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새문화정책준비단



문화체육관광부

발간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문화정책준비단’이 1년 3개월여에 걸쳐 준비한 『문화비전2030_사람이 있는 문화』가 많은 분들의 노고로 드디어 마무리 되었다. 이 보고서는 2004년에 만든 『창의한국』에 이어 실로 오랜만에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국가문화정책의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시절 블랙리스트 사태와 올해 들불처럼 일어난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의 파고를 극복하고 국가 문화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문화비전2030_사람이 있는 문화』는 아주 시의적절한 의미를 가진다.

『문화비전2030_사람이 있는 문화』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란 가치를 기본 원리로 삼고 있다. 자율성은 개인의 자유로운 문화 활동과 향유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 개인 뿐 아니라 문화예술인, 관광 및 문화산업 종사자,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을 담았다. 다양성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집단들이 서로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며, 자신들의 문화적 힘을 펼쳐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국적, 인종, 종교만이 아니라 세대, 성, 성차, 장애, 지역을 아우르고, 나아가 예술의 크고 작은 집단들이 서로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는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창의성은 단지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역량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교육, 노동, 복지, 도시재생, 환경, 통일 분야에서 문화가 사회 발전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가치이자 동력이다.

사람 이 있는 문화

이러한 문화의 3대 가치를 기반으로 『문화비전2030_사람이 있는 문화』는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이란 3대 방향을 설정했다. 3대 방향은 각각 3개의 실천 의제들을 포함한다. ‘개인의 자율성 보장’에는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확대’, ‘성평등 문화의 실현’이란 의제가,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에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지역 문화분권 실현’이란 의제가, 그리고 ‘사회의 창의성 확산’에는 ‘문화자원의 융합역량강화’,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이란 의제가 담겨 있다. 9개의 의제 안에는 혁신적이고 통합적인 많은 실천과제들이 담겨 있다.

『문화비전2030』은 3대 가치, 3대 방향, 9대 의제를 기본 골격으로 47개의 대표과제와 186개의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여 2030년까지 국가 문화비전의 큰 그림을 보여주고자 했다. 또한 문화비전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보고서는 실행조직 구성과 민간과의 협치 방안, 법, 제도 개선 및 재원조성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문화비전2030』은 여전히 개방형, 진행형 보고서이다. 미처 담지 못한 과제들과 더 충분한 협치는 구체적인 실행과정에서 보완될 것이다. 이 보고서를 완성하기까지 정말 많은 민간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고, 따가운 질책과 훈훈한 격려,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셨다. 이분들이 아니었으면 이 보고서는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보고서 출간까지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을 비롯해 실무행정을 담당해주신 문체부 미래문화전략팀 직원들, 그리고 보고서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차례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신 문체부의 모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마지막으로 1년 3개월간 동고동락한 새문화정책준비단 위원들과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주신 간사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제 이 보고서를 시작으로 새로운 문화의 시대가 열리길 간절히 기원해본다.

2018. 12.

새문화정책준비단 단장 이 동 연

사람 이 있는 문화

목 차

총론

01. 비전 수립의 취지와 배경.....	006
02. 비전 수립의 원칙과 과정.....	009
03. 비전의 도출 원리.....	011
04. 비전 수립의 필요성.....	013
05. 준비단 구성과 경과.....	014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01. 국가 문화정책의 흐름과 성찰.....	020
02. 핵심어로 읽는 지금 우리 문화 환경.....	029
03.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044
04. 문화비전의 표어: 사람이 있는 문화.....	052
05. 문화비전의 가치.....	054
06. 문화비전의 방향.....	082
07. 「문화비전2030_사람이 있는 문화」 체계.....	087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의제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090
01. 문화권 확산.....	091
02. 일과 삶의 균형으로 여가친화 사회환경 조성.....	100
03. 전 국민에게 문화복지 확산.....	104

사람 이 있는 문화

04.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전면 확대.....	109
05. 개인의 문화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116
 의제2 문화예술인·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	120
01.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121
02. 문화예술인·종사자(예술·스포츠·관광·콘텐츠 분야) 노동권·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확충	126
03. 예술인 복지 통합정책 지원체계 수립	137
04. 자율성과 협치 중심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지원체계 혁신.....	144
 의제3 성평등 문화 실현.....	149
01.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	150
02. 성평등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혁신	155
03. 여성친화적 생태계·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	162
 의제4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169
01. 문화다양성 정책 위상 강화와 법제 정비	171
02. 문화다양성 침해(혐오표현 등) 금지와 인식 제고	177
03.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 보장.....	181
04. 언어문화 다양성 실현.....	186
05. 전통문화유산 보호와 현대화.....	188
06.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국내외 관광객 정책 마련	192
 의제5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195
01. 예술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	197
02.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체계 마련	202
03.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	209
04. 문화콘텐츠 유통과 노동 불공정 개선 법률 제정	216
05. 국공립 문화기반시설 운영혁신과 민간 예술단체 창작 다양성 실현 ..	222
06. 공정하고 다양한 스포츠 문화 조성	225
07. 출판의 다양성 실현	228
08. 관광산업의 공정 상생을 위한 지원	236
 의제6 지역 문화분권 실현.....	239
01. 지역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 조성.....	241
02. 지역 문화의 고유성 유지·발전.....	246
03. 지역문화 거점기관 운영 혁신과 지원체계 마련	251

사람 이 있는 문화

04. 문화 협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253
05.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	255
06.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260

의제7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263
01. 창의성과 상상력을 갖춘 시민·인재	264
02. 문화자원 관련 산업의 융합 기반 조성	268
03. 문화자원과 신기술·지식 융합 촉진	271
04. 문화자원의 기록·보존 체계 강화	275
05. 문화자원 융합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	278

의제8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280
01. 문화·체육·관광 분야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획기적 전환.....	281
02. 문화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적 지원	285
03. 지원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국제교류 확대	287
04. 한반도 평화를 여는 문화의 섬·문화로드 프로젝트.....	290
05. 아시아 문화교류 확대와 국제교류협력 기반 조성.....	292

의제9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296
01. 사회 의제를 주도하는 문화정책 협력체계 마련	297
02. 더 나은 삶을 위한 '공론·학습·해결의 문화플랫폼' 모델 확산	299
03. 공공문화 서비스와 사회문화적 일자리 전환	302
04. 문화 공유지 활성화에 따른 지역·공간 재생	304
05. 기후변화에 문화적으로 대응	306

3부 사람이 있는 문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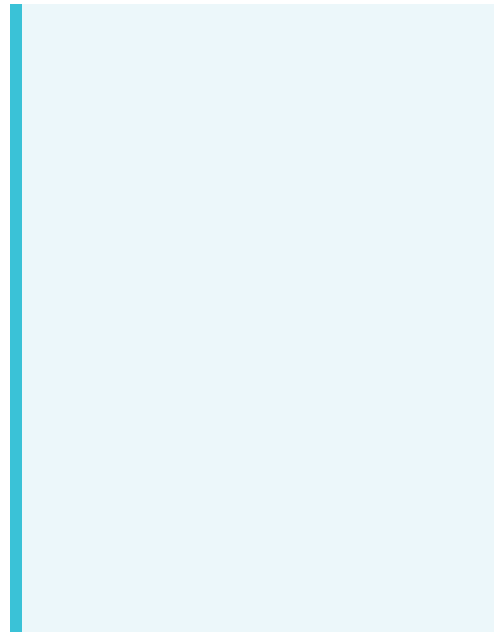
01. 비전 실행 협치 방안	312
02. 문화행정조직 혁신	319
03. 법·제도 개선과제	324
04. 중장기 재정전략	330

부록

01. 국민 제안 주요 내용	342
02. 문화정책(文化聽策) 주요 내용	366

문화비전2030

사람 이 있는 문화



총론



1. 비전 수립의 취지와 배경
2. 비전 수립의 원칙과 과정
3. 비전의 도출 원리
4. 비전 수립의 필요성
5. 준비단 구성과 경과

01 비전 수립의 취지와 배경

○ 지금 우리의 삶: 경쟁 · 효율을 중시하는 일 중심의 사회

- ▶ 과도한 노동시간, 자유시간 부족, 임금격차 등으로 문화 여가시간은 물론 기본 휴식시간도 확보하지 못해 삶의 만족도 저하
 - * '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연간 노동시간 2위(1위 멕시코 2,255시간, 2위 한국 2,069시간)
 - * '1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는 10점 기준 5.8점,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
- ▶ '일'과 '생존' 외에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회문화 활동에 관심을 쏟을 시간 부족
- ▶ 일 중심 사회는 창의적 사고를 저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림

○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 타인을 혐오하고 상호 신뢰 부족

- ▶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사회', '평등한 관계가 무너진 사회', '상호 불신과 혐오 발언이 넘치는 사회'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상호 신뢰'가 부족한 상황
 - * 우리 사회의 포용영역과 신뢰영역은 10점 만점에 각각 3.79점, 3.8점으로 과거 대비 크게 악화됨¹⁾
- ▶ 경제 양극화에 따른 소외, 지위 · 위계 등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과 세대 · 젠더 간 갈등 문제 상존
 - * 국민들이 생각하는 문화다양성 정책 필요 우선순위: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75%), 세대 간 갈등(69%), 성별 불평등(65%) 순(『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 진보 정부 10년, 보수 정부 10년을 넘어서는 새로운 문화비전

- ▶ 김대중, 노무현 진보 정부를 거쳐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부에 이르는 20년 동안 문화정책은 많이 발전했지만, 정치적 이념과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과 갈등을 반복
- ▶ 문화는 정치와 이념의 성향을 가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며, 창의적인 미래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
- ▶ 진보-보수라는 낡은 이념적 잣대를 넘어서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문화의 역할이 필요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사회통합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문화정책 장기 계획 수립

-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기술혁신과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문화정책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이 있음
- ▶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른 사회 환경의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고려하여 문화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는 문화정책의 장기 계획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
- ▶ 북핵과 사드(THAAD)로 대변되는 신냉전 체제의 위기에서 벗어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로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음. 정치·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교류가 남북 평화의 물꼬를 트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 예술과 기술, 문화와 과학이 융합하는 새로운 문화예술의 영역이 부상하고, 새로운 창작과 향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함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을 성찰하는 문화정책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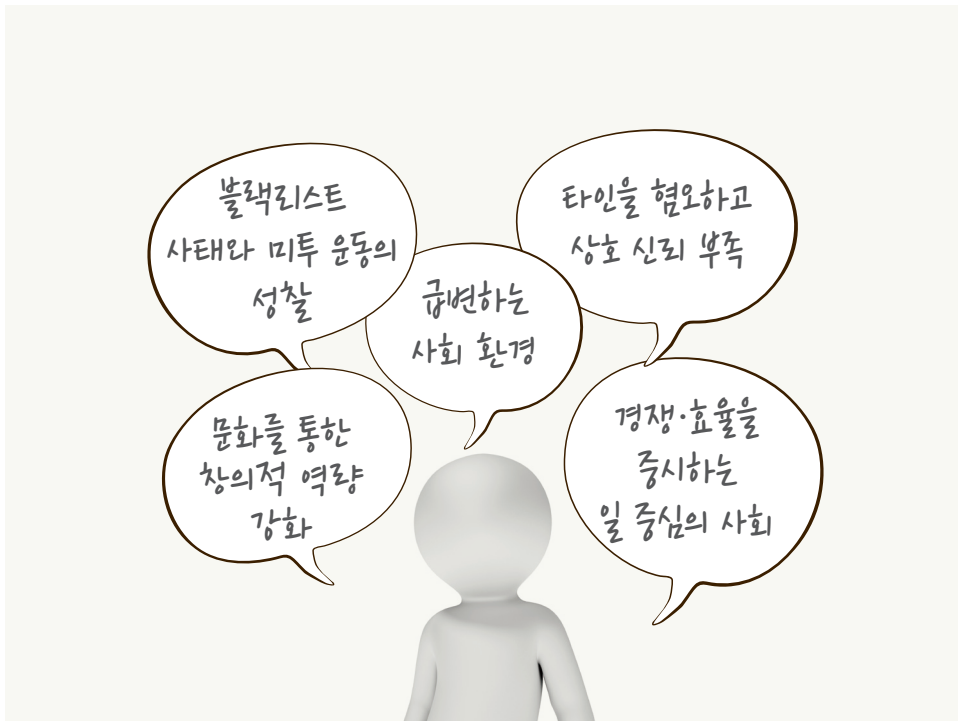
- ▶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Me Too) 운동 이후 문화예술계는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예술인의 창작 권리가 완전하게 보장되고 정치적 이념에 따른 견해 차이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국가의 예술 지원에서 배제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함
- ▶ 미투 운동 이후 문화예술계 역시 오랫동안 만연했던 위계와 권력에 따른 젠더 폭력을 근절하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함. 젠더 폭력에 노출되는 전근대적 관행을 근절하고, 젠더 평등과 젠더 주류화를 이루기 위한 문화정책 필요
- ▶ 문화비전을 수립할 때 블랙리스트 사태를 극복하고 미투 운동의 시대적 소명을 성찰하는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제시해야 함

○ 문화의 기본 가치와 철학에 충실한 문화비전 수립

- ▶ 문화가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앞서 문화의 고유한 가치들이 사회 안에서 실질적·창의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문제의식과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시대
- ▶ ‘문화는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어떤 철학을 갖추어야 하는가’는 문화비전을 수립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질문
- ▶ 문화자본의 논리와 문화의 정치적 검열로 문화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정책이 문화의 가치라는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문화비전을 제시해야 함

○ 문화가 국가 성장 동력의 중요한 자원이 되도록 창의적 역량 강화

- ▶ 고비용, 저효율 시대, 국가 성장 동력의 저하와 사회 발전 동력의 위기에 따른 대안으로 문화가 국가 발전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함
- ▶ 케이팝(K-pop)의 글로벌 열풍을 기반으로 문화콘텐츠, 관광, 스포츠산업 등 경쟁력 있는 창의적인 콘텐츠 분야의 육성과 차세대 융·복합 콘텐츠 연구개발에 대대적인 지원 필요
- ▶ 김대중 정부의 문화콘텐츠 및 IT 산업 진흥 정책과 같이 문화가 국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종합 계획 필요



02 \ 비전 수립의 원칙과 과정

○ 우리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문화정책

- ▶ 국가 문화정책은 국민의 삶에 가장 밀착되어야 하는데도 일상의 삶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결과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음
- ▶ 문화정책이 주로 몇몇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폐쇄적인 구조 안에서 수립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국민이 공감하는 문화정책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음

○ 모두가 협력하여 함께 만드는 문화비전

- ▶ 국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만들려면 무엇보다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고 숙의하는 협력 과정이 중요함
- ▶ 문화비전을 만들기 위해 문화계 현장의 전문가, 문화관료, 일반 시민들이 협치해서 문화정책의 혁신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임

○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방형 · 진행형 문화비전

- ▶ 「문화비전2030」은 문화의 비전을 담은 보고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보고서의 위상을 갖고 있음
- ▶ 지난 10년간 문화정책은 슬로건과 구호는 좋았지만 새로운 시대로 이행하는 문화정책의 기본 토양을 튼튼하게 만드는 일에는 소홀하여 추진력과 지속성에 어려움을 겪었음
- ▶ 계속 진화하는 개방형 · 진행형 문화비전 수립 원칙을 견지. 문화의 미래를 만들어 갈 사람을 위해 개성의 원칙을 실천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 협력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비전을 수립

○ 현 정부에 국한되지 않고 2030년까지 중장기 비전을 바라보는 문화정책 구상

- ▶ 당장 필요한 문화정책 수립의 수준과 위상을 넘어서 국가 문화정책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는 문화정책 수립이 필요
- ▶ 새로운 진보정부의 출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세 변화,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도래,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 이후 문화정책의 근본적인 전환과 혁신의 에너지를 담아야 함
- ▶ 근시안적 문화정책이 아니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바탕을 조성하고, 개인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문화 환경을 만드는 체계적인 문화정책이 필요



03 비전의 도출 원리

○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문화의 가치는 ‘사람’ 그 자체

- ▶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사회와 나라를 외쳤던 사람들은 어떤 절망을 극복하고 무슨 희망을 갖고자 했을까? 재난이 반복되는 사회, 희망을 잃어 가는 미래 세대, 혐오와 반목이 심화되는 사회, 생명과 인권을 경시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 ▶ 새로운 사회를 위한 문화의 가치와 철학은 사람의 생명과 권리를 중시하는 문화로 전환되어야 함.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자유시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함
- ▶ 예술인을 낯은 이념의 잣대로 편을 가르거나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예술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사회로 발전해야 함

○ 돈과 시설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문화

- ▶ 문화는 총체적인 삶의 양식이자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문화의 다양한 기반시설과 경제적 가치가 사람보다 우선할 수 없음.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는 문화가 되어야 함
- ▶ 문화의 중요한 가치인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는 다양한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중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함. 다양한 사람이 만들어내고 향유하는 다양한 문화를 문화정책이 권장하고 지원해야 함
- ▶ 문화는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창의적 활동 과정으로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 영역에서 창의적인 역할을 지금보다 더 많이 담당해야 함

○ 미래 인간소외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문화의 창의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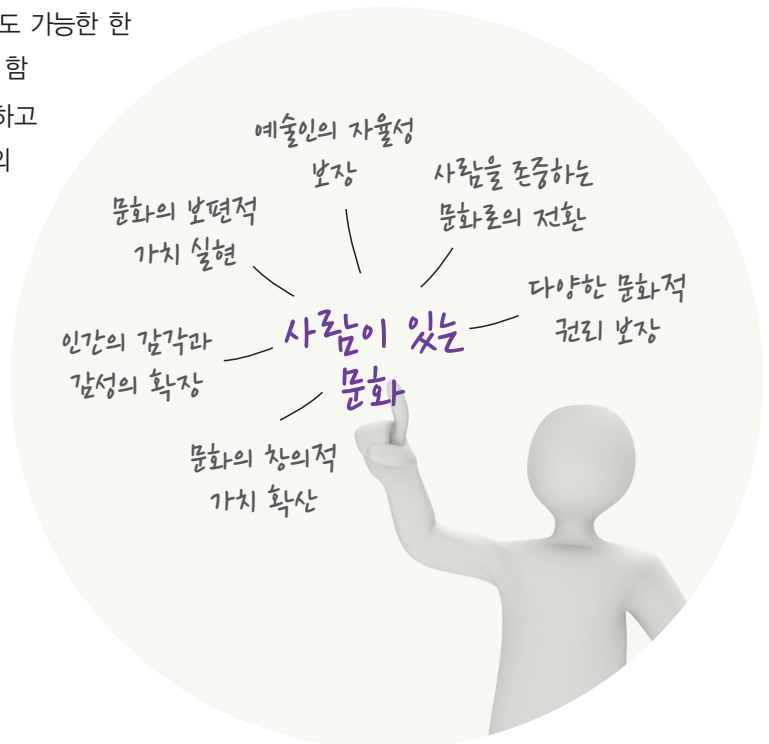
-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과 자본에 인간이 소외되지 않도록 개인의 문화적 삶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함. 4차 산업혁명은 기술자동화에 따라 사람이 담당하던 노동을 대부분 기계와 로봇이 대체하여 새로운 노동소외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음
- ▶ 기술자동화로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오히려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문화 여가를 즐길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음.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의 요소들을 파악하여 문화가 인간소외와 사회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함

-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으로 인간의 문화적 역량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고 인간의 감각과 감성이 확장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창의성과 상상력이 사회혁신의 동력이 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창의적 대안을 마련해야 함

○ 문화정책 비전을 담은 새로운 용어와 언어

- ▶ 그동안 문화정책에서는 대한민국, 국가, 국민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여 용어에서부터 국가중심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음
- ▶ 새로운 문화비전의 원리에서는 국가 문화정책의 용어와 언어를 새롭게 사용하려고 함. 대한민국, 국가, 국민이라는 말을 될 수 있으면 적게 사용하고 그 대신 사람, 개인, 인간 등 문화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용어를 사용하려고 함. 문화정책 용어를 한글의 쓰임새와 문법에 맞게 사용하고 설명도 가능한 한 쉬운 언어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함
- ▶ 그동안 문화정책의 슬로건은 화려하고 구호는 이상적이었지만 문화정책의 가치와 철학의 깊이가 부족했음. 따라서 「문화비전2030」에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개인의 문화적 삶에 기여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을 담고자 함



04 비전 수립의 필요성

○ 촛불 혁명과 정권교체에 따른 새로운 문화비전 수립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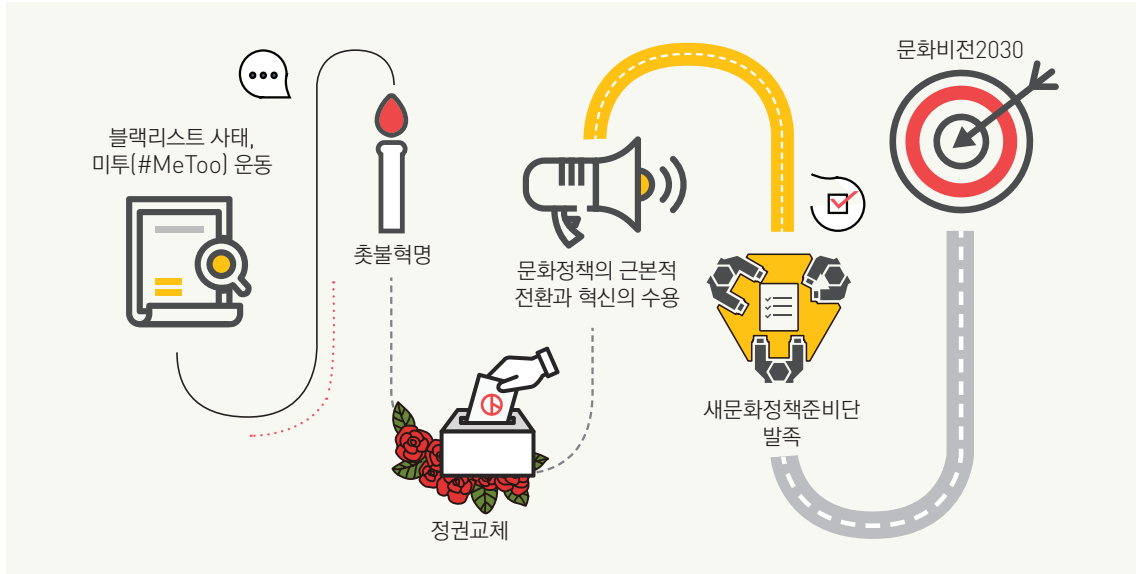
- ▶ 촛불 혁명에 이어 정권이 진보 정부로 교체됨에 따라 새로운 미래 사회로 나아가는 국정과제를 담을 수 있는 문화정책의 장기 비전을 만들어 갈 필요성 대두
- ▶ 새 정부의 문화 분야 국정과제를 잘 반영하면서 동시에 문화정책의 가치, 방향, 법, 제도 등의 혁신을 기획하는 문화비전을 수립
- ▶ 수사적 언어를 구사하기보다는 블랙리스트 사태를 극복하고, 미투 운동의 대안을 제시하는 실질적 해법을 담은 문화정책 비전 수립 필요

○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문화적 대응 필요

- ▶ 문화는 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의 많은 갈등을 치유하며 창의적인 미래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함
- ▶ 예술 · 체육 · 관광 · 콘텐츠 등 정책 범위를 개별화 · 협소화해 사회 현안과 미래변동의 이슈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문화정책이 지나치게 정치적 · 이념적 이해관계에 종속된 측면이 있음

○ 새로운 문화비전을 담은 넓은 의미의 장기 문화정책 수립 필요

- ▶ 누구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문화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혁신의 에너지를 담은 장기 문화비전이 필요함
- ▶ 블랙리스트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미투 운동이 문화예술계에 미친 문제의식을 잘 인식하여 문화정책의 가치와 철학, 정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장기 문화비전 수립이 요구됨
- ▶ 문화기본법에 명시된 문화의 기본 가치와 방향을 중시하고,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높이며, 문화예술인들의 지위를 향상할 뿐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확산하며 문화의 가치와 역할을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춘 문화비전을 수립하고자 함



05 준비단 구성과 경과

○ 준비단 소개

▶ 준비단 위원: 총 27명(총괄위원 19명+분과위원 8명)

구분	성명	현직	분과
총괄위원	이동연(단장)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기획처장)	총괄
	김기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다양성
	김기영	부산민예총 미디어기획위원장	다양성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	창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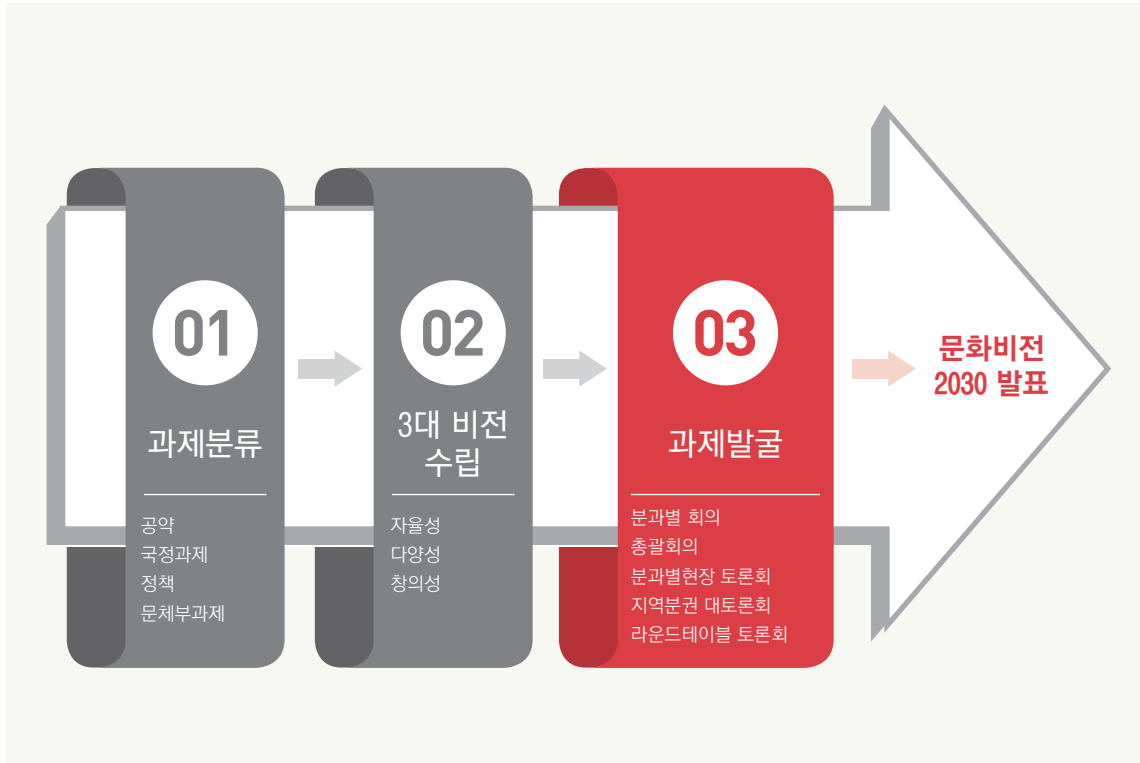
5. 준비단 구성과 경과

구분	성명	현직	분과
총괄위원	김중휘	서울문화재단 대표	창의성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창의성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지털문화정책전공 교수	다양성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 본부장	자율성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자율성
	성해영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창의성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다양성
	양현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다양성
	유지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자율성
	윤광식	국제문화협력지원센터 사무총장	창의성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자율성
	이동민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 대책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자율성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자율성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창의성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다양성
분과위원	김권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팀장	자율성
	전고필	대인예술시장 감독	자율성
	최승훈	문화산업정책협의회 정책위원	자율성
	노용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다양성
	유승호	강원대학교 교수	다양성
	이훈	한양대학교 교수	다양성
	김상훈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창의성
	한창완	세종대학교 교수	창의성

▶ 준비단 간사: 총 4명

구분	성명	현직	분과
총괄간사	이정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 위촉책임연구원	총괄
	김미소	DMZ피스트레인뮤직페스티벌 사무국장	기획
분과간사	최고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다양성
	정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창의성

○ 준비단 운영체계



○ 준비단 운영 경과

-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10월 새문화정책준비단 위원을 위촉하고 10월 24일 실무에 착수하여 2018년 11월까지 약 1년간 진행함
- 민간위원 19명이 각각 자율성 · 다양성 · 창의성 분과로 나뉘어 준비단을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전략팀과 협업해서 문화비전을 설계

2017. 10.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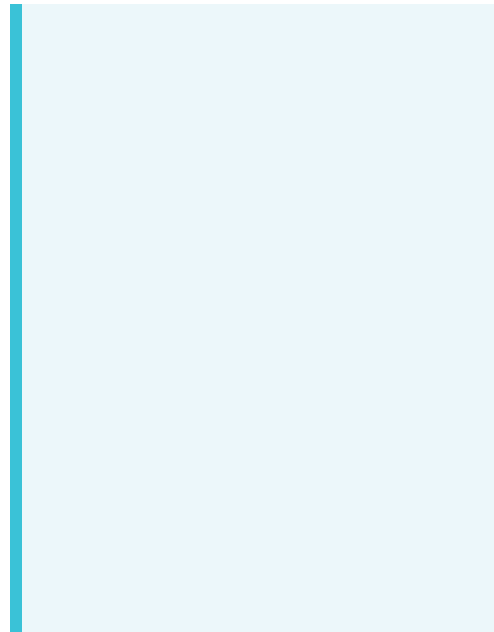
• 새문화정책준비단 첫 기획 회의

5. 준비단 구성과 경과

2017. 10. ~201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문화정책준비단 정례회의 개최(총 2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 분과구성: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 총괄회의는 매주 월요일 진행 ※ 분과회의는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 – 분과별로 총괄위원 6명 내외와 분과위원 3명으로 구성 • 준비단 워크숍 개최(2회) • 문화정책(文化聽策)포럼 개최(13회) • 분과별 현장 토론회 개최(6회) • 준비단 · 문체부 공동연수회(2회), 토론회(2회)
2017. 12.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 있는 문화 기조발표
2018.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제안 · 페이스북 온라인소통
2018.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문화정책준비단 문화비전2030 기조와 비전, 전략과제와 실행과제 확정 • 문체부 의견 수렴
2018.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관련 이슈 추가 논의(외부 전문가 간담회, 현장토론회 개최)
2018. 5.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 발표
2018.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필진회의(8회)
201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보고서 발간

문화비전2030

사람
이 있는
문화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1. 국가 문화정책의 흐름과 성찰
2. 핵심어로 읽는 지금 우리 문화 환경
3.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4. 문화비전의 표어: 사람이 있는 문화
5. 문화비전의 가치
6. 문화비전의 방향
7. 「문화비전2030_사람이 있는 문화」 체계

01 국가 문화정책의 흐름과 성찰

- 문화정책은 국가 행정만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 특히 문화적 변화와 긴밀한 연관 속에서 전개되므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요인을 고려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함
- 협의의 문화정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문화행정을 의미하며, 특히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경우 오랫동안 정부 주도 문화행정이 곧 문화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
- 여기에서는 국가 차원 문화행정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서 문화정책적 함의를 성찰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구체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문화 분야 법제의 변천 과정과 시기별 문화행정의 범위와 추진 체계의 변화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시대적 변천 속에서 문화정책이 어떠한 맥락으로 전개되어 왔는지 분석해 보고자 함

1. 국가 문화정책의 전개과정

시기	특징	주요 내용
1945~1959년	공보수단으로서 문화행정	공보정책의 일환으로 문화를 통제하거나 동원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던 시기
1960~1989년	국가 중심의 문화진흥과 육성	국가 주도의 진흥전략과 육성을 바탕으로 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던 시기
1990~2017년	문화국가를 향한 도전과 한계	문화 발전을 추구하였으나 오히려 예술지원에 대한 정부 개입의 강화나 블랙리스트의 작동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한 시기

1기. 공보 수단으로서 문화행정: 1945~1959년

1) 1945~1951년

- ▶ 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었고, 3년간 미군정 통치를 거쳐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 1948년 정부 수립 이전 3년간의 미군정에서는 문화계가 좌우 대결을 벌이는 상황에서 주로 영화나 방송, 출판에 대한 통제 위주의 정책을 펼쳤음
 - 미군정 시기에는 학무국(후에 문교부로 변경)과 공보국(후에 공보부가 됨)에서 문화행정을 담당하였으며,

1. 국가 문화정책의 흐름과 성찰

공보정책의 일환으로 영화, 방송, 출판에 대한 통제가 진행되었음

연도	주요 내용
1944년	조선흥행 등 취체 규칙
1945년	출판허가제 → 출판등록제
1946년	출판물에 대한 규제와 통제 강화
	군정법령 제115호 영화의 허가 규정 제정
1961년	조선흥행 등 취체 규칙 → 공연법 제정

* '취체': '단속'으로 순화(국립국어원)

- ▶ 제헌 헌법에서 '민주독립국가 재건'과 '민주주의 체제의 수립'(이상 전문)이라는 목표 아래 국민의 권리로서 '예술의 자유'와 '예술가의 권리'(이상 제14조)를 보호하도록 규정함
 - 예술가의 권리는 1957년 저작권법을 제정하면서 저작권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보호 조치를 함
- ▶ 이 시기 국가 차원의 문화정책은 일제강점기에 운영되었던 문화기관과 시설의 명칭을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였음
 - 조선미술전람회를 대한민국미술전람회로, 이왕직아악부를 국립국악원으로, 부민관을 국립극장으로 개편하는 정도였음
 - 1950년대 후반에 가서야 국산 영화를 진흥하기 위해 입장세 면제 조치가 내려지는 소극적 지원 정책이 시행됨
 - 이 시기에는 사회 일반의 문화에 대한 인식도 높지 않았고 국가 정책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었다고 할 수 있음

2) 1952~1959년

- ▶ 1952년 문화보호법 제정, 1953년 문화인등록령 시행, 1954년 대한민국학술원과 대한민국예술원 설립이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행정이라 할 수 있음

법명	주요 내용
문화보호법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가의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창조 ·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
문화인등록령	문교부에서 과학자와 예술가를 대상으로 등록제를 실시함
대한민국예술원 설립	선정된 예술가에게 국가적 우대 조치 구체화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 ▶ 체육 행정에서는 미군정 시기부터 학교체육이 발전하였으며, 정부 수립에 앞서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출범하여 1948년 런던올림픽에 참여함
 - 정부 수립 초기부터 국내 체육은 대한체육회, 국제 체육은 대한올림픽위원회라는 양대 체제가 구축됨
 - 예술행정과 체육행정이 모두 문교부 관할 아래 전개됨

2기. 국가 중심 문화 진흥과 육성: 1960~1989년

1) 1960~1979년

- ▶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군사정권으로 대표되는 권위주의 시대가 전개됨
 - 1960년대 들어 남북한의 체제 대결이 가속화했고, 그 결과 국가 문화정책은 체제문화 형성에 주력하는 양상을 보임
- ▶ 1960년대 문화정책은 법제 측면에서 일제강점기의 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체제로 정비한 시기임
 - 이 시기 문화법제의 특징은 종합적 문화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보다는 개별 사업 분야의 필요성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점임
 - 일제강점기라는 법제를 벗어나 국가 중심 문화정책의 원형이 형성되는 실마리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문화행정의 주요 시기로 볼 수 있음

연도	법명
1961년	공연법, 관광사업진흥법 제정
1962년	영화법, 문화재보호법, 향교재산법, 국민체육진흥법, 국제관광공사법 제정

- ▶ 1960년대 초 문화행정을 담당할 다양한 부처와 기관을 신설함

부처	주요 업무 분야
공보부	영화, 연극, 무용, 음악, 정기간행물, 국립기관 관리
문교부	문학, 미술, 문화재, 단행본, 박물관, 종무, 체육
문화재관리국	문화유산정책
국제관광공사	관광행정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공연물 사전 검열

1. 국가 문화정책의 흐름과 성찰

▶ 1968년부터 1989년까지 문화공보부 체제 유지

- 문화행정과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엘리트 예술을 육성하는 방향과 공보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본 체계를 구축한 시기임
- 이후 '유신체제'로 공보기능이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임

▶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는 국가가 주도하는 예술과 체육, 관광의 진흥이라는 적극적 방식의 문화정책을 펼침

- 이 시기에는 문화재 보호와 문화예술·체육·관광진흥이 국가의 재정 투입과 제도 정비로 강력하게 추진됨
- 국가 주도의 문화진흥은 결국 국가(심지어는 정권)의 가치와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가(권력)의 검열이나 진흥 배제가 상시적으로 진행됨

분야	주요 내용
문화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 1973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설립, 국립중앙극장 개관 - 1974년: 제1차 문예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2년: 국민체육진흥재단 설립 - 1973년: 병역특례제도 도입 - 1974년: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실시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2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정, 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 - 1975년: 관광기본법-관광사업법 분법화,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정

2) 1979~1989년

▶ 1988년에 출범한 제6공화국은 '문화국가' 수립이라는 새로운 문화정책 비전을 형성함

-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 민주주의 실현 요구가 분출하면서 사전 검열 철폐 등 문화행정의 민주화를 동시에 요구함
- 일반 국민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 생활체육의 활성화, 국민 여행 활성화 등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 문화정책의 새로운 목표로 등장함
- 5년 단임제 체제가 정착되면서 5년마다 등장하는 새 정부의 문화정책 수립과 시행이 관행으로 자리 잡음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분야	주요 내용
문화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1년: 새 문화정책 수립 - 1985년: 문화발전 장기 정책 구상(1986~2000) 발표 - 1987년: 외국 영화 직배 허용 - 1988년: 남·월북 작가 해금조치, 예술의전당 개관 - 1989년: 북한 미술품과 서적 수입 허용
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 스포츠과학연구소 설립 - 1982년: 프로야구 출범 - 1983년: 프로축구 출범
관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4년: 지방관광 행정 활성화

3기. 문화국가를 향한 도전과 한계: 1990~2017년

1) 1990~1997년

- ▶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민주화된 정치체제 위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였으며, 물질중심주의에 대한 반성 속에 '문화'의 중요성이 대두함
 - 정보화·세계화의 흐름 속에 개개인의 문화적 역량을 기반으로 '문화'가 사회 통합의 매개체가 되고,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된다는 점이 주목됨
 - 행정체계 면에서는 지방자치제도 도입으로 분권화의 거대한 흐름이 형성됨
 - 문화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행정이 전개됨
- ▶ 1990년대의 문화정책은 '문화주의'라 할 정도로 '문화' 자체를 중시했으며, 다가오는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지칭하고 '문화의 발전'을 추구했음
 - 1990년 '문화부' 출범은 국가 운영에서 문화의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며, 그 점에서 '문화국가'의 첫 출발이었다고 할 수 있음
 - 문화복지 개념이 등장하였고, 자발적 참여와 진흥, 축진이 문화행정의 기초로 자리 잡음

연도	주요 내용
199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발전 10개년 계획(1990~1999) 수립 - 문화부 출범 - 국민 생활체육 진흥 종합 계획 수립

1. 국가 문화정책의 흐름과 성찰

연도	주요 내용
199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티켓 도입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출범
199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 통합 - 문화창달 5개년 계획(1993~1997) 수립 - 예술의전당 전관 개관 - 한국예술종합학교 개원
199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국 신설 - 관광업무 문체부로 이관 - 한국기업메세나협회 창립 - 영화진흥금고 설치
199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진흥기본법, 영화진흥법 제정
199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를 향한 한국문화의 비전과 전략 발표 - 문화정보화 추진 기본계획(1997~2010) 발표
199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비전 2000 발표

2) 1997~2007년

- ▶ 2000년대의 문화정책은 문화산업과 관광산업이 국가 문화정책의 핵심 분야로 추진됨. 1997년 IMF 사태로 한국 경제의 구조조정과 체질개선, 신성장 동력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음

연도	주요 내용
199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부 명칭 변경 - 국정홍보처에 해외홍보기능 이관 - 문화재관리국 → 문화재청 승격 - 새 문화관광 정책 발표 - 문화관광축제 지원 - 금강산 관광 개시
199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 - 문화산업진흥기금(1999~2006) 조성 - 문화산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200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산 1% 달성 - 국립중앙극장 책임운영기관화 - 국립예술단체 재단법인으로 독립기관화 진행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연도	주요 내용
2002년	- 한일월드컵 개최
2003년	- 제3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수립
2004년	- 창익한국, 예술의 힘 발표 - 개방과 소통의 국제문화교류 - 국제문화교류 중기계획 발표 - 스포츠여가산업과 신설 - 지역방문의 해 사업 추진
2005년	- 스크린쿼터 축소 - 지방문화산업 육성, 문화기술정책 확대 추진 - 스포츠산업 비전 2010 발표
2006년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세분화
2007년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

3) 2008~2017년

- ▶ 2010년대 문화정책은 외형적으로는 문화국가론이 유지되고, 그 정점으로 '문화융성'을 내세움
 - 그 이면에서는 예술지원에 대한 정부 개입이 강화되고, 예술인과 단체 블랙리스트가 작동되는 등 문화행정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함
- ▶ 이 시기에 문화정책에서 대대적인 입법 활동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특기할 만함

연도	주요 내용
2008년	- 문화체육관광부로 명칭 변경 - 문체부로 국정홍보와 정부발표 기능 이관 - 『문화비전 2008~2012: 품격 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 발간
2009년	- 한국콘텐츠진흥원 출범
2010년	- 국립자료원, 한국공연예술센터 개원
2011년	- 예술인복지법 제정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 문화향수를 통한 문화복지의 양적 확대 -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1. 국가 문화정책의 흐름과 성찰

연도	주요 내용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 보고 - 문화기본법 제정
201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20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통합 → 대한체육회로 재출범

2. 국가 문화정책의 한계와 성찰

1) 1990년대 이후 문화정책의 거시적 성과와 한계

▶ 1990년 문화부 설치에 한국 문화정책 변화의 시발점

- 문화부 출범은 정부 정책에서 문화 분야의 독자성과 주도성이 강조되는 ‘문화주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함
- 1990년대 이후 거시적 환경 변화는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문화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증대에 대한 인식 확대 등으로 연결되었으며, 무엇보다 고도 경제성장 시대에 후순위에 밀려 있던 ‘문화’를 재평가함
-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인식하고 준비하는 흐름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흐름은 IMF 사태를 겪으면서 일시 중단되는 양상을 보였지만 2000년대 들어 한국 문화정책의 거시적 방향으로 자리 잡음

▶ 한국 문화정책의 거시적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음

분류	시기	주요 변화
문화정책 안정화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연속성 유지 → 문화, 체육, 관광의 3대 영역 포괄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산 1% 달성
	201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기본법 제정
예술지원 정책에서의 민간 자율성 확대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재출범 → 예술계의 자율성 확대에 방향 전환 → 팔길의원칙의 실현
	201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랙리스트 사태 발생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분류	시기	주요 변화
문화 향유권 증진으로 방향 전환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201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트체육 + 생활체육의 통합 체제 구축
문화산업정책의 등장과 확대 발전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의 본격화 - 경제성장 동력으로서 역할
국제사회로 진출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극적인 문화교류 활성 전개 - 세계화 전략으로 문화교류 정책 추진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대중문화 개방 - 국가 간 문화협정 체결 진행
	201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 한국문화원과 세종학당 확대

2) 2020년대 새로운 문화정책의 요구와 과제

- ▶ 그동안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면 국가주의적 문화정책에서 문화국가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음
- ▶ '문화'를 중시하는 문화주의적 접근만으로는 언제나 권력의 위협으로부터 문화적 가치가 훼손당할 위험성이 있음
 - 합리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거나 운영·지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문화적 가치 구현이 담보될지 의문
- ▶ 새로운 문화정책의 과제
 - 사람에 주목하는 문화정책: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로서 사람에 주목
 - 종합적 비전과 전략의 제시: 지속성을 보장하는 장기 비전과 전략 마련이 절실
 - 민관 협치 모델 마련 필요: 정부와 지자체 사이의 관계부터 민간에 이르는 협치 모델 재정립 필요

02 \\ 핵심어로 읽는 지금 우리 문화 환경

○ 노동시간 과잉과 경제 양극화: 빈곤한 문화적 삶

- ▶ OECD 국가 중에서 노동하는 시간이 두 번째로 많은 한국인은 자유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 경제 양극화로 소득 격차가 심하여 기본생활에 필요한 비용 이외에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경제적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함
- ▶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자유시간이 확보되어도 문화여가 시간을 즐기기에 경제적 부담이 커서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개인들의 문화적 삶이 빈곤한 상태가 유지됨
- ▶ 문재인 정부에서 최근 주당 52시간 이상 초과 노동시간을 법으로 금지하여 자유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났지만, 자유시간이 개인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문화시간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문화복지의 실현이 필요한 상황임
- ▶ 개인의 자유시간을 보장하고 문화 여가생활을 확대하는 문제는 계층, 세대, 성차, 장애, 지역, 생애주기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 방향을 수립해야 함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 재난과 위험사회: 감성의 위기

- ▶ 고도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지 않는 위험사회를 자초함
- ▶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 화재, 세월호 침몰 등 대형 재난사고의 기본 원인은 생명보다는 성장, 안전보다는 효율을 중시했기 때문임
- ▶ 재난사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사회로 갈 개연성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사회로 갈 가능성은 낮아짐
- ▶ 안전과 재난 문제는 문화적 삶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 재난과 위험 지수는 문화 지수와 반비례하며, 개인의 삶의 가치를 떨어뜨림
- ▶ 사회적 재난에 처한 개인과 집단을 치유하고 정신적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문화와 예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문화적 표현으로 재난과 위험을 경고하고 신체적·정신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한 문화 치유 활동의 역할이 중요함



사람 혐오와 집단 갈등: 공동체 문화의 위기

- ▶ 사회의 불안 요소를 인식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혐오(hatred) 지수임.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계층, 이념, 지역, 성, 성차, 인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혐오 발언과 담론이 급증
- ▶ 디지털 문화 환경에서 이러한 혐오 발언은 좀 더 자극적인 방식으로 급속하게 전파되어 사회와 공동체의 집단적 갈등으로 확산됨
- ▶ 인터넷과 누리소통망 서비스(SNS)에서는 여성과 남성 혐오, 지역 혐오, 동성애 혐오, 다문화와 인종 혐오가 일상적 담론으로 형성되어 개인의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는 현상이 사회적 갈등을 가중함
- ▶ 혐오 담론이 정치, 인종, 성차의 갈등을 증폭하고 있지만 문화예술계의 미투 운동은 남성 권력이 만들어 놓은 여성 혐오를 극복하려는 구체적 대안 활동으로 확대되었고 공동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긍정적 운동으로 이어짐. 그러나 미투 운동에서 야기된 지나치고 극단적인 남성 혐오와 인권 침해, 성적 표현은 우리 사회에 여전히 서로 다른 집단과 공동체 간 갈등의 골이 깊다는 것을 알게 해 줌
- ▶ 새로운 문화비전을 담는 문화정책은 무엇보다 사회 혐오와 집단 갈등을 해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문화와 예술의 활동으로 사회적 혐오를 해소하고 문화다양성을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함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 촛불 혁명과 민주주의: 블랙리스트와 미투 운동의 거울

- ▶ 1,700만 명이 거리에 나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민주주의를 요구했던 촛불 혁명은 단순히 정권교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공권력에 대한 불만, 사회적 재난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절규를 드러낸 것임
- ▶ 촛불 혁명은 비정규직 노동자, 노사분규 현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뿐 아니라 일상에서 지역, 성차, 장애, 이념에 따라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는 아래로부터 올라온 민주주의였음
- ▶ 삼포세대로 대표되는 청년, 동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의 희생자인 자영업·임대차 상인, 같은 일을 하는데도 차별 임금을 받는 여성 등 촛불 혁명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오히려 구조적으로 심화된 차별과 배제 문제들을 해결하라는 요청으로 이해할 수 있음
- ▶ 블랙리스트 사태는 촛불 혁명의 도화선 중 하나지만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와 예술 지원의 팔기이원칙을 국가가 나서서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촛불 혁명 속 시민들이 외쳤던 사회개혁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음
- ▶ 블랙리스트는 예술과 예술인의 검열을 국가가 앞장서서 체계적으로 실행한 국가 검열의 대표적 사례로 예술계에 큰 충격과 파장을 몰고 왔음
- ▶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려고 예술인들이 광화문에서 노숙 농성을 143일간 진행하였고, 블랙리스트 실행에 가담한 많은 사람이 사법처리를 받음. 새 정부 출범 이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출범하여 1년여 조사 끝에 진상조사 결과물과 제도 개선 권고안을 제출함
- ▶ 블랙리스트 사태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문화예술계에서 권력과 위계에 따른 성폭력 사례들이 폭로되면서 본격적인 미투 운동이 전개됨
- ▶ 미투 운동은 문화예술계에서 오랫동안 자행된 성불평등 구조가 드러난 것으로, 특히 예술창작 현장의 위계질서가 만든 성차별 의식과 성폭력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목소리를 담음
- ▶ 미투 운동은 오랫동안 자행된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사건들을 폭로함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평등적 관점으로, 다시 성주류화 관점으로 이동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상황임
- ▶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은 문화예술계 현장과 국가 문화정책의 비전 수립에서 표현의 자유와 창작의 자율성 그리고 성평등의 인식과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 논점이었음



○ 문화다양성과 정의: 차이와 분권의 문화, 공정한 문화 환경

- ▶ 문화다양성은 국경의 지리적 경계가 완화되고 이주민과 난민이 이동하면서 서로 다른 이념과 인종, 지역과 세대가 공존해야 하는 사회의 변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함
- ▶ 문화다양성은 단지 이주민 문화, 다문화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인과 공동체의 문화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임
- ▶ 따라서 문화다양성은 국적, 종족, 인종, 종교, 언어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문화적 요소만이 아니라 개인의 신체와 감성을 구성하는 문화정체성 그리고 문화예술의 다양한 개인과 집단의 표현을 함께 고려해야 함
- ▶ 예술, 문화콘텐츠 산업, 관광 산업 그리고 체육 분야가 정의롭고 공정한 생태계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예술계 현장 역시 창작의 양극화가 심하고 권력관계에 따른 기층 예술인, 청년 예술인들의 노동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실정임. 문화콘텐츠와 관광 분야 역시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기층 인력이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함
- ▶ 체육 분야도 성공한 몇몇 선수와 그렇지 못한 다수 선수 사이에 생존의 간극이 심하고 선후배, 감독·선수 사이의 위계가 강해 체육활동 과정에서 선수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함. 이른바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문화예술계, 콘텐츠, 관광, 체육계 전반에 걸쳐 정의롭고 공정한 환경이 조성되지 못함

- ▶ 표준 공정계약서: 제작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추구하며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계약서임. 표준 공정계약서가 안착되려면 강제성이 필요하기도 함
- ▶ 수익률 배분: 창작자들이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하여 분배되는 수익률이 매우 낮음. 수익 대부분이 유통사나 제작사로 들어가는 상황을 개선해야 함
- ▶ 문화콘텐츠 산업의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생산-유통-소비의 순환과 제작자-배급자-창작자 간의 경제적 분배의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검토가 필요함. 특히 유통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함
- ▶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관련 정책은 늘어나고 있지만 불공정 거래나 생태계 교란을 방지하는 형태의 제도적 보완은 미비한 상황임
- ▶ 콘텐츠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면 문화콘텐츠의 종다양성이 증가되고 문화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
- ▶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노동 권리를 보장하는 환경 역시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예술과 삶이 극단적으로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남
- ▶ 예술인의 사회보장: 예술가 사회보장의 근거를 예술노동으로 간주하여 예술가의 4대 보험(고용, 연금, 의료, 산재)을 실현해야 함
- ▶ 공정상생: 예술가가 공정하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여 예술가들이 역량 차이와 관계없이 상생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함
- ▶ 예술-삶: 예술가의 복지는 예술가의 삶 전체를 고려해야 함. 예술가들에게 삶과 창작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임
- ▶ 예술가의 시간: 예술가의 시간에는 무대 위의 시간만이 아니라 반복적인 연습 시간과 생활시간을 모두 포함해야 함. 예술가들의 복지는 예술가의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해야 함



● **인구와 지리: 문화 환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 ▶ 인구와 지리는 21세기 문화정책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임. 특히 한국은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감소하여 인구가 20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저출산율과 고령화로 인구 유형이 피라미드형에서 2010년에는 ‘항아리형’이나 ‘역피라미드형’으로 바뀌고 있음
 - 현재 대한민국 인구는 2012년을 기준으로 5,000만 명이 넘었으나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1990~1995년에 10.6%였던 것이 2005~2010년에는 4.9%로 급감했음. 2016년에는 2.4%에 불과했으며 출산율도 117명으로 세계 최저임. 반면 고령화의 경우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총 72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했는데, UN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규정함.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이동 중임
- ▶ 저출산과 고령화로 제조 생산 분야의 노동력이 부족해 이주 노동자가 갈수록 많이 들어오고 이주 결혼 여성도 늘고 있음. 한편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데도 사람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으며, 지역의 인구 역시 군·면 단위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 내 주요 도시로 몰리면서 인구분포도가 전 국토 면적에서 도시 중심의 점 단위로 집중됨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 ▶ 2000년대 이후 글로벌화가 가속되어 국가와 국경을 기준으로 하는 지리적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음. 여행, 유학, 이민 등 인구의 자유로운 이동, 이주 노동자의 전지구적 이동에 따른 정주형 인구의 감소로 지리적 형태는 탈국적화·탈국경화하는 추세임. 대한민국의 경우 탈국적화된 지리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남북 분단에 따른 냉전이라는 지리적 현실에서 살아가며, 전통적으로 영호남 갈등은 물론 서울 수도권과 다른 지역의 경제·문화 격차, 지역 분권 부재에 따른 지리적 종속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 ▶ 문화적 관점에서 지리적 문제는 문화의 지리적 분권과 지역 문화의 불균등을 해소하는 문화자원의 분배, 국적과 국경을 넘어서는 문화아시아의 교류와 공존 문제와 직결되어 한류의 비전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고려 지점이라 할 수 있음
- ▶ 저출산과 인구 감소, 노령화와 지역 인구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는 문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제시하지 못함. 또한 탈국적 문화지리의 관점에서 한류나 국제 문화교류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으며, 문화자원의 지리적 분배라는 관점에서 지역문화의 분권정책을 수립하지 않음
- ▶ 인구 변화와 지리적 환경 변화의 관점에서 문화정책의 장기 비전을 수립하는 것은 지역분권과 문화다양성, 문화자원의 분배와 배치의 객관적 근거 속에서 도출할 수 있음
- ▶ 인구 감소와 저출산 시대에 대응이 필요함. 새로운 가족공동체, 1인 가구, 비혼자, 유아-아동 돌봄 문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정책이 수립되어야 함
- ▶ 인구 이동과 노령화에 대비하는 생애주기별 문화 향수, 노인들을 위한 문화 복지 확대, 생애주기별 예술교육의 확대가 필요함
- ▶ 문화 지도(cultural mapping)의 통계와 조사 분석에 따른 지역의 문화자원 분배와 특성화 자원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함
- ▶ 인구-국적-지리라는 경계를 넘어서는 문화다양성의 확대, 이주 노동자·결혼 이주 여성들의 문화 교류와 문화 환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다양한 해외 문화예술가들과 교류·협력 확대, 국내 거주 다국적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 ‘문화민족주의’와 ‘문화자본’의 논리에 기반한 한류정책에서 벗어나 아시아 내 한국의 문화적 자원과 역량이 다른 국적의 문화와 공존하고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함. 해외문화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틀을 바꾸어야 함
- ▶ 인구정책과 문화정책의 연계, 인구 변화에 따른 문화 환경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에 따른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함
- ▶ 요람에서 무덤까지 개인과 가족, 공동체를 위한 생애주기별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해야 함. 인구 환경의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비혼자들을 위한 문화정책이 요구됨
- ▶ 맞벌이 가구가 늘고 핵가족화가 가속함에 따라 아이 돌봄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예술교육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 돌봄 문화정책을 제시해야 함

- ▶ 지역 문화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문화지리 지도를 분석해 지역 문화의 생태계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문화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4차 산업혁명과 인간소외: 새로운 생활양식 추구

- ▶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시대를 일컫는 용어가 되었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적으로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함. 이러한 산업적 변화가 개인의 생활양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고민이 시급한 시점임. 통섭적 환경이 가져올 감각의 지평을 고려한 미래 연구가 필요함
- ▶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책현황은 기본법의 성격을 띠. 「국가정보화 기본법(제14839호)」이 2017년 7월 26일에 공포된 이후 2017년 3월에 발의된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이나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 등은 국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 보임
- ▶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제도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아울러 위원회 형태로 민간 거버넌스를 활용하면 개인의 삶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킬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가능함. 또한 기술과 문화를 융합하면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문화콘텐츠 영역이 어떻게 바뀔지도 논의하고 있음

- ▶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경제결정론과 기술결정론이 지나치게 담론을 지배하여 인간소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거세지고 있음.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담론의 핵심은 기술과 사회문화가 결합되어 구성되는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기술혁명이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하는 데에 있음
- ▶ 문화 영역에서는 모바일, 게임, 메신저 커뮤니티, 대중음악, 영화, 웹툰, 미디어아트 등의 분야에 나타날 변화의 추이와 미래 예측이 필요함. 기술 혁신으로 인간 감각에 새로운 경험과 역량이 강화되어 인간의 새로운 생활양식과 기술문화 생산 그리고 소비 감각에서 변화가 예상됨
- ▶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화 산업과 연계된 ‘초감각지능사업’, ‘창의적 유비쿼터스 건강관리 산업’, ‘메이커 창의 산업’ 등이 발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생활양식과 문화콘텐츠에 미칠 창조적 영향을 상상하기 위해서 ‘예술과 문화, 기술과 과학’(Arts + Culture + Technology + Science)에 대한 문화 연구개발(R&D)의 확대가 필수적임
- ▶ 예술 중심의 창의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술의 창의적 역량을 중시하는 ‘예술 이니셔티브’(arts initiatives)로 콘텐츠 연구개발을 기획 대중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콘텐츠 영화, 게임, 음악뿐 아니라 모바일, 전자기기, 스마트 홈, 교통, 여행 등 일상생활을 새롭게 변모시키는 콘텐츠를 연구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분단과 평화: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문화 프로세스

- ▶ 2018년 초까지도 남북 사이의 군사적 긴장관계가 고조되어 있었음. 북핵 위기와 사드 배치 문제로 한반도에 전쟁 위협이 고조되었음
 - ▶ 북핵과 사드로 대변되는 남북 대치 상황이 지속된다면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가 분쟁이 상시화하는 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선수단 참가와 단계적 비핵화 선언을 한 후 한반도 정세는 급격하게 평화체제 분위기로 전환됨. 북한 선수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문화예술가들의 합동공연에 이어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됨
 - ▶ 이러한 한반도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는 남북 문화교류와 평화와 통일을 위한 '문화 프로세스'(cultural process)에 대한 구체적인 문화정책 이행안(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함
 - ▶ 문화예술 분야에서 남북 교류는 장시간 협상이 필요한 정치적·군사적·외교적 갈등 관계 해소에 참여하여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문화 프로세스가 될 수 있음
 - ▶ 문화교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면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상호 이해의 기반이 형성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바탕으로 평화 관리에 도움이 될 것임
 - ▶ 특히 한반도 분단과 군사적 긴장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국제적인 관심과 연대를 이끌어 낼 수 있음
 - ▶ 한반도가 평화와 번영으로 가기 위한 문화정책의 하나로 분단에 따른 문화적 이질성을 회복하는 것뿐 아니라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문화적 프로세스로 문화 분야에서 전 세계인을 향한 총합적 프로젝트를 수립해야 함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 문화아시아: 교류, 협력, 공존을 위한 한류 3.0

- ▶ 북핵과 사드 배치로 동아시아 지역에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이에 따라 문화 교류와 한류의 중국 진출이 중단된 사태는 동아시아의 정치적·군사적 긴장관계를 그대로 보여 줌
- ▶ 동아시아의 한중일 세 나라가 정치적·군사적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한중일은 한자문화권으로 유사한 문화경험을 공유하는 문화적 권역(cultural region)이라 할 수 있음
- ▶ 한류가 1990년대 중반부터 아시아에서 대성황을 이루며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우월성과 엘리트주의가 표출됨. 이로써 동아시아 국가 내에서 ‘협한’ 기류가 생겨나기도 함
- ▶ 한류가 영화, 드라마(한류1.0)에서 케이팝(한류2.0)으로, 케이팝에서 다시 관광, 음식, 의류, 뷰티(한류3.0)로 확산되고 있지만 산업적 차원에서만 중점을 둬, 시장 중심주의나 문화민족주의를 극복하는 문화적 교류의 관점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함. 아시아를 국경을 넘어서는 하나의 문화권역으로 간주하여 신생전 체제를 끝내는 문화적 교류와 연합을 이루는 다양한 문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임
- ▶ 2017년까지만 해도 북핵 위협에 더해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로 엔터테인먼트업체의 중국 진출이 어려워지고 해외관광객이 줄어들면서 국내 콘텐츠 산업계와 관광 산업계가 큰 위기를 맞았음. 주로 ‘공연취소’, ‘계약보류’, ‘투자협약 중단’, ‘편성보류’, ‘광고계약 무산’ 등의 구체적 피해 사례가 보고되었음
– 2016년 9월 유은혜 의원실에서 발간한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영향」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참여 31개 업체 중 65%에 달하는 20개 업체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에서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고 답변함
- ▶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정상회담을 한 이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면서 동아시아에서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한 문화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 아시아의 문화적 공통점과 차이를 인정하고 탈냉전 시대 문화동반자로서 아시아 각국이 문화로 공존할 수 있는 문화교류 정책의 재구성이 필요한 상황임
- ▶ 아시아가 문화적으로 연대하고 공존하기 위한 공동 목표로 문화아시아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문화아시아는 ‘생성’(becoming), ‘공통의 목표’(common objective), ‘차이와 공존’(difference & co-existence), ‘협력’(cooperation), ‘경험의 공유’(sharing experience)라는 문화적 비전을 담고 있음
- ▶ 문화아시아 정책은 대립과 갈등의 아시아 권역을 상생과 공존의 아시아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 예술, 관광,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기여할 수 있음. 문화 자본과 문화민족주의의 논리에서 벗어나 한류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향유 환경을 조성해야 함

2. 핵심어로 읽는 지금 우리 문화 환경



○ 삶의 미래와 사회혁신: 문화의 사회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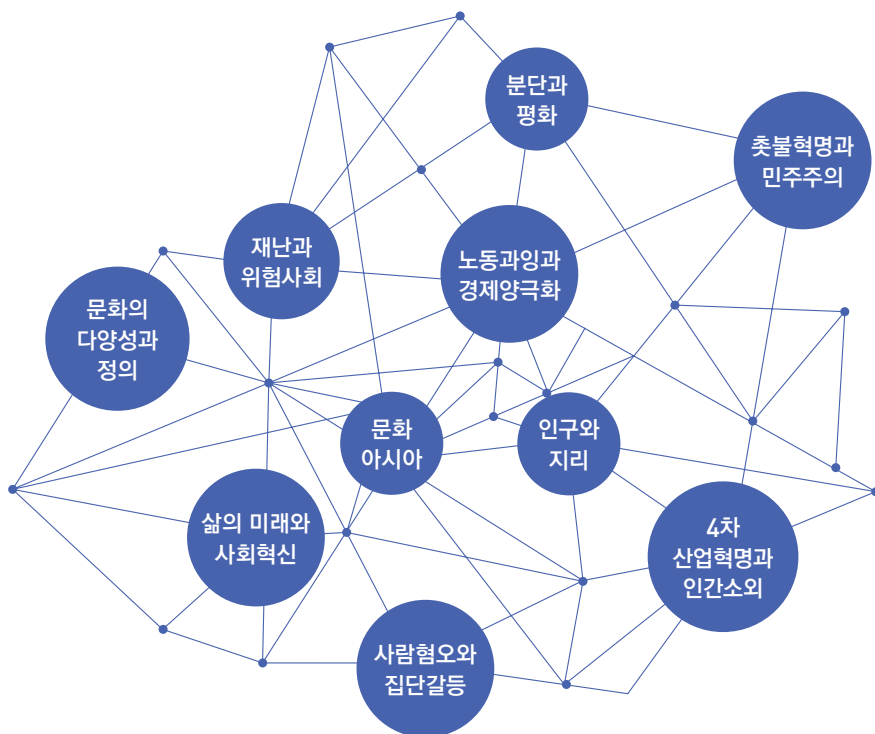
- ▶ 문화는 개인의 미래 삶과 사회혁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존 문화정책의 비전이 문화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함
-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저출산·고령화 시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대에 문화의 위상과 역할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함
- ▶ 문화가 포스트 산업사회 경제 도약의 중요한 자원이 되고 근대적 도시의 낡은 모습을 새롭게 변모시킬 뿐 아니라 재난과 갈등의 시기에 예술 창작이 갈등 해소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동아시아 냉전체제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으로 예측
- ▶ 문화는 4차 산업혁명에서 개인들의 새로운 생활양식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임. 사물인터넷, 유비쿼터스 건강관리,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의 기술혁신 시대에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게 자신의 생활양식을 창조하느냐 하는 것임
- ▶ 문화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교육 수단이자 방법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데 중요한 소통 통로이기 때문에 문화와 예술활동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함
- ▶ 도시재생은 그 도시가 유지해 온 ‘맥락’을 지키면서 공간을 새롭게 바꾸려는 시도임. 이로써 인프라 구축, 도시 시스템 정비,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음. 도시재생은 또한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는 틈을 타 대기업 자본이 침투해서 원주민이 내몰리는 ‘동지

도시재생의 핵심어는 '맥락'과 '주체'로 공간 정체성의 보존, 과거와 현재를 잇는 시간의 중첩 속에서 과거 역사와 현재의 장소성, 예술성 등을 적절히 조율하는 것이 필수 요건임. 문화적 도시재생은 도시의 공간과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음. 문화적 역량을 갖춘 주체자들과 도시재생 생태계의 주요 구성원이 공감대를 형성하여 문화적 자원과 예술의 미적 감수성으로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면서도 동지 내몰림에 저항하거나 그 확산을 억제하는 문화적 도시재생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함

문화를 매개로 일자리 창출, 생태적 삶 구현, 도시 공간 활용, 소통과 협치가 구현되도록 하고 문화를 사회혁신의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해 문화정책의 폭과 깊이를 더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함



2. 핵심어로 읽는 지금 우리 문화 환경



03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 경쟁과 효율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문화로

- ▶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치열한 경쟁과 사회 갈등
 -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난 1966년에 1인당 국민소득은 114달러, 수출은 2억 5,575만 달러에 불과하였음. 그러나 50년 후인 2016년에는 국민소득이 2만 7,561달러로 241배, 수출이 6,000억 달러로 2,400배 상승함
 -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일 중심 사회, 성장 중심 경제로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함
 - 치열한 입시 경쟁, 경제 불균형, 지역 격차, 이주민 증가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됨
- ▶ 재난에 대비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
 - 대구지하철 화재, 세월호 침몰 등 대형 재난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사회적 참사가 인재로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함
 - 속도와 효율보다는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해 건물 붕괴, 화재, 수해 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우선시해야 함
 - 국가정책의 우선순위를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전환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회문화정책이 필요함
- ▶ 문화시설보다는 그 시설을 즐기는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정책
 - 현재 국공립문화예술 기관은 총 393개로 국립 예술기관이 11개,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예술기관이 지방문예회관을 포함하여 382개임²⁾
 - 지자체별로 문화 기반시설을 경쟁적으로 건립하는 시대에서 벗어나 기반시설을 실제로 이용하는 향유자 중심 문화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함
- ▶ ‘하향식’(Top-Down)이 아닌 ‘상향식’(Bottom-Up) 방식의 문화정책으로
 - 문화정책이 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아래로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다양한 문화적



2) 문화체육관광부, 『2017 공연예술실태조사』, 28쪽.

3.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 욕구와 요구를 아래에서부터 수렴하여 현장과 일상을 중시하는 문화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 경쟁과 갈등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문화가 사회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의미를 확장해야 함
-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열린 문화정책을 선언해야 함

㉠ 위기와 청산에서 비전과 미래의 문화로

▶ 블랙리스트도, 화이트리스트도 없는 문화정책으로

- 국가 문화정책으로 관리해 온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밝히고, 다시는 국가가 이념적 잣대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념적 지향을 잣대로 지원 심의에서 이익과 불이익이 생겨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문화정책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문화정책이 헌법에 명시된 예술가의 창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검열과 통제의 정책에서 자율과 협치의 정책으로 전환

- 예술 검열과 지원 배제를 자행한 문화정책을 반성하고 예술 지원정책의 새로운 체계와 패러다임을 구상해야 함
-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려면 무엇보다 문화예술계, 콘텐츠 산업계, 체육계, 관광계와 자율과 협치를 이룰 구체적인 의제를 제시해야 함
- 문화정책을 위에서 아래로 지시·전달하는 통제 방식에서 문화 관료들과 예술가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수평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과거 청산에만 머무르지 말고 미래 비전을 구상하는 문화정책

- 블랙리스트를 넘어 문화정책이 정권의 이념과 코드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미래지향적인 비전 제시가 필요함
- 현재의 사회변동과 사회위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경제·정치·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변할지 예측해서 문화정책이 그에 대응하고 미래의 사회문제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비전을 제시해야 함
- 인구 감소, 기후 변화, 4차 산업혁명, 한반도 평화 분위기 등 우리 사회의 변화 양상을 간파하고 그에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적합한 중장기 문화비전을 수립해야 함

▶ 냉전의 한반도에서 평화의 한반도로 가는 이행기, 문화정책의 변화가 시급

-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로 한반도가 평화의 시대로 가고 있으므로 문화정책에서 신속한 대응과 전략 수정이 필요함
- 문화정책의 비전에서 남북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수립해야 하며, 남북교류를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두고 비전 수립에서 평화를 위한 남북 문화교류 정책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함

○ 젠더 불평등에서 젠더 평등의 문화로

▶ 젠더 불평등에 대항하는 미투 운동

- 미투 운동은 젠더 폭력에 저항하는 운동으로 위계와 권력에 따른 젠더 불평등의 현실을 고발하고 문제해결을 요구하면서 불평등을 없애는 실천 운동으로 발전함
- 미투 운동은 여성 혐오에 저항했던 젠더 운동의 진화된 연장선으로 볼 필요가 있음
- 여혐 운동이 남성 권력에 따른 젠더 차별을 개선하려는 담론적 운동이었다면, 미투 운동은 담론 운동을 넘어 젠더 폭력을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법적 처벌과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발전함

▶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의 의미

- 문화예술계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은 오랫동안 자행되었지만 침묵했던 남성 위계 권력에 따른 일상적 성폭력과 성차별을 고발하는 의미가 있음
- 예술 권력의 독점과 위계적 도제방식에서 관행처럼 자행된 젠더 차별과 성차별을 더는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행동으로 제시함
- 미투 운동은 위계 도제식 예술교육과 상층부 남성 위계 권력이 만나 강고해진 젠더 폭력이 예술의 장을 왜곡하고 불공정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저항까지 포함함. 단지 성적 문제만 제기하는 것이 아님

▶ 미투 운동 이후 문화예술계의 지각 변동

- 미투 운동은 예술계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켰으며, 블랙리스트 사태가 준 충격 못지않게 문화예술계 내에서 중요한 쟁점을 제시함
- 미투 운동은 예술교육에서 잘못된 근대적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젠더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을 뿐 아니라 교육 방식, 교육자와 학생들의 관계, 교육의 윤리문제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함



3.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 미투 운동으로 예술에서 이야기하는 표현의 자유와 타자에 대한 차별의식 사이의 복잡한 문제를 이론적으로 제기하게 만들
- ▶ 젠더 평등으로 가는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미투 운동은 문화예술계 안의 젠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 변화를 요구함
 - 미투 운동은 특히 문화예술정책에서 젠더 감수성을 고려하고 젠더 주류화를 제도적으로 실천해서 젠더 폭력이라는 구조가 바뀌기를 희망함
 - 문화예술정책은 젠더 폭력에 대응하고 젠더 감수성을 중시하며 젠더의 주류화를 위한 제도적 보장으로 나가야 함

○ 불공정과 독과점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로

- ▶ 불공정으로 기울어진 문화 현장을 바로잡는 문화정책
 - 공연예술 현장의 위계 권력과 계약 불이행, 불공정 계약 등으로 현장 기층 예술인들이 적절한 대우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문화콘텐츠 산업, 관광 산업에서도 기층 현장 인력들이 불공정 계약과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 체육계에서도 선수와 지도자, 선배와 후배 사이의 위계에 따른 부당한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소수 유통자본의 독점이 심해 창작자들이 수익 분배와 저작권 문제 등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므로 기울어진 문화예술계의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함
- ▶ 창작, 유통, 향유의 관계와 분배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 영화 산업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대형 상업영화의 스크린 독과점과 메이저 배급사들의 권한 강화로 영화의 다양성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
 - 방송, 대중음악, 게임콘텐츠의 경우에도 제작-유통-소비 과정에서 각자의 권리와 권한이 고르게 분배되고 수익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함
 - 저작권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문제가 된 창작자-제작자-유통사 간 저작권 신탁과 수익 분배, 가격 결정에서 각각의 이해와 요구를 공정하게 반영하도록 해야 함
- ▶ 위계와 관행으로부터 문화예술계 현장 인력 보호
 - 공연예술계 단역배우, 무대기술 스태프, 문화기획자 등 공연예술계에서 활동하는 현장 인력들에 대한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공정한 대우가 필요함

- 방송 분야의 구성작가, 출판계의 교정·교열·편집자, 영화와 드라마 촬영 현장의 단역·엑스트라 배우와 스태프, 만화·애니메이션·웹툰 시장에서 활동하는 단순 작업 창작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가 필요한 시점임
- 문화예술, 문화콘텐츠 산업 제작 현장의 불법 노동시간 연장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권위와 위계에 따른 부당한 지시와 강요 등을 금지하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

▶ 모두가 다양하게 문화의 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모든 인력이 지위와 위계, 역할과 기능의 차이로 차별받지 않도록 공정한 환경을 마련해야 함
- 다양한 문화예술인이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함

○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의 문화로

▶ 분권형 개헌의 시작, 자치분권의 시대로

-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분권형 개헌 제안으로 문화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특히 문화분권을 실현하려면 지역문화정책이 핵심 사안이며 장기적으로 문화정책에서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기 위한 계획이 필요함
- 지역문화의 분권은 장기적으로 문화정책, 행정, 계획 등에서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자치로 이행해야 함

▶ 문화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구체적 방향 제시

-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지역 문화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실행조직 등 실행계획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지역문화의 분권을 구체적·장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 그에 따른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만들어야 함
- 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중앙에서 만들어서 내려주는 문화분권 계획이 아니라 스스로 중심이 되어 만드는 자발적이고 고유한 문화분권 정책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함

▶ 문화 인프라 분권에서 문화자치와 고유성을 만드는 정책으로

-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한 문화분권정책의 주요 방향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문화 기반 기관들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었음



3.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 문재인 정부의 문화분권정책은 문화 인프라의 지방 이전 단계에서 벗어나 공공문화 기반시설을 지역분권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어야 함
- 문화분권정책이 실질적 문화자치로 가려면 지역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지역의 고유한 문화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함
- ▶ **실질적 문화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 구상**
 - 실질적 문화분권을 실현하려면 문화행정을 혁신하고 전달체계 방식을 바꿔야 함. 즉 중앙과 지역이라는 위계질서 속 낡은 관행을 개선해야 함
 - 문화 재원의 구성에서도 재원의 규모와 배분, 활용 방식에 관해서 실질적인 문화분권의 수준에 맞게 권한을 부여해야 함
 - 주요한 지역문화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해야 함

② 일 중심에서 쉼이 있는 문화로

- ▶ **일 중심의 사회, 과도한 노동시간**
 - 한국은 2016년 기준 OECD 국가 중 연간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멕시코(2,255시간)에 이어 2위를 차지함. 이는 OECD 35개 회원국 평균인 1,764시간보다 305시간이 더 많은 것임.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개인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됨
 - ‘일과 생활의 균형’(Work & Life Balance) 지수에서도 24위를 기록하여 일과 여가에서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자유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주간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여가시간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정책이 필요함
- ▶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여가 시간 필요**
 - OECD 발표에 따르면 한국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6년 기준 331달러로 미국(633달러)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OECD 평균 471달러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임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현재 주당 68시간까지 허용되는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해 노동시간 단축 시대로 이행할 예정임
 -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가시간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님.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려면 비(非)노동시간을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여가 시간의 질적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수준이 높아질 필요가 있음

▶ 자유시간을 문화시간으로

-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자유시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가 시간이 자연스럽게 보장되지는 않음. 대부분 여가 시간에 드는 비용에 부담을 느끼며 삶을 즐길 마음의 여유가 없음
- 한 인터넷 회사가 20~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줄여서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운동(50.6%), 집에서 휴식 및 잠들기(46.1%), 텔레비전 보기 등 혼자만의 시간 갖기(38.8%), 가족과 저녁식사(13.7%), 외국어 공부(12.4%), 진학 및 자기계발(11.2%), 악기배우기·영화보기 등 문화·취미생활하기(3.6%)로 나옴
- 전체적으로 문화와 예술 분야의 취미생활을 원하는 응답이 낮게 나와 자유시간이 문화시간으로 전환될 개연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보여 줌. 따라서 문화시간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정책이 필요함

◎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소외가 아닌 인간 감성의 문화로

▶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간소외에 대한 공포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술자동화로 인간 노동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높음
- 인간의 일을 로봇이 대체하면서 대량 실업 사태가 우려되고, 인간 본연의 노동과 생산력에 대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됨
- 기술자동화로 인간의 생활이 편리해지는 반면 인간의 고유한 사유력과 상상력의 쇠퇴, 노동양극화에 따른 소외 등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됨



▶ 기술과 경제 중심에서 인간의 생활양식을 중시하는 문화로

- 4차 산업혁명의 주된 의제는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생명공학 등 주로 기술혁신과 그에 따른 산업경제체제의 변화에 집중되어 있음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혁신과 산업구조의 변화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문제의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4차 산업혁명의 주된 목표가 기술혁신으로 인간의 삶의 잠재성이 얼마나 현실화되느냐에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인들의 생활양식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대응이 필요함

▶ 인공지능 시대, 예술 상상력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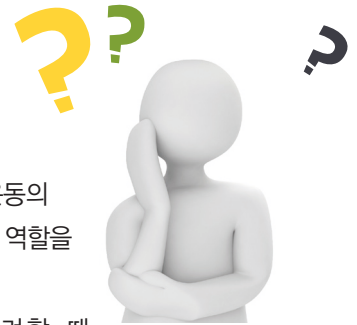
3.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

-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하던 단순 노동 직종들이 사라질 우려가 있는 반면 소설가, 음악가, 무용가 등 문화예술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남
- 인공지능이 인간의 단순한 육체노동을 대체할 수는 있지만, 고도의 사유와 상상력이 필요한 창의적인 일은 대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인공지능 시대는 기술혁신의 도움을 받아 예술의 창작 잠재성이 더 확대되고 상상력이 더욱 활성화하는 환경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됨
- ▶ **인간 고유의 창조적 역량을 높이는 계기로 전환**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화와 예술이 기술과 경제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기술과 경제를 통제하는 주도권을 가져야 함
 - 문화정책은 인간이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혁신에 따른 경제발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인간의 창조적 상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문화예술의 표현과 창작의 실험성을 높이고 일상에서 문화의 상상력이 높아질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함

04 문화비전의 표어: 사람이 있는 문화

○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 ▶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의미하는 것은 문화정책의 근본 원리와 가치를 사회의 변화와 미래 예측에 근거하여 새롭게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임
- ▶ 문화정책의 비전은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고,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의 성찰과 대안을 담아야 하며, 문화가 정치·경제·사회의 변동에 따라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제시해야 함
- ▶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문화비전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고려할 때, 「문화비전2030」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하고, 삶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며, 다양한 감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내재적인 힘과 역량을 높이는 문화를 담아야 함
- ▶ 사람을 중시하고 존중하는 문화비전은 세월호 사건과 촛불 혁명에서 강조했던 ‘누구나 평등한 사회, 누구나 평등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연합’의 목소리를 담고, 나아가 문화예술계의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을 성찰하는 목표를 가져야 함
- ▶ 사람에 대한 혐오, 대립·배제·갈등의 시대를 청산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공존·협력·소통·차이의 시대로 나아가는 문화비전을 담아야 함



○ ‘사람이 있는 문화’의 근본 원리

- ▶ ‘사람이 있는 문화’는 문화가 사람의 존재 이유를 묻고 답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그동안 국가 문화정책이 문화가 국민에게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을가에 대한 ‘목적’에 관심을 기울였거나, 문화가 국민의 삶의 행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방법’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문화비전2030」은 사람 자체의 존재, 사람 안에 내재한 문화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성찰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4. 문화비전의 표어: 사람이 있는 문화

- ▶ ‘사람이 있는 문화’는 문화의 기능·역할·수단의 의미를 묻기보다는 사람의 존재성·본질성·정체성의 의미를 묻는 근본적 원리를 지향해야 하며,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우리 사회가 지난 20년간 겪은 사회적 재난과 갈등, 문화의 사건들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제시된 것임
- ▶ 사람이 있는 문화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는 문화’, ‘사람을 창의적으로 해 주는 문화’, ‘사람을 잘살게 해 주는 문화’와 같이 목적 추구형 기능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람의 존재이유와 본질적 가치에 다가가는 것을 궁극적 원리로 삼고자 함
- ▶ 그런 점에서 ‘사람이 있는 문화’는 문화의 근본 원리를 중시하고, 문화가 사람들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로 인식될 수 있는 사회적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포함

○ ‘사람이 있는 문화’가 추구하는 가치

- ▶ 사람을 중시하고 존중하는 문화는 사람 안에 내재하는 문화의 본질적 가치에 기초함. 사람의 사고, 활동, 표현의 자율성이 문화의 본질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고 사람 안에 잠재해 있는 창조적 역량을 발휘해 사회가 발전하는 토대를 굳건하게 하는 것도 중요함
- ▶ 따라서 ‘사람이 있는 문화’가 추구하는 주요 가치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임
- ▶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의 가치는 문화의 기본 가치이며 정치적 전환, 경제적 위기, 사회적 변화의 시대에 문화정책의 비전을 담는 가치로 가장 적절함



05 문화비전의 가치

○ 3대 가치의 도출 근거

- ▶ 「문화비전2030」의 3대 가치는 혐오와 절망, 사회적 재난, 촛불 혁명, 블랙리스트, 미투 운동 등 정치·경제·사회의 격변을 거치면서 문화가 어떤 비전을 담아야 하느냐에 대한 근본적 성찰에서 비롯함
- ▶ 3대 가치는 특히 문화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기본이념을 참고하여 반영함
 - 문화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 3대 가치는 개인의 기본 권리, 사회구성원의 책무, 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개인, 공동체, 사회가 문화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단계 발전하자는 비전을 담음

○ 자율성의 가치

- ▶ 자율성은 개인의 자율적 권리와 판단과 행동에 기반함. 개인의 권리와 생각을 타인과 집단, 국가에서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것에서 자유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가치를 의미함
- ▶ 자율성은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받고, 개성과 감각의 특별함을 중시하며, 생각과 행동에서 개인이 자기결정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강조함
- ▶ 자율성은 문화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며, 개인과 공동체의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함
- ▶ 자율성은 자본과 권력으로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며, 문화의 창조적 상상력에 기초하고, 문화 역량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본이 되는 가치이기도 함

5. 문화비전의 가치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1) 자율성의 개념과 가치³⁾

[자율성의 개념]

- 자율성은 개인의 자율적 권리와 판단과 행동에 기초함. 개인의 권리와 생각을 타인과 집단, 국가에서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것에서 자유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가치
- 자율성은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개성과 감각의 특별함을 중시하며, 생각과 행동에서 개인이 자기결정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강조
- 자율성은 문화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데 가장 근본적인 가치이며, 개인과 공동체의 학문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
- 자율성은 자본과 권력으로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며, 문화의 창조적 상상력에 기초하고, 문화의 역량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데 기본 가치이기도 함

“문화는 삶의 총체적 방식이며 동시에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사회적 실천이다”

문화를 ‘지적·상상적 산물’로만 여기는 것은 문화를 주로 고도의 학술적·예술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만 보는 것이다. 문화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들이 긴밀하게 연결된 ‘삶의 전체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_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_

- ▶ 문화국가의 의미가 국민 국가적 계몽체제로부터 자율성과 자유성에 바탕을 둔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개념으로 옮겨간 현재, 이를 국가운영규범/체제에 구체적으로 녹여내야 할 때임. 국가문화정책에서 자율성의 가치를 보장하고 확산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국가가 문화 창조나 계몽의 주체로 기능하는 반문화적 현상을 초래하는 왜곡된 규범과 시스템을 정비해야 함

3)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2018),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컨퍼런스 자료집』, 한상희(2018), 『블랙리스트 방지 법제도 연구』, 한국입법학회.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 ▶ 자율성 가치를 실현하려면 기본권으로서 문화권과 문화국가원리를 바탕으로 한 법·제도 개정과 행정운영 시스템 개혁까지 동시에 해야 함

[문화국가원리와 자율성의 가치]

- 문화국가원리에 들어 있는 국가의 문화정책 방향인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과 문화향유권
- 자율성과 자유성에 바탕을 둔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장

“문화국가원리에 들어 있는 국가의 문화정책 방향인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과 문화향유권”

- ▶ 국가는 국민과 사회 나아가 문화예술영역에서 자율성을 보장해야 함. 이를 위하여 국가의 개입은 가능한 한 간접적·소극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문화적 자율공간 – 예컨대 음악, 미술, 영화 등 문화예술산업의 하위영역, 문화창작·생산·유통·소비 등의 하위영역, 나아가 문화적 지방자치영역 –의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야 함
- ▶ 국가는 문화예술의 육성과 지원,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물론 이때 요청은 문화에 대한 간섭·규제·통제가 아니라 지원을 의미함. 여기서 첨언해야 할 것은 국가의 본래적 정책의무에 해당하는 문화적 간접자본의 형성, 즉 문화시설이나 문화공간 등 문화 인프라를 창출하고 확충하는 것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사항이라는 점임
- ▶ 문화적 평등의 확보는 문화국가뿐 아니라 사회국가와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바탕을 이룸
- ▶ 자율성과 자유성에 바탕을 둔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장

국가의 문화정책은 문화국가조항으로 정당화되는데, 문화국가조항의 기본적 의미는 문화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위에 국가·정부가 문화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문화에 대한 지원과 육성 정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에 있음

“오늘날 문화국가에서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화가 생겨날 수 있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헌가1)

- ▶ 우리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5. 문화비전의 가치

보장하기 위한 사회국가원리 그리고 국가에 문화의 창달과 발전을 위한 정책의무를 부과하고 문화행정의 토대를 이루는 문화국가원리를 기본원리로 삼고 있음

- ▶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라는 규정에서 문화향유권을 도출했듯이 문화적 기본권은 인간생활의 핵심 권리로 자리 잡고 있음. 이렇듯 국가문화정책에서의 문화권과 이에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인 자율성과 다양성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정책 수립은 예술영역에 국한된 표현·창작의 자유나 수동적인 문화향유의 범위에서 확장된 국민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함
- ▶ 정부의 권한이자 동시에 헌법적 의무인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국가적 개입과 지원, 육성과 조정은 이 원칙 아래 전개해야 함

2) 자율성의 가치방향

“기본적 인권의 집합적 실천태로서 문화”

- ▶ 문화는 대중이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삶에 부여하는 의미와 가치이며 나아가 그러한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고 향유하는 생활방식임.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문화는 시민으로서 대중이 향유하는 기본적 인권의 집합적 실천태가 되며, 기본적 인권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국가의무를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됨
- ▶ 문화향유권은 자율성을 가지는 문화가 다양하고도 지속가능하게 제공될 때 비로소 가능하며 따라서 문화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육성 정책들은 이 문화향유권을 실천하기 위한 대응적 개념으로 구성되어야 함

[문화정책 핵심가치]

-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창작자의 권리 보장
- 문화적 평등과 문화적 정의 실현
- 시대변화에 따른 공동체의 인식변화에 부응하는 문화·예술정책 정비
- 문화예술인·문화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1) 핵심가치별 문화정책 실천 방향

- ▶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창작자의 권리보장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 다양성과 상호 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공정성, 공공성, 다양성, 균형성, 사실성을 담아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같이하는 국가문화정책으로 전환
- 공동체의 총체적 활동 산물과 인식 변화를 문화의 핵심지위로 산정한 문화정책 수립

- 헌법은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장해야 할 정신적 기본권으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을 규정함. 이들 기본권은 견해와 사상의 다양성을 본질로 하는 '문화국가원리의 불가결의 조건'이라고 선언함. 이에 따라 국가문화정책도 다양성과 상호존중 이념을 바탕으로 공정성, 공공성, 다양성, 균형성, 사실성을 담아내 헌법에서 기본권에 대한 인식과 행동을 같이하는 전환이 필요함. 이와 더불어 문화국가 개념이 시대적으로 변이함에 따라 근대 문화국가 이데올로기가 전제하는 교양 수준을 넘어 일상생활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문화 영역에 포섭하면서 예술로 규정되는 특정영역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생산해 내는 총체적 활동 산물과 인식 변화를 문화의 핵심 지위로 산정하고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함
- 헌법이 수많은 인권항목 중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에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며 그 파생적 기본권으로서 예술의 자유와 창작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규정(헌법 제22조)을 둔 것은 이 때문임. 여기서 표현의 자유는 진실 발견이나 민주주의를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뿐 아니라 인격의 발현 내지는 다른 사람의 표현에 대한 관용의 의미 또한 있음.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정치뿐 아니라 문화영역에서도 또한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문화적 다양성, 다원성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음. 그것은 헌법질서와 타인의 권리 및 도덕률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규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헌법 제21조 제4항)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함을 의미. 아울러 비록 주류의 가치관이나 세계관과 다르다 하여 배척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적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라고 요구하는 헌법적 요청이기도 함
-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질서와 도덕률을 보장하기 위해 내용을 규제하는 제도들임. 우리 정부는 아직도 청소년보호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간행물윤리위원회, 무선인터넷콘텐츠자율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등 다양하고도 이질적인 내용 규제 심의기구들을 설치하여 매체별 심의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문제는 이러한 심의기구들이 문화예술산업계의 자율적 규율이 아니라 정부(유사기구) 주도형 사전규제 방식에 치우침으로써 문화예술산업의 발전뿐 아니라 국민의 문화향유권에도 소극적·부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점임
- 우리 헌법에서 엄연히 검열 금지를 비롯한 제반 표현 규제 장치들에 대한 개선 의무를 규정했는데도 현재 상황은 청소년보호 등 도덕률의 최소한 보장에 허용되는 유통구조의 규제라는 수준을 넘어서 문화예술산업의 질적 내용까지 간섭하는 헌법 위반 수준에 이름

5. 문화비전의 가치

▶ 문화적 평등과 문화적 정의 실현

- 문화향유권의 평등한 보장
- 문화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실현 기회 보장
- 문화예술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격차 해소
- 문화의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한 환경 조성

- 우리 헌법의 굳건한 기본원리로 인정되는 사회국가원리는 국가가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해 줌으로써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오늘날 중대한 정치적 의제가 되고 있는 복지국가의 논의들은 이러한 사회국가원리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적 틀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사회국가원리는 사회적 정의와 사회적 안전, 사회적 평등이 중심개념이며 궁극적 지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물질적·사회적 토대를 형성함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임. 이런 사회국가원리를 문화영역에 적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문화적 정의와 문화적 평등임
- 문화평등 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전 국민의 문화권 신장’이라고 볼 수 있음. 이런 관점에서 문화평등은 사회국가원리의 또 다른 표현이자 동시에 민주주의의 실천 양태를 이룸

① 문화향유권의 평등한 보장이 필요

- 사회국가원리가 ‘최저한도의 문화적 생활을 할 권리’를 의미한다면 이는 문화생활이 그 자체로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핵심적 구성요소가 됨을 선언한 것임. 즉, 기본적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음이 ‘인간다운 생활’의 중심개념이며 이는 모든 국민이 정치적·사회적 지위는 물론 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일반적·보편적 권리임. 이런 관점에서 문화향유권의 평등한 보장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헌법 제34조의 요청에 따라 국가의 기본의무로 설정됨

② 국가는 모든 국민이 문화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와 그 실현 기회를 보장해야

- 주로 문화적 인프라의 형성이 이에 해당하는 국가의무라 할 것이나 그와 더불어 문화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원조 또한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정책 영역임. 일종의 문화 격차(cultur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정책 의지가 요구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약자를 위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점

③ 문화예술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

- 문화자본을 중심으로 재생산되는 불평등한 구조개선도 중요한 과제임. 정부의 문화정책이 총체적이고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체계적이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음

- 이에 관해서는 특히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고려가 중심 정책사항이 될 텐데 문화예술산업 종사자에 대한 4대 보험 실시, 그들의 기초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과 같은 인간다운 근로조건을 구현하기 위한 법제 정비와 집행, 나아가 문화자본의 시장지배력으로부터 피해 당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내지는 표준약관제의 실시 등이 이에 해당함

④ 이와 관련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요청은 문화의 다양성

-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문화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가능하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그때그때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생산되고 그것이 그 각각의 수요자인 구체적 문화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유통될 수 있어야 함. 문화국가원리가 문화적 다양성의 요청을 내포한다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임. 이러한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라는 요청은 그대로 문화 자율성의 요청으로 이어짐. 문화의 생산은 생산 주체인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의와 비판의식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함. 문화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문화 생산이 가능해진다는 것임

▶ 시대 변화에 따른 공동체의 인식 변화에 부응하는 문화예술정책 정비

- 권한규범에서 권리규범으로
- 자기조직권 관점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 틀로 전환
- 문화예술인과 문화소비자 보호
- 내용규제 개선

- 현재의 문화예술정책, 특히 그에서 파생되는 문화예술산업정책은 적어도 법 측면에서 바라볼 때 상당한 수정이 절실함. 문화예술의 실질적 진흥을 중심으로 문화적 자율성 보장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의 간접개입 방식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은 정부 영역 바깥에서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임. 이는 산업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문화예술산업은 문화예술의 창작을 보장하는 하나의 외곽체계일 뿐이기 때문임. 그뿐만 아니라 문화적 약자와 소수자, 취약자 문화와 신흥 문화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보호막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나아가 문화주체에 대한 지원과 그 결과로의 문화적 다양성,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강구해야 함. 과도하게 집행되는 내용 규제도 자율 규제 방식에 따른 유통구조 개선과 내용정보 제공이라는 수준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① 권한규범에서 권리규범으로

-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법제 정비 과정은 행정기관 중심적인 사전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5. 문화비전의 가치

민간자율 중심의 사후 규제 축으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함. 실제 이런 규제개념의 변화는 현대 행정의 기본방향으로 모든 정책 영역에서 타당하겠지만 특히 문화적 창의성과 자율성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문화예술영역에서 그러함

-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초상권자에게 부여하는 법상 권리가 실제 문화예술산업 현장에서 충분히 보장되는지 점검하고 이를 구현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함

② 자기조직권 관점을 기반으로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 틀로 전환

- 우리 헌법체계가 문화국가원리를 선언했다고 해서 그것이 국가의 직접적 개입과 통제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님. 중요한 것은 국가적 개입이 아니라 문화 영역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면서 발전하고 이로써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점임. 이에 현재 행정청 내지는 그의 이니셔티브에 따라 설립되는 준행정기관으로서 '민간'단체가 규율권과 통제권을 행사하는 체제는 조속히 시정해야 함. 각종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국가적 권력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다양한 하부기관이나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경유하여 국가가 간접적으로 문화예술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관여하는 현재 체제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결코 부합하지 않음
- 국가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업무는 문화예술 자체의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면서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조합이나 협회 등의 조직을 결성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대해 1차적 시장규제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일종의 자율규제의 틀을 마련하고 행정청은 그 자율규제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함. 물론 이 과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규제기관에 일정한 지원(물적·재정적 지원)을 도모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 사항임. 하지만 그때에도 국가가 직접 자금을 조성하여 자율기관에 귀속시키는 것은 또 다른 규제와 간섭의 계기를 만들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오히려 자율적인 민간기구들이 자조활동과 자율규제활동을 할 때 필요한 재정적 수요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금을 조성하거나 운영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법제상 근거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정책수단임
- 유네스코 권고에서도 예술가들은 '그들의 공동 이익을 집단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함. 그래서 이들은 "필요하다면 방위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직업적 부류의 하나로 인정받을 권리를 가져야 하고 또한 노동조합이나 직업단체를 구성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단언함. 문화예술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의 필요성은 문화예술인들의 자기조직권 관점에서 조정하고 설계해야 한다는 것임

③ 문화예술인과 문화소비자 보호

- 문화소비자에게는 무엇보다 문화상품에 대한 알 권리 보장과 접근권 강화가 절실함. 전자를 위해서는 문화상품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해야 함. 즉 문화상품의 질적·양적 수준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분석·정리해 문화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문화상품에 대한 심사와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비평 체계를 문화영역별로 자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과 협력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음. 후자를 위해서는 전술한 문화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개입이 절실함

- 극장이나 공연장, 전시장 등 다양한 공간이 지역단위로 구성되는 동시에 지역 주민센터나 도서관 등과 같은 공적 시설이 지역문화센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배려하고 협력하게 해야 함. 그리고 바로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질 때 헌법상 문화국가원리가 지향하는 문화적 다양성의 실현은 물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문화예술산업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임
- 아울러 문화소비자에 대한 문화복지정책은 또 다른 헌법 요청이기도 함.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사회적 약자나 이주민 등 소수자 집단에 대한 재정적 지원(예컨대 문화바우처 지급 등)이 절실하며, 문화향유 자체가 일상생활의 필수품으로 정립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의료비 공제 등의 예와 마찬가지로 각종 소득세 산정 과정에서 일정 수준까지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는 식의 세제 지원도 필요함

④ 내용 규제 개선

-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산업을 가로막는 큰 장애 중 하나가 과도한 내용규제의 틀임. 그것은 간행물, 방송·통신, 게임, 공연, 비디오, 영화, 음악, 선전·광고, 전자출판, 무선콘텐츠 등 거의 문화예술산업 전역에 걸쳐 가장 광범위한 형태로 이루어짐. 하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이들 각각의 매체별로 별도 심의기구가 별도 기준에 따라 내용을 규제하는 바람에 동일한 콘텐츠가 매체마다 다른 규제를 받는 기현상까지도 발생한다는 점임.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 규제를 대부분 정부 내지는 준정부적 성격의 민간기구에서 사전에 하는 바람에 내용 규제의 관료화 현상은 물론 실질적으로 검열에 상응하는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기도 함. 또 매체 단위에서 수직적으로 규제하는 관행은 매체융합의 시대적 현상에 속수무책이거나 무리한 규제로 이어지며, 한류 등 전지구적으로 확대되는 문화예술산업에 대하여 국지적 심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문화예술산업의 확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함. 요컨대, 현재의 내용 규제 체제는 마땅히 해야 할 문화적·사회적 고려와 산업적·경제적 고려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비효율적·비경제적·비민주적 국가규제로만 귀결하고 있음
- 무엇보다 이제는 정부주도형 규제체제에서 과감하게 민간자율 규제체제로 전환하고 국가는 사후적으로 민간영역에서 걸러지지 못하는 내용 표현만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즉, 국가는 불법 표현을 제외하고는 민간 자율, 사후 규제 방식을 취해 민간 영역이 자율적으로 유해 표현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후원하는 한편, 민간부문에서 거르지 못한 채 유통되는 표현에만 통제력을 행사하는 형태로 이행해야 함
- 내용 규제 또한 표현 자체에 문화소비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하기보다는 표현 내용에 대한 정보를 심사하고 분류하여 그 결과를 문화소비자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문화상품 향유 단계에서

5. 문화비전의 가치

문화상품소비자의 선택으로 규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내용 규제의 경우 게임셋다운제나 쿨링오프제 등에서 보듯이 정부주도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규제 방식을 버리고 3분할규제의 협력방식을 체계화하여 국가부문, 문화예술산업부문, 공공(시민사회)부문이 상호 견제하고 협력하는 균형 구조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소극적·부정적 규제에서 적극적·긍정적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매체별·장르별 비평과 정보 제공 체계를 확립하고 지원할 뿐 아니라 문화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한 전사회적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문화예술인·문화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 정신적·물질적 지원으로 사회적 인식 향상
- 노동·고용 조건 향상
- 예술가들을 위한 연금제도 마련과 건강 보호
- 문화 주체들의 창작·향유 활동 지원과 보호

- 유네스코는 1980년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를 공표함. 이 권고에서는 예술을 ‘인간생활의 총체적인 한 부분’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예술이 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선언함. 나아가 예술가는 사회생활과 사회진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확인하고, 예술가를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하는 인간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함. 즉, 예술가들은 예술가적 직업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지위에 관계되는 모든 법적·사회적·경제적 이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또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임. 그래서 이 권고는 이런 권리가 있는데도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가난하며 사회서비스나 사회보장에서 소외된 예술가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려고 제정했음. 이에 따르면 예술가들은 ① 창조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 ② 국가 문화정책·발전정책 수립과 이행 그리고 평가에 참여, ③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 ④ 시민교육, 특히 청소년의 미적 감수성과 세계관 수립, 인식 향상에 기여하는 등 순기능을 수행함. 그러기에 국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고려하고 또 시행해야 한다고 함

① 정신적·물질적 지원으로 사회적 인식 향상

- 저작자·예술인 등의 권리보장을 단순히 저작권이나 실연권 등의 보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저작자·예술인들의 생활보장에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음
- ▷ 자기 예술에 전념하기로 하고 경력을 시작하는 입문 시기에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반 수단을 고려해야 함. 예술가들이 자기 자신의 분야에 고용되도록 장려해야 하며, 이는 특히 공공 경비의 일부를 예술활동에 할애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함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 ▷ 예술활동을 촉진하고 예술가를 위한 유급 작업 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예술활동의 결실에 대한 공적·사적 수요를 자극해야 함
- ▷ 특히 이것은 예술단체와 개별 예술가들의 위원회 또는 지역적·전국적 차원에서 예술활동 기구를 이용해 보조금이나 예술기금을 설립하여 조장해야 함

② 노동·고용 조건의 향상

- 국제노동기구 기준에서 정의한 노동·고용 조건에 관한 법적 보호를 예술가들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특히 여기에는 노동시간, 주간휴일, 유급휴가, 생명·건강과 노동환경 보호 기준이 포함되어야 함
- 예술가들의 작업 전제에 관한 특수한 문제들을 고려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건축 유산과 환경 보존을 보장하고 예술적 활동을 위한 예술가의 전제 변경에 관계되는 규정들을 집행할 때는 안전과 건강에 관련되는 규정들을 확립해야 함

③ 예술가들을 위한 연금제도 마련과 건강 보호

- 예술가의 소득의 불확실함과 격심한 등락, 예술활동의 특수한 특징 그리고 많은 예술적 직업이 고용기간이 비교적 짧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특정 부류의 예술가들을 위한 연금권을 마련해야 함. 이때 특정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가 아니라 경력 기간을 그 기준으로 해야 함
- 예술가의 건강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연장하기 위해 의료 지원을 충분히 해줄 것이 요망됨. 이는 작업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뿐 아니라 예방 목적으로도 해야 함. 또한 예술가적 직업에 특유한 건강문제의 연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④ 문화주체들의 창작·향유 활동 지원과 보호

- 전통적인 문화의 소통구조는 개개의 문화생산자가 개별적·고립적으로 창작하면서 문화 아이템들을 생산하고 문화향유자들이 이를 사적인 경로로 획득 소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옴. 문화의 생산에서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아주 사적이고 개별화된 구조가 일반적이었던 것임. 하지만 이런 문화구조에 문화자본이 들어가고 문화예술산업이 대형화·광역화·종합화·융합화 등의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되자 문화예술산업의 영역에서는 이중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음. 즉,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한쪽에서는 자본의 논리에 따라 대량적·획일적 소통구조가 형성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전통적인 사적 거래의 틀을 계속 유지한 채 개별적·특수주의적 형태의 소통구조가 잔존하게 됨. 문제는 이 과정에서 대형 자본의 시장지배력에 따른 문화생산자와 문화향유자의 종속화 현상임. 즉 개별화되어 있는 문화주체들에 대하여 대형 문화자본이나 대형 문화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계약상 우월한 지위를 오용하는 경우 문화 자체가 왜곡되는 것은 물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인격성조차 유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게 됨
-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문화예술인·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5. 문화비전의 가치

- 시급함. 물론 이는 정부가 직접 하기보다는 문화영역별로 자율적인 자조조직을 구성하되 정부는 배후에서 이 자조조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좀 더 적절함. 문화의 자율성에 대한 배려라는 점뿐 아니라 각 문화 영역의 전문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자조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임. 이를 위해 문화영역별로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게 하거나 그 기금에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자조조직의 물적 토대를 구성하게 하고 그에 기반한 공제조합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 이 법은 불공정 계약서 작성이나 미실시에 대한 처벌이 미약할 뿐 아니라 수혜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음. 또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과 같이 정작 필요한 사회보장이 빠져 있고 ‘예술가들이 경력을 시작할 때 특히 자기 예술에 전념하기로 시도하는 입문 시기에 그들을 지원’하라는 유네스코 권고와 달리 신진 예술인이 수혜에서 배제될 여지가 너무 많다는 한계가 있음
 - 종속노동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노동법의 특성상 문화예술인·종사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법제 현실임. 따라서 이들에게는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자 보호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됨
 - 실제 경제적 의미에서 생산성과 경쟁력이 열악한 상태인 문화예술인의 경우 일반적인 노동시장이나 서비스 시장에 방치할 경우 그 처우나 지위가 크게 불리하게 될 우려가 있음. 여기서 우리는 문화예술의 공적 기능성을 감안해야 함. 그들의 노동은 다른 산업 분야 노동과 달리 수많은 경제외적 가치를 산출하는데도 그것이 경제적으로 상품화되지 않아 교환가치가 측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보상에서 누락된 가치는 외부자들이 무임승차하며 향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정의가 발생함. 나아가 이러한 저보상체제로 그들의 노동조건은 일반적 노동조건에 비하여 열악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다시 저생산성·저경쟁성이라는 또 다른 시장담론에 따라 더욱 가중됨. 그래서 현행 헌법처럼 이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음

○ 다양성의 가치

- ▶ 다양성은 한 사회의 문화적 성숙도를 평가하는 척도이며, 한 사회의 개인과 공동체 간 차이와 공존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
- ▶ 다양성은 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정체성과 다양한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포함
- ▶ 다양성은 계급, 성, 인종, 언어, 종교, 성적 지향성, 지역, 세대 등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 주체를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존중하고 그 문화와 표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

- ▶ 다양성은 획일화되지 않고, 자율성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문화 발전을 위해 중요한 가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안 제2조 정의

1.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1)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가치

“문화다양성은 인간성을 규정하는 속성이다”

“문화다양성은 풍요롭고 변화무쌍한 세계를 창조하고, 선택 범위를 늘려주며,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증대시킨다. 그러므로 문화다양성은 공동체, 민족,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천이다.”

“문화다양성은 민주주의, 관용, 사회정의, 민족들과 문화들 사이의 상호존중이라는 틀 안에서만 번성하는 것이다.”

“문화는 시공간을 넘어 다양한 형태를 취하며, 개성 있고 다양한 정체성, 인류를 구성하는 민족과 사회의 문화적 표현으로 구현된다.”

“문화는 상품 이상이다. 영화, 책, 시각예술 그리고 동시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은 우리 생각, 정체성, 영감을 실어 나르고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발전과 혁신을 이끈다. 이 두 차원, 즉 문화적 차원과 경제적 차원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현재적 쟁점의 핵심이다.”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유네스코, 2005) 전문

- 문화다양성 개념은 인류가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 추상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UN과 유네스코의 국제적 협약과 이행이라는 구체적이고 규정력을 갖는 실천 차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발전해 왔음
- 다양성의 어원인 라틴어의 ‘디베르수스’(diversus)는 다양한 것의 조화와 공존이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견과 차이라는 의미도 있음
- 유네스코 헌장(1945)에서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며,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도

5. 문화비전의 가치

- 인간의 마음속"이라고 선언함으로써 회원국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증진하여 문화 간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의 문화를 구축하는 데 필수 조건임을 강조
- 유네스코 인권선언(1948)은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인권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킴.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 참여권과 문화향유권을 지니며, 자신의 문화적 창작물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선언
 - 레비-스트로스(Levi-Strauss)는 다양성 문제가 문화 간 상호관계(inter-relations of cultures)뿐 아니라 개별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내부 집단의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유네스코에 의견 제출(1952). 이로부터 '다양성 속의 통합'(unity-in-diversity), '차이와 통합'이라는 관점이 형성됨
 - 이후 문화적 표현물들의 저작권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세계저작권협약'(1955), 국가 간 전쟁과 같은 위기에도 각국의 문화유산을 국제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무력충돌 시 문화유산 보호협약'(1954)을 체결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구체화하기 시작함
 -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1966)은 "모든 문화는 그 자체로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할 존엄성과 가치를 지니며,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킬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모든 문화는 전 인류에 속하는 공동유산"임을 선언. 인류 공동유산으로서 문화 개념은 '세계문화와 자연 유산의 보호에 대한 협약'(1972)으로 발전함
 - 일반 대중의 문화생활 참여와 기여에 관한 권고(1976)에서는 문화 개념을 확대하여 집단과 개인의 생활양식 과 예술활동 모두에서 문화의 창조성과 그 표현을 포함해야 한다고 정의함. 일반 대중의 문화생활 참여를 위한 정책을 언급함
 - 인종과 인종 차별적 편견에 대한 선언(1978)에서 문화적 차이가 인종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인류가 이룩한 서로 다른 성취는 각 민족의 '지리적·역사적·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요인들'에 기인하므로 이러한 차이로 위계적 질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함
 - 유네스코가 1980년에 조직한 심포지엄에서 문화산업 개념이 문화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새롭게 정의되고, 이어서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1980)가 채택됨. 이 권고에서 방송 분야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문화생산활동을 뜻하는 예술은 다양한 사회의 문화정체성과 정신적 유산을 반영·보존·풍요롭게 하고, 민족·문화·종교적 차이의 공통된 척도로서 표현과 소통의 보편적 양식이며, 모든 사람이 인류 공동체에 소속감을 갖게 해 주는 것으로 규정됨. 이에 따라 예술에 대한 접근권 보장과 예술가의 직업적 권리와 사회적 지위 보장, 고용 및 노동, 생활 여건의 보장, 문화정책을 통한 국가의 책무 등이 권고사항으로 채택됨
 -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 세계문화발전위원회 유네스코 보고서(1995)에서 "한 문화의 진정한 공헌은 그 문화가 개별적으로 생산해 낸 발명품 목록이 아니라 다른 문화와 차이에 있음"이라고 명시함. 한 문화의 개별 구성원들이 다른 문화의 구성원들에게 느껴야 하는 감사와 존경은 다른 문화가 자신의 문화와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 셀 수 없는 면에서 다르다는 인식에 기초"함을 강조, 과거 문화의 보존에만 집중하던 배타적 시각에서 벗어나 문화다양성을 보호·증진하는 것이 국가나 지역, 인류 사회의 중요한 발전 전략이라는 적극적 관점의 필요성 제기. 생물다양성 개념으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의 논리적 근거 마련됨
- 세계문화발전위원회 보고서에서 제안된 장관급 회의가 스톡홀름의 '발전을 위한 문화정책 정부간회의'(1998)로 실현되어 이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5개 정책 목표를 제안함. ① 문화정책을 발전 전략의 핵심 요소로 간주, ② 문화생활에서 창조성과 참여 증진, ③ 문화유산 및 문화산업을 위한 정책 강화, ④ 정보화 사회에서 문화 및 언어 다양성 증진, ⑤ 문화발전을 위한 인적·재정적 자원 확보 증대
 - 그 후 문화정책 국제네트워크(1999), 문화다양성 국제네트워크(1999, 시민사회·학계·예술가·문화 생산자 참여) 결성. 전지구화가 문화 영역에서 초래하는 변화에 우려를 표명하며 공조하고, 문화다양성과 관련해 국제법적 강제력을 지닌 장치의 필요성 제기. 문화다양성연대 총회(2001, 2003)에서도 문화다양성의 법적 구속 필요성이 강조됨
 - 이 시기에 조직된 유네스코 심포지엄(1999)에서는 문화가 경제적 문제나 개념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문화상품이 다른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이와 함께 전지구화에 따른 문화다양성 증진 문제, 공공정책 등을 논의함
 - 인권과 문화다양성 결의(2000)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으로 문화다양성이 인류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해 주는 자원이자 서로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며 평화를 유지하는 필수 요소임을 강조, 개별 국가나 국제기구에서 문화다양성을 보장해야 하고 유엔이 인권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함
 - 세계문화다양성 선언(2001)에서 유네스코는 이 선언과 실행 계획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 선언은 4개 영역 12개 조항으로 구성됨. 4개 영역은 ① 정체성·다양성·다원주의, ② 문화다양성과 인권, ③ 문화다양성과 창조성, ④ 문화다양성과 국제연대임. 이로써 문화가 포괄적 개념(한 사회와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는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 예술이나 문자의 형식, 함께하는 방법으로서 생활양식, 인간의 기본권·가치·전통·신앙 등을 포함)으로 규정됨으로써 문화권이 인권의 기본요소이고, 문화상품은 다른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함.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법상 장치 마련이 실행계획에서 권고되면서 이를 토대로 문화다양성 협약 추진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2005)중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은 미국 주도의 전지구화와 자유무역 확대에 대한 대응이라는 현실적 조건 위에서 채택되었고, 협약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채택된 측면이 있음. 이에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을 같은 범주로 인식하는 '생물문화다양성' 개념이 만들어져 제안됨

2) 다양성 가치의 필요성

(1)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 이후 문화다양성 정책의 한계

- 2005.10.20. 제33차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the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채택
- 2005년 국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스크린쿼터 제도로 문화적 예외, 즉 문화산업의 발전과 보호라는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운동 전개
- 이때 문화다양성 개념이 '국가 간 문화산업의 예외성'으로 축소 이해되고, 이후 무역협정에서 핵심 안건이 농산물 등으로 옮겨 가는 환경 변화. 한미 FTA에서 스크린쿼터 축소,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 이후 구체적인 실천 전략 제시 실패, 2006년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다문화정책(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 제정, 다문화가족지원법(2008) 제정) 등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정책 의제가 사라짐
- 2010.04.01. 대한민국 정부가 협약 비준서를 기탁해 110번째 비준국이 됨(2009.06.03. 문체부, 외교부에 조건 없는 비준에 동의 의견 전달)
- 2014.05.0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법률' 국회 의결: 비준국이 된 이후 특별한 조치 없이 4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법률 제정 ① 법률 제정과 함께 문화다양성 정책 총괄은 문체부가 담당하게 되었으나 '총괄' 기능의 취약성 내지 형식성 노정, ② 법률이 협약의 내용적 범위와 그 실행에 관한 정책적 수단을 충분히 실효적으로 반영하지 못함
- 2017.06. 제6차 유네스코 협약 당사국총회 정부간위원회에서 한국이 위원국으로 선출
- 2017.09. 제62차 UN 사회권규약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 '문화다양성' 관련 한국의 다문화주의 수용도가 낮고 문화다양성 제고 정책이 부족하다는 '우려' 표명. 문화다양성 가치에 관한 국민인식 제고 및 관련 정책·수단의 효과성 모니터링 '권고'(그 외 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 권한 강화, ② 국가에 의한 공공조달, 융자, 원조, 보조금 지급 등을 국내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즉 인권 준수 여부와 연계할 것, ③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채택 시행 및 차별의 해로운 영향에 관한 인식 제고, ④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 철폐, ⑤ 외국인 및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장, ⑥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및 사회보장권 보장, ⑦ 노인빈곤, 노인학대, 아동학대 등의 문제에 대한 정책 강화, ⑧ 노숙자를 위한 주거정책 강화 및 임차인 보호, ⑨ 낙태의 비범죄화를 통한 여성의 성 및 재생산 건강 권리 보장, ⑩ 소외계층을 고려한 양질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 보장 등의 우려 및 권고사항 포함)

(2) 문화다양성 관련 최근의 사회적 쟁점과 과제

-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사태, 예술 검열 등으로 자율성·다양성·창의성에 근간을 둔 문화의 기본 가치 붕괴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 문화예술/문화산업의 글로벌화 및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창조·생산·유통·접근 등의 사회적 조건 변화. 이러한 조건 변화는 문화예술/문화산업 분야 종사자들(예술가, 크리에이터 등)의 열악한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지속된 위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가 일어나 불안정한 사회적·경제적 지위가 더욱 심화된 상황을 도외시하고 논의할 수 없음
- 다인종/다민족사회로 진전, 젠더 갈등 및 성폭력 문제 만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및 배제 심화, 장애인/비장애인 차별 문제, 세대 갈등, 전통문화의 전승기반 약화, 지역 간 문화 격차, 소득에 따른 문화 격차, 가족형태의 다변화, 종교 갈등, 비주류 문화예술의 감소 등 국내 문제 지속 또는 심화

[문화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및 현황]⁴⁾

UN 차원의 외부 평가뿐 아니라 국민들도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수준이 매우 낮다고 평가: 전체적인 문화다양성 용인 수준(25.5%), 소수자 권익보장(11%), 차이를 차별로 인식(89.7%), 다름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 수준(14.8%),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수준(17.3%)

일반적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국민의 동의 정도는 높은 수준: 동의 정도가 76.1%에 달하고 국내 환경에 따른 필요성에 대한 동의도 73.8%로 매우 높음

사회구성원에 대한 거리감은 성소수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반영 필요: 이러한 인식은 상기 집단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는다는 국민적 인식과 연결되는데 성소수자, 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민 등의 순으로 차별 정도가 높다고 지적함

사회구성원에 대한 거리감 중 가족으로 수용도가 이웃으로 수용도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 범정부적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차원에서 '평균적인' 또는 '정상적인' 가족 개념을 좀 더 개방적이고 다양하게 재정립해 국가 전반의 문화다양성 수준을 제고할 필요성을 시사함

가족으로 수용에서 저항감을 느낀 순서는 성소수자,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타종교인, 결혼이주민, 장애인 순이었음

사회현상에 대한 개인적 수용 정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성별인식, 세대인식, 독신가족인식 등에서 높은 수용도와 개방적 태도가 확인됨: 반면, 대중매체의 성차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높고 사회적으로 독신인구 증가 또한 문제적으로 인식하였으며, 업무처리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역시 긍정과 부정이 같은 수준으로 섞여 있음

국민들은 문화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접근과 지원에도 전반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임: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 확대 필요(55.8%), 전통문화 위기에 대한 공적 지원 찬성(67.8%),

4)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7).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5. 문화비전의 가치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대한 공적 지원 찬성(57.7%), 독립문화예술의 발전가치 인정(58.8%) 및 비용 지불 의사(48.9%) 등임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책 우선순위는 소득에 따른 문화소외, 세대 간 갈등, 성별 불평등, 전통문화 위기, 지역문화 차별, 주류 문화예술독점, 독신가구 증가 등의 순으로 나타남: 이는 그간의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정부정책이나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매우 강한 데서 그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3) 다양성 가치의 실천원칙과 방향

(1) 문화다양성은 공동체의 생존과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핵심요소로,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데에서 출발

- 다양성은 전쟁과 전지구화,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인류 사회를 보호하고 평화로운 공존 및 장기적 생존을 가능케 하는 핵심가치임
- “문화다양성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표현의 자유,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의 자유 등), 문화적 표현을 선택할 개인의 능력이 보장될 때에만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다”(문화다양성 협약)
-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 원칙: 누구도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 이 협약의 조항들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문화다양성 협약)

(2) 문화다양성의 기반인 서로 다른 문화정체성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써 그 존엄성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존중

-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는 문화다양성은 곧 인권존중과 직결되며 국적, 민족, 인종, 나이(세대), 성별(젠더), 장애, 종교, 성적 지향, 소득수준이나 직업, 지역, 언어 등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의 문화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소통, 이해와 협력을 위한 사회적 자원이자 기반이 되는 것을 지향함
- 모든 문화의 평등한 존엄 및 존중의 원칙: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은 모든 문화(소수자 및 원주민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문화 포함)의 평등한 존엄과 존중을 전제로 한다.(문화다양성 협약)
-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문화다양성은 개인들과 사회들을 위한 풍요로운 자산이다. 문화다양성의 보호, 증진, 유지하는 현재와 미래 세대의 혜택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 요건이다.(문화다양성 협약)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조건들을 창출하기 위하여 모든 차원의 발전 정책에 문화를 통합하도록 노력. 이러한 틀 안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측면 증진(문화다양성 협약 13조)

(3) 문화의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가 상보적 관계 속에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생태계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다양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자율성과 창조성이 자유롭게 꽃피울 수 있는 조건이자 토대이며, 자율성과 창조성으로 더욱 증대됨
- 다양한 문화활동이나 문화유산이 경제적 가치나 특정한 정치적 견해에 따라 획일화되거나 창작과 생산, 전파와 유통, 접근과 향유로 연결된 생태계에서 차별 또는 배제되지 않도록 문화의 종다양성을 지키고 그 사회적·공공적 가치를 증대
- 개인들과 사회집단들이 그들만의 문화적 표현들을 창조, 생산, 전파, 유통, 접근, 향유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이때 여성들과 다양한 사회집단(소수자 및 원주민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 포함)의 특수한 상황과 욕구에 정당한 관심을 쏟아야 한다.(문화다양성 협약)
- 예술가들과 창조적 과정에 관여하는 다른 사람들, 문화공동체, 그들의 작업을 지원하는 조직들의 중요한 기여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성장시키는 핵심적 역할을 인식시켜야 한다.(문화다양성 협약)
- 예술문화산업 분야에서 교육, 연수, 교환 프로그램 등으로 창조성을 장려하고 생산 역량을 강화(전통적인 생산방식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문화다양성 협약 제9조)
- 다양한 방식으로 창조·생산·전파·유통·접근되는 문화적 활동, 상품들, 서비스들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면서 그 수단과 기술에 상관없이 역동적인 문화부문이 출현할 수 있도록 육성(문화다양성 협약 제7조)

(4)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할 접근권 및 참여 개념의 강화와 제도적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 문화다양성은 속성상 다양한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문화민주주의로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음
- 기존 문화정책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향유' 개념이 문화의 창조·생산·유통·전파 영역(가치사슬)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문화 창조 및 생산 여건의 불안정성, 전파/유통에서 독과점과 경제적 가치의 불균형한 성장, 경제적 수익의 분배 정의 파괴와 그로 인한 창조/생산 주체의 지속가능성 위기 등)에 대한 적극적 고려나 구조적 연계가 취약한 상태로, 실질적으로는 이를 전제로 하여 국민들의 '문화소비 격차' 해소라는 차원에서 작동해 온 점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아래와 같이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5. 문화비전의 가치

- 첫째, '문화정책에 대한 접근과 참여' 보장. 문화생태계의 각 가치사슬(창조/생산-전파/유통-접근-향유)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가 이와 관련된 공공의 가치와 제도를 숙의하고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정책과정과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과 참여'를 보장
- 둘째,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공평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집단이 문화적 접근에서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을 교육·향유 차원에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정치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조건이나 문화정체성으로 이러한 평등한 접근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적 노력 활성화
- 셋째, '문화의 표현 및 전파 수단들에 대한 공평한 접근' 보장. 문화 표현과 전파에 필요한 수단이나 인프라는 특히 기술환경이나 경제구조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문화의 표현과 전파 수단들에 대해서 창조/생산의 주체는 물론 접근/향유의 주체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넷째, 위의 세 가지 접근권에서 말하는 '공평함' 내지 '평등'은 '문화적 표현의 소수자(개인과 집단)'에 대한 개방성을 원칙으로 하여 그 참여와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시민사회의 역할이 근본적임을 인식, 협약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문화다양성 협약 제11조)
- 모든 이해당사자, 특히 시민사회의 참여로 문화적 활동, 상품들, 서비스들의 창조·생산·유통·전파·접근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문화다양성 협약)
- 문화다양성의 정책수단들은 현존하는 구조와 네트워크들(풀뿌리 공동체 포함)에 기초해야 하고, 이들이 전략적 플랫폼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검토, 지원(문화다양성 협약)
- 공평한 접근(equitable access)의 원칙. 전 세계로부터 풍요롭고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대한 공평한 접근 그리고 표현과 전파 수단들에 대한 문화들의 공평한 접근은 문화다양성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문화다양성 협약)
- 개방성 및 균형의 원칙. 국가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수단들을 채택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세계의 다른 문화들에 대한 개방성을 촉진하도록 노력(문화다양성 협약)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여성·소수자에 속하는 사람들, 원주민들이 모두 참여하고 개입하도록 함(문화다양성 협약)

(5) 문화다양성을 위한 공적 제도의 강화·체계화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확산

- 다양성은 현재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을 파괴하거나 위협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윤리적 원칙으로 삼아 예술과 문화산업, 지역문화와 여가, 관광과 체육활동 전반에서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이행하고,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문화생태계의 불공정행위 해소와 문화생태계 내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민주주의로 문화다양성을 뿌리내리려는 정책 가치임

- 주권의 원칙: UN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국가는 영토 내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수단과 정책을 채택할 주권을 갖는다.(문화다양성 협약)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공공인식 증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국제조직과 지역단위 조직들과 협력(문화다양성 협약 제9조)

(6) 기술변화 및 디지털 환경에 부응하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개발과 실행

- 문화적 내용의 창조·생산·유통·전파에 대한 기술적 변화의 영향력은 매우 크므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증진하는 정책/수단들이 새로운 기술환경에 잘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문화다양성 협약)
- 이와 관련하여 유네스코는 2017년 6월에 문화다양성 협약의 새로운 실행지침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실행지침'을 채택함
- 디지털 기술이 전 세계에서 채택·확산되면서 디지털 격차(국가 간 격차, 국내 격차, 남성과 여성의 격차, 도시와 시골의 격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가 심화되고,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 문화적 상품들·서비스들의 창조·생산·유통·접근 방식에 영향을 줌(문화다양성 협약)
- 소셜 네트워크와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의 확산, 데이터 팽창, 유통 모델의 복잡화, 유저들의 손에서 연결되는 멀티미디어 디바이스의 증가 등이 전 세계에서 창조 섹터에 심대한 영향을 줌. 기술 변화는 또한 새로운 플레이어들과 새로운 로직들을 등장하게 하고, 문화적 표현들의 다양성을 촉진할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문화다양성 협약)
- 정체성·가치·의미를 전달하는 문화 활동, 상품, 서비스의 속성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변함없으므로, 디지털 환경에서 인권·창조/표현/정보/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 이는 인권에 기초해 열린 인터넷을 촉진하는 인터넷 보편성(Internet Universality) 원칙(모두에게 접근가능하고, 복수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함(문화다양성 협약)
- 기술 중립성(technological neutrality)과 인터넷 중립성의 원칙을 따라 데이터 트래픽의 평등하고 비차별적인 처리로 인터넷 접근 서비스와 최종 사용자의 권리 보호(문화적 상품들이나 서비스들의 유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식의 데이터 트래픽 관리를 금지하기 위한 것)(문화다양성 협약)
- 오프라인에서 권리, 특히 표현의 자유가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보호되어야 하고, 가치사슬의 심대한 변화 및 새로운 활동주체의 등장을 고려해 문화적 표현의 창조·생산·유통·전파·접근·향유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것을 지향(문화다양성 협약)

○ 창의성의 가치

- ▶ 창의성은 인간이 가지는 고유한 능력이자 잠재력으로 사회발전과 혁신의 중요한 문화동력
- ▶ 창의성은 그동안 주로 경제혁신이나 콘텐츠산업 발전의 도구나 방법으로 사용되면서 경쟁력의 중요한 핵심어로 오용되었음
- ▶ 창의성은 사회 문제해결의 중요한 요소이고, 사회혁신에서 귀중한 인간의 능력이자 역량으로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음
- ▶ 창의성은 미래 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해 중요한 핵심어이며, 문화의 안과 밖의 융합과 사회구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의 힘이자 가치임

창의성의 특성들

첫째, 창의성은 행동을 수반한 것이다. 따라서 창의성은 상상력이 응용된 것이라 할 수 있고, 공중 세계에서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상상력의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둘째, 창의성은 기존에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거나 생각해 보지 않는 것들을 시도하고 생각하는 것. 독창적인 결과를 생산하는 상상력의 과정이 창의성의 두 번째 정의다.

셋째, 창의성은 현실의 벽을 넘어서는 노력들이 새로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적 가치는 조직을 내에 창의적인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다.

(Ken Robinson, Out of our Mind, Capstone, London, 2001, pp. 111~118)

1) 창의성의 개념과 가치

“미술(Art)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미술가들이 있을 뿐이다.”

(E. H. 고프리치, 『서양미술사』 서문)

“분노에서 축제로, 1,600만 명의 대기록”(춧불 1주년, 노컷뉴스, 2017. 10. 26)

- ▶ 창의성은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자 잠재력으로 사회발전과 혁신의 중요한 문화 동력임. 그러나 그동안 창의성이 인간과 사회가 고유하게 가꾸어 온 본원적 가치라는 인식보다는 주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나 방법으로 이해되어 온 경향이 있음
- ▶ 창의성은 자신의 기량을 고도의 학습으로 발전시켜 온 예술가나 창작자, 영재들이 발휘하는 독창적 가치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사회에서 다양한 시민이 삶과 일의 영역에서 협력하고 협동하는 과정에서 발휘하는 과정이자 역량이기도 함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창의성(創意性)은 새로운 생각이나 개념을 찾아내거나
기존에 있던 생각이나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해 내는 것과 연관된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이다.”(위키백과)

- ▶ 독창적이며 협력적인 과정을 거쳐 발현되는 창의성은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의 해답을 제공해 주는 원천으로 더 나은 사회로 변화하기 위해 함께 키워나갈 중요한 가치라는 좀 더 폭넓은 인식이 필요함

“창의성은 사람의 사고와 사회문화적 맥락의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새롭고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나 행위다.”(미하이 칩센트미하이, 1996)

- ▶ 창의성은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미래 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해 더욱 중요한 핵심어이며, 문화의 안과 밖의 융합과 사회구성원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의 힘이자 가치임

“한 개인, 집단, 사회로부터 새롭고 적절한 것이 출현하는 것”(키스 소여, 2006)

- ▶ 결국 창의성은 개인의 다양한 경험으로 그동안 지나치거나 마주하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방안 또는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2) 창의성 가치의 필요성

- ▶ 개인과 사회 공동체 모두에게 창의성 증진의 원동력이 되는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체계가 형성되어야 하나 우리 사회는 아직 새로운 시도와 실험에 대해 보수적이며 도전을 장려하는 문화와 제도적 토대가 성숙되지 못함
- ▶ 창의적 사고에 기초한 문제해결과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과정적 기회(집단지성의 장 등) 부족: 획일화된 교육으로 창의적 사고가 바탕이 된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함.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개방과 소통, 공유와 공감, 비판과 토론으로 이어져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과 교육이 필요함. 또한 결과주의, 성과주의, 급진주의로 빠르게 정량화될 수 있는 성과 중심주의가 사회 전반에 만연함. 결과에 다다른 정성적 과정이 생략되거나 축소되어 리서치, 연구개발 등이 확대될 수 있는 교육, 지원체계 등이 필요함
- ▶ 일 우선 사회, 다양한 경험을 방해하는 사회 분위기: ‘일’과 ‘생존’을 위한 시간 외에 사회문화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 공동체나 집단의 창의적 문제해결 경험이 미흡함. 쉼과 여유로 개인과 사회의

5. 문화비전의 가치

창의성을 회복하는 환경이 필요함. 사회문화의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갖고 개인의 의견과 창의성을 개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보고서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2,285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적은 시간 일한 독일보다 16배가량 많이 일했음을 의미한다.”(국민일보, 2015.11.30)

- ▶ 사회적 혁신의제를 재발견하는 문화적 해결 필요: 사회적 재난과 공동체의 갈등 해소, 사회변동(인구변동, 기후변화, 평화공동체, 도시문제 등), 사회혁신(일자리, 청년, 협치 등) 의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재해석과 재발견을 통한 새로운 관점 설정 중요. 여전히 부족한 사회적 상상력과 사회혁신의 실험적 여건이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음. 특히 획일화된 교육 방식과 창의적 사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일 중심 사회구조, 서슴없이 자기 생각을 터놓을 수 있는 개방화·다양화된 논의 구조가 없는 한 창의성 중심의 사회 발전은 어려움에 직면함
- ▶ 급변하는 기술융합 시대, 창의적 관계망과 인간소외 문제: 인공지능, 초연결성 등 진보적 기술혁명을 바탕으로 예술적 능력을 제고하는 창의성은 새로운 표현양식을 넘어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창의성은 기존 산업의 혁신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혁신하는 방향으로 나아감. 반면, 전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 혁신역량이 갖춰지지 않는 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 시대에 인간의 창의성은 존재적 위기, 진화된 기술에 따른 인간소외 현상을 맞게 될 수 있음
- ▶ 4차 산업혁명, 제약 없는 표현과 실험 기회 창출: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 내며 기존의 것을 혁신하는 것으로서 창의성은 과거 예술가나 발명가, 혁신가 등 특수한 계층에 의존했음. 그러나 디지털 문명의 발전,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모든 개인은 제약 없이 표현이 가능해지고 초연결성에 기반한 다중적 네트워크와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음. 그 결과 개인의 창의성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가치를 확산하고 있음
- ▶ 이에 우리는 창의성을 핵심가치로 내세움으로써 개인의 창의적 사고를 막는 다양한 사회적 억압을 제거하고 혁신적이며 독창적인 사고가 존중되는 문화를 형성하여 창의성 중심 사회에 대응하고자 함. 즉, 인간의 창의성에 기초하여 예술과 상상력을 극대화해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발전 역량을 축적하고, 넓은 산업과 사회관계를 혁신하여 인간의 창의성에 바탕을 두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함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3) 창의성의 핵심가치와 실천 방향

“사회의 창의성 확산-창의성의 생태계-창의적 사회 공간”

- ▶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는 인간의 창의성이 존중되는 문화 형성을 핵심가치로 창의성이 극대화·지속화되는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혁신과 발전 역량 축적을 주요 실천 방향으로 설정함
- ▶ 미래 사회변동과 기술문화의 진보, 사회혁신 의제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창의적 역량을 높이려면 이에 기초가 되는 ‘창의성의 생태계, 창의적 사회 공간’을 형성하는 정책적 지향이 중요함
- ▶ ‘창의성의 생태계, 창의적 사회 공간’이라는 지향점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과 자발적 조직, 비영리단체, 기업 등이 일과 삶 속에서 키워가는 시민성에 기초한 창의성(Civic Creativity)과 예술가, 창작자들이 독창적이고 고유한 방식으로 생성하고 공유하는 예술 창의성(Artistic Creativity) 등에 기초함

“상상력의 중심이 ‘오직 나만을 위한’ 창조성인지 아니면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나는 이런 유형의 창조성을 ‘시민성의 창조력’이라고 한다.”(찰스 랜드리,

『크리에이티브 시티 메이킹』, 2009)

“민주적 참여권의 평화적 행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생동하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구성요소 ... 한국

국민들의 촛불 집회가 이 중요한 사실을 전 세계 시민들에게 각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독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인권상 수상문, 2017.10.15)

“사회혁신의 기초와 바탕이 되는 시민적 창의성”

- ▶ 시민성에 기초한 창의성은 시민이 참여하는 지역과 생활 곳곳이 민주주의의 토양에 따라 작동되고, 다양한 사회가치와 다름(또는 차이)을 존중하는 문화로 성장해 갈 수 있으며, 예술 창의성은 독창적인 생각과 실천을 장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기초로 생성되고 확장됨
- ▶ 창의성이 확산되어 사회 내의 문화로 자리 잡으려면 창의성의 기반인 각 개인이 언제든지 생각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함. 각 개인이 일과 삶 속에서 새로운 것을 상상하고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함
- ▶ 이를 위해 기술적 기반과 더불어 창의성을 분출하고 확산할 수 있는 창의적 생태계를 갖추어야 함. 즉, 각 개인이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이를 구현하고자 노력할 때 각종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사회 환경 자체가 새로운 생각과 발명, 혁신에 친근해질 수 있도록 변해야 함

5. 문화비전의 가치

- ▶ 이런 창의성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이 시민성에 기초해 새로운 사고를 키워나갈 수 있는 기반임. 새로운 사고를 포용할 수 있는 다양성의 문화, 그런 생각이 잉태되도록 돕고 사고의 여유를 주고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 등은 시민적 창의성(civic creativity)의 기반이라 할 수 있음

“미래 사회 변동의 신호감지기, 혁신자로서 예술적 창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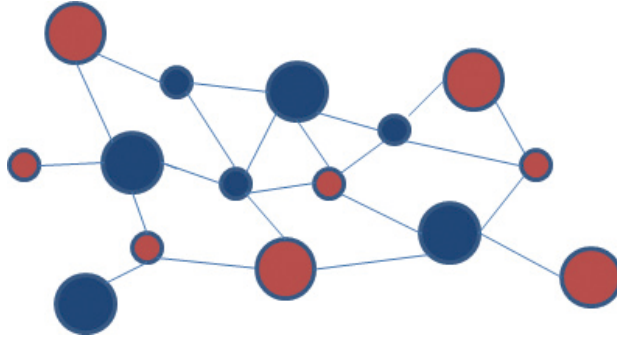
- ▶ 이런 시민적 창의성이 증대되는 데 예술은 중요한 기반이 됨. 특히,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미화하고 이를 들려주거나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상상력을 유발하는 예술은 인류에게 다양한 영감을 부여하여 현재보다 더 뛰어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했음. 이런 점에서 예술적 창의성(artistic creativity)은 시민적 창의성을 제고하는 바탕이라 할 수 있음
- ▶ 창의성을 제고하려면 이 시민적 창의성과 예술적 창의성이 융합해야 함. 즉, 다양한 예술적 창의성으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상상의 힘을 불어넣고, 그 힘으로 사회를 더 민주적이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개방된 사회로 만들어 냄으로써 예술가가 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창의성 중심의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바탕임. 그러므로 시민적 창의성과 개인적 창의성은 연결되어야 하며, 끊임없는 선순환 과정을 거쳐 사회를 확대·재생산해야 함

“시민적 창의성과 예술적 상상력의 상호작용이 만드는 창의적 사회 공간”

- ▶ 시민 창의성과 예술 창의성이 상호작용해 형성되는 공간을 ‘창의적 사회 공간’이라 할 수 있음. 창의적 사회공간은 창의적 생태계가 공존하며 작동되는 공간임. 즉, 각 개인이 자기 상상력에 바탕을 둔 다양한 활동을 하며 예술을 발전시키고 사회를 혁신할 때 그 사회를 창의적 사회공간이라 할 수 있음
- ▶ 새 문화정책은 시민 창의성과 예술 창의성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사람’들과 이를 발현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문화정책을 지향함
- ▶ 시민 창의성과 예술 창의성이 삶, 사회, 문화의 다양한 현장과 분야에서 여러 가지 방식과 형태로 상호작용(interaction)하며 자율적으로 생성·형성되고 확장(또는 확산)하는 ‘창의적 생태계, 창의적 사회 공간’을 지향함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시민 창의성과 예술 창의성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창의적 사회 공간 모델



- ▶ ‘문화비전 2030 사람이 있는 문화’는 이런 창의적 사회 공간을 지향함. 즉 시민적 창의성과 예술적 창의성이 상호작용하고 미래 사회변동에 대응하며 발전하는 사회를 형성해 가는 것이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가 지향하는 방향임

“세계에 기여하는 창조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분야의 울타리를 허물고 전체를 연계해서 문제와 해결책을 모든 각도로 바라보아야 한다. 수직과 수평적 사고를 갖추고 전략과 세부 내용, 전체와 부분, 숲과 나무를 동시에 바라보아야 한다. 세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찰스 랜드리, 『크리에이티브 시티 메이킹』, 2009)

“미래 변동과 혁신의제 설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역할”

- ▶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는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 우리 삶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짐. 우리가 직면한 인구문제나 일자리, 과다한 노동과 자살 등 우리 삶을 둘러싼 현실과 사회문화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이를 어떻게 혁신할지 등에 초점을 둠
- ▶ 이런 문제들은 개별적 정책영역의 문제이기도 하나 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이며 예술이 답해야 할 문화의 문제이기도 함. ‘쉽보다는 일이 중심이 된 사회’, ‘삶의 가치보다 경제력이 우선되며 한계에 처했음에도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회’ 등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임. 이에 우리는 사회적으로 발전한 창의성을 바탕으로 삶과 사회 속에 놓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 과거 정부의 문화정책은 예술, 체육, 관광, 콘텐츠 등 문화정책의 범위를 개별화·협소화하여 문화정책이 폭넓은 사회 접점을 만들어가지 못하고 [창의적 사회공간] 형성에 한계를 보임
 - 문화의 역할에 대한 협소한 사회 인식, 사회통합과 사회문제 해결로서 문화의 역할 부재, 미래 사회 변동의 신호 감지기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 부족, 문화예술인에 대한 검열과 배제, 시민 기본권 침해 등


5. 문화비전의 가치

- ▶ 우리 사회 각 영역에서 직면하는 인구문제, 일자리, 노동 과잉, 기술 진보 등 사회적 현안과 미래 변동의 이슈 등에 문화정책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했거나 주목하지 않았음. KAIST 미래전략연구센터에서는 저출산·초고령화 사회, 불평등 문제, 미래 세대 삶의 불안정성, 저성장과 성장 전략 전환 등 한국 사회의 10년 후를 규정하는 미래 이슈를 발표한 바 있음

10대 미래 이슈


순위	이슈명	순위	이슈명
1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	6	사이버범죄
2	불평등문제	7	에너지 및 자원고갈
3	미래세대 삶의 불안정성	8	북한과 안보, 통일문제
4	고용불안	9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5	국가 간 환경영향 증대	10	저성장과 성장전략 전환

- ▶ 앞으로 문화정책은 미래 사회변동과 사회혁신, 혁신성장, 사회구조의 전환 등에 대한 의제를 삶터와 일터 현장, 성장과 전환 현장에서 긴밀하게 참여하고 협력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정책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해야 함




자율성 가치

자율성은 개인의 권리와 생각이 타인과 집단, 국가권력에 의한 간섭과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자율성은 개인과 공동체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개성과 감각의 특별함을 중시하며, 개인이 문화권리의 주체임을 강조



다양성 가치

다양성은 한 사회의 개인과 공동체 간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문화적 성숙도를 평가하는 척도
다양성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정치적 견해 등에 관계없이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그 문화와 표현을 인정



창의성 가치

창의성은 미래 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해 중요한 요소이며, 문화 안과 밖이 융합하는 기본 원리
창의성은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원천일 뿐 아니라, 사회 문제해결과 사회혁신을 이끄는 귀중한 능력이자 역량

06 문화비전의 방향

㉠ 개인의 자율성 보장

- ▶ 개인의 자율성 보장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자유롭게 평등하게 자기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
 - 자율성: 개인의 권리와 생각이 타인·집단·국가로부터 구속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상태
 - 국가는 개인이 문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여가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며 문화 기반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함
 - 국가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각자의 개성을 문화 활동에서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 개인의 자율성 보장은 다양성 실현과 창의성 확산의 토대임
 -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야 다양한 문화가 존재 가능
 - “문화다양성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 등)와 문화적 표현을 선택할 개인의 능력이 보장될 때에만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다.”(UN 문화다양성 협약 중)
 - 서슴없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개방·다양화된 환경이 없는 한 창의성 중심의 사회발전은 어려움
- ▶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문화예술인의 역할이 중요
 - 문화예술인은 사람들이 향유할 다양한 문화를 창조하는 주된 주체임
 - 국민 모두가 각자 개성을 표현할 역량을 키우려면 문화예술인의 사회적 역할 중요해질 수밖에 없음
- ▶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의 가치에 기반하여 개인 – 공동체 – 사회를 연결하는 3대 정책 방향을 설정함

6. 문화비전의 방향

[방향 1. 개인의 자율성 보장]



- ▶ 예술가, 체육인, 시민, 개인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서 누구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창작하고 향유할 권리를 부여함
- ▶ 개인의 자율성은 표현의 자유의 근간이면서 동시에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권리를 표방함
- ▶ 개인의 문화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각자의 개성과 감성을 문화활동에서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의무를 짐
- ▶ 블랙리스트를 통한 예술인들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창작자와 향유자가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문화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함

의제 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의제 2	문화예술인 · 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
의제 3	성평등 문화 실현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 ▶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문화정체성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문화적 활동·표현이 속성이 다양한 공동체 내에서 자유롭게 발현·존중되는 것을 의미
 - * 다양성: 성별, 세대, 지역, 경제적 지위, 사회적 신분, 신체 조건, 정치적 견해 등의 문화정체성과 관계없이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을 존중하고 그 문화와 표현을 인정하는 것
 - 국가는 개인과 집단의 다양한 문화활동이나 문화유산이 경제적 가치나 특정한 정치적 견지 등에 따라 획일화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
 - 국가는 창작과 생산, 전파와 유통, 접근과 향유로 연결된 생태계에서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의 종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우선 고려해야 함
- ▶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은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배척하지 않고 존중하며 공존하고 협력하는 사회 기반이 있어야 가능함
 - 다름에 대한 인정과 존중은 타인의 삶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함
 - 다양한 문화는 공동체의 다양성을 실현함으로써 구현됨. 획일적이지 않고 창의성이 보장되는 것이 자유롭게 꽃피울 수 있는 조건이자 토대임
- ▶ 공동체의 다양성을 실현할 여건 조성이 시급함
 -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발현·유지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함
 -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문화에 쉽게 접근하고 능동적인 문화 활동과 참여가 가능한 지역 문화분권 실현이 필요한 시점임

[방향 2.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6. 문화비전의 방향

- ▶ 문화의 다양성은 한 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개인과 공동체가 문화적 고유함과 특성을 편견 없이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함
- ▶ 한국 사회는 다문화 가족의 증가, 이주 노동자의 유입으로 다양한 국적·인종·언어·종교가 공존하나 다문화정책은 주로 이주민 동화 중심으로 진행함. 다문화 주체들의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차이와 공존의 정책이 필요함
- ▶ 문화의 다양성 실현은 단지 다문화만이 아니라 개인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를 인정하고, 그것의 문화적 표현을 차별하지 않으며, 나아가 문화예술의 종다양성을 유지·확산하는 것을 의미함
- ▶ 문화의 다양성은 예술뿐 아니라 지역문화, 여가문화, 관광·체육활동에도 적용되어야 하고 일상에서 다양한 문화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함
- ▶ 문화의 다양성 실현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소하며, 문화와 예술의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의제 4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의제 5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의제 6	지역 문화분권 실현

○ 사회의 창의성 확산

- ▶ 사회 전반에 문화적 상상력과 역량을 확산해 4차 산업혁명·통일·일자리 변화 등의 미래 의제와 저출산·교육·복지·주거 등의 사회의제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 국가는 창의성을 토대로 산업 혁신이 이뤄지도록 기술적·재정적 기반을 제공하고 문화와 기술, 문화와 관광, 예술과 과학 등의 융합을 촉진해야 함
 - 국가는 개인과 집단이 교류·협력하면서 자유로운 상상과 실험이 가능한 공간과 계기를 제공하고, 상상의 결과물이 문화자원과 사회혁신의 동력이 되는 대안 생태계를 조성해야 함
- ▶ 『문화비전2030』은 창의성의 개념을 사회혁신의 중요한 동력으로 간주하며, 이를 시민적 창의성까지 확장
 - 종래의 창의성에 대한 논의는 예술적 창의성과 산업혁신과 경제성장을 위한 발판으로서 고안적 창의성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음
- ▶ 창의성은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자 잠재력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임

1부 왜 사람이 있는 문화인가?

- ▶ 영역 간 융합, 집단 간 소통, 협력과 통합을 통한 문제해결 모두 사회 전반에 창의성이 확산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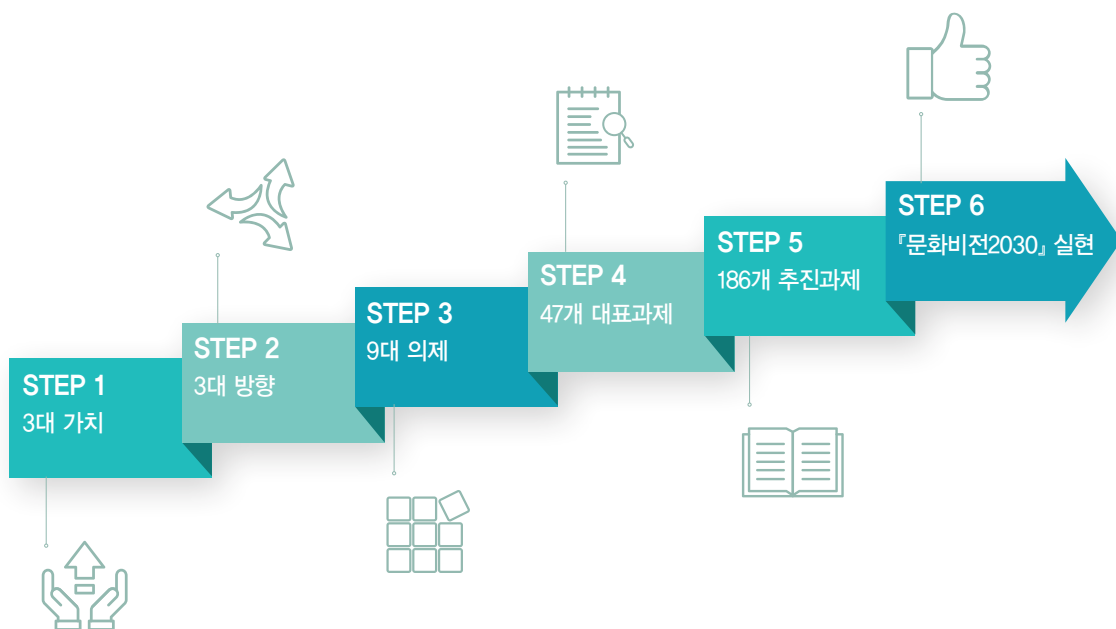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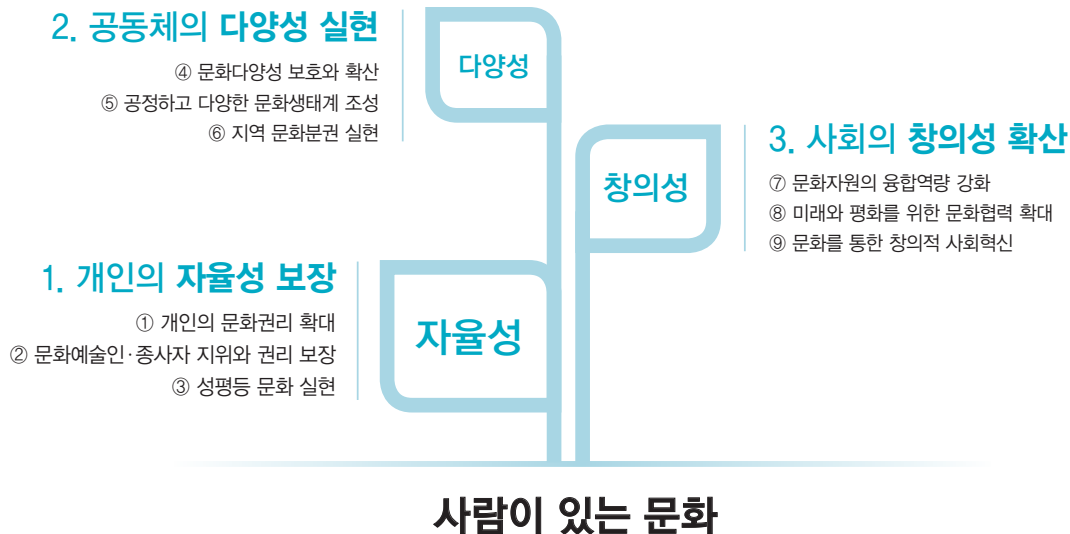
[방향 3. 사회의 창의성 확산]



- ▶ 창의성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 교육·노동·복지·주거·도시 분야에 문화의 창의적 상상력과 역량이 확산될 수 있는 통합적인 사회문화정책이 필요함
- ▶ 창의성이 콘텐츠 산업의 미래 동력이 되려면 문화와 기술, 예술과 과학이 융합할 뿐 아니라 예술과 체육, 관광이 융합해야 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재양성과 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함
- ▶ 창의성은 단지 콘텐츠 산업 발전의 동력만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도시재생, 암기식 지식교육, 복지와 주거정책의 문제해결에 문화적 창의성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창의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사회의 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모이는 과정에서 필요한 소통의 원천으로 미래 사회혁신의 동력으로 이해하고 그에 따른 문화의 실천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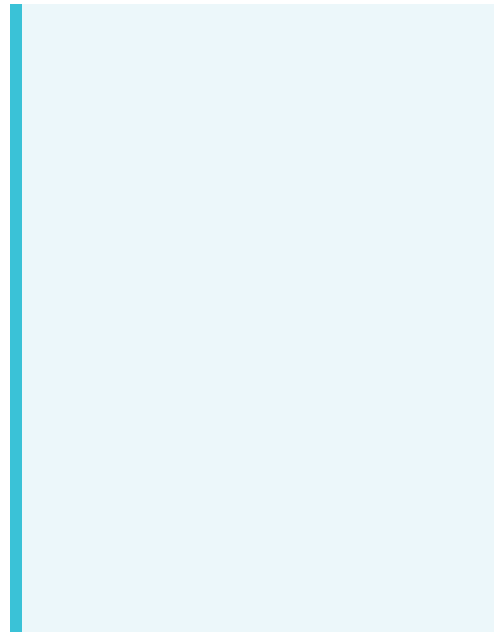
의제 7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의제 8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 협력 확대
의제 9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07 「문화비전2030_ 사람이 있는 문화」 체계



문화비전2030

사람 이 있는 문화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9대 의제별 대표사업]

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2. 문화예술인·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
3. 성평등 문화 실현
4.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5.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6. 지역 문화분권 실현
7.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8.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9.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의제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문화는 삶의 양식,
행복하고 즐거운 문화사회를 만든다”

-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문화의 권리를 사회의제로 확산하고 노동 중심에서 여가 중심 사회로 전환하여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원하는 문화를 즐기고, 문화향유자만이 아니라 생산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화정책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
- 개인의 문화 권리를 경제적·사회적 권리와 연계하여 권리 영역을 확대하고, 개개인의 다양한 문화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문화 환경의 기틀을 다지는 문화정책으로 전환 요구

대 표 과 제

1. 문화권 확산
2. 일과 삶의 균형으로 여가친화 사회환경 조성
3. 전 국민에게 문화복지 확산
4.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전면 확대
5. 개인의 문화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01 문화권 확산

○ 개념

- ▶ 국가와 사회 운영원리로서 문화에 대한 가치 확산
- ▶ 기본권으로서 문화권 인식 제고와 제도 보안을 통한 실질적 보장과 확산
- ▶ 문화영향평가의 실질적 시행으로 문화의 가치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
- ▶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확산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수단으로서 문화영향평가를 활용하는 강화 방안 마련

○ 추진 배경

▶ 취지와 배경

- 세계인권선언(1948년/UN)을 시작으로 국제사회는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1966년/UN), 국제문화협력의 원칙에 관한 선언(1966년/UNESCO), 미주인권선언(1967년), 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에 관한 성명(1968년/UN), 시민적 · 정치적 권리를 위한 국제협약(1976년/UN), 문화다양성 선언(2001년/UNESCO) 등으로 문화적 권리의 정의와 실현 방안 등을 발전시켜 오고 있음. 국내에서는 문화헌장(2006년)과 「문화기본법」(2013년), 「지역문화진흥법」(2014년), 「문화다양성법」(2014년) 등을 거치면서 기본권으로서 개인의 문화권 개념과 보장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확장하고 있음
- 문화생산자와 향유자를 완전 분리된 별개 영역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문화헌장(2006년)부터 최근의 「문화기본법」(2013년)은 두 영역을 분리하여 인식함. 이와 더불어 문화권의 주요 구성체계인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환경권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반영하는 문화정책의 수립 근거로 법적 성격의 사회적 선언이 필요함
- 특히 문화예술계에서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인식이 높아졌고, 개인의 삶은 물론 지역과 공동체를 살리는 문화의 가치가 주목받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문화 분야 헌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양극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경제적 차원에서 격차뿐만 아니라 한 사회 안에서 차별되고 격리된 문화가 형성되는 것에 크게 우려한다. 경제적 격차는 국가의 의지와 사회적 연대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문제이지만, 생활 속에 쌓인 경제적 격차의 결과로 나타나는 문화적 격차는 좀처럼 좁힐 수 없는 고질적 문제로 사회통합과 민주주의의 가장 큰 난제로 남게 된다.”

_에스핑 안델센(UN 사회개발연구소)

- 「문화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목적으로 문화영향평가시행이 의무사항으로 포함됨
 - 이는 제2조(기본이념)에 명시된 바와 같이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라는 인식 위에서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문화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개정 20171128>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제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 문화권,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실행하는 데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는 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핵심 정책수단인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함

▶ 현황과 문제점

- 시대변화에 따른 개인의 문화권에 대한 사회 요구를 반영한 근거가 미비
 - 개인의 문화권은 문화적 표현물을 향유하거나, 향유에 필요한 접근과 정보의 권리를 갖는 것만이 아니라 창작의 권리도 함께 포함함
 - 창작자와 생산자로서 예술가와 향유자와 소비자로서 개인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없음
 - 개인이 직접 생산하면서 소비하고, 창작하면서 향유하는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분리하기가 어려워짐
 - 문화현장부터 문화기본법까지 문화평등과 문화정의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으며,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과 환경권에 대해 확장적이며 적극적인 인식이 미비함
- 자율성 가치를 보장하고 확산하는 국가 문화정책을 수립·운영하기 위하여 왜곡된 규범과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문화국가의 의미가 국민국가적 계몽체제로부터 자율성과 자유성에 바탕을 둔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개념으로 옮겨감.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의 요청을 유보하고 국가가 문화를 창조하거나 계몽하는 반문화적 현상을 초래하는 왜곡된 규범과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에서부터 비롯해야 함. 현재 기본권으로서 개인 문화권과 문화국가 원리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정에서부터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행정운영 시스템 개혁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로서 문화권 선언이 필요함

- 「문화기본법 시행령」은 모법에 의무적 시행으로 규정되어 있는 문화영향평가의 시행을 선택적 시행으로 인식할 소지가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음
 -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문화영향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①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②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거나 ②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의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위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음
 -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문화영향평가(자체 평가)에서 예외로 취급되는 경우(문화체육관광부 시행 문화영향평가/문체부 평가)를 적시한 제2조 제3항이 문화영향평가 일반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을 적시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크게 기술되어 있음. 즉 ‘자체 평가’와 ‘문체부 평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은 채 모두 문화영향평가로 칭해짐으로써 ‘문체부 평가’를 문화영향평가 자체로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 시행령의 이러한 예외규정과 그에 따른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의 혼란은 결과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요청이나 협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선택 시행 사항으로 인지하게 함. 이런 점은 모법의 의무적 시행 규정과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실질적으로 현재 시행되는 문화영향평가는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요청이나 협의 행위에 따라서만 선택적으로 시행되어 문화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처럼 법적·제도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해야 함
 - 특정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사업에 집중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문화영향평가가 역으로 활용되어 평가로서 목적이나 정책기능이 취약해질 우려도 있음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문화영향평가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계획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정책의 선정기준, 문화영향평가의 방법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릴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과 정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관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할 때 대상 계획·정책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평가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제2호에 따라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제3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협력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1.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영향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영향평가 협력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제4조(문화영향평가를 위한 교육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영향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문화영향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3. 민간 연구기관

- 문화영향평가 지침에 따르면, 문화영향평가는 자율성·다양성·창조성의 원리를 평가의 대범주로 설정하여 진행하는데, 각 범주에서 평가지표가 추상적이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 정책적 실효성이나 시행목적, 평가결과의 환류방식 등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기대효과

- 국민이 향유하는 인권의 기본 권리로서 문화 권리를 확대하는 것은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문화는 대중이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삶에 부여하는 의미와 가치를 뜻하며 나아가 그러한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고 향유하는 생활방식임. 바로 이 점에서 문화는 시민으로서 대중이 향유하는 기본적인 인권의 집합적 실천태가 되며,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한 중요한 교두보가 됨
- 문화권 선언으로 문화가 국민의 권리임을 명확하게 하고, 개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지원과 육성정책을 견인
 - 국민 기본권으로서 문화권 보장이라는 국가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국가 문화정책의 방향과 의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됨
 - 국가와 정부는 문화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화에 대한 지원과 육성 정책을 실시한다는 헌법의 문화국가원리를 충실히 구현해야 함
- 시대가 변화하면서 공동체의 인식도 변화하는데, 이에 부응하는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함

- 개인의 문화 권리를 보장해 문화정책의 긍정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줄일 수 있는 분위기 마련

추진과제 01

문화권의 중요성을 공표·공유하는 '문화권2030 선언' 추진

- _ 문화와 문화권(문화적 권리)에 대한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 사회적 선언
- _ 문화행정의 토대를 이루는 헌법상의 문화국가 원리와 문화권리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선언으로 자리매김

- ▶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초로서 문화권을 강조
- ▶ 개인 문화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문화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과 의무를 선언
- ▶ 자유권, 접근권, 교육권, 참여권 등 개인 문화권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의무를 선언문에 명시하여 개인의 문화권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공표·공유
- ▶ 문화생산자와 향유자로 분리된 개념을 극복하고 다양성과 상호존중 이념을 바탕으로 문화주체들의 문화활동 환경에 공정성, 공공성, 다양성, 균형성, 사실성을 담아내 국가 문화정책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함

☉ 문화권2030에 담겨야 할 인식

※ 문화권(문화적 권리)

- 물질적 차원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뛰어넘어 문화적 차원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
- 문화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받고 문화적 종다양성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여러 여건을 조성하거나 조건의 충족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문화적 권리개념에는 문화자유권, 문화평등권, 문화교육권, 문화환경권, 문화참여권 등이 있음

- ▶ 문화는 인간 삶의 총체적 양식이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의 기초이며,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님. 따라서 문화를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인정하고, 국가는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문화에 대한 통합적 시각을 바탕으로 문화권(문화적 권리) 보장에 대한 실천적 대응으로서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함

- ▶ 문화권(문화적 권리)은 삶의 질을 높이고 난 이후 보장되어야 하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기본권임. 따라서 국가정책에서 '문화'와 '복지'는 분리하여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님. 구체 개념으로서 문화복지가 아니라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한 문화 주체로서 지속가능한 삶을 누리는 기본 권리라는 인식을 제도 전반에 반영해야 함
- ▶ 문화권(문화적 권리)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높이거나 삶의 모습을 가꾸는 사회적 권리임. 따라서 문화적 권리를 누리려면 삶을 가꿀 수 있는 사회 공공성이 기반되어야 하며, 사회적 자유 등이 법률적·제도적으로 제공되고 보장되어야 함
- ▶ 기본권으로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과 침해에 대한 보호는 불충분한 자원의 분배가 아니라 문화 정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각각의 권리는 서로 연결되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함. 이와 더불어 문화의 종다양성을 보호하고 확산하기 위한 문화생존권을 적극 반영해야 하며, 문화권(문화적 권리) 실현의 환경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문화의 자기결정권과 주체권이라는 관점이 중요함
- ▶ 시대 요구에 맞게 문화권(문화적 권리)이라는 기본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거나 내용을 신설해서 문화적 평등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도록 추진해야 함

추진과제 02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추진

“문화의 가치와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의 중요성”

— 문화는 인간 삶의 총체적 양식이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의 기초이며,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닌 국민의 기본권임. 따라서 문화의 가치와 문화권을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에 반영해야 함

- ▶ 문화가 국가와 사회의 중요한 운영 원리이자 국민의 기본 권리임을 헌법에 명시. 한국에서 문화권은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문화권 국가 실행계획(NAP)’ 이래 ‘문화헌장제정(2006년)’, 「문화기본법」(2013)으로 발전해 옴
 - 하지만 한국에서 문화권은 여전히 중시되지 못하고 있고, 그 관점도 창작과 생산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로 한정해서 보려는 경향이 지배적임. 환경권이나 생태권과 다르게 문화권은 특수한 권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아 문화를 직접 창작하고 생산하는 특수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로만 이해함.

의제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 일반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행복추구권이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졌는데도 시민들의 문화권리는 적극적으로 요청되지 못하는 상황임
- 헌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국가 원리와 개인의 문화권을 반영해야 함
 - * (개헌안 제9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표현의 자유’ 보장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허가·검열 금지를 명확히 해야 함
 - * (개헌안 제20조 제1항)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한다.

추진과제 03

문화영향평가제도 확대 및 실효성 강화

“문화영향평가의 확대 및 실효성 강화”

- _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보장하려면 「문화기본법」을 개정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할 때 문화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함

※문화영향평가는 국가 주요 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도입해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가치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문화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2016년부터 시행하는 평가제도임. 문화권은 성별이나 종교, 인종, 세대, 지역, 경제적 지위, 사회적 신분 등과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문화를 창조하고 누릴 권리를 말함. 따라서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면 「문화기본법」을 개정해 문화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이나 계획에 대해 문화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함

- ▶ 문화영향평가가 의무적·실질적으로 시행되도록 「문화기본법」과 그 시행령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의무 시행의 대상이 되는 계획과 정책 범위를 우선 모법에서 명확하게 적시할 필요가 있음(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문화영향평가의 위상과 지속성, 실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문화영향평가의 시행 목적, 주체, 절차, 대상 범위, 추진체계, 평가기관, 평가 결과, 환류방식 등에 관해 법률 수준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해야만 정책효과를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음(「환경영향평가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등 참조)
- ▶ 문화영향평가 시행상의 ‘다양성’ 범주와 관련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영향평가에서 문화다양성 평가지표를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다양성협약 등을 바탕으로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 문화생태계의 다양성 보장 등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해야 함
- 이로써 평가가 문화다양성 정책의 목표와 방향, 비전을 구현하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은 물론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게 해야 함

- ▶ 문화다양성 정책 실행지침,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국가보고서 작성 등 문화다양성 정책을 관리하기 위한 제반 정책수단과 문화영향평가의 연계성 제고
 - 이를 위해서는 현행 「문화다양성법」과 「문화기본법」을 검토하여 문화다양성을 문화권과 문화정책의 기본이념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평가지표 차원에서뿐 아니라 평가결과 환류방식에서도 긴밀한 연계 방안 도출

02 일과 삶의 균형으로 여가친화 사회환경 조성

○ 개념

- ▶ 일 중심 사회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지향하는 사회로 전환
 - 개인의 여가시간과 적극적인 여가권을 보장하여 개인의 문화적 권리가 가능한 사회환경 조성
- ▶ 개인이 문화를 향유할 기본적인 환경 제공
 - 노동시간을 줄이고 균형을 갖춘 여가시간을 확보해 개인의 풍요로운 문화적 경험을 충족하기 위한 사회환경 조성
- ▶ 개인의 횡단적 여가시간을 확대할 뿐 아니라 종단적 여가시간도 확보
 - 생애주기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일-삶의 균형 정책 지향
 - 시간균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비물질적 요인을 책임지는 기반 확보
- ▶ 사회 전반에 문화권을 확보하기 위한 여가친화 환경 조성
 - 개인, 국가, 기업 등 사회 전반에서 개인의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도입하고 참여를 견인

○ 추진 배경

▶ 취지와 배경

• 여가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

- 삶의 방식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삶의 양식 안에서 여유와 쉼을 찾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는 추세임
- 휘게(Hygge), 옴로(YOLO), 워라밸(Work-Life Balance) 등 새로운 생활방식을 일컫는 신조어가 유행하고 '쉼이 있는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가치관이 좀 더 강화되면서 일 중심적 생활에서 일과 여가의 균형을 꾀하려는 요구가 증가함

• 고령화 시대, 여가 경력 모델을 고려한 생애설계 모델의 중요성

- 평균 수명이 늘고 노동 은퇴 인구가 증가하면서 은퇴 후 생활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은퇴 후 삶을 가치 있고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 여가시간에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생애주기 초반부터 문화활동과 여가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생애주기 전체(특히 생애 후반)에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여가경력(leisure career)의 중요성이 강조됨

• 실질적인 문화적 여가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현실

- 저성장이 고착되면서 여전히 과도한 노동시간, 자유시간 부족, 임금격차 등으로 실질적인 문화적 여가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과도한 노동시간 등으로 삶의 만족도가 주요 선진국 대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 삶의 만족도(2015): 한국은 10점 기준 5.8점,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
 - ※ 노동시간(2015): 한국은 2,113시간, OECD 회원국 중 2위로 장시간 노동국가, OECD 평균은 1,766시간

▶ 현황과 문제점

• 개인의 여가활동 참여에서 가장 큰 제약 요인은 여가시간 부족

- 한국인 개인 평균 여가시간은 큰 변화 없이 10년간 지속되어 온 상태임. 즉 1999년 4시간 50분이던 여가시간이 2014년에도 4시간 49분으로 유지되고 있음('16년 통계청)
- 문화, 체육, 관광 활동 등 여가활동 참여에서 가장 큰 제약요인이 '여가시간 부족'으로 제시됨 ('16 국민여가활동조사: 제약 조건의 51.5%가 시간 부족으로 응답)

• 장시간 노동과 여가시간 부족으로 텔레비전 시청 같은 소극적 여가활동에만 집중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2016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 1순위 여가활동은 여전히 텔레비전 시청(46.4%)임
 -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문화 참여, 체육활동, 여행, 취미활동 등에 참여율을 높이려면 최소한의 여가시간 확보가 절실함
 - 개인의 여가시간과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 시도
 - 대체휴일제 확대(현재 7일에서 확대 논의 중), 유급공휴일 민간 적용(「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중) 등 제도를 개선해 국민휴식보장권 인정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을 개정('16.12.20.)하러 직장인의 여가를 위한 휴가사용실태조사 실시 등 기초자료를 수집해 제도적 접근 시도
 -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연령 차별적 여가시간 불균형 초래
 - 학습중심의 청소년기, 일과 가족 중심의 중·장년기, 여가시간 확장의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일-여가 불균형 상태
 -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시간구조를 균형적으로 형성해야 은퇴한 뒤에도 노년기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으나 현재 아무런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거나 여가경력이 개발되지 못함
- ▶ 기대효과
- 문화적 여가시간을 확보해 문화향유가 가능한 기본적인 사회환경 조성
 - 노동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확보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체감이 가능한 시간균형 정책 정착

추진과제 01

잃어버린 삶의 시간 회복- '쉽이 있는 삶' 캠페인

- ▶ '쉽이 있는 삶' 캠페인으로 통한 일-삶의 균형 인식 제고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하여 캠페인 실시(노동부 협력)
 - 삶의 풍요를 핵심가치로 하는 자유시간과 적극적인 여가권을 주요 내용으로 캠페인을 진행
- ▶ 일상의 시간구조를 개선하여 문화향유의 토대 마련
 - 노동시간의 총량을 관리하여 여가시간의 확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불균형한 시간문제의 개선을 통해 여가참여의 토대와 기회를 마련
- ▶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일과 여가가 균형을 이루는 삶 지향
 - 캠페인 참여자들에게 실효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홍보 효과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추진

추진과제 02

노동시간 총량 관리 및 근로자 휴가권 강화

- ▶ 공휴일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체 휴일제 확대(관계부처 협의)
 - 현재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고 있는 대체 휴일제를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대 적용하는 방안 추진
 - 장기적으로는 토요일과 중첩되는 경우에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
- ▶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휴일 관련 법 제정, 공휴일 전후 연차 사용 의무화 추진 (관계부처 협의)
 - * 현재 민간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준용 중
- ▶ 휴가실태관리, 연가사용촉진 등 근로자의 휴가권 강화(관계부처 협의)
 - 연차휴가의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국가승인 통계화를 추진
 - 공공부분의 연가사용을 촉구하고 미사용 연가보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연가사용의 기반을 마련
- ▶ 민간의 휴가활성화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휴가지원제도 실시(인센티브제도, 한국형 체크바캉스 도입 등)
 - 한국형 체크바캉스를 도입하여 휴가비 지원 등을 통해 휴가 활성화를 유도
 - 중소기업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휴가제휴시스템을 구축
- ▶ (중소기업 직장인)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추진('18년 2만명 → '22년 연간 10만명) 및 민간 중심으로 제도 정착
 - * '18년부터 마중물 형태로 한시 지원, 향후에는 간접 지원 형태로 전환 유도

추진과제 03

휴가시간을 확보해 여가 경력 개발

- ▶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문화, 체육, 여행 등 여가활동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 조성
 - 유아의 창의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부터 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과 노년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을 추진
 -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모임형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 개인의 삶의 질 영역에서 비물질적 요인을 책임지는 정책 영역 확보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추진과제 04

여가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

- ▶ 여가친화기업인증제 확대, 개인의 여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 적극적 참여 독려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개정을 통해 여가친화기업인증제를 법정 인증제로 전환 추진
 - * 여가친화기업 인증제 확대('18년 79개 → '30년 1,000개) 및 정착
 - * 선정된 여가친화기업에게 혜택 제공(찾아가는 직장문화배달 등)
- ▶ 일상의 여가공간 확충 및 접근성 제고, 관련 서비스 전문인력 관리 체계 구축, 여가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여가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체계 구축 등 여가친화환경 조성 기반 마련
 -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공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중 주민생활권 내에 있는 유휴지(시설)를 생활권 여가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 추진
 - 여가에 관련된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여가서비스 공급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서비스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

03 전 국민에게 문화복지 확산

○ 개념

- ▶ 문화복지-보편적 문화권의 인식 확산
 - 문화복지는 궁극적으로 소득, 지역, 성별, 연령, 직업의 격차 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문화권의 확산을 전제로 함. 이에 국가가 추구해야 할 문화복지는 궁극적으로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전 국민적 문화복지의 실현에 있음
 - 문화는 궁극적으로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재로 인식되고 가치가 확산되어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에서 전 국민 차원으로 확산되어야 함
- ▶ 문화적 감수성, 창의적 사고, 잠재역량 강화 장치로서 문화복지

의제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 문화복지는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좁게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넓게는 모든 사람의 문화적 감수성, 창의적 사고, 잠재역량을 높이기 위한 직간접적인 문화 영역의 노력과 장치를 의미함

▶ 문화 취약/소외에 대한 재정의와 제도적 반영

– 취약계층이라는 말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의미하여 빈곤계층,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을 한정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음

○ 추진 배경

▶ 취지와 배경

- 개인의 문화적 권리는 정치적·사회적 지위는 물론 경제적 지위와도 관계없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포용적 권리로 계층·지역을 넘어 전 국민에게 고르게 향유 되어야 함. 유네스코에서는 “모든 국민의 복지는 좋은 자극이 되고 유익한 환경의 존재에 의존함”을 선언함으로써 포용적 문화복지의 중요성을 언급함
- 최빈곤층과 깊은 오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문화소외는 계층·지역과 상관없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여 문화소외라는 개념 정의 역시 확산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정의와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상을 확장하는 정책의 확산이 필요함
-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문제는 현재 전 계층과 지역을 함께 아울러 재구성하고 강화하는 과정에 있으나,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인 중심의 다양한 사회예술교육,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을 확산하려는 별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현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50대는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치에 이를 정도로 문화소외 계층으로 분류됨. 생애 이모작 주기에 속하는 50대 이상 세대를 특화하는 문화 프로젝트와 이를 예술교육과 연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함
- 문화원, 문예회관, 문화의 집, 소외지역·문화시설, 폐동사무소를 활용하는 주민자치센터 이외에 박물관·미술관·문학관 등은 모두 생활문화의 기본 전제가 되는 문화향유의 터전임.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문화를 획기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기존 기초단위의 행정/문화 시설 간 연계 협력 강화가 요청됨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현황과 문제점

- 문예회관, 문화원,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기반시설을 건립했으나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고, 각기 분리된 운영개념으로 작동해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음
- 문화복지의 근간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각 시설이나 기관에 파견·지원하거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확대해 왔으나, 상시적·지속적인 교육활동 전용공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비하였음. 문화예술교육의 매개자(예술가, 문화예술교육자)와 수요자들이 일상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개자 인력(인력 자원)과 프로그램(콘텐츠 자원)이 상시적으로 결합되고 문화예술교육이 이루어지는 상설화된 전문공간(공간 자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행해야 함
 - ※ 생활현장의 문화예술교육 전문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시설물이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예술가, 문화예술교육자)과 지역 주민이 가깝게 만나고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문화예술 경험을 확장하는 플랫폼으로 의미가 있어야 함. 또 생활공간 내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실험과 활동을 상시적으로 시도하는 생활권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의 거점이 되어야 함
 - ※ 문화예술교육 전문공간으로서 문화예술교육센터의 정의: 일상생활에서 지역사회의 어린이·청소년과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예술가와 함께 예술로 상상하고 표현하는 예술놀이와 창작활동을 하면서 늘 새롭게 변화하는 미적 공간과 문화적 경험을 만들어 가는 창조적인 체험교육의 장(『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7)

▶ 기대효과

- 현행 제도를 강화하고 개선하여 더욱 적합한 제도로 정착시켜 실효성을 높임
- 전 국민이 '문화를 누릴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 문화복지 국가로 나아감
- 문화복지 확산의 방법론으로 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 활성화를 터전으로 확산하되, 이를 지탱할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시설의 융합기능을 확대하며 정책 지속성·일관성을 유지함
- 궁극적으로 현재 특정한 대상으로 한정된 문화복지 개념을 사람의 기본권리 차원에서 문화권의 사회적 인정과 넓은 의미의 보편적 복지 개념의 문화복지 진입, 포용적 문화복지를 실현함

추진과제 01

통합문화이용권제도 개선과 확산

- ▶ 통합문화이용권 이용 방법 개선, 저소득층 외에 일반 국민으로 대상 확대, 관리체계 개선 등의 제도 강화

의제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 경제적 소외에서 발생하는 문화소외를 극복하는 장치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005년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06년 본격적으로 저소득층 대상 '문화바우처'를 도입함. 2014년 각기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권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으로 통합하여 운영 중임
- 최빈곤층과 깊은 오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문화소외는 계층·지역과 상관없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여 문화소외라는 개념 정의 역시 확산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정의와 확대가 필요함. 이를 바탕으로 대상을 확장하여 궁극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복지 확산을 최종 목표로 함
- ▶ 단순한 증액 차원을 넘어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의 문화적 경험 확산과 문화 향유 확산이 가능하도록 함
 - 저소득층 고령자(80세 이상 등)가 활용하도록 당사자는 물론 동행자에게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추가 제공 추진
 - 국정과제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에 기반해 2021년까지 1인당 10만 원으로 증액
- ▶ 이용 가능한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특정 분야에 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함
 - 통합문화이용권은 문화, 여행, 체육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나 영화 관람과 도서 구입 등의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음. 또 지역별 문화 인프라 차이에 따라 사용 환경에 차이가 있고 고령자·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서 카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고 광역지역문화재단이 관리하는 기존 체계에서 기초문화재단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업하는 체계로 강화해야 함

추진과제 02

생애주기별 문화복지 확산

- ▶ 청소년 문화 활동 강화, 학교문화예술교육 강화
 - 지역별로 대학교 공연예술동아리, 인문학동아리, PT동아리들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확장해서 문화와 청소년을 이어주는 다양한 효과가 기대됨. 입시 중심의 교육환경에서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예술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연은 중·고등학생들의 몸과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음
 - * 지친 수험생을 위한 공연 차원을 넘어서는 학교예술교육, 인문학교육을 기획해 청소년에게 문화적 경험은 물론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함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직장인이 문화를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일과 놀이' 프로젝트 전개

- 직장이 생활문화를 확산하는 장소로 사용되고 일과 놀이가 원활하게 상보작용을 강화하도록 직장인 동아리 활동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중년 세대의 문화복지 확대(50+문화복지 확산)

- 전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생애전환 주기에서 결정적 세대인 50대 이상 세대의 문화복지 확산. 이로써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의 의미를 문화복지 확산 차원에서 시행해야 함

* 50대 이후 세대의 삶의 질 향상, 근본적인 존재이유와 삶의 이유 찾기, 여전히 사회적 역할이 분명한 풍부한 인적 자원으로 사회자본의 생성과 확장, 생애주기의 내재화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인생 3모작 신중년 프로젝트임

〈50+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 지원〉(100대 국정과제)

- 50+세대 또는 장년층으로 불리는 50세~64세 연령은 생애주기에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를 겪으며 다양한 역할 변화(사회활동의 변화, 자녀 독립, 은퇴, 조부모 됨)에 직면하는 시기임
- 문화예술 경험이 부족하고 자기감정이나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며 문화예술교육정책 대상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세대임
- 행복감 수준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노후의 경제적 안정 외에도 자유시간의 활용과 문화 향유를 통한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둔 공공문화정책 추진
 - ※ 미국의 경우 '창의적 노화'(creative aging) 개념에 기반을 두고 중장년과 고령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실행하며 예술교육과 커뮤니티 아트 성격의 예술활동, 예술치유, 세대 통합의 사회적 목표를 포함하고 있음
 - ※ 영국의 경우 문화의 시장성을 제고하는 데 장년과 고령 인구를 '제3연령기'(Third Age)로 규정해 주요 타깃으로 설정함. 영국예술위원회에서는 새로운 관객 개발 프로그램의 하나로 장년과 고령층에게 예술택시 등 차량을 제공하거나 일부 갤러리에서 이들을 스태프로 고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함

추진과제 03

생활문화공간을 재편해 전 국민적 문화향유 확대

- ▶ 공공도서관, 문예회관, 박물관, 미술관 등 기존 문화시설에서 기능을 융합해 생활문화 매개 공간 역할을 증진해야 함

- ▶ 지역에 산재한 문화센터와 생활문화의 기능 중복을 강화 차원으로 유도하고, 다른 부처와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이것이 생활문화 활성화라는 동일한 시점에서 작동되도록 유도해야 함
- ▶ 각 시설이 다양성을 유지하고 고유의 활동을 보장받되 생활문화 차원의 인증제도를 도입해 중앙정부-광역지원체계-기초실천체계를 구축하고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는 기본 전제가 되도록 유도해야 함.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부양할 필요가 있음
- ▶ 전 국민의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편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체계를 조성해야 함
- ▶ 문화자원봉사 활동을 강화해 문화향유 기반을 단단히 해야 함
- ▶ 문화자원봉사 전국대회를 열거나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등 문화자원봉사제도를 확산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민 캠페인을 추진해야 함

04 /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전면 확대

○ 개념

- ▶ 거주지 중심 간이체육시설 조성, 스포츠지도사 시군구 단위 확대 배치, 국민체력100 사업 연계로 국민체육센터 지역 거점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 공공형(중앙정부 관리형), 전문형 스포츠클럽(중앙정부 지원형), 공익형(지방자치단체 관리·지원형) 등 다양한 유형의 스포츠클럽 조성 중
- ▶ 시군구 단위 도시형 2개 이상, 중도시형 1개 이상, 농촌형 등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클럽 운영모형 개발 중
 - 1시군구(읍면동) 1스포츠클럽 추진 중('18년 63개 → '30년 3,500개)
 - 스포츠클럽 지원 근거법 마련 및 지자체 조례제정 유도, 지역사회와 스포츠클럽 간 연계 강화 예정
- ▶ 스포츠클럽육성법 제정, 스포츠클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가 구축되고 있음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 문화주체들의 문화향유 기반과 네트워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음
 - 개인의 문화향유 기반을 조성하거나 공동체의 경계를 허물어 접근성과 개방성을 지향함
 - 문화인프라-창작자-이용자를 연결하는 문화향유 네트워크를 구축해 자발적인 문화적 확장성의 기반을 마련함
- ▶ 문화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있음
 - 지역별, 세대별, 세대공감별, 장르별 접근성이 용이한 문화 환경을 구축 중임
 -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율 증대를 꾀함

○ 추진 배경

- ▶ 취지와 배경
 - 노동집적화와 도시화, 초고령화 등으로 문화접근성이 제약된 환경을 개선해 문화가 있는 삶을 보장해야 함
 - 중앙 중심이 아니라 구석구석의 문화로, 각 지역의 지리적·인문적 특성이 지속가능한 국가로 전환해야 함
 -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촉진
 - 인구통계적 특성과 개인적 기질이 공존하는 문화
 -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공동체의 문화활동과 체육활동에 기반한 클럽, 동아리, 동호회 활동 지원 확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분야 등 모든 영역에서 문화시설의 법적 위상 정립 및 국가 지원, 민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함
 - 문화시설의 공공성과 사회적 자원으로서 위상 정립
 - 공공성에 기반해 문화시설을 전면 개방하고 전문인력이 운영함으로써 효율화 추구
 - 사회적 자원으로 관광지의 공유성 확장
- ▶ 현황과 문제점
 - 수요자 중심과 현장중심 정책 개발 요구에 적절한 응답을 주지 못함
 -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려는 국가의 문화정책이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공급자 위주의 분절적 서비스 공급과 경제적 성과지표에 근거한 성과관리에 집중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정책으로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음

의제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 제공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예산이나 공급자의 기획에 근거하여 기능과 성과를 평가하던 것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는 체계가 필요함
- ‘개인’의 문화적 권리에 집중하는 문화정책은 수립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한 요구에 맞게 재편할 필요가 있음
- 아날로그와 정보통신기술(CT) 등 전통과 현대가 융·복합적으로 작동하는 현장 상황에 적절한 문화기반 시설의 개선이 필요함
 - 기존의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점검을 바탕으로 한 시설 재배치와 설비 증강이 필요하고, 지역과 현장 맞춤형 시설을 개조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문화력을 증진해야 함
- 각종 문화시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지원을 제도화해 전국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접근성을 향상해야 함
 - 법제화된 시설 중에서 소외된 문화의집,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생활문화센터 등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지속적 지원을 정착해야 함
 - 사설 및 국공립 창작소, 레지던스, 갤러리, 스튜디오, 도서관 등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관리·운영을 지원해야 함
 - 관광 부분에서 게스트 하우스, 여행자 플랫폼, 로컬 여행사, 여행자 카페 등의 사업 범주를 확장하고 법적 지위를 인정(「관광진흥법」 개정)해 주어야 함

▶ 기대효과

-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해 문화력 회복
- 소규모 공동체 문화활동 확대
- 수요자 중심 문화서비스 모델을 정착하고 서비스의 질 제고

추진과제 01

문화 인프라-창작자-이용자를 연결하는 문화향유 생태기반 구축

- ▶ ‘국민 누구나 1시간 거리 안에서 균질적인 문화향유가 가능하도록 문화인프라-창작자-이용자를 다양한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통합적인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앱이나 웹서비스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으로 구현
- ▶ 문화향유 네트워크 설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창작자와 이용자들의 자율성에 기반하는 분산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 (아동) 어려서부터 문화에 친숙해지도록 문화 체험 기회 제공
 - 첫걸음(New Step) 문화카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문화카드 제공
- ▶ (청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국내여행을 다닐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관광 체험 할인혜택이 포함된 통합관광교통카드 도입 추진
 - 청년층 대상 시범 도입, 다른 계층 확대 도입 추진
- ▶ (노인) 저소득층 고령자(80세 이상 등)가 활용하도록 당사자는 물론 동행자에게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추가 제공 추진
- ▶ (중장년) 또래와 교류하기 등 관심사와 신체적 여건을 고려한 환경 조성
 - 실버여행학교(노년): 평생교육기관이나 지역문화센터와 연계, 여행과 평생교육을 결합
- ▶ (장애인) 무장애 환경 조성 및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
 - 장애인예술 전용극장 설립, 일반 영화관 내 장애인·비장애인 동시관람 시스템 구축
 - 장애물 없는 열린 관광지 조성('18년 29개 → '30년 220개/누적), 시군구 단위로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 찾아가는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확대('18년 15개소 → '30년 50개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18년 577명 → '30년 3,000명)
- ▶ 주거 인접 장소에 가족 친화형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확대
 - 문화놀이터: 낡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기존 놀이터에 문화를 입혀 가족 친화형 놀이터로 재조성, 낙후 지역 중심으로 조성 시작('30년 100개)
- ▶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생활문화시설 등 주거 인접 시설에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인문 프로그램 지원
 - 인문강연, 인문융합 프로그램, 인문동아리 운영 등 지원
-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주도형 '우리 동네 특화 도서관' 도입
 -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추진
- ▶ 집에서 10분 거리 안에 운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신규 시설 조성, 기존 시설 활용 확대
 - 거주지 인근 간에 체육시설 조성,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교육부 협의), 생활체육지도자 시군구 단위 확대 배치 등

추진과제 02

근린생활권 내 생활문화기반 시설 이용 활성화

- ▶ 지역 간, 도시 간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 기반 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
- ▶ 생활문화와 기술, 장르문화가 융·복합할 수 있는 생활 속 문화권을 확장하기 위한 지원 제도화
 - 게임·영화·웹툰 등을 직접 창작·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 누리터’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이 모두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창작·향유 프로그램 구성(‘18년 2개소인 콘텐츠 누리터를 광역 지자체별 조성 추진)
- ▶ 문화클럽이나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해 생활문화 지역 확산
 - 문화 동아리 10만 개(‘18년 현재 약 3만 2,000여 개)를 양성하기 위한 단계적 지원
 - 발표·교류·공간·강사활동 지원 등
- ▶ 지역단위 수요자 기반의 문화 서비스 통합 지원(‘여가패스’ 도입)
- ▶ (직장인) 퇴근 후나 공휴일에도 이용 가능한 시설과 프로그램 확대
 - 업무 지역 인근 국공립 문화시설 야간개방 연장, 심야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추진과제 03

지역문화시설의 관객 참여 플랜 수립

- ▶ 지역단위 문화시설(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등)의 관객 참여 및 접근성 완화 계획 수립(‘문화시설 문턱 없애기’, ‘관객참여 플랜’ 등)
- ▶ 기존의 문화시설에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생활용품을 만들어 사용하는 ‘메이커스 문화’, ‘문화공작소’ 활동 지원
- ▶ 생활문화시설의 건립 및 재생에 국가 지원 확대
- ▶ 공급 지표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지역문화지수’에 수요 부문을 결합하여 ‘지역문화균형지수’로 확장·모델 개발
 - 공급(시설, 인력, 기관, 프로그램 등), 수요(문화향유 수준, 만족도 등)
- ▶ 지역 간 문화 여건을 진단하고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 맞춤형 지원 등 정책을 연계하여 실효성 제고
- ▶ 지역문화 실태조사를 2년 단위 조사로 정례화하고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추진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추진과제 04

전국 관광지의 접근성 향상

- ▶ '장애인과 노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관광자원의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및 무장애 관광지 확충
- ▶ 지역 주민 참여형 관광개발과 지역 주민 보상형 관광개발을 조화해 관광지동지내몰림(투어리스트피케이션) 또는 관광객 과잉(오버투어리즘) 방지
 - ※ 투어리스트피케이션(Touristification): 주거 지역이 관광지가 되면서 기존 거주민이 이주하는 현상
 - ※ 오버투어리즘(over tourism): 한 지역에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환경/생태계 파괴와 더불어 어딜 가도 사람이 많거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 등 관광의 질이 떨어지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

추진과제 05

가족친화 '문화놀이터' 도입

- ▶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에 가족단위로 참여하기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 확충
- ▶ 활성화되지 않은 전국 놀이터를 문화공간으로 전환하여 근린형 가족 문화놀이 공간 조성
- ▶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에 보육과 육아지원이 가능한 무료 유아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전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적 서비스 제공('문화놀이터' 도입)
 - 국공립 문화시설 내 아이 돌봄공간 확대 등

추진과제 06

체육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밀착시설 공급

- ▶ 유휴자원을 활용해 재정투입을 최소화하고 체육복지 증진 기반 마련
- ▶ 생활권 내 체육시설 확보방안으로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유도하고자 학교 개방에 따른 학교장 책임 부담 경감 및 인센티브 제공 정책

추진과제 07

생활공간 중심의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및 지원체계 구축

- ▶ 거주지 중심의 간이체육시설 조성, 스포츠지도사 시군구 단위 확대 배치, 국민체력100 사업과 연계해 국민체육센터 지역 거점화
- ▶ 공공형(중앙정부 관리형), 전문형 스포츠클럽(중앙정부 지원형), 공익형(지방자치단체 관리·지원형) 등 다양한 유형의 스포츠클럽 조성 추진
- ▶ 시군구 단위 도시형 2개 이상, 중도시형 1개 이상, 농촌형 등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클럽 운영모형 개발 추진
 - 1시군구(읍면동) 1스포츠클럽 추진 '18년 63개 → '30년 3,500개)
 - 스포츠클럽 지원 근거법 마련 및 지자체 조례제정 유도, 지역사회와 스포츠클럽 간 연계 강화
- ▶ 스포츠클럽육성법 제정, 스포츠클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구축

추진과제 08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참여와 향유의 주체가 되는 문화 예술 정책

- ▶ 나도 예술가, 3W 프로젝트, '100만 인 생활예술가 되기'
 - 누구든: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가 되기”(모두가 누리는 생활예술의 확대)
 - 언제든: “언제든 예술로 즐거운 삶”(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 어디서든: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문화공간”(더 가까운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공연장)
- ▶ 보는 콘텐츠에서 만드는 콘텐츠로
 - 청소년을 위한 콘텐츠 창의력 학교 운영(“나도 영화감독”, “나도 웹툰작가” 시리즈 프로그램)
 - 우리 모두 손재주 장인 되기: 수제·메이커스 문화 공방 지원 확대
 - 주민이 미디어의 주인이 되는 마을 미디어 사업 전국 확대

05 개인의 문화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 개념

- ▶ 문화적 권리는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스스로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앞으로 문화정책에서는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임
- ▶ 문화예술교육은 제도교육으로서 학교 예술교과 교육이나 사설학원의 기능전수교육에서 수행할 수 없는 문화 이해 교육을 기반으로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역량을 습득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등장함

○ 추진 배경

- ▶ 취지와 배경
 -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정책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이후의 일로 이제는 성장기를 넘어 성숙기로 접어드는 시점임
 - 문화예술교육정책은 투입되는 재정 규모나 지원체계 구축,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서 비약적 발전을 보임
 - ‘양적 성장’이라 불리는 일련의 과정은 이제 성장과 발전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구호이자 암묵적 압박 기제로 작동함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자의 대량 배출과 의무 배치의 어려움
 - 학교 예술강사의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계약 주체와 관련한 중앙과 지역 간 갈등 표출, 이로써 드러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 재정비 등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안들이 제기되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와 다양화라는 두 가지 큰 방향성을 제시한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5개년)’을 발표함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과 이어지는 시행계획, 지역계획으로 문화예술교육의 본원적 가치를 회복하고 지역화·다양화를 이뤄 개인의 문화적 권리 실현에 기여해야 함

의제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 현황과 문제점

- 문화예술교육이 전반적으로 성장했는데도 다양한 참여 주체 사이의 협업은 극히 낮은 수준이며, 핵심 주체인 예술강사의 경우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서 일함
- 대부분 사업이 지역현장에서 전개되는데도 지역센터의 운영환경이 열악하고 지위가 불분명하여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며, 기초단위에서 정책 수행 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 규모가 가장 크고 참여 예술강사도 5,000여 명에 이르는 거대사업이지만, 재원이 일자리 예산으로 편성되어 연단위로 재편되는 단기일자로 운영되기 때문에 상시 지속 업무로서 문화예술교육 서비스 제공에 제약을 받음

▶ 기대효과

- 지역분권과 참여주체 활동 여건 개선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생활예술, 문화기반시설 연계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생활권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자 함
- 문화예술의 향유와 창조에 적극 참여하는 새로운 문화주체 형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

추진과제 01

문화예술교육 지역 분권화 추진과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 ▶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행정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특성 반영
 - 지역별 종합계획 수립, 문화예술교육지원조례 제정, 광역센터 역할 강화 및 기초센터 지정 방안 마련 등
- ▶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역문화예술교육 거점 기관화
- ▶ 기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기반 마련
- ▶ 향후 5년간 문화예술교육정책 사업 가운데 지역단위로 이관할 사업의 목록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권한의 이관/이양 수준, 이관/이양의 연차별 추진 계획 마련
- ▶ 중앙단위에서는 정책 전반의 방향을 수립하는 일, 파일럿 성격의 사업, 문화예술교육정책 환경(제도 등)을 조성하는 일 등을 담당하고 구체적인 사업 실행은 지역단위에서 담당
- ▶ 학교/사회문화예술교육으로 이원화된 문화예술교육정책을 지역단위에서 통합적 재편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추진과제 02

학교 예술강사 등 문화예술교육가의 지위와 권리를 강화해 문화예술교육 안정화

-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강사 선정과 배치, 강사의 수업 진행과 그에 대한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음. 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치중되어 예술교육전문가로서 역량 확충 및 안정적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부족
- ▶ 문화예술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교육의 담당 주체인 문화예술교육가(예술강사)의 지위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함
- ▶ 특히 학교 예술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화하기 위해 지속적 노력 필요

추진과제 03

수요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 영역의 다변화

- ▶ 문화예술교육은 계층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인문교육, 문화다양성 교육, 미디어교육, 문화유산교육, 통합·융합교육 등 프로그램을 다양화함
- ▶ 다양한 채널과 내용으로 접근하는 문화예술교육을 의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해당하는 다원주의적 가치관 구현
- ▶ 청소년이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과 연계하여 '청소년 창의스쿨'(Youth Creative School) 개설

추진과제 04

예술 수요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강화

- ▶ 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를 '문화예술교육 자원지도'로 찾아보기 쉽게 정리하여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강화
 - 문화예술교육단체, 프로그램, 시설 현황, 타 부처 문화예술교육 관련 내용 포함
- ▶ 문화나눔 등 티켓 보조 방식의 관객 지원 정책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수요 확대로 연결되려면 예술 감상과 표현 등 문화예술교육과 결합하는 것이 효과적
- ▶ 문화예술 동아리 활성화·교육지원 등 생활문화와 연계한 자발적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 '18년 700개, 8개 지역 지원 → '30년 1,500개, 17개 지역 지원
- ▶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전문공간(문화예술교육센터)과 지역 문화기반시설을 연계해 문화예술교육 기능과 역할 강화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상설화, 문화예술교육 매개인력 상주 등

추진과제 05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 ▶ 보호주의적 접근, 기술활용적 접근 등 기존 미디어교육의 한계를 ‘문화권리 증진’ 관점에서 극복하는 새로운 미디어교육 추진
- ▶ 방송, 영화 등 창작과 이용 사이의 문화적 매개가 활발한 전통적 미디어와 달리 무매개적 수용 환경에 놓여 있는 게임, 1인 미디어, SNS, 웹툰 등에 대한 미디어 수용의 문화적 매개 활동(인문적 비평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 ▶ 문화예술교육의 지평을 대중문화예술과 뉴미디어로 확장하여 대중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체계 구축
- ▶ 중고등학생의 대중문화·미디어·뉴스 수용 능력 교육 도입, 성인 대상 미디어교육 평생교실 확대 운영

추진과제 06

치유와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 ▶ 군 부적응병사, 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 등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개인에게 적합한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 ▶ 세대 갈등, 가족해체,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통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추진

추진과제 07

생활 속 자생적 인문 확산 기반 구축

- ▶ 인문을 접할 기회가 부족한 계층·지역에 찾아가는 맞춤형 인문 프로그램 실시
 - 찾아가는 인문 세대공감(독거노인, 양로원 등), 찾아가는 직장인 인문콘서트(직장, 공단), 찾아가는 인문교실(군부대, 교정시설, 복지시설) 등 특화·확대
- ▶ 인문·철학의 교류·소통·확산 거점공간으로 세계인문학교 운영 추진
 - 국내외 석학·명사들의 강연·교류와 학술행사로 새로운 인문담론 형성과 확산

의제2 문화예술인·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

“문화와 문화정책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인의 권리를 실현해 인권의 가장 중요한 감성적 권리를 실천한다”

- 창작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제도를 무너뜨린 블랙리스트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와 기관 조직구성·운영의 혁신을 이끌어내 문화국가로서 기반을 확고히 하는 문화정책 수립
-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생존 기반인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복지제도를 확충해 보편적인 사회보장 혜택을 받게 하고, 예술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활동역량이 사회의 다른 영역과 긴밀히 연결된 사회적 자원이라는 인식을 확산하며, 제도적 실천으로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의 토대를 다지는 문화정책 수립

대 표 과 제

1.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2. 문화예술인·종사자(예술·스포츠·관광·콘텐츠 분야) 노동권·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확충
3. 예술인 복지 통합정책 지원체계 수립
4. 자율성과 협치 중심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지원체계 혁신

01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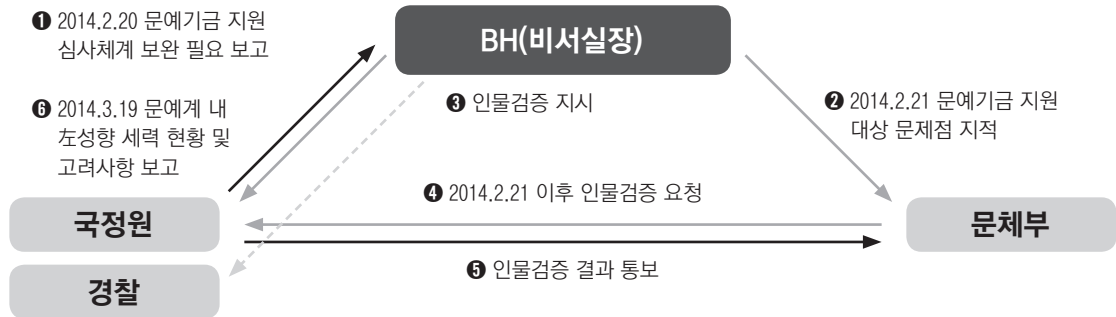
○ 개념

- ▶ 대한민국 헌법은 문화 · 예술 영역의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와 그 파생적 기본권으로 예술의 자유 및 예술인 등의 권리(헌법 제22조)를 보장하고 있음
- ▶ 표현의 자유는 진실을 발견하거나 민주주의를 위한 수단으로 기능할 뿐 아니라 인격의 발현 내지 다른 사람의 표현에 대한 관용의 의미로서 가치를 포함
- ▶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정치뿐 아니라 문화영역에서도 상대주의에 입각하여 문화적 다양성 · 다원성을 보장한다는 의미
- ▶ 대한민국 법 · 제도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허가제와 검열을 원칙적으로 금지함(헌법 제21조 제2항 외)

○ 추진 배경

- ▶ 취지와 배경
 -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로써 표현의 자유 침해를 방지해야 함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법 · 제도 기반 마련
 - 표현의 자유와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상설화된 제도 마련 필요
- ▶ 현황과 문제점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이하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의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조사 결과(2017년 12월 기준) 1만 1,000여 명의 블랙리스트 명단 데이터베이스(DB)가 작동된 것으로 밝혀짐
 - ※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의 활동보고에 따르면 문화예술인 1,012명, 문화예술단체 320곳이 실제 구체적인 피해를 보았음이 확인됨. 피해 건수로는 개인이 1,898건, 단체가 772건의 검열 및 지원배제, 사찰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 보도자료’(2017. 12. 20)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국정원 개혁위원회 보고자료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의 주요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자문·심의내용 발표>

- 이명박 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2008. 8),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2013. 3) 등 문화정책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 및 통제 반복
 - 헌법, 「문화기본법」 등이 명시한 문화국가의 원리, 문화예술인의 권리 등에 대한 국가 권력의 일상적인 침해 구조가 존재
-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하여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
 - 현행 법·제도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제시할 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범죄에 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의 법적 근거가 취약한 상황
 - 블랙리스트 범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대규모 국가 범죄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의 법·제도적 근거와 권한이 없어 문화체육관광부의 훈령에 의존하는 자문위원회 수준의 제한된 진상조사만 진행되고 있음
 - 특히 표현의 자유 범죄의 특성상 블랙리스트 사태의 경우처럼 문화체육관광부의 권한을 벗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상황
 - 최근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의 사례처럼, 표현의 자유 관련 국가범죄에도 불구하고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하여 '직권남용죄'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 표현의 자유 관련 국가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적절한 처벌 조항으로 재발방지를 모색해야 함

▶ 기대효과

- 법·제도를 정비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보장 강화
- 블랙리스트 범죄를 비롯하여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 재발 방지

추진과제 01

예술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제도 기반 강화

▶ 헌법을 개정해 표현의 자유와 문화권 확대

- 예술 표현의 자유와 이에 대한 침해 및 배제 금지 등 표현의 자유 영역과 문화권을 확대하기 위한 기저 토대인 문화의 자율성/다양성/향유권 보장 등 구체화된 법조문을 현행 헌법 개정에서 반영토록 추진(관계 부처 및 기관 협의)

– 헌법 제9조 개정: 문화의 자율성, 다양성, 지속가능성, 문화향유권 보장 조항 신설

현행 규정	개정안	비 고
〈항 신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조 ① 모든 사람은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문화적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문화의 창달과 육성을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다음에 조 신설

– 헌법 제21조 개정: 표현의 자유를 명문화

현행 규정	개정안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제25조 ①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언론매체의 자유와 다원성·다양성은 존중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 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헌법 제19조 개정: 정치적 이유에 따른 배제 금지 조항 신설

현행 규정	개정안	비 고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항 신설〉	제19조 ① 모든 사람은 양심, 사상, 신념, 의견, 종교,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정치적 이유로 인하여 법에 의해 부여되는 자격이나 능력, 권리가 제한되거나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률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정치적 이유에 따른 배제 금지

▶ (가칭)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방지와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블랙리스트 사태의 유형에 따른 예술지원 원칙 명문화 및 법률에 근거한 지침 마련
-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보장하는 국가/지자체의 책무 법제화
- 표현의 자유는 문화정책의 핵심가치로 명시되고 강조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는 거의 없는 상황
-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문화기본법」에 차별과 배제 금지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아직도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 피해자 구제 및 보상제도 등에는 법·제도가 취약한 상황
- 이에 표현의 자유 침해 범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구제 및 보상 역시 법·제도화 추진

※(가칭)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목적: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가의 권리 보호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법률안은 기본적으로 예술 표현의 자유보장,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예술인 권리 보장 지원기구를 두는 것을 목표로 함
- 예술가의 권리: 표현의 자유와 문화다양성 등 문화기본권, 예술활동에 종사할 권리, 예술을 사회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 예술활동과 권리 보호를 위해 단체를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 외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가의 권리에 대한 적극적 보장 책무, 계획과 정책 그리고 평가 등의 수립과 집행, 차별과 배제 금지,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외

-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책무: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 강화, 개방성과 투명성 그리고 협치에 기초한 기관 운영 외
- (가칭)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
-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와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예술가권리보호책임자 제도 도입: (가칭) ‘예술가권리보호관’을 개방직으로 임명, 예술가 권리보호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가칭)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지원 업무 총괄 외
- 예술가 권리 침해행위 관련 내용: 실태조사, 신고 및 직권조사, 피해자 보호 및 구제, 시정 조치 외
-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 및 예술가 권리 침해 범죄 처벌 근거: 벌칙, 과태료 외

▶ 정치권력 등에 비판적인 예술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

- 직접적인 예술 검열뿐 아니라 간접적인 예술 검열 및 국가에서 예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
- 특히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이 선출한 정치인,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과 관련된 비판이나 정치적 표현이 사적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일반적으로 예술 표현에서 특정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경우는 그들의 공적 지위와 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그러한 예술 표현을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간주하여 고소하는 행위는 부당하므로 이를 미연에 금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특정 기업 또는 기업주가 공적 이익을 훼손하는 것과 관련한 비판적인 표현의 경우에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음

추진과제 02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 ▶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상설적인 협치기구로서 (가칭)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 표현의 자유 관련 예술가들의 일상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칭) ‘예술가 권리보장위원회’를 (가칭) ‘예술인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등으로 설치 명문화
 - (가칭) ‘예술가 권리보장위원회’는 표현의 자유, 예술가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일상적인 ‘신고 및 제보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센터 운영', '조사 활동', '피해자 보호 및 구제 활동', '제도개선 활동',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 후속 조치 활동', '표현의 자유 관련 권고 및 평가 활동' 등을 진행
- (가칭) '예술가 권리보장위원회'는 형식화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행정지원을 받는 민간 주도의 협치형 위원회로 설치
 - (가칭)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등과 연계, 예술가의 권익침해 행위 조사, 시정권고 및 분쟁조정(안) 심의·의결
 - (가칭) '예술가 권리보장위원회'는 국제노동기구 기준('국제노동협약')에 부합하는 노동 및 고용 조건에 관한 법적 보호를 예술가들에게 확대 적용하고, 유네스코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 따라 예술가의 특수성을 고려한 노동·복지정책 개발 및 시행(*성평등 노동 및 고용에 관한 사항, 성차별·성폭력에 대한 대책 포함 필수)
 - 위원회가 상기 법정계획(5년)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의사결정, 심의, 평가 등의 권한을 갖고 이를 책임 있게 수행
 - 분야별 자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가칭) '예술노동환경조사' 및 (가칭) '예술노동환경평가' 실행과 그 정책적 환류에 관한 심의·평가·의사결정 등 예술노동환경조사 및 평가에 성차별·성폭력 관련 사항 포함 필수

02 문화예술인·종사자(예술·스포츠·관광·콘텐츠 분야) 노동권·인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확충

○ 개념

- ▶ 예술노동의 물적 토대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로 예술인의 권리 보장
 - 직업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지위에 관계되는 일체의 법적·사회적·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
 - 보편적 사회서비스나 사회보장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문화예술인/종사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보장

사회적 지위란 자유나 법 앞에 평등이라는 사실의 후면에 존재하는 지배관계(체계 내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현대사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현저한 말단침투(末端浸透)로 사회적 지위는 마치 사람들의 평등을 전제로 한 교체(交替) 가능한 역할의 상위(相逢)를 수반하는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쉽다. 대개 일상적인 위신을 서열화해 지배관계가 침투한다.

권리(權利)는 인간과 집단이 국가, 사회, 단체 활동을 할 때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이다. 또한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을 뜻하기도 한다. 사전적 의미의 권리는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을 의미한다.

▶ 문화예술인 ·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 개별화되어 있는 문화예술인 · 종사자에 대하여 대형문화자본이나 대형문화기업이 그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거나 계약상 · 관계구조상 우월한 지위를 오용하여 발생하는 부정의/불공정행위에 따른 인권침해 방지

* 문화예술인 · 종사자

- 다양한 예술장르의 창작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문화정책전문가, 문화제작 · 기획자, 문화교육자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과 스포츠 활동과 방송 및 산업, 관광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든 창의적 종사자를 포함함

※ 인권으로서 노동권 보장

‘세계인권선언 제23조’

- 1948년 UN 인권위원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서는 노동, 자유로운 직업 선택, 적절하고 알맞은 노동 조건, 실업에 대한 보호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노동권에 관련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모든 국가가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했다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6조’

- UN은 세계인권선언을 표명함과 동시에 1954년부터 각국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인권관련법을 완성하기 위해 1966년 인권에 관한 국제규약을 만들었는데 이 국제법에는 “각 정부는 노동권의 존재에 대해서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노동권에 명시된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사항에 대해 보호 및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 ‘UN 세계인권선언’의 시사점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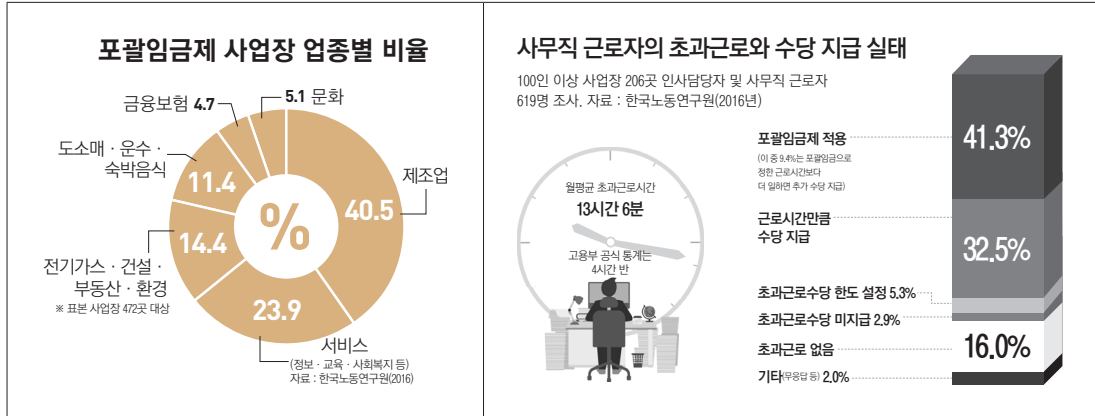
- 위계폭력·갑질은 삶의 자기결정권을 가진 주체로서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이에 따른 활동범위 보장이라는 개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침해한다는 점을 인식
- 계층·학력·연고·행위관계 등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권력·위계구조에서 저질러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와 부당함의 강요 등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사안으로 바라보아야 함
- 이에 대한 개선은 전방위적으로 깔려 있는 사회인식을 바꾸는 규범의 재정비와 시행으로 시작해야 함

○ 추진 배경

▶ 취지와 배경

- 예술인의 창작과 생활의 권리는 명확하게 분리할 수 없으며, 생활은 창작 환경 또는 조건임. 예술가의 권리는 예술 창작의 과정과 결과물을 보장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생활에서도 마땅히 인정받아야 함
-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예술인의 노동권과 노동자로서 지위에 대한 법적·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보장은 예술인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미약한 수준임
- 문화예술인/종사자들은 창의적 활동으로 주권의 의지를 표현하고,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국민의 문화향유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지만, 노동의 특수성으로 보편적 개념의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함. 이들의 생존 기반인 노동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은 인권과 직결되어 있음
- 예술의 노동가치, 예술의 사회적 활동역량 등 사회적 자본으로서 예술노동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제도적 뒷받침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토대로 작용함
- 문화예술인/종사자들의 인권 강화는 문화예술인/종사자들의 복지제도 개편과 별개 사항이 아니라 이들의 활동 현장에서 병행 추구해야 할 중요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노동 강도가 매우 높은 나라에 속함. 이로써 국민행복지수가 낮아지고 생산성도 오히려 떨어지며 산업재해와 높은 자살률도 초래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일을 덜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도록 보장하기 위함임. 특히 문화예술 종사자들은 노동 성격 및 환경의 특수성 때문에 법적으로 시행 중인 주52시간 근로제와 포괄임금제 폐지 등의 당연 혜택을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큼.

의제2. 문화예술인 · 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



- 국가인권위원회(2010)가 제시한 ‘스포츠인권헌장’에 따르면,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은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으며 신체적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로 저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하였음
- 2010년에는 스포츠인권헌장과 폭력예방, 성폭력예방, 학습권보호 등 3개 부문의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가이드라인’이 각 체육단체에 권고되어 스포츠인권이 더는 사각지대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함
- 위계폭력과 갑질은 조직문화의 위계구조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 개념이 법률과 제도 적용에서 구체화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나 지속적인 개정과 개선 반영이 요구됨
- 한국 사회의 갑질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갑질을 행한 개인의 도덕성이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이 한국 사회의 갑과 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함. 즉, 갑질은 사회구조적 문제이며, 존비로 대변되는 한국 사회의 문화 정서적 경향이 갑질의 가장 큰 원인임. 한국 사회의 기저에 갑의 강압적 역할과 을의 저자세가 깔려 있기 때문에 개개인은 그런 문화를 답습하는 것임. 이는 한 관계에서 을이었던 개인이 또 다른 관계에서 갑이 되었을 때 같은 행동을 행하는 이유임. 갑질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사회적 지위나 직책 또한 다름의 일부이며, 이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고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족에서부터 사회 각 영역의 조직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인식을 키워 나가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함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현황과 문제점

- 창조경제, 콘텐츠산업, 4차 산업 등 문화예술을 둘러싼 경제적·산업적 접근은 활성화되었으나 문화예술 분야의 노동환경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임
- 문화예술 분야 노동의 특수성을 이유로 노동권 침해가 구조화·보편화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역시 매우 취약한 상황임
- 경제적 의미에서 생산성과 경쟁력이 열악한 상태에 있는 문화예술인의 경우 일반적인 노동시장이나 서비스시장에 방치할 경우 그 처우나 지위가 매우 불리하게 될 우려가 있음
- 문화예술의 공공기능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그들의 노동은 다른 산업 분야 노동과 달리 수많은 경제외적 가치를 산출하는데도 그것이 경제적으로 상품화되지 않아 교환가치가 측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보상에서 누락된 가치들은 외부자들이 무임승차해 향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부정의가 발생함
- 고용불안과 불명확한 노동관계, 비정규 노동과 자본 중심 간접고용·특수고용형태의 문제까지 문화예술인의 노동환경은 복합적인 악재를 안고 있음
- 예술가들의 창의적 감수성이 사회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공공서비스의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하여 예술노동자의 권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함
- 온갖 ‘갑(甲)질’ 문제는 갑의 권력이 강할수록 그리고 그렇게 강한 갑의 권력을 감시하거나 견제할 힘이 약할수록 크게 나타남
 - 이런 맥락에서 문화예술계 갑질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 유명 작가, 예술계 교수, 큐레이터 등이 우리 사회에서 대단한 권력자는 아니지만 문화예술계라는 좁은 세계 안에서 이들은 절대권력임. 이 세계는 학생이나 작가 지망생, 신인 작가, 유명 작가를 섭외해야 하는 출판사 등의 직원, 작가의 팬 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명 작가·교수·큐레이터 등이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함. 특히 지망생과 신인으로서 높은 사람들에게 밉보일 경우 자신의 장래를 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절대적 약자의 처지가 됨
- 문화예술계 위계폭력·갑질은 다른 사회영역과 다른 특수성이 있음
 - 일반적으로 위계폭력·갑질이 고용이라는 노동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데에 비해 문화예술계는 이러한 고용구조가 아닌 주로 일대일 관계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향이 많음
 - 문화예술계는 조직이나 기업의 고용구조 안에서 고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맥으로 인사가 진행되고 일용직 고용, 각종 금품 수령, 수상, 심사 등이 개인적 관계 안에서 이뤄지기 쉬움
 - 예술교육 현장인 학교/학원에서 관계가 전문인으로서 활동하는 직업인으로서 창작현장까지 고스란히

- 연계되는 상황이 반복. 교육현장에서 창작현장까지 이어진 권력구조는 개인의 성취에 지대한 영향을 주며, 특히 전문예술인으로 진입하는 단계에 있는 신진예술가들에게 막대한 장애를 초래
- 문화예술계의 경우 유형화된 조직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공동체' 내의 위계폭력, 남성중심적 권력구조, 스승 · 선배가 활동영역에서 심사위원이나 비평가 등으로 이어지는 위계관계, 표현의 자유로 빙자되는 성폭력의 특징이 있음

- 서울시, 만화 · 웹툰 · 일러스트 작가 등 834명 실태조사(2017년)

과도한 수정 요구 · 부당 해지 등 80% '불공정 계약 강요당해',

3명 중 1명 인권침해 경험

서울시는 만화 · 웹툰 작가 315명, 일러스트 작가 519명 등 문화예술인 834명을 대상으로 최근 4개월 동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부당한 수익 배분,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불공정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우선 조사에서 일러스트 작가 79%가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 불공정 계약 유형별로는 과도한 수정 요구(23.6%)가 가장 많았음. 이어 시안비 미지급(20.2%), 일정 금액만 받고 2차 콘텐츠 창작과 사용 권리를 모두 넘기는 매절계약 강요(15.2%)가 그다음 순. 시안비는 작업물 초안을 만들었지만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 지급하는 비용. 만화 · 웹툰 작가도 37%가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았다고 응답. 매절계약(31.4%)과 부당한 수익 배분(31.4%)에 따른 피해가 많이 발생

부당한 수익 배분에 따른 피해 금액은 만화 · 웹툰 작가는 평균 766만 원, 일러스트 작가는 340만 원이었음. 부당한 계약 해지를 당했다는 응답도 일러스트 작가 55%, 만화 · 웹툰 작가 36%로 높은 편임

불공정 관행은 계약과 수익 배분뿐 아니라 인권침해로도 나타남. 만화 · 웹툰 작가의 31%, 일러스트 작가의 36%가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 인권침해 유형으로 만화 · 웹툰 작가는 욕설을 듣거나 무시당한 경우가 22%로 가장 많음. 사적인 업무 지시를 당한 경우도 16%에 달함. 성추행, 성희롱 등 성폭력을 경험했다는 비율도 9.5%로 응답. 실제로 서울시가 만화 · 웹툰 연재계약서와 일러스트 외주계약서에 대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 공통적으로 저작물의 2차 사용권과 관련한 불공정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기대효과

- 문화 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분야의 기층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 마련
- 단기 일자리 사업 차원의 청년 실업 대책을 넘어서는 안정된 문화종사자 고용환경 제도 개선, 미래가 있는 삶으로서 문화 기본권 확보 차원의 복지
-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예술가·문화종사자의 존재의식, 기본권 차원의 문화예술·스포츠의 범시민의식 확대 가치 확산
- 직업군으로서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공감대 확산
- 위계폭력·갑질 근절을 위한 문화정책의 역할은 문화적 관점에서 사회적 성찰을 이끌어내고, 이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으로 사회의 인식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음
- 창작 의욕 저하와 문화산업 위축이라는 양측면의 부작용을 낳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예술생태계의 건강성과 자생력을 회복하는 기초 환경을 만들

추진과제 01

(가칭) 문화예술노동권위원회 운영

- ▶ 문화예술산업종사자에 대한 노동법 특히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문제, 연금 등 문화예술노동권 보장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치 위원회 운용— (가칭)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예술가 지위와 권리보호 위원회’ 내,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노동권을 보장하는 (가칭) ‘문화예술노동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함
 -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에 의해 정의된 노동 및 고용 조건에 관한 법적 보호를 예술가들에게 확대 적용시킬 방안 모색
 - 문화예술 노동환경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중장기정책 및 계획수립
(공정한 대가지급체계를 비롯한 주52시간 근로제, 포괄임금제 폐지 등의 실효적 정착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
 - 문화영역별 자율성과 전문성을 배려한 영역별 노동환경조사 운용지원
 - 예술노동에 대한 정의, 예술인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의 범위와 기준, 예술인복지 실행을 위한 부처 간 협력, 예술현장의 불공정 문제 대응에 대한 조율 등 주요 예술인복지 의제에 대한 포괄적 논의와 조율 역할 수행

추진과제 02

예술인 직업분류와 취업기준 차별화 추진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직업분류 세분화

- 분야별 예술 창작 시스템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예술인의 직업분류를 세분해서 직업분류체계에 반영
 - ※ 직업분류가 사회보장제도(노동, 복지, 의료 보장체계)의 수혜 근거가 됨과 동시에 공정한 보상체계, 노동자로서 지위, 독립적인 전문인으로서 지위 확보와 보장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

▶ 예술인의 취업률과 취업 형태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

- 예술인의 취업에 대한 기준이 일단 사회 분야 취업과 동일 기준을 따르다 보니 예술대학 평가와 예술인의 사회적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따라서 예술인의 취업률과 취업 형태에 대한 독자적 연구와 기준이 필요

추진과제 03

저작권제도 개선

▶ 저작권이 이용허락, 양도되는 과정에서도 원창작자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 마련

추진과제 04

예술의 사회적 가치,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관한 인식 제고

- ▶ 각급 학교와 대학교육에서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 지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예술교육 과정의 정규화(정규 교과목 개발 및 시수 확보), 이에 관한 교육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 보급
 - 초 · 중 · 고 공교육 커리큘럼 내 예술의 사회적 가치,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 지위, 예술노동에 대한 교육 시행
 - * 시범학교 형태로 시작하고 예술교육사업과 연계해 정규 커리큘럼으로 확대 시행
- ▶ 문화행정기관 내 직원에 대한 ‘문화예술의 가치’, ‘문화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연수 워크숍 정례화
 -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사명 · 업무로 예술 인식 제고 의무화와 추진
 - 범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교육과 인식 제고 프로그램 개발 보급
- ▶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에 관한 모범사례 조사 · 연구, 공론화(언론 및 시민단체와 협력)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추진과제 05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부서 간/부처 간 정책협력체계 구축

- ▶ 문체부의 예술정책과 문화정책, 문화산업정책, 관광정책 사이의 연계 협력 강화
- ▶ 문체부의 예술정책과 다른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정책 연계 협력 강화
- ▶ 지역개발·지역재생, 문화유산의 보존·활용, 지역축제와 관광사업, 각급 학교와 대학 등의 예술교육 분야에서 예술가 참여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사업의 확대와 발굴
- ▶ 각종 정책사업, 예술가 고용·지원 프로그램에서 예술가에게 보수 규정 적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연계협력 강화

추진과제 06

예술가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한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 ▶ 예술가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에 관한 모니터링 체계와 평가·환류 체계 구축
- ▶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에 관한 기초연구 및 정책연구 확대
 - 문화예술·문화산업 분야 장르별 직업분류체계 정비, 성평등 현황과 개선방안 등
- ▶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에 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이에 관한 국민인식조사와 의견수렴 포함)
- ▶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관련 평가·환류 체계 마련
- ▶ 문화예술 관련 각종 정책과 예술가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관련 모든 정책에서 예술가의 정책형성과 결정, 평가·심의과정 참여 보장

추진과제 07

예술가의 직업훈련·직업개발 여건 개선과 지원정책 도입

- ▶ 예술가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예술가의 직업훈련·직업개발 지원 법제화
 - 예술가의 직업훈련 및 직업개발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가의 직업훈련, 직업개발, 직업적 처우 개선, 취업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가의 직업훈련, 직업개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예술가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반드시 포함

- ▶ 각급 학교와 대학에서 전문적인 예술가 양성교육 교과과정과 입시제도에 예술의 사회적 가치,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 지위 · 권리 등에 관한 내용 포함 의무화
- ▶ 예술가의 직업을 개발하고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 고용노동부와 정책 개발
 - 기업 등의 예술전공자 또는 직업적 예술가의 취업 · 고용 지원(업무협약 등)
 - 기업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예술전공자 또는 직업적 예술가 채용 확대 방안 검토
 - 성평등 고용 및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협력 방안 포함
- ▶ (가칭) ‘예술가교육 및 양성 지침’을 제정하여 각급 학교와 대학, 사설 예술교육기관 등에 적용
 - 예술교육 종사자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 규정화(성차별, 성폭력, 위계폭력 등 금지)
 -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정책참여 등에 관한 (가칭) ‘예술가시민교육’ 교과과정 마련 필수화: 기능 중심, 결과(성과) 중심 교육의 한계 극복, 지역사회와 세계 시민으로서 예술가 등에 관한 비전 제시 등
 - 예술교육 여건(시설, 교육인력, 교육비 등)에 관한 기준 마련과 적용
 - 예술가 교육의 좋은 사례 발굴 · 시상 등

추진과제 08

미성년 예술가와 신진 예술가의 보호와 지원 법제화

- ▶ 미성년 예술가 · 신진 예술가의 보호와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의 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예술가로서 직업훈련 또는 교육을 받는 미성년 예술가(이하 미성년 예술가)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해야 함. 미성년 예술가의 인권을 침해하는 자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예술가로서 직업적 활동을 개시하려고 준비하거나 예술가로서 경력이 5년 미만인 자(이하 신진 예술가)에 대해서는 나이, 성별, 인종, 국적, 민족, 장애, 정치적 견해, 경제적 여건, 학력, 지역, 예술경력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예술적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한 보호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함
- ▶ (가칭) ‘예술가 교육 및 양성 지침’ 제정의 법적 근거 마련
 - 미성년 예술가와 신진 예술가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보장하는 사항 포함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추진과제 09

스포츠인권 전담기구 운영과 스포츠 복지제도 강화

▶ 스포츠인권 전담기구의 독립적 운영

- 스포츠인권을 담당하는 기구는 스포츠계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문제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해야 하며 동시에 필요한 교육활동과 사업을 운영해야 함
- 스포츠인권 전담기구의 기능과 역할,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체육 관련 단체인 대한체육회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일한 독립기구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스포츠지도자 처우 개선과 효율적 관리 시스템 구축

- 체육지도자의 처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데도 현장의 체감 수준은 매우 미흡하고, 제도적 불합리성으로 높은 퇴직률과 이직률 유지
- 지도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당 체계, 초과 근무 등 근로복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지도자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성과 관리와 인력 수급 모니터링 상시화

추진과제 10

문화예술계 위계폭력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 마련⁵⁾

▶ 문화예술계 갑질 근절 센터(신고, 교육) 운영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확산하기 위한 문화정책 시행”: 위계폭력, 갑질 없는 민주적인 문화예술 · 문화산업 창작 · 생산 환경 조성

- 문화예술계 갑질 근절 신고센터
- 인권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교육 커리큘럼에 도입과 시행(교육부와 연계)

▶ 위계폭력, 갑질 실태조사와 엄중처벌 방안 마련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분야별 위계폭력과 갑질 실태조사

※ 문화예술계 내 위계폭력, 갑질 가해자들은 권위 있는 사람들인 반면 대다수 피해자는 학생이나 신진

5) 민경자(1999). 「성폭력 여성운동사」, 『한국여성인권운동사』, 한울아카데미.
변혜정(1999). 「성폭력 의미 구성과 여성의 차이」, 『섹슈얼리티 강의』, 동녘.
변혜정 역음(2006). 「성폭력 '경험들'에 대한 단상」, 『섹슈얼리티 강의, 두번째』, 동녘.
송재룡. 「끊이지 않는 '갑질'의 역사, 유형을 진단해 보면」, 이코노믹리뷰, 2016.1.12.
서울시(2017).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서울시.
이성은(2005). 「섹슈얼리티와 성문화」, 『새여성학 강의』, 동녘.

- 예술가 등으로 ‘등록된 예술인’에 들지 못할 확률이 높음. 따라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실태조사를 하거나 피해자를 지원할 때 단순히 ‘등록된 예술인’으로 범위를 한정하면 안 됨
 - 2차 피해 방지, 가해자 엄중 처벌 방안 마련
- ▶ ‘문화예술 종다양성’ 확산을 위한 예술지원 체계 마련
 - 차이에 대한 존중과 차별 방지의 기초 문화 토대인 문화다양성 확산에 대한 문화정책 의지를 담아낸 예술지원 체계 마련
 - ※ 문화예술의 종다양성을 확산하려면 소수자에 대한 시혜나 배려의 관점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개체로서 다양한 속성의 예술창작 작업의 활동범위와 이에 대응하는 환경조성이라는 적극적 관점의 정책시행 필요

03 예술인 복지 통합정책 지원체계 수립

○ 개념

- ▶ 보편적 사회보장 체계를 강화하는 예술인 복지
 - 현재와 같은 특수복지체계를 기존의 보편적 복지체계로 확장하고 이로써 예술인과 유사한, 사회보장 체계 사각지대에 놓인 여타 직군의 사회보장 통합을 모색
 - 보편적인 복지체계 위에 예술인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장르별, 고용형태별, 세대별 복지정책을 제공함으로써 시혜적인 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권리로서 예술가의 삶이 지켜지도록 추진

○ 추진 배경

- ▶ 취지와 배경
 - 예술현장과 밀착한 기관운영 방향 제시
 - 예술현장에 호응하는 예술인 복지정책을 펴려면 예술인이 복지제도에 직접 참여하고 예술인 당사자가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동료 예술인 시민과 함께하는 것이 필수적

- 이로써 예술인들이 개인으로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고 스스로 예술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적 역량을 강화해 낮은 수준의 참여부터 높은 수준의 참여까지 예술인 스스로 권리로써 예술인 복지를 운용·실행할 수 있는 협치 기반 마련
- 예술인 복지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적 방향 수립
 - 단순한 예산지원과 사업관리가 아니라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과 비전이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음
 - 예술인의 삶과 창작의 자유가 분리되지 않는 통합적인 예술활동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강화
- 예술인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복지 사업 추진
 - 예술인 사회보장(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예술인 직업권 보장(예술가 사례비 현실화), 예술인 생활지원(주거 지원과 예술인 금고 도입) 등으로 예술가들의 삶과 작업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사업 추진

▶ 현황과 문제점

- 예술인의 삶과 떨어져 있는 단순 지원 사업의 반복으로 예술인 복지정책이 파편화되어 왔음
 - 예술인 복지는 다양한 예술인의 삶에 조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창작준비금/파견예술인 사업으로 이원화된 구조에서 해당 사업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예술인의 삶을 진단하는 기능이 갖춰질 필요가 있음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에도 문체부의 위계적인 행정구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사퇴 사건, 블랙리스트 사태 외), 단순 사업수행 기관화 등으로 예술인 복지정책의 전문성과 통합성 확보가 지체되어 왔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구조와 현황

창작역량강화	창작준비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예술인 지원 - 소득기준,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 1인당 300만 원 지원(연속지원 불가)
	원로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로예술인 예우와 지원 -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활동경력 20년 이상 - 1인당 300만 원 지원

의제2. 문화예술인 · 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

창작역량강화	예술인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실비 지원 - 소득기준,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직업역량강화	예술인 파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브잡(sub-job)을 통한 경제 지원 - 예술인과 기업/기관/지역 연계
	예술인 시간제 보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 맞춤형 돌봄(보육)시설 운영 - 대학로 '반디돌봄센터', 망원동 '예술인자녀돌봄센터' - 시간당 500원
예술환경 개선	예술인 신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 소송비용(각종 수수료) 지원 최대 200만 원
	표준계약서 보급 및 교육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분야별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 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실무 교육
	예술인 법률상담/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상담 컨설팅 월 2회 -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
	예술인 심리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심리상담 지정기관 25개 - 총 12회 무료심리상담 -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사회안전망 구축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보험료 50% 지원 - 예술인복지재단이 산재보험 업무대행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계약서 사용 조건부 지원 - 예술인 및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50% 지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체성 부재와 단기 사업 중심의 운영으로 중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예술인 복지정책 및 사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예술인 복지정책의 사회적 공론화와 협력 역시 부족한 상황
 - 기관 독립성과 자율성의 부재, 불투명한 사업관리와 조직운영 체계, 비정상적인 고용구조, 예술 현장과 협치 구조 부재 등

▶ 기대효과

- 예술인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수용하고 만족할 수 있는 통합적인 예술인 복지정책과 추진체계 확립
- 예술인 복지를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축적된 제도적 한계를 적극적으로 해소
- 불공정 행정, 블랙리스트 사태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었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상화와 협치 기관화 추진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추진과제 01

예술가들을 위한 연금제도와 의료지원정책 마련

- ▶ 예술노동의 특수성으로 기존의 보편적 사회보험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음. 이에 대한 보완으로 예술인고용보험과 별개로 예술인 연금제도에 대한 공적설계가 필요
 - ※ (가칭) ‘문화예술노동권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와 정책 반영
 - 현재 예술인고용보험은 프랑스의 앙테르미탕의 한국식 변형이라면, 문화비전에 제시되는 예술인연금제도는 일종의 독일식 연금제도처럼 좀 더 보편적 개념의 예술인 복지제도임
 - 연금제도의 구성과 운영, 내용, 재원확보, 수혜대상 관리 등은 별도의 민관합치 자리에서 좀 더 깊고 넓은 논의로 구체화함
- ▶ 특수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예술가들을 위한 연금제도와 의료지원정책 마련
 - 소득의 불확실함, 등락이 격심한 예술활동의 특수한 특징, 많은 예술적 직업은 고용기간이 비교적 짧은 사실 등을 인지하여 특정 부류의 예술가들을 위한 연금권 마련
 - 건강한 직업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예술가 직업에 기인한 특유한 건강문제에 대한 연구와 의료제도 반영
 - ※ 특정한 연령에 도달했을 때가 아니라 경력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함
 - ※ 예컨대 무용수, 성악가, 작가 등의 건강한 직업활동을 위하여 기존 공적 의료지원제도를 보완하는 의료지원제도 운영. 이는 작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할 것이 아니라 예방 목적으로도 해야 함

추진과제 02

예술인고용보험 도입과 예술인복지센터 개소

- ▶ 예술인 사회보장을 위한 예술인고용보험 지원
 - 예술인이 ‘보수를 목적으로 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추진하여 단속적 활동에 따른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분야·직종과 무관하게 ‘계약 형태’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 판단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 술 인		
계약에 따라 예술활동 수행		계약 없이 예술활동
근로계약 체결 예술인	용역계약 체결 예술인(프리랜서)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 제도 도입 대상	

- (기본 방향) 사실상의 '경제적 종속' 여부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여 당연가입 방식 적용. 다중 계약 체결 시 예술인이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사업주 선택
- (단계적 확산) '예술활동증명자'를 기본적인 당연가입 대상으로 하고 점진적 제도 확산 추진: 사업주 보험료 지원, 사업주의 규모(1인 사업자 등)에 따른 의무 부과 유예기간 설정 등으로 제도의 정착률 도모
- 방안 강구/ 예술인이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격단위 확인'으로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임을 확인 가능
- (제도적 기반) 서면계약 의무화(「예술인복지법」 제4조의3)에 따른 조사권한 신설 및 매뉴얼 배포 등으로 서면계약 문화 정착 도모: 표준계약서 등 '보수목적 계약'을 위한 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계약서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요건을 추가로 검토 · 확정 필요
- ▶ **한국형 예술인고용보험 도입, 예술인 복지지원센터 개소, 예술인 사회보장을 위한 교육 서비스로 예술인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접근성 강화**
 - * 예술인복지센터: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고용 · 산재보험), 직업교육, 타 기관(복지부 · 고용부 · 지자체 등) 사회보장 제도 안내와 신청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추진과제 03

법정부 차원의 예술인복지 정책 활성화

- ▶ **법정부 차원의 예술인복지 정책 활성화**
 -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 정부기관에 예술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 제안 및 사회적 공론화 추진
 - 주요 법 · 제도 개정 · 정비: 「문화예술진흥법」, 「노동법」, 「고용보험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추진과제 04

예술인 창작주거 연계 복지 확산

- ▶ **예술인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 주택공급에 대한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와 방향을 숙지하여 예술인들에게 특화된 주거시설을 제공
 - 예술인들의 주거 실태조사와 예술인들의 주거지원에 대한 여론 수렴
 - 주거 중심의 공간이지만 예술인들의 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창작 공간 등 확보
 - 내공사 공공임대주택 계획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특화된 임대주택 확보(광역별 예술인 임대주택 사업 실시)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예술인 공공임대주택 기준안 마련
- 생활거주공간과 공동체 창작커뮤니티 구현

성북구 정릉2동 공공 임대주택 사례

- 공공목표
 - 문화예술인들이 공동체 회복과 창조로 마을 만들기(마을복지)에 참여하는 것
 - 지역과 마을에 기여하는 문화예술 공동체를 만드는 것
 - 저소득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 주거 공간 동시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 예술가 선정 조건
 - 1) 지역에 기여하는 주민예술활동 담보(개인작업, 공공 참여 마을을 만드는 예술가)
 - 2) 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복지에 참여하는 예술인(공동체 예술 및 사회혁신 경험과 계획)
 - 3)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며 주거복지가 시급한 예술인

▶ 예술인 금고를 도입해 대출 생활지원

- 예술인복지금고의 사업영역은 우선 생활대출과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하는 대출상품 중심으로 구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예술인 당사자의 자산 형성을 위한 예·적금 상품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함
- 생활대출은 단속적인 예술인들의 직업적 특징에 따라 최대 6개월간 최고 300만 원까지를 무이자로 대출하는 것이고 주택대출은 전세권계약을 전제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시중금리보다 낮은 비용으로 대출하는 것임
- 대출의 담보는 생활대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용대출로 도입하고 주택대출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상의 전세금을 담보로 시행함
- 중장기적으로 도입하는 예·적금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술인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설계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함
- 예술인금고의 채원과 관련해서는 초기 채원의 국고지원을 전제로, 문화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라는 측면에서 예술계 자부담 및 문화예술사업자 기업 기부금 등의 재원화 방안을 핵심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금고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지속적 유입이 가능한 신규재원 발굴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조성할 계획임.

* 예술인복지금고: ('19~) 예술인의 자생적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생활자금 대출 등 운영

추진과제 05

(가칭)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운영

▶ 예술인복지 협치 체계 구축: (가칭)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

- 중앙정부는 예술인복지와 관련한 제도 설계와 정책 목표를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예술인 지원과 실행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재단이 실행하는 방식으로 역할 전환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역문화재단, 지방자치단체 예술인복지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원회' 구성 · 운영

추진과제 06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개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재구조화와 운영조직 개선

- 민간 전문가,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 확대 도입: 임기제 개방형 직위를 도입하여 예술현장과 밀착한 새로운 기관운영의 구조 마련
- (가칭) 정책기획팀을 설치하고 팀장을 개방형 직위로 채용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조직 확장과 업무에 따라 개방형 직위를 확대 적용
- 예술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직무(예 예술인복지지원 등에 대한 상담, 경력관리, 불공정 신고 대응 등)에 예술인을 상담 전담 비정규 인력으로 고용하여 해당 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술인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
- 예술인 복지 지원 등에 대한 상담사업과 경력 관리는 예술인으로 구성된 전담 풀에서 진행

추진과제 07

스포츠인의 복지증진 기반 마련

▶ 스포츠인 복지제도 강화

- 스포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스포츠인 복지전담기구 설치, 스포츠인연금제도 시행, 스포츠인 복지서비스지원 시스템 구축, 은퇴 스포츠인 재취업 지원 확대 등 스포츠인 복지제도 강화정책 시행

04

자율성과 협치 중심 문화예술 공공기관과 지원체계 혁신

○ 개념

- ▶ 정부가 지향하는 자율, 분권, 협치에 기반한 문화 분야 공공기관 및 지원체계의 혁신 필요
- ▶ ‘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국민과 문화예술생태계가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실질적인 변화와 가치적 성과를 구현하는’ 지원체계 혁신 추진
- ▶ 블랙리스트 사태, 미투 운동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화행정의 권위주의, 관료주의, 부패구조 등을 혁신하는 과정으로 지원체계 혁신 실천
- ▶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에서 예술인 중심으로 전환
- ▶ 폐쇄적·위계적 지원체계에서 독립적·자율적 지원체제로 전환

○ 추진 배경

- ▶ 취지와 배경
 - 문화·예술지원체계의 자율성 부재가 문화·예술지원행정 전반에 걸쳐 블랙리스트 범위를 양산하고 문화행정을 국가권력의 통치도구로 전락시키는 원인이 되었음
 -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기관(공공기관)에 대한 불법적인 조직 장악,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범위를 통한 지원체계 통제 이후 각 기관들의 자율성, 독립성, 전문성 등이 크게 훼손됨
 - 블랙리스트 범위를 방지하고 문화·예술지원체계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추진
 - 문화예술기관의 자율성은 외부 권력기구로부터 기관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적 통제와 협치로 성장해야 하며, 이로써 문화예술기관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심화해야 함
 -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국가 문화정책과 문화행정을 정상화하려면 문화예술기관의 정상화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율성 보장과 사회적 통제의 강화부터 시작해야 함

▶ 현황과 문제점

-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외부 권력의 압력과 통제로 문화적 가치와 원리를 벗어난 문화행정이 반복됨
 - 이명박 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2008. 8),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2013. 3) 등 문화정책에 대한 국가권력의 개입과 통제 반복
 - 국가 문화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 문화정책 관련 협치형 위원회보다는 청와대, 기획재정부, 국정원 등이 중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형적인 문화행정 구조
- 현행 문화지원체계는 ‘청와대-기재부-문체부-문화분야공공기관-지역문화공공기관-민간문화생태계’로 위계화 · 서열화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 문화예술지원정책은 현장 문화예술생태계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매우 중요한 분야인데도 문화적 가치가 아닌 권력구조와 예산 권한에 따라 지원정책과 사업이 결정되는 구조
- 문화 환경이 변화했는데도 중앙정부 중심의 지원체제로 공공기관, 지역지원기관, 현장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일방적인 공급정책이 반복되며 자율성과 다양성이 침해됨
 -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처에서 인사권 · 예산권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을 일방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수월한 행정구조, 중앙정부의 문화예술지원 경로 전반에서 협력 주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됨
 - 국가 문화행정 전반(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 등)에 대한 협치(거버넌스) 구조 부재,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확인되듯이 문화행정에 대한 참여, 평가 등 사회적 통제구조가 운영되지 않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대다수 문화 분야 공공기관이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됨
 - 대다수의 문화 분야 공공기관에서 위원회, 이사회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가 작동하지 못한 채 형식화됨
 - 블랙리스트 구조와 연계해 더욱 심각한 비민주적 운영이 반복되어 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운영의 민주화에 대한 개선 필요
- 현재 예술지원체계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구성
 - ‘17년 문화예술위원회 총사업비는 2,160억 원. 그러나 예술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창작지원사업비’는 454억 원에 불과(전체 사업비의 21% 수준)
 - 그나마 자체적으로 설계하여 사용하는 사업비는 345억 원 규모이고 예술관람을 촉발하는 ‘문화향유사업’이나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등은 정부가 제시한 지침으로 사용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 (향유사업) 통합문화이용권사업(69,875백만 원), 소외계층문화순회사업(21,119백만 원, 복권기금), 방방곡곡 문화공감(15,000백만 원 복권기금) → 총 1,071억 원으로 문화예술위원회 총사업비의 49.6% 차지
- ▷ (지역문화예술지원 사업)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7,389백만 원), 공연예술활용관광자원화(24,557백만 원) → 총 319억 원으로 문화예술위원회 총사업비의 14.8% 차지
- 많은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단체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집행, 사실상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운영
- ▷ 2017년 현재 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보조되는 기관은 총 24개, 460억 원
- ▷ 해당 보조사업은 위원회 의결 없이 바로 집행,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태
- 현재 장르별 지원체제로 부서를 구성하여 운영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재구조화는 예술지원체계 혁신의 핵심 사안임
 - 문화예술정책실 내 예술정책관실: 예술정책과, 공연전통예술과, 시각예술디자인과, 문화예술교 육과 등 총 4개 과로 구성
 - 과마다 장르업무를 맡아 관련 정책수립 · 산하기관 운영으로 다양한 사업 추진하는데, 장르 중심 운영 결과 문체부와 소속 공공기관 간 업무 독립성과 자율성에 문제 발생
 - 문화예술 지원정책과 지원기관의 효율적 연계와 역할분담 및 민간과 협치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정책 관련 지원기구는 장기적으로 현행 예술장르에 기반한 분과조직보다는 정책과 전략 중심, 그리고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장르별 관리체제로 운영한 결과 대부분 정책은 장르별 영역에 제한되어 시대변화에 따른 미래의제나 통합적인 예술정책 의제를 꺼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냄
 - 특히, 최근 예술인 복지나 생활환경 개선, 예술인 일자리, 창작권, 노동권, 표현의 자유, 예술의 종다양성 등 여러 문제가 떠올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야 함

▶ 기대효과

- 블랙리스트 사태, 미투 운동 등으로 제기된 문화정책 구조의 본질적 혁신 추진
- 국가 문화행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문화기관과 지원체계의 정상화를 확보할 수 있는 전환점과 구조 마련
- 국민, 문화생태계가 협력하여 문화정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율, 분권, 협치의 출발점 마련

추진과제 01

문화행정·현장 문화예술인의 협치 기반 조성

▶ (가칭) '문화비전위원회' 설치

- 「문화기본법」을 개정해 문화정책 민관 협치기구인 (가칭) '문화비전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명문화
 - ※ (가칭) '문화비전위원회'는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에 대한 점검과 문화비전 내 정책과제/사업들의 실행에 필요한 정책환경 조성 등을 다루는 전담 기구로 설립
 - ※ (가칭) '문화비전위원회'는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의 이행계획뿐 아니라 「문화기본법」에서 명시된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구 역할 담당
 - ※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이행과정까지 분권과 협치의 원칙 아래 현장과 소통하는 국가 문화정책 기획·조정 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체성 확립

▶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구조 개혁과 협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실행

- 문화행정 관련 '참여와 협치의 원칙', '정보공개 책임' 등을 「문화기본법」에 명시
- 협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정보공개 책임 의무화: 청구행위 이전에 사전공개 원칙 명시
- 국가 중장기 재정 수립, 정부기관 평가 등에 문화 분야 전문가 참여 보장: 국가 단위 정책수립 과정에 문화적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문화 분야 전문가의 참여 의무화
- 참여와 협치에 기반한 문화행정 평가와 환류 체계 구축: 평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확보(시민추천시스템 도입, 평가위원 선정 과정의 공개, 전직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임명 지양 외), 평가에서 국민참여 및 협치제도의 실질적 도입(국민평가단 운영, 실질적 배점 부여 외), 문화행정 평가지표와 평가체계 개혁
- 각 기관과 지역을 묶는 협치 플랫폼을 조성해 효율성 중심에서 자율과 분권, 협치를 중심으로 한 분권형 협력체계로 전환: 기관과 지역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로 촘촘한 그물망 예술지원체계 형성

▶ 중기재정계획 수립, 정부업무평가, 예술인 복지정책 등에 문화·예술계 참여 확대

- 예술지원체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자원 확보 방안 마련: 예술지원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 추진
- 국민과 예술인이 참여하는 새로운 문화정책 수립과 평가체계 형성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추진과제 02

문화예술기관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능과 역할 재정비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정책 의제와 미래비전을 창출하는 정책 총괄기관으로 장르 중심에서 예술생태계를 형성하는 요소 중심으로 조직과 업무 개편
-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장르별 예술지원과 운영에서 예술가 권리보호, 예술과 다른 분야 정책 협력/기획조정 등의 업무 중심으로 조직구성과 운영 전면 재구조화
 - ※ 예술인 복지나 생활환경 개선, 예술인 일자리, 저작권, 노동권, 표현의 자유, 예술생태계 종다양성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
-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개별 문화사업 관리 및 통제'에서 '국가 문화정책 기획 조정 및 협치'로 정체성 확립
 - ※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역할을 '국가단위 문화정책 기획조정, 국정운용의 문화적 가치 확산, 국가 단위 문화사업 관련 부처 간 협력, 전국 단위 지역문화 연계, 문화 관련 국제 교류, 문화 관련 연구개발(R&D) 등'으로 확장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재구조화

▶ 한국예술위원회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문화기관/국공립예술단체들의 자율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전면 검토 및 방안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에서 문화예술위원회와 각 기관 중심으로 지원체계 이전
- 현행 예술지원체계, 의사결정, 평가와 운영에 관한 전면적인 혁신 계획 수립과 실행으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예술행정 체계 구축
- 블랙리스트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확인된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예술지원과와 소속기관 사이의 위계적이고 비효율적인 직렬 구조 해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독립성 보장

- 1차적으로 법 개정 없이 즉각적으로 가능한 기능적 독립보장
 -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원사업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고 지역 간, 부처 간, 국가 간 정책기획 조율 기능 중심으로 전환
- 2차적으로 법·제도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와 방안 조속히 마련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제외하여 장관 임명이 아닌 예술위원 호선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게 함
 - ※ 국가인권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법적인 독립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방식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 진행
- 예술지원체계에서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되 강한 공적 책임과 국민(예술계)이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반 체계 개편

의제3 성평등 문화 실현

“성차별 없는 문화정책, 성주류화를 위한 문화정책으로 성평등한 문화실현의 비전을 만들자”

- 여성 인구가 총인구의 절반을 넘어섰으나 최근 10년간 성폭력범죄의 급증과 일상화, 사회적 차별의 고착화로 여성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성평등 문화의 실현이 시급한 상황에 이룸
 - * 성별 인구분포: 남성 24,882천 명, 여성 24,974천 명(2016, 통계청)
 - *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 15,157건(2006)→31,063건(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성격차지수(Gender Gap Index): 144개국 중 116위 수준(2016, 세계경제포럼)
- 문화 분야의 성비특수성(여성 비중 70% 이상)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과 현장에서 남성중심적 위계구조·문화가 일상화되어 성차별이 만성화되고 위계적 성폭력이 만연함으로써 여성 위협적인 생태계가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이러한 생태계가 성차별적 문화표현과 활동을 조장하는 악순환이 심화
- 체육 분야 역시 남성중심주의 문화, 폐쇄적이고 서열화된 구조, 선수생활과 직결된 전권이 감독에게 있는 상황 등으로 인한 구조적·위계적 성폭력이 만연함으로써 강력한 처벌, 지도자 자질 검증 강화, 위계질서를 깨뜨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인식 전환 등으로 성폭력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
 - *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인권센터 최근 5년간 성폭력 신고 건수(2016) 184건
 - * 2016 국감자료-‘체육선수 성폭력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생태계 전반의 성평등 실현 및 여성친화적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촉진하는 선순환 지향

대 표 과 제

1. 성차별·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
2. 성평등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혁신
3. 여성친화적 생태계·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

01 성차별 · 성폭력 없는 문화생태계 조성

○ 개념

- ▶ [위계폭력(power harassment)으로서의 성폭력: 예술활동 포기 · 중단이라는 예술가의 지위 위협 수반] 가해자의 예술계 내 지위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예술계 내에서의 불이익을 명시적 · 암시적으로 환기하면서 침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를 예술계에서 퇴출시키는 경우가 빈번한 특징을 보임
- ▶ [위계폭력으로서 성폭력이 재생산될 수 있는 조건 1: 경제적 불안정성] 여기에 문화예술계의 경제적 불안정성과 예술인 복지정책의 한계로 아르바이트나 일자리를 빌미로 한 성폭력이 일어나기도 하나 경제적 여건 때문에 성범죄에 대한 소송이나 상담을 하기 어려움
- ▶ [위계폭력으로서 성폭력이 재생산될 수 있는 조건 2: 성해방의 예술철학을 빌미로 한 정당화] 남성 예술가나 교수가 예술가는 성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는 그릇된 ‘예술철학’을 빌미로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성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예술의 가치를 훼손

○ 추진 배경

- ▶ 2016년, #○○_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으로 우리나라 예술 역사상 처음으로 미술계, 문단 등의 성폭력이 공론화되기 시작해 성폭력 피해자들의 고백과 고발이 계속 이어지면서 #미투 운동으로 확산
- ▶ 그러나 대부분 가해 남성 예술가들은 프리랜서인 경우가 많고 예술계 인맥의 폐쇄성 등으로 사회적인 제재 방법이 없어 가해자 다수가 예술계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활동을 계속하는 등 성폭력이 근절되기 어려움
 - 무엇보다 예술계 성폭력으로 문화예술계의 남성 중심적 권력구조와 예술학교의 폐쇄적 인맥이 성폭력의 핵심 요인으로 부상
 - 문화예술계 내의 권력이 고용관계로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경력 · 인맥을 통한 모호하고 폭넓은 남성중심적 문화가 지배적이어서 이러한 문화 속에서 가해자들이 서로 옹호하고 무리 내 성폭력을 정당화해 왔고,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때에는 교묘하게 보복하기도 함⁶⁾

6)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 여성가족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

의제3. 성평등 문화 실현

- ▶ 여성문화예술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큐레이터나 선배 작가, 교수나 강사가 대부분이었고 (출판계는 사업주와 직장상사가 대부분), 피해자 연령은 20대에서 30대 초중반에 집중됨
 -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 비율은 매우 낮음: 사건계 성폭력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9%가 '참고 넘어갔다'고 응답했고, 여성문화예술연합의 조사결과에서도 매우 적은 수의 피해자만 신고함
 - 성폭력 피해자는 대부분 신고해도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고 본인만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 같아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함⁷⁾
- ▶ 이러한 성범죄의 특징이 여성 학생 종사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남성 교사(교수)와 상급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예술계의 성차별적 위계구조를 바탕으로 고착화·확대 재생산되어 왔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임
 - 아동·청소년기부터 도제식 교육으로 학원, 개인레슨 연습실 등 사설기관이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 빈발하는 사각지대로 문제시됨
 - 예술대학 학생의 80% 이상이 여성이지만 교수의 80%는 남성이며, 서울시내 예술대학 교수진은 70% 이상이 같은 학교 출신으로 남성중심의 학연 문화와 학내 교수 성폭력 사건 노출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⁸⁾
- ▶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체육계 성 인권 실태를 조사하면서 체육계의 성 인권 상황이 '군대보다 열악하다'고 지적함
 - 그러나 여성 인력 부족, 지도자와 선수의 권력관계, 상위기관의 의지 부족, 성폭력 피해자를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는 인식 등으로 성폭력 사건이 은폐되기 쉬운 구조이다 보니 체육계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임
 - 체육계 여성들에 대한 2차 가해 역시 잘못된 사회적 편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생(예: 역도선수는 성폭력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거나 유명해지니 지도자를 바꾸려는 의도라는 시각 등)
 - 체육계 성폭력이 심각함에도 근절되기 어려운 이유로는 (1) 스포츠 특성상 훈련 중 신체접촉이 많아 의도적 접촉 여부와 구분하기 어려운 점, (2) 이해관계자의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태도의 부재, (3) 피해자가 주로 사회적 약자라는 점, (4) 성폭력 가해자가 주로 남성이면서 지인인 점, (5) 기관의 책임 회피 등 부족한 성인식과 교육의 부재, 권력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적되고 있음⁹⁾
- ▶ 2018년 사회 전반에서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속에서 사단법인 100인의 여성체육인회는 체육계에 만연한

7)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

8)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 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8.

9) 「성폭력진단 ④ 성 인권 사각지대인 체육계, 전망과 해결책은?」, 스포츠니어스, 2018. 2. 12.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성폭력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성차별·성폭력 없는 세상, 여성의 스포츠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 양성평등한 스포츠 세상을 위한 여성체육단체연합이 결성됨

추진과제 01

문화계·체육계 등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침해 구제 관련 법 제화 추진

- ▶ (문화 분야 법제화) 현장 문화예술인, 종사자, 전문가 등의 참여와 협의로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및 성차별·성폭력 근절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가칭)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기존 법률 보완
 - 문화 분야 정책사업 전반에서 성차별·성폭력 근절 및 성평등 확산 원칙 적용
 -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의 기본적 사명·업무로서 예술 애드보커시 의무화 시, 예술 인식 제고 활동에 성차별·성폭력 척결 및 성평등 문화 확산 포함
- ▶ (체육 분야 법제화) 체육계 종사자, 지도자, 선수, 전문가 등의 참여와 협의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 마련 추진
 - '성 인권 사각지대'로 간주되는 체육계 내부의 종사자, 관계자, 전문가뿐 아니라 성폭력 문제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성차별·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률안 마련
 - 체육계 성차별·성폭력 관련 법제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체육정책 관련 각종 정책연구·정책심의·의결과정에서 여성 체육인과 종사자, 전문가 등의 참여 비율 의무화(현행 「양성평등기본법」 근거 40% 이상 우선 도입)
 - 체육정책 관련 여성 대표성 보장 관련 법제화·실질화 방안 마련
-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의 관련 법률에 성차별 금지와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각 분야 종사자의 기본 인권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요소로서 성차별 금지와 성평등 실현 원칙을 「문화기본법」 등을 비롯한 분야별 법령에 반영
 - 성차별·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징계, 공직·공적 지원에서 배제 근거 마련(체육 분야의 경우 성폭력 가해자의 국가대표 감독, 청소년을 가르치는 감독이나 코치직의 금지 포함)
 -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와 제3자의 2차 가해 금지와 엄중 처벌·징계, 피해자의 직업활동과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지원 등의 근거 마련(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 원칙 명시)
- ▶ 문화·체육 분야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위계폭력에 대한 엄중조치 마련
 - 문화·체육 분야는 특히나 매우 어린 나이부터 공교육 과정뿐 아니라 사설 학원이나 개인 교습 등으로 교육이나 훈련이 이루어지며, 문화계나 체육계의 성폭력 사례 중에서 청소년 대상 사례도 적지 않은

의제3. 성평등 문화 실현

- 문제로 제기됨. 특히 나이 어린 학생들은 교수, 교사, 감독, 코치 등의 권한이나 권위에 더욱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임
- 최근에는 케이팝 등의 한류 확산과 함께 어린이·청소년 시기부터 연예산업이나 게임산업 등 문화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1인방송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문화콘텐츠 창작자로서 활동하는 사례도 급증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각종 성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증가
 - 각급 학교와 대학의 문화·체육 관련 학과, 문화·체육 등의 특성화된 각급 학교와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 사설 교육기관, 개별 레슨이나 강습, 연예기획사, 관련 협회·단체 등에서 발생하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 위계폭력에 좀 더 엄중한 관리감독과 행정적 징계 방안 마련
 -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 위계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시범실시(2018)로 향후 실태조사의 정례화와 그 법적 근거 마련,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 제도화 등 추진
 - 문화산업 분야와 디지털 플랫폼의 문화콘텐츠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실행 지침 마련

추진과제 02

분야별 성차별·성폭력 실태조사 정례화·활용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분야별로 성차별·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 분야별 사업장/비사업장, 각급 학교와 대학(대학원 포함), 관련 단체, 공공기관과 민간의 관련 기관·시설, 국가와 지자체의 관련 정책 수립·시행 조직·부서·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시 전문조사기관에서 하는 위탁조사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분야별 현장전문가, 성폭력 전문가 등을 조사·설계·시행단계에 반드시 참여시킴
- 실태조사 방법을 정교화하기 위해 분야별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조사방법의 다변화, 정성적 방법의 적극 활용, 실태조사 자문·평가위원단 운영 등 도입

▶ 분야별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분야별 법정 종합계획 수립, 연차별 업무계획 등의 수립 의무화
- 법정 종합계획, 연차별 업무계획 등을 근거로 한 정책 모니터링, 평가 등의 환류체계 구축
- 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영향에 관한 기초연구·정책연구 시 문화예술·문화산업·장르별 직업분류체계 정비 등에 성별 현황을 반영하여 추진

▶ 분야별 미성년자(어린이·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조사, 위계폭력 실태조사 시범 실시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예술학교 등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 위계폭력의 양상을 띠는 성차별·성폭력의 경우는 좀 더 강력하게 처벌·근절하는 방향으로 설정
- 시범실시로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분야별 성평등 통계정보 시스템 구축
 - 성인지 통계와 성평등 정보 공개: 문화부 산하 기관과 관리 감독 기관, 문화부 기금 지원받는 기관과 업체 등에 요청
 - 여성 노동자의 고용과 실업, 성차별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성별 종사자 현황·격차 정보 구축, 성별/직급별/고용형태별 임금 현황·격차 정보
 - 이사회 성별 구성 현황·격차 정보
 -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와 달성 시기
 - 성평등 제도와 시행 정보(육아휴직 등, 성평등 교육 내용과 횟수, 성폭력 상담과 사건 등)

추진과제 03

분야별 성차별·성폭력 신고 및 피해자 보호·지원센터 설치

-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한 (가칭) '통합적 성차별·성폭력 신고 및 피해자 보호·지원센터' 설치
 - 설치·운영과정에서 분야별 종사자, 관계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협의로 운영계획 수립·상설화
 - 각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센터 위상에 부합하는 본부의 관할 조직 신설(문체부 기획조정실 내 성평등문화정책관 신설)
 - 분야별 특수성 등을 충분히 논의하여 현장은 물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센터 조직·운영 방안 마련
- ▶ 단순 신고기능을 넘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한 신고, 피해자 보호·지원센터 운영
 -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 신고·보호 기능은 기본적으로 포함(여성가족부 협력)
 - 문화계, 체육계 등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문화계에서 활동이 곤란해지거나 퇴출당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적극적인 신고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해 방식 역시 해당 분야의 특수한 구조 내에서 발생하므로, 일반적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문체부 내 통합적 센터 설치·운영 필요
 - 성차별·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방안 마련

-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피해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형법상 명예훼손죄(제307조 제1항)로 공소제기를 하는 등 2차 가해를 금지하는 방안 마련(제20대 국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발의됨)
-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분야별 특수성에 기초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계획 수립과 실행
 - 분야별 가해자와 제3자의 2차 가해 신고, 처벌, 피해대책 포함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신고, 처벌,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 특별대책 포함
 - 위계폭력 일반에 대한 신고, 조사, 처벌, 피해자 보호와 지원 포함
 -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여가부) 활용, 분야별 세부 가이드라인 개발·배포, 가이드라인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분야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활용)
 - 적극적인 조치로서 성폭력 피해자(생존자)를 지지하는 분야별 활동에 대한 지원 포함

02

성평등한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혁신

○ 개념

- ▶ 여성 대표성(women representation)
 -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유를 인식할 때 성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모든 구별, 배제, 제한을 의미함
 - 인구비례상 남녀 인구가 동등한 수준의 규모인데도 남녀 간의 정책적·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위가 불균형하고 차별적임. 이러한 격차가 사회 전반에서 구조적으로 더욱 심화되고 성폭력 범죄의 증가와 일상화로 이어져 세계 각국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 해법이 여성 대표성의 확대임
 - 여성 대표성의 확대는 성차별이 대의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회의원이거나 관료제 조직의 정책결정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성비 불균형, 그에 따른 남성의 과잉대표성과 여성의 과소대표성으로 더욱 심화되고 구조화되어 왔다는 오랜 연구와 문제제기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최근 정치·행정 분야를 중심으로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법제화되는 상황임¹⁰⁾

▶ 한국 사회의 취약한 여성 대표성

- 특히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 공공부문에서 여성대표성 확대와 관련해 구체적 시한을 설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받았는데, 여기에는 각급 학교와 대학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위직에서 남녀 동수의 여성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조치 활용이 포함됨
- 그간 정부가 각종 법제를 정비하고 양성평등채용목표제(2003) 등을 도입해 여성의 양적 진출 확대를 통한 여성의 권한과 지위 향상을 도모해 왔으나 이행 수준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많음¹¹⁾

▶ 더욱 취약한 문화 분야의 여성 대표성

- 문화 분야의 경우, 이러한 양적 진출(양성평등고용) 측면에서 이미 성차별이 통계적으로 확인되며, 양적 진출에서 한계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됨으로써 여성 대표성의 제약(국·공립기관의 장과 보직자, 국공립 단체와 공공지원 대상 협회·단체의 장과 보직자, 지도자·교육자 등의 여성 비율 제약)은 물론 남성중심적 생태계와 조직문화를 고착해 왔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조치(active action)로 해결 필요
- 적극적인 조치의 구체적 방안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나 다른 분야에서 채택되어 온 성별 쿼터제(할당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여성 예비인력과 진입인구의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문화 분야의 인구특수성과 문화생산물의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프랑스 등 해외에서 법제화된 남녀 동수의 대표성(parité law)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성평등 문화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¹²⁾

○ 추진 배경

- ▶ 현재 예술 분야 인구의 성비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생산되지 않았으나 예술계열 대학의 입학,

10) 「개헌과 여성대표성, 젠더정치의 동학」,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 박주현, 아동·여성·인권포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2018. 3. 6; 홍미영, 「관료제의 여성대표성 확대에 대한 공무원 태도의 결정요인」, 『한국행정논집』 18(2), 한국정부학회, 2006. 6, 447~473쪽.

11) 조연숙·박선영,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관련 법제의 한계와 정비방안」, 『이화젠더법학』 10(1),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2018. 5, 103~140쪽.

12) 남녀 동수 대표성과 관련해서는 조앤 W. 스콧, 오미영 외 옮김, 『Parité! 성적 차이, 민주주의에 도전하다』, 인간사랑, 2009 참조.

의제3. 성평등 문화 실현

- 재학, 졸업자 수에서 여성 인구 비율이 높은 성비상 특수성을 추정해 볼 수 있음
- 2013년 현재, 예술계열 재적 학생 중 여성의 비율은 일반대학 66.6%, 전문대학 55.5%, 대학원 석사과정 70.8%, 박사과정 67.7%를 기록해 다른 계열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임
 - 이는 입학생 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술계열의 여성 입학생 비율은 일반대학 약 72%, 전문대학 약 69%, 대학원 약 69%를 기록한 바 있음
 - 실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시점의 여성 인구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졸업생 수에서도 예술계열의 여성 졸업자 비율은 일반대학 76.9%, 전문대학 74.1%, 대학원 76.8%를 기록했음
- ▶ 여성 인구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에 비해 취업률에서는 남성 취업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특징을 보이며, 여성 취업률은 다른 전공계열과 비교해서 가장 낮은 특징을 보임
- 2013년 현재 예체능 계열의 여성 취업률은 일반대학 41.5%, 대학원 석사과정 25.7%, 박사과정 39.2%를 기록해 전체 평균을 심하게 밑돌고 있음
- ▶ 이미 2009년에 문화예술 분야의 고위관리직 비율이 남성이 여성의 4배에 달함이 지적되었고, 문화 분야 고학력 여성의 상당 비율이 전업주부로 있는 상황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음¹³⁾
- ▶ 2015년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활동 수입이나 고용형태에서도 성별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예술활동 수입이 없는 경우(남성 34.7%, 여성 37.8%), 500만 원 미만인 경우(남성 16.2%, 여성 22%),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남성 10%, 여성 10.3%),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인 경우(남성 14.4%, 여성 15.7%)에서는 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예술활동 수입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서는 모두 남성 비중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예술활동 수입에서도 남녀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음¹⁴⁾
 - 겸업 예술인의 경우, 고용형태에서도 남성은 정규직 비율이 31.7%로 가장 높고 고용주인 경우도 17.8%를 차지한 반면, 여성은 기간제/계약직/임시직 비율이 35.9%로 가장 높았고 고용주인 경우는 10.1%에 머물렀음. 그 외에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 비중은 여성이 더 높았고(파트타임 남성 10.1%/여성 16.4%, 프리랜서 남성 10.8%/여성 14.3%), 일용직의 경우는 남성이 더 높았음(일용직 남성 2.6%/여성 0.8%)¹⁵⁾
- ▶ 정부 · 기업 · 개인의 지원금을 실제로 받은 경험에서도 성별 격차나 나타남
- 2015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원금을 받은 경험은 남성이 19.9%, 여성이 18.1%로 차이를 보임

13) 류정아(2009), 『성별 문화인력 통계DB』,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4) 『2015 예술인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63쪽.

15) 『2015 예술인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84쪽.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지원 금액에서는 전체 평균값에서뿐 아니라(남성 1,251만 원, 여성 916만 원), 공공기관 지원금(평균값 남성 1,063만 원, 여성 732만 원), 기업 지원금(평균값 남성 1,118만 원, 여성 595만 원), 개인 지원금(평균값 남성 818만 원, 여성 437만 원)으로 큰 격차를 보임

▶ 예술계의 진입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취업률, 고용형태, 예술활동 수입, 지원금 수혜, 예우 등 전반적인 예술활동 여건이나 현황에서 성별 격차가 엄존하는 상황은 최근 예술계 내 성폭력 사태나 미투 운동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예술계가 성범죄의 일상적인 재생산, 양산에 지극히 취약한 분야일 수밖에 없음을 잘 말해줌

– 문화예술계 성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철저한 권력구조에 따라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일반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달리 고용구조가 아닌 일대일 관계에서 발생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음

– 문화예술계의 폐쇄적 인맥구조와 경제적 불안정성 등으로 피해사실이 신고로 이어지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실정¹⁶⁾

* 성폭력 설문조사 결과(문화예술계 중 사진 분야 조사): 조사참여자 385명 중 320명의 피해자 가운데 ‘참고 넘어갔다’는 사람의 비율 80.9%(259명). 그 이유는 ‘문제제기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소문 평판에 대한 두려움’, ‘대처 방법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순

추진과제 01

분야별 성평등 계약지침 마련 및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관련 조항 반영 의무화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각 분야 관련 법률에 성평등 계약 관련 조항 신설 및 분야별 (가칭) ‘성평등 계약지침’ 제정

– 분야별 성차별 ·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가칭) ‘성평등 계약지침’ 수립 · 시행 의무화
– 예술가 보수규정과 업무계약에서 성차별 · 성폭력 금지 명시

▶ (가칭) ‘성평등 계약지침’을 반영한 표준계약서 의무화

– 개인 대 개인의 ‘인맥’에 따른 구두계약 등까지를 포함해 모든 업무상 활동이나 직업활동의 문서화된 계약방식 도입 의무화(표준계약서 의무사용 범위 확장)
– 표준계약서 내 성차별 · 성폭력 · 위계폭력 등을 금지하는 조항,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의 명시적 반영 의무화
– 의무불이행 시 각종 공적 지원사업, 투 · 융자심사, 행정기관 · 공공기관, 기업 등 대상 평가에서 불이익

16) 「문화예술계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면?—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 제작 · 배포」,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7. 11. 9.

의제3. 성평등 문화 실현

- 또는 배제 등 방안 마련
- 정부기관, 공공기관, 국·공·사립 교육기관(대학 포함), 사업장·비사업장(단체·프로젝트 포함) 등에 대해 (가칭) '성평등 계약지침' 이행 관련 정보공시 의무화 검토
- ▶ 개인의 인권과 직업적 권리 보호, 사회안전망으로서 계약문화(표준계약서) 확산을 위한 인식 제고
 - 개인의 인권과 직업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성평등 계약문화의 필요성 관련 인식 제고
 - 이러한 방향에 따른 성평등 계약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교육 대상범위를 각급 학교와 대학, 각 사업장 및 단체 등을 포함해 확장적으로 적용)
 - 교육 이수·성평등 계약문화 이행주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추진과제 02

성차별·성폭력·위계폭력의 적극적 공적 배제와 규제

- ▶ 성차별·성폭력·위계폭력 가해자 및 신고대상자에 대한 공적 지원, 공모사업, 심사·강의 등 참여 배제
 - 수상 철회, 심사·강의 등 배제 포함
 - 성차별·성폭력·위계폭력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 사법적 판결 이전에 소정의 행정절차에 근거해 신속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공적 배제 진행
 - 현행법상 비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성차별·성폭력에 관련한 근거가 취약하여 현행 법률의 특정 근거나 처벌기준을 적용하는 조치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임
 - 그간 성평등 정책의 약점으로 평가되어온 '적극적 조치'(active action)의 부재와 그에 따른 정책 실효성의 저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적 차원의 적극적 조치로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한 적극적인 공적 배제 조치' 도입(격리 원칙)
-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각 분야의 국공립 기관·단체·시설, 각급 학교와 대학의 임직원·교원 채용 배제, 징계 규정 등 강화
 - 개별 기관 등의 자체 규정 마련 의무화(임직원 채용·평가기준 반영, 징계 등)
 - (가칭) '예술가교육 및 양성 지침' 제정과 그에 따른 예술교육 종사자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 규정 마련 시 성차별·성폭력, 위계폭력 등 금지 반영
 - (가칭) '성폭력·위계폭력 이력제' 도입으로 가해자의 타 기관과 단체, 학교 등의 이직이나 재취업 금지, 각종 공공위원회·이사회 등의 인사배제 조치 등
 - (가칭) '성폭력·위계폭력 정보공시제' 도입: 각종 국·공·사립 문화·체육시설, 분야별 지원기관과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단체, 기업, 재단, 각급 학교와 대학, 사설 학원 등 전반에 대한 정보공시 의무화 방안 검토

- ▶ 분야별 사업장(기업), 비사업장(단체), 사설 교육기관(학원 등)에 대해서도 성폭력·위계폭력 관련 규제 도입
 - 해당 사업장 등에서 성폭력·위계폭력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단체, 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 투·융자 등 배제
- ▶ 정부지원·공모사업 등의 시행 시 성차별·성폭력·위계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 민간 문화예술기관, 단체, 기업, 학원 등의 성폭력·위계폭력 예방교육 지원
 - 단체 등의 자체 윤리강령 제정·개정과 그 운영에 관한 지원
 - 문화산업 현장 인력들이 사전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시스템과 지원체계 구체화

추진과제 03

정책의사결정과 정책사업에서 성평등 제도화

- ▶ (여성대표성)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각 분야 공공기관, 협회·단체, 국공립 시설·단체, 각급 학교·대학 등에서 성평등한 정책의사결정과 실행 제도화
 - 문체부 산하기관의 기관장 임용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2조(공직 참여)를 적극적으로 반영(40% 이상)해 전체 산하기관장의 성비 균형 현실화
 - 분야별 성별 대표성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사회, 임원, 심사위원 등의 구성·채용·승진에서 여성 대표성을 실현하고 성평등 쿼터제 도입
 - 특히 각 기관이나 단체의 정책의사결정 전반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별(동수) 대표성을 바탕으로 한 인구 대표성 실현 의무화(남성의 과잉대표성이 초래한 남성중심적 시스템과 문화에 대해 지금까지 과소대표되었던 여성에게 정책결정에서 권한을 부여하는 여성 대표성 실현. 이러한 여성 대표성 도입에 대한 정책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분야별 특수성에 기초한 인구 다양성 반영의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연구와 입법, 인구대표성 반영 추진)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지원, 공모사업 등 지원 대상 선정, 각종 문화·관광·체육 행사(축제 포함) 등에서 (가칭) ‘성평등 쿼터제’ 의무화 추진
 - 사업별 지원 대상 규모의 (가칭) ‘성평등 쿼터제’ 도입: 단계별 확대 방안 마련·추진
 - ‘성평등 쿼터제’를 실질화·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연구, 토론회 개최 등 추진계획 수립, 제도화 방안 마련
- ▶ 국공립 문화시설 등의 전시·공연 프로그램 등의 여성 관련 비중의 ‘성평등 쿼터제’ 실시
 - 국·공·사립 문화시설에서 연간 전시·공연 프로그램 중 여성 관련 프로그램 참여 계획 포함 시행

추진과제 04

분야별 성평등 고용 실현과 여성인력 처우개선

- ▶ 예술인, 체육인의 직업개발과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성평등 고용 및 예술인·체육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부처 간 정책협력 방안 마련
- ▶ (가칭)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 설치·운영 시 성평등 노동과 고용에 관한 사항, 성차별·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
 - 위원회를 구성할 때 문화예술계 성평등 노동·고용 관련 현장 전문가, 정책 전문가 등 참여, 여성 대표성을 반영한 구성 필수
 - (가칭) 예술노동환경조사·평가에서 성차별·성폭력 관련 사항 포함 필수
 -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종 의사결정자에게 프로젝트별 근로환경 보고 규정 마련
- ▶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각 분야의 성평등 고용 및 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 우수사례의 지속 발굴·시상
 - 우수사례 선정 대상에는 각종 지원·공모사업에서 우대·홍보
- ▶ 분야별 국공립 기관·단체·시설, 민간 사업장 등에 종사하는 여성 인력 처우개선·권한 강화
 - 성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격차 해소: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대안 수립·실행
 - 성차별적 직급체계 개선: 여성 인력 비율에 따른 승진 쿼터제 실시
 - 보직자 비율의 성차별 구조 개선, 기관장 채용·평가에 성평등 인식 반영
 - 문화산업 클러스터 근무자 맞춤형 보육시설 연구 및 시범사업 후 확대
 - 경력단절 여성 재교육·재취업 지원, 원격근무제도, 단축근무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제도 현실화
- ▶ 분야별 성평등 문화 확산 협력 네트워크(포럼 등) 구축 지원

03

여성친화적 생태계·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

○ 개념

▶ 여성친화적 문화정책과 여성친화적 문화생태계

- 여성친화적 문화정책개념은 문화정책이 더는 문화 일반을 위한 보편적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의지를 갖춘 문화주체의 구체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
- 한국 사회에서 구체성이 무시된 채 단순 분할만 강요당했던 여성들의 좀 더 구체적인 문화적 욕구를 정책적 차원에서 구체화해 충족시키는 것이 여성친화적 문화정책의 과제로 제기된 바 있음¹⁷⁾
- ‘문화의 시대’를 선언한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문화의 소비·향유가 증대된 점을 고려할 때 여성의 문화정책성을 표현하는 문화콘텐츠가 부족한 데다 남성 시각에서 이상화된 ‘왜곡된 여성성’이 팽배하게 된 문화생태계 상황은 사회 전반의 성평등을 제고하는 데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문화의 창조·향유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데도, 심지어 여성의 문화향유 활동 참여 횟수와 빈도가 남성보다 높게 조사되고 있는데도 여성의 실질적 삶의 질을 높이면서 여성적 문화정책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체험할 기회가 지극히 한정됨. 그러한 자원에 좀 더 많은 여성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현실은 여성친화적 문화정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환기해 줌
-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친화적 문화정책은 여성친화적 문화생태계의 조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단순한 일회성 지원사업을 넘어 좀 더 분명한 인식전환, 나아가 문화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¹⁸⁾
- 이러한 여성친화적 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성인지 문화정책’의 틀 내에서 시도된 바 있으나¹⁹⁾ 여러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형식적이고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함. 이로써 문화정책이나 문화생태계의 남성중심적 구조와 그에 따른 사회문제가 심화된 측면을 부정하기 어려움

17) 류정아, 「『여성의 시대』 문화가 경쟁력이다-여성친화적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여성우리』 38, 부산여성가족개발원, 2007. 12, 6~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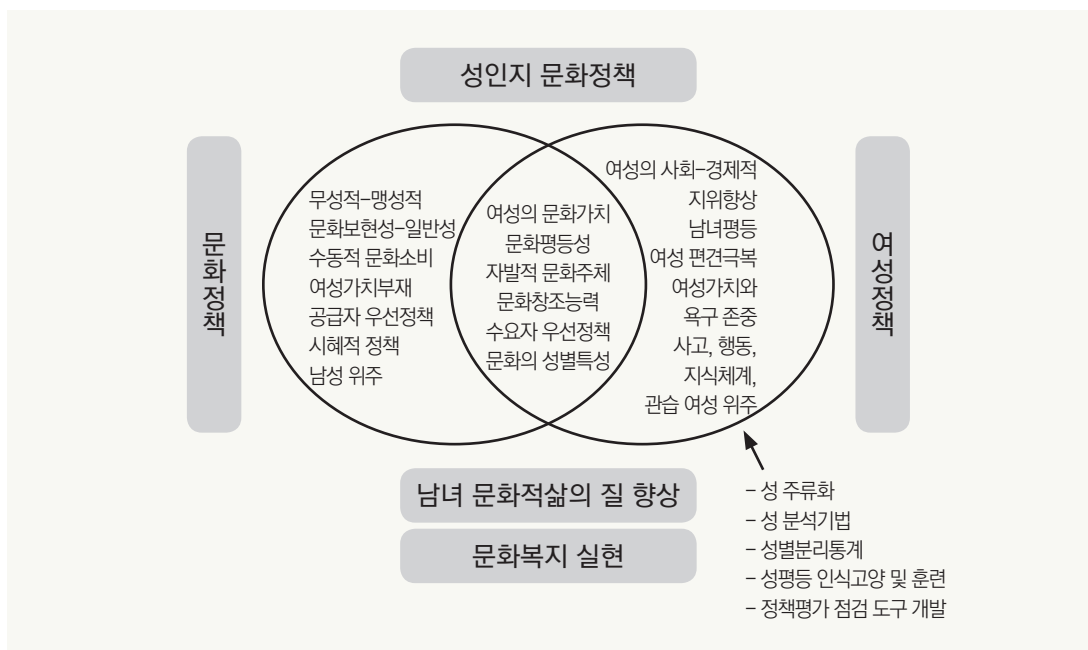
18) 류정아(2007), 위의 글, 7쪽.

19) 류정아, 「한국 여성의 문화적 위상과 여성문화정책의 방향」, 『문화정책논총』 2004. 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65~282쪽.

의제3. 성평등 문화 실현

- 여성친화적 문화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여성친화적 문화정책의 실현을 도모함과 동시에 여성친화적 문화정책이 기존 문화정책 패러다임을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문화정책 전반에서의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 구체화하는 방안 마련

성인지 문화정책의 영역



* 자료원: 류정아 · 김이선, 『여성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성인지적 관점에서 본 문화정책』, 2004,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 문화정책에서의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 개발

- 1990년대 후반 이후 여성정책을 국가정책의 핵심 분야로 다루는 성 주류화 전략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왔으나, 각 정책 분야나 소관부처에 따라서 실행 수준에 차이를 보여 왔으며, 문화정책 영역은 그 자체만으로도 성 주류화 전략에 적극적으로 부응했다고 보기 어려움
- 성 주류화 전략은 두 가지 개념적 견해를 내포하는데, 하나는 유엔의 '제3세계 여성발전 프로젝트'에서 배태된 것으로, 여성을 복지 프로그램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경제개발의 적극적 기여자로 설정해 성평등을 달성하고자 한 것임. 이로써 여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과 사업이 정당화되었고, 여성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기회균등 프로그램과 반차별법 등의 제도개선이 강조됨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또 하나는 주류사회가 이미 성별에 따라 구조화된 불평등 체계이며 여성문제가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로 형성된 점을 성찰하고, 주류사회의 남성중심성 자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1970년대 말 '모든 정부정책의 여성에 대한 효과를 자문할 수 있는 효율적 국가기구 설치 및 강화'라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공식 권고로 구체화됨
- 후자의 권고사항은 1995년 베이징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행동강령 제202조 "정부와 행위자들은 정책결정에 앞서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젠더 관점을 주류화하는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을 증진해야 한다."로 거듭 강조됨²⁰⁾
- 이러한 관점에서 한편으로는 여성이 적극적인 사회발전의 주체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정책적 접근과 남성 중심의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 내지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정책적 접근이 상보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특히 베이징행동강령에서와 같이 모든 정부정책에서 성평등 관점을 주류화하는 방향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문체부의 소관 정책영역에서 성평등 관점을 구현하는 것과 함께, 이를 통해서 문화정책이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하나의 정책영역으로 정립되어야 함을 의미함
- 그런 의미에서 '여성친화적인 문화생태계의 조성'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문화정책'을 별개가 아닌 상보적이고 불가분한 지향점으로 설정하는 것은 성 주류화 전략이라는 그간의 정부정책 방향을 문화정책 분야에서 좀 더 실효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며, 문화계와 체육계의 심각한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추진 배경

- ▶ 예술계의 남성중심적 위계구조는 "왜 위대한 여성 예술가는 없는가?"(린다 노클린), "왜 여성 예술가는 사라졌는가?"와 같은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술계 내에서 여성 예술가에 대한 인정, 비평, 평가, 역사적 기억 그리고 예술활동의 조건 등의 문제와 직접 연관됨. 이는 예술계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제한하고 예술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과 성폭력을 구조적으로 고착화하여 예술에 대한 사회적·윤리적 인식을 악화하고 예술계 전반의 사회적 가치마저 고갈하는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음
- ▶ 정책적으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반영되지 못하고, 예술계를 기성의 남성 예술가를

20) 마경희,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에 대한 비판적 성찰-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함정인가?」, 『한국여성학』 23(1), 한국여성학회, 2007. 3, 39~67쪽; 이은아, 「성 주류화와 성평등 사회구조로의 '전환가능성'-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4),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4, 265~288쪽.

의제3. 성평등 문화 실현

정상적·평균적 예술가상으로 전제하고, 이로써 예술계 전체를 단일하고 동질적인 인구집단으로 간주해 온 한계가 작용함

- 여성 인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남성 중심 후속세대 양성이 구조화된 예술계의 특수성이 예술계의 성차별적 구조를 고착화한 요인으로 거듭 지적되어 왔으며, 예술계의 성폭력 사건들 역시 이러한 특수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음²¹⁾
- 예술계 성폭력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선명한 사회적 위계관계, 하나의 이너서클만 강화되는 독점구조, 교수(교사)-학생, 성인-미성년자 등과 같은 권력구조, 성적 자유와 여성의 성적 도구화를 예술성의 원천으로 삼아온 관행, 여성주의 비평 삭제 등을 포괄하는 점 역시 특수성으로 지적됨²²⁾²³⁾
- 이러한 특수성은 현행법상 성희롱,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강간, 형법상 강제추행·강간, 형법상 비동의간음죄의 도입 등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유형화될 수 있으나, 폭력을 방관해온 분위기, 처벌 공백 등을 고려할 때 비법률적인 개선방안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며,²⁴⁾ 이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수반하는 조치라 할 수 있음
- 나아가 예술계의 다수 인구집단인 여성이 사회적 소수자 위치에서 겪어 온 성폭력과 성차별을 개선함으로써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다양한 인구집단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극복하는 정책적 관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예술창작과 문화향유의 다양성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을 함께 제기함

추진과제 01

문화예술, 문화산업, 체육 등 각 분야 여성활동 활성화 지원

21) 이는 그간의 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술계 내에서의 '정실'이나 '부패' 문제로만 포괄적·간접적으로 형용되어 왔음(허은영, 『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2) 오정진, 「결코 내부일 수 없는 세계」,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1~9쪽.

23) 가령, 문단 내 성폭력 양상에 관해서 이성미는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기술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등단한 남성 문인이며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하고 창작교육, 낭독회 등을 진행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젊은 여성으로 대학 또는 예고 문예창작과 학생이거나 작가 지망생, 즉 한국문학의 독자이며 창작자이다. 대부분 학교 또는 사설 교육기관에서 창작 강의를 듣다가, 낭독회에 참석했다가, 출판사 편집자로 일하다가 피해를 입게 되었다 즉 폭력이 일어난 공간은 대부분 문학과 출판의 현장이었다. 가해자들이 SNS를 통해 문학을 좋아하거나 글을 쓰는 젊은 여성에게 먼저 접근하여 신뢰를 얻은 후, 불러내어 초면에 바로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 또한 많았다. 가해자로 지목된 문인들은 이러한 폭력행위를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수년에서 10년 이상 지속해왔다. 문단의 수직구조와 등단이라는 강고한 벽으로 인한 사각지대에서 은폐되고 묵인되면서……"(이성미, 『#문단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그 후-제도적 정책적 대안으로』,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30쪽).

24) 이선경,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의 법적 쟁점 및 향후 개선 방향」,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10~21쪽.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 분야별 여성 예술가, 여성 체육인, 관련 분야 여성 종사자들의 직군별 경력단계와 생애주기조사 등 기초 정책연구 실시
- ▶ 문화예술, 문화산업,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여성의 활동과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 (가칭)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시 반영
 - 기존 문화예술, 문화산업, 체육 등의 분야별 법률 제정·개정을 통한 법제화 추진
 - 예술가나 체육인으로서 기본적 권리 및 사회적 역할, 예술 표현의 자유 등을 보호·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예술가와 체육인에 대한 권리 보장 명시
 -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등을 명시: 「지역문화진흥법」과 지자체의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에 성평등 진흥 활동 보장 명시 포함
 - 문화부 본부 및 산하기관, 지원대상기관 등에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평등 관련 법률의 실질적 적용 여부를 각종 평가에 반영
- ▶ 여성의 전문적·직업적 문화·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실행
 - ▲여성 예술가/체육인 활동 활성화, ▲경력단절 여성 예술가, 여성 체육인의 활동 재개 지원, ▲분야별 여성단체/조합 결성 및 활동 지원 등
 - 양적·질적 차원에서 분야별 진출 및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중장기 지원계획 수립·이행
 - 여성 속의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지원방식의 설계: 나이, 지역, 국적/민족/인종, 장애, 소득수준 등을 반영한 '포용적 지원' 설계 및 개발
- ▶ 여성 관련 사회문제, 여성의 삶, 여성 관련 문화유산·역사·위인 등을 주제로 한 예술 및 문화콘텐츠, 여성(들이) 창작·제작하거나,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예술·문화콘텐츠 등에 대한 특별 지원 및 유통·향유 확대
 - 발표 기회 확대 포함: 지역과 해외 등 발표 기회 마련 포함
 - 대중매체, 언론 등을 통한 기획 프로그램 제작 활성화
 - 지역 여성들의 '생활지식'을 공유하고 문화생산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문화 기반 구축: 성평등 문화기획 교육 등 도입
 - 풀뿌리 성평등 문화·예술 창작·제작과 유통 지원 시스템 설계·구축 포함

추진과제 02

여성 문화·체육활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인식 제고

- ▶ 여성 문화·체육 활동 관련 각종 문화·역사 유산, 자료 등의 발굴·연구·비평 활성화 지원(교육부 협력)
 - 여성 예술가·단체 등에 대한 동시대 비평 활성화 지원 사업

의제3. 성평등 문화 실현

- 다양한 예술작품/활동, 문화계 구조 등에 관한 여성주의 비평·연구 활성화 지원 사업
- 여성 예술가, 체육인 등에 대한 역사적 평가 등에 관한 연구지원 사업
- ▶ (가칭) '여성 역사·문화 아카이브/컬렉션' 신설·운영
 -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연계협력
 - 과거·현재의 각종 여성 역사와 문화 관련 자료, 여성들에 의한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의 동시대 아카이브/컬렉션, 여성 문화유산의 발굴과 창조, 계승과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운영
 - 어린이집/유치원, 각급 학교와 대학, 평생교육시설 등과 연계한 활용계획 수립·실행
- ▶ 각급 학교와 대학, 예술학교와 대학 관련학과 등의 정규 교과목에 여성 예술가·체육인의 업적과 활동, 여성주의 비평·평가 등 반영 추진
 - 각급 예술학교와 예술대학 정규 교과목에서 예술이론/비평 과목의 비중 확대
 - 예술이론/비평 과목 중 여성 예술가와 여성주의 비평이론 시수 반영 의무화
 - 성평등 문화예술, 문화산업, 체육, 관광 관련 교구재 개발 연구·활용
 - 초·중등 과정 문화예술교육에 성인지적 관점 도입
- ▶ (가칭) '여성문화주간' 사업 실시 및 여성예술·체육행사 지원 확대 등
 - 여성 예술가와 여성 예술활동, 여성 체육인과 여성 체육활동 등에 관한 전시, 공연, 학술대회 등 개최
 - 예술, 체육활동 등을 통한 성차별 인식 개선 활동 지원 등

추진과제 03

문화정책을 통한 성평등 사회 실현

- ▶ 성평등한 문화콘텐츠 제작·유통 확산 지원
 -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기준에 성평등 지표 개발·적용(내용, 형식, 제작/유통에서 성별 참여/처우 등)
 -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공연, 전시, 문학창작, 페스티벌 등 여성 문화콘텐츠의 창작활성화와 유통기반 조성·지원
 - 각종 문화콘텐츠 기업, 문화콘텐츠, 유통플랫폼 등에 대한 (가칭) '성평등 인증제' 실시
- ▶ 성평등한 언어문화정책의 수립·실행
 - 성차별적 언어사용과 혐오표현 규제, 성평등한 언어문화 캠페인
 - 성차별적 언어사용 습관과 혐오표현에 대한 국어실태조사와 모니터링
 - 공공언어와 학교교육(교과서 등)에서 차별어와 혐오표현을 제한하기 위한 '성평등한 포용적 언어교육' 프로그램 개발·활용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가칭) ‘성평등 언어문화사전’ 편찬
- ▶ 지역문화정책에서 성평등 실현, 여성친화적 ‘문화도시’ 조성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정책, 생활문화정책 등에서 여성의 중심성에 관한 인식 제고, 법정계획 수립 · 사업 운영, 평가 등에 반영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조성사업에서 여성친화적 문화도시 조성 활성화 추진

추진과제 04

성평등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담조직·재원 확보

- ▶ 성평등 문화정책(문화생태계의 성평등을 실현하고 문화정책으로 성평등한 사회혁신)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 조직 신설
 - 민관협치를 위한 정책결정기구(위원회) 설치, 전담 지원기관, 재정 확충 등 추진
 - 성인지적 민관협치를 위한 내실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성인지 감수성과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포함
 - 문체부 기획조정실 내 (가칭) 성평등문화정책관 신설 방안 검토 · 추진
 - 문화비전위원회, 예술노동위원회 등과 정책의사결정 관련 연계 협력체계 구축
 - 성평등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문 진흥 · 지원기구 설립 검토 · 추진
- ▶ 성평등 문화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다른 부처 · 지방자치단체와 연계 협력체계 구축

의제4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문화다양성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평화의 조건이자
공동체 ·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화정책의 목표이다”

문화다양성의 기본원리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은 민족 · 인종, 성별, 장애 등의 사회적 차이를 차별과 배제의 근거로 삼고 집단학살에까지 이르게 했던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고 평화의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적 합의로 도출된 가치임
- 문화다양성은 인간다움을 규정하는 기본 속성이자 인류사회의 평화로운 생존을 위한 일차적인 조건으로서 공동체, 민족,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원천임(유네스코 헌장)
- 이런 의미에서 문화적 권리는 인권의 중요한 요소로 규정되고, 문화다양성은 생물다양성과 동등한 수준에서 인류 생존의 요건으로 간주됨(인권선언)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한 문화다양성의 여건 조성

- 문화는 시공간을 넘어 다양한 형태를 취하며, 개성 있고 다양한 정체성, 인류를 구성하는 민족들과 사회들의 문화적 표현으로 구현됨(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 문화적 차이가 인종차별 등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문화는 그 자체로 보호 · 존중받아야 하고, 모든 사람은 자신의 문화를 발전시킬 권리와 의무를 갖는 동시에 모든 문화는 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규정됨(유네스코 국제문화협력의 원칙 선언)
- 이러한 문화의 다양성은 우선 민주주의, 관용, 사회정의, 민족들과 문화들 사이의 상호존중이라는 틀 안에서만 번성할 수 있음(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 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는 개인의 문화생활 참여권과 문화향유권, 문화적 표현의 자유 보장 및 문화적 창작물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보호, 문화적 표현과 창작 주체에 대한 권리 보호 등의 창의성을 포함해야 함

-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 또는 집단의 문화적 권리가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상호 존중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즉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창의성이 존중되고,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대한 접근과 향유가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필요함

관련법에 따라 문화다양성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제도 기반 조성

- 2010년 대한민국 정부는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의 비준국이 됨으로써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
- 문화다양성 정책은 각 정부부처 간에 유기적 연계가 취약한 상태로 추진됨으로써 문화다양성의 본래적 가치와 지향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고 특정한 정책사업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여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인식을 형성하는 데에도 한계를 지남
- 이러한 정책적 위상과 기능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률 제정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 문화다양성 정책 총괄 기능의 형식성과 취약성을 개선·보완하고, 기존의 문화다양성 정책이 포괄하지 못했던 정책과제들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문화다양성의 실현과 확산을 도모함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 본부와의 협력 강화
- 문화다양성 국제기금(IFCD) 출연 참여

대 표 과 제

1. 문화다양성 정책 위상 강화와 법제 정비
2. 문화다양성 침해(혐오표현 등) 금지와 인식 제고
3.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 보장
4. 언어문화 다양성 실현
5. 전통문화유산 보호와 현대화
6.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국내외 관광객 정책 마련

01 문화다양성 정책 위상 강화와 법제 정비

○ 개념

- ▶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이라는 개념 자체가 공유되거나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협약 비준국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을 실행해야 함. 따라서 유네스코에서 채택한 ‘문화다양성 협약’을 준거로 삼아 ‘문화다양성 정책’의 정의, 범위, 위상 등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 이에 따르면 ‘문화다양성 정책’은 창조성에 기인하는 문화적 표현과 문화정체성에 기인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으로, 범주적으로는 문화생태계의 전 가치사슬(창조-생산-전파/유통-접근/향유)에 따라 산업적·비산업적 영역을 포괄하고, 시간적으로는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문화유산 개념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양한 문화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공평한 표현·개방적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함
- ▶ 이러한 점을 인식한 위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의 위상을 제도적 차원에서 강화하는 것을 제안함

○ 추진 배경

- ▶ 최근 UN의 한국 문화다양성 수준에 대한 우려 표명과 정책 모니터링 강화 등에 관한 권고는 기존의 문화다양성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업무나 사업에 관한 개선을 넘어 범정부적 차원의 협력과 대책 마련이 요구됨
- ▶ 문화다양성 협약 이행에 따른 필요성이라는 차원에서만 아니라 국내의 문화다양성 수준에 대한 국민적 체감 및 인식, 문화정체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나 혐오문화의 확산 등은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함
- ▶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문화다양성 정책의 구체적 범위와 관련 내용이 협약 관련 실무와 국민인식 제고 수준으로 한정되어 있음. 따라서 이 법을 확대 개정해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원칙을 확산할 수 있는 법체계 전반의 정비가 필요함
- ▶ 문화다양성 정책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에도 법률적 정비는 필수라고 할 수 있음
 - 문화다양성 정책은 매우 광범위한 정책 범위를 포괄해 단일 법률의 제정·개정으로는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한계가 예상되므로 전반적인 법체계 정비 속에서 추진해야 함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문화다양성 정책과 관련된 법률은 2014년에 제정된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로 총 15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실무적인 행정행위로 개념 정의와 책무,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 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국민인식 제고 관련 활동(문화다양성의 날, 교육), 자원과 권한 위탁 근거 마련 등 제한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러한 법률의 한계점과 추상성은 2016년 말에 제정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총 8장 38개 조항으로 구성)과 비교해 보면 법률적 구체성과 효력 차원에서 확연하게 차이를 보임
- ▶ 문화 분야 법제 전반의 체계화가 오래된 과제로 제기되는 시점인 만큼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정책 범위의 광범위성을 법체계 정비 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접근하지 않으면, 협약 의무사항 이행 및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 수준의 문화다양성 정책 범위를 넘어서기 어려움
- ▶ 게다가 현행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협약 의무사항 이행을 중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도 창조성에 기인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문화정체성과 관련되거나 그에 기인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명확하게 정책개념으로 구별하지 않고 모호하게 설정하여 정의함으로써 정책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임
- ▶ 또한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의 범정부적 총괄 기능을 문화부가 맡게 되었으나 총괄부처로서 위상과 기능이 형식화되고 제한적인 측면이 강함
- ▶ 문화다양성 정책의 정부 간 협력체제도 문체부가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심의를 총리실 산하 문화다양성위원회가 하는 구조이나, 심의과정이나 심의결과 정부부처간 업무분담 및 협력, 심의결과와 반영 등에 관한 관리 방안이나 체계가 미비하고 연차보고서 및 국가보고서 작성과 같은 정책의 성과관리 측면에서도 협의나 협력체제가 취약함
- ▶ 문화다양성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나 사회구성원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의 참여가 요구됨. 이러한 특성상 유네스코 협약에서도 시민참여가 강조되었으나 현재의 문화다양성위원회는 당연직으로 포함된 각 부처 장관들의 비중이 시민사회보다 높음
- 이러한 성격상 문화다양성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협력체 성격이 강하나 이러한 성격 역시 충분히 구현되지 못함

추진과제 01

문화다양성 정책의 위상 강화와 총괄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책임성 제고

- ▶ 문화다양성 정책 총괄부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위상과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의제4.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 문화다양성 정책 총괄부처로서 위상 법적 명시
- 문체부가 정책의 목표와 방향, 종합적인 실행계획의 수립과 관리감독 권한 확보, 평가, 조사, 권고 등 실질적인 행정수단을 갖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정비
-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책과 사업 전반에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위한 공통지침 마련(법정부 차원의 실행지침으로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 기금, 소속기관 등의 운영에서 운영주체와 종사자, 보조사업자 등의 자격요건, 사업운영 과정에서 문화다양성 실행규정, 상벌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제도화
 - 이러한 제도적 정비로 문화정책과 사업 전반에서 참여자와 운영주체의 인식 개선, 정책효과 제고
 -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 지침 실행을 위한 정책수단 개발
-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 본부와 협력 강화
 - 한국은 유네스코 아태지역 위원국으로서 문화다양성 국제기금(IFCD) 출연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현재 73개국이 기금 출연에 참여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 문화다양성 협약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국내 문화정책에의 적용과 민간 전문가 참여와 관련된 정책 담론 확대가 요구됨
 - 문화비전2030의 영문버전을 발간하여 향후 각국 문화부와 유네스코 본부에 제공하여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데 활용

추진과제 02

문화다양성 정책을 위한 정부 간 협력체계 강화와 시민참여 확대

- ▶ 문화다양성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체계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가 총괄부처 역할을 수행하고 다른 정부부처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실행 기능 분담
 - 문체부는 이러한 실행기능이 원활하도록 조정·협력 기능 수행
 - 문화다양성 정책의 총괄부처와 실행부처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간 협력방안과 그 실행체계(부처 간 업무분담과 협력방안 포함)를 법정 기본계획에 반영
 - 총괄부처인 문체부의 법정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과정·결과 공론화, 심의결과의 정책반영과 반영결과 설명 의무화, 정책관리 방안 수립·실행의 의무화 등 절차 보강
 - 이러한 정책적 절차를 바탕으로 문화다양성 협약에서 요구되는 연차보고서와 국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보고서들이 실질적인 정책성과 관리의 기초자료이자 지표가 되게 함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총괄부처의 이러한 기능이 원활하도록 문화다양성 정책 실행부처들의 협력과 지원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함
- ▶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시민사회 참여 확대 · 실효화
 - 문화다양성위원회 운영에 있어 문화다양성 정책의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와 문화다양성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체의 기능을 명확히 구별함
 - 심의기능을 포함하는 의사결정협의체 내에 문화의 모든 가치사슬(창조/생산-전파/유통-접근/향유)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문화정체성 관련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실효화
 - 동시에 각 부처 장관들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는 정부 간 실행 협력체의 성격 역시 실질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

추진과제 03

문화다양성을 문화정책 전반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

-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확대 개정하여 문화다양성 정책의 실효성 제고
 - 현행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관련 실무와 국민인식 제고 수준에 머물러 있어 법정 계획 수립의 범위나 정책의 위상 등에 제약이 적지 않음
 - 이에 법률 제정의 직접적 계기였던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비준에 충실하도록 협약에서 적시하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위상과 범위를 적용하여 확대 개정 추진
 - 확대 개정 시 법률의 위상을 기본법 수준으로 강화하고, 문화예술(문화유산 포함),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문체부 소관 영역은 반드시 문화다양성 원칙이 적용되도록 함(유관 부처의 관계 법률과 정책에 대한 적용 단계적 검토 · 추진)
-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과 다른 법률 사이의 명확한 관계 설정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추상도가 높은 문화정책의 가치와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로, 헌법적 가치와 원칙의 조응은 물론, 다른 문화 관련 법률들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규정하는 법적 위상을 갖도록 정비하는 것이 실효성 제고에 중요
 - 「문화기본법」을 비롯한 문화 관련 법률 전반에서 문화다양성 개념의 적용과 그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조항의 신설
 - 또한 문화다양성 개념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문화산업, 지역문화, 문화기반시설, 문화재, 관광, 체육 등 포괄적 영역의 관련 법률에 근거한 각종 법정계획, 평가 등을 할 때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도록 개정

추진과제 04

문화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개념과 범주의 재정립

▶ '문화적 표현' 개념의 법적 정의와 정책영역의 명확화

- 문화다양성 협약에 따라 '문화적 표현' 개념을 중심에 둔 정책개념의 명확화
- '문화적 표현'은 '창조성'에 기인하는 표현 영역(문화예술을 포함하는 문화·창조산업의 영역에서의 창조, 생산, 유통, 전파, 접근/향유)과 '문화정체성'에 기인하는 표현 영역(나이, 성별/젠더, 장애, 민족/인종, 성적 지향, 종교 등에서 기인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차원, 문화적 가치 등)으로 구분
- '창조성'에 기인하는 문화적 표현에 대한 정책 영역과 '문화정체성'에 기인하는 문화적 표현에 대한 정책 영역을 구분하여 정책체계를 정립하고, 이 체계를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에 반영

1. '문화정체성'에 기인하는 표현: 언어와 같은 상징적 의미가 인권과 다양한 차이를 존중해서 타인과 평화롭게 공존하며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을 우선적 목적으로 하는 범주
2. '창조성'에 기인하는 표현: 문화예술/문화산업 생태계와 직결되는 표현으로 생태계의 산업구조나 시장원리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종다양성을 유지·발전할 수 있는 상태를 원칙으로 하며, 독과점이나 불공정한 생태계가 초래하는 위험으로부터 그러한 종다양성을 보호하고, 창조적 주체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우선적 목적으로 하는 범주
3. 문화정체성 범주와 창조성 범주의 상관관계: 창조성에 기인하는 문화적 표현은 타인의 문화정체성을 존중해야 하며, 문화정체성에 기인하는 문화적 표현은 문화생태계의 창조성이 과거-현재-미래를 관통하는 문화정체성 형성에서 핵심요소임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존중해야 함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문화생태계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 유네스코 협약상 문화다양성 개념은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 다양성'으로도 정의되어 문화생태계의 가치사슬을 채택함
- 이때 '예술'이란 '문화·창조산업'(culture & creative industries)의 의미로 국내법상 '문화예술'뿐 아니라 '문화산업' 개념까지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임
- '창조성'에서 기인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예술가의 창조적 활동과 국민의 문화향유 연계성을 법적으로 명시하려면 이와 같은 생태계의 가치사슬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
- 문화생태계 가치사슬에 따라서 창작(비산업적 활동)-생산(산업적 활동)-유통/전파-접근/향유로 범주화해 가치사슬별로 문화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 신설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이때 문화생태계의 각 가치사슬에 대한 법적 접근은 문화적 표현이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의 균형 위에서 보호·증진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명시
- 문화생태계의 가치사슬 중 창작·생산 단계에서 창작·제작활동의 자유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창작·제작 주체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민 일반의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중시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시킴

* 문화생태계 가치사슬과 문화의 사회적 가치 사이의 상관관계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은 문화의 창조·생산, 전파·유통, 접근(향유 개념 포함)이라는 문화생태계의 가치사슬로 실현된다”

* 문화생태계 가치사슬에 기반한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공적 책임 사항

- 문화의 창조와 생산에서 사상·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지원
- 문화의 전파와 유통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문화의 접근에서 문화정책의 의사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참여, 이를 위한 합법적 절차와 원칙 마련, 정책정보의 절차별 투명한 공개뿐 아니라 문화활동, 문화교육에 평등한 참여와 향유 보장
- 문화의 창조와 생산, 전파와 유통, 접근의 각 가치사슬에서 문화권의 보장,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 문화정책의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 이를 위한 심사나 평가 등의 절차에서 국민과의 협치체제를 마련하고 이 과정이나 절차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여 국가의 자의적 정책결정에 따른 국민의 자유와 권리 침해 방지, 문화에 관한 공론장 활성화, 문화정책의 민주주의 실현
- 문화 분야의 지원, 투자 등을 위한 심사·평가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협치체제로 마련하고 운영(국가나 공공기관의 자의적·임의적 변경이나 집행 불가)

▶ 문화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참여와 민관협치 관련 조항 신설

- 유네스코 협약에서 강조했듯이 문화다양성 정책의 실행에서 시민참여와 민관협치를 필수 사항으로 반영

02 문화다양성 침해(혐오표현 등) 금지와 인식 제고

○ 개념

- ▶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뜨거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혐오표현’은 문화다양성 정책의 한 축을 구성하는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범주들, 즉 “인종, 성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폭력, 적의를 선동하기 위한 표현”(국제인권규범, EU 등),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차별, 혐오(조롱과 증오), 선동의 적대적 내용을 발언, 글, 기타(몸짓, 제스처, 그림 표장 등)의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국가인권위원회), “차별적 속성을 이유로 조롱, 무시, 폭력, 선동 등의 내용을 언어, 그림, 창작물, 몸짓 등 유·무형의 언어적·시각적 매개체를 통해 표현하는 행위”(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으로 정의됨

*소수자/소수자 집단: 젠더, 이주민, 인종,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열악한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의 공통적 정체성을 갖는 개인 또는 집단

- ▶ ‘혐오표현’은 ‘차별’을 핵심 기제로 삼는데, 여기서 ‘차별’이란 차이에 위계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불안정이나 무시를 포괄하며, 부당대우의 역사를 거쳐 형성되거나 현재의 불평등한 사회적 위치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있음²⁵⁾
- ▶ 따라서 혐오표현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집단과 계층을 대상으로 투영되는 사회적 실천으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성 상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이 최근 각국에서 제기되어 왔음²⁶⁾

25) 박미숙·추지현,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22쪽.

26) 마사 누스바움,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 민음사, 2015; 마사 C. 누스바움, 강동혁 옮김, 『혐오에서 인류애로-성적 지향과 헌법』, 뿌리와이파리, 2016.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추진 배경

- ▶ 현행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캠페인이나 교육을 통한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상화된 인터넷과 SNS 환경을 기반으로 혐오표현과 증오범죄가 급증하는 최근 상황에서는 캠페인이나 교육에만 의존한 정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 따라서 캠페인이나 교육으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다양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에 대한 금지를 적극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병행되어야만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캠페인의 효과 역시 증대될 수 있음
- ▶ 특히나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혐오표현을 국가와 공공기관이나 그에 속하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발화하는 일이 크게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 즉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캠페인의 주체인 공적 영역이 역설적으로 혐오표현을 생산, 전파하는 데 기여하는 점은 교육이나 캠페인의 효과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무력화하는 요인이기도 함
- ▶ 나아가 ‘혐오 비즈니스’²⁷⁾라고 불릴 만큼 혐오표현이 산업적·경제적 수익과 실적을 높이는 수단이자 자원으로 활용되는 일 또한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함께 빠르게 증가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추진과제 01

문화다양성 침해(혐오표현 등) 금지 법제화

- ▶ 문화다양성 정책의 실행주체인 ‘공공기관’의 문화다양성 침해를 우선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국민적 차원의 인식 제고,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선도
 - ‘공공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와 같이 광범위하게 설정: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위원회 등의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 및 각급 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자체 출자 및 출연기관, 특수법인,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연간 5,0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 등
 - 이와 같이 혐오표현의 발화주체를 특정하여 문화다양성 침해를 공적 주체로부터 금지한다는 것은 이러한 공적 주체의 경우에는 어떤 매체나 공간에서도 모든 혐오발언 등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 독일의 증오선동금지법(1994)과 혐오금지법(2018), 영국의 인종/종교적 혐오방지법(2006) 등 참조

27) 기획-혐오 비즈니스, 한국일보, 2017. 9. 16.

- ▶ 타인의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부정적·적대적·차별적 표현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규제 근거 마련 검토
 - “문화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 문화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은 동시에 타인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부정적·적대적·차별적 표현으로 문화다양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혐오표현’과 관련된 논의들에서는 인권적 관점에서 차별금지가 핵심을 구성하나 이것이 타인의 문화정체성과 직결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현행 국제법(문화다양성 협약)과 국내법(문화다양성법)에 위배된다는 관점이 부재함
 - 이는 현재의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법률적 위상과 실효성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함. 따라서 문화다양성 법체계를 정비함으로써 타인의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문화적 표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혐오표현’을 규제할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반영
 - 이때 타인의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문화적 표현의 침해는 곧 「문화기본법」에 따른 ‘문화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는 곧 인권으로서 문화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제재, 처벌 등의 정책수단을 함께 검토하여 반영
 - 이러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는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혐오표현을 제재하기 위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충분히 논의·검토하여 그 제도적·정책적 실효성을 강화

추진과제 02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요소로서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

- ▶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보급, 문화다양성 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원·공무원·공공기관 등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화 등 추진
 - ‘무지개다리사업’과 같은 특정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교육 전반에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을 위한 지침과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활용
 - 직장장 학교에서 문화다양성 보호·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이수 의무화,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 지원
- ▶ 문화예술교육 영역에 문화다양성 보호·확산도 포함
 -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 교과과정 개발 및 교사 프로그램 지원: 최대한 다양한 시대의 다양한 양식과 형식, 다양한 문화정체성에서 기인하는 예술들이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될 수 있는 다문화주의적 프로그램 개발 지원(탱글우드 선언문 참조)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모든 시대, 모든 양식, 모든 형식, 모든 문화의 음악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된다. 우리 시대의 모든 음악이—여기에는 10대들의 대중음악, 아방가르드 음악, 미국의 민속음악, 다른 민족의 음악들이 포함된다—학교에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탱글우드 선언문, 1967)²⁸⁾

추진과제 03

문화다양성 보호·확산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운영 규정 신설

- ▶ 도서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영화관 등 각종 문화기반시설의 운영 전반에 문화다양성을 보호·확산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적용
 -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 기관장, 운영위원회 등의 인적 구성에서 (가칭) 문화다양성 쿼터제 도입
 - 기관 소속 직원의 다양한 문화정체성 보장 의무화
 - 소수자의 문화정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적 표현의 전파와 접근의 공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관운영 방식 개선
 - 문화 프로그램에서 소수자의 문화정체성 관련 관점의 적용
 - 소수자의 문화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활용 지원 등
- ▶ 문화기반시설 등에 대한 각종 기관평가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평가항목 개발·적용

추진과제 04

지역문화정책과 미디어·콘텐츠정책에서 문화다양성 실현 방안 마련

- ▶ 지역문화 진흥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통합지침 마련
 -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은 일차적으로 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관계(가족, 이웃 등)를 바탕으로 형성·변화·고착화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인정·포용하는 문화다양성 정책을 지역문화정책 차원에서 접근 필요

28) 최승은·박봉수, 「문화다양성 이해를 위한 다문화 음악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문화교류연구』 2(1),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13. 4, 87~105쪽.

- 현재 다양한 지자체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나 대상범위나 내용, 정책수단이 상이함
-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문화다양성을 보호·확산하기 위한 통합지침을 마련하여 각종 정책·사업 실행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방향 제시, 중앙과 지역 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시민사회 참여 촉진
- ▶ (가칭) '지역 문화다양성위원회' 운영과 (가칭) '문화다양성 도시' 지정
 - 다양한 문화정체성과 그에 기반한 문화적 표현의 활성화가 지역발전의 원천임을 인식
 - 이에 관한 자율적 참여와 지역단위의 문화다양성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가칭) '지역 문화다양성위원회' 운영
 - 문화다양성을 척도로 한 (가칭) '문화다양성 도시' 지정 등으로 인식 제고
- ▶ 방송과 디지털 미디어 기반 문화상품·문화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에서 문화다양성 보호·확산 강화 방안 마련

03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 보장

○ 개념

- ▶ 「문화기본법」의 '문화권' 개념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의 '문화적 표현'과 '문화다양성' 개념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언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문화정체성의 차이로 인한 차별을 금함
- ▶ 동시에 문화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정체성을 표현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 증진하는 것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다른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표현을 존중·이해하는 것을 사회구성원의 책무로 규정
- ▶ 이는 문화정체성이 사회적 '차별'로 형성·유지되어 온 역사로 문화적 표현이 제한, 왜곡, 배제, 폄하될 수밖에 없었던 만큼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은 이러한 사회적 차별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를 지님
 - 이는 사회적 차별구조를 철폐해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을 증진할 뿐 아니라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표현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차별구조를 개선해 나아가는 양방향 노력을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 ‘차별’이 차이에 위계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문화정체성의 사회적 불인정이나 무시를 포함하는 만큼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을 보장하려면 사회적 차별구조 내에서 소수자에 속하는 집단의 문화정체성을 대상화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그치는 대신, 소수자의 문화정체성이 ‘비정상’이나 ‘무능함’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의 근본적 전환을 초래하는 사회혁신이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함

○ 추진 배경

- ▶ 그간 한국 사회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은 주로 이주 노동자나 결혼이민자와 같은 제한적인 외국인정책으로 특화되어 왔으며, 이 역시 동화정책에서 다문화정책으로 이행하는 과정을 밟아 왔음
- ▶ 그러나 이른바 ‘다문화정책’은 문화의 우열을 조장하고,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국내외에서 직면함
 - 즉, 문화의 우열 조장이란 현지인의 문화는 다수가 향유하는 문화, 이민자의 문화는 소수가 향유하는 문화라는 구분으로 다수의 현지인이 공유하는 주류 또는 강자의 문화와 소수의 이민자가 버리지 못한 비주류 또는 약자의 문화라는 우열의 이분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더욱 강화하게 된 것을 의미함
 - 정부가 이민자를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고 다문화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이민자 지원사업을 확대하면, 현지인은 다문화정책이 자신의 세금을 무능한 이민자에게 쏟아 붓는다고 비판하고, 이민자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조장한다고 비판하는 이중 비판에 직면
- ▶ 구별, 분류, 분리에 따른 정태적·모자이크적 다문화정책을 넘어 사회통합과 상호교류의 역동적 문화혼합 또는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의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재설계하는 방향 지향
 - 이는 문화다양성을 규범적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자산으로 간주하는 기능적 차원을 활성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럼으로써 소수자 집단이나 그에 속하는 구성원에 대한 지원과 같은 대상특정적인 ‘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회적 자원인 문화다양성의 증진 차원에서 ‘정상성’의 위계구조를 수평화하는 전략을 취하도록 함
- ▶ 더구나 최근에는 소수자 집단에 대한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혐오표현의 일상화와 그에 기반한 정치적 담론의 확산, 혐오표현의 문화상품화와 같이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을 위협하는 문화적 표현의 증식과 전파 등으로 사회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임
- ▶ 이에 반해 ‘다문화’와 같은 정책개념이나 사업이 사회적·문화적 차별을 조장하고 고착하는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은 부족

추진과제 01

문화다양성에 입각한 '문화정체성' 개념과 정책범주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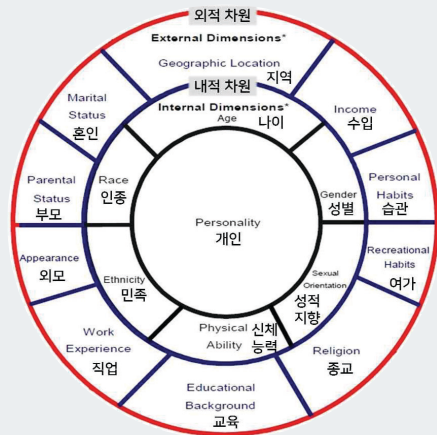
▶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우선적 · 핵심적 정책범주 설정

- 정책범주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국내 실태조사 등으로 우선적 · 핵심적 정책범주 설정
- 민족/인종, 나이, 종교, 장애(신체적 조건), 성적 지향,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등 법률상 범주들의 검토(「문화기본법」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검토)
- 이에 더해 국내 현실에 기초하여 직업, 외모, 부모, 학력, 출산 여부, 혼인 여부, 거주지역 등과 같은 사회적 차별의 범주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책적 범주와 과제 발굴

-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 채택(2000)→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 선언(2001)→국가별 다양성 헌장 제정(2004~)→유럽위원회의 다양성 헌장이 강령으로 시행(2010)
- 유럽의 다양성 헌장은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수자 인권보호와 차별금지가 국제사회의 중요 이슈로 다루어지면서 이를 국제인권문서로 보장하는 일련의 조치들(세계인권선언, 유럽인권협약, 유럽연합기본권헌장 등)의 연장이며, (2) 1960년대 미국의 공민권운동과 그 결과 제정된 공민권법(1964), 차별수정조치(1965) 등에 기원하여 제정 · 실행된 것임



유럽 다양성헌장의 여섯 가지 핵심범주



독일 다양성헌장에서 문화다양성 범주구성

*자료: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7, 58~60쪽.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사회 통합 · 상호문화주의 관점에서 정책개념 창출

- 각 정책범주를 소수자 정체성으로 특성화하고 대상화하는 대신 사회통합과 상호교류의 역동적인 문화혼합 또는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 관점에서 정책개념 창출
-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동성애자 등과 같이 소수자 집단을 지칭해 온 언어들은 그 자체로 차별적 함의를 포함해 정책적 분류나 정책언어로서 그대로 채택하는 것은 사회적 차별을 정책 영역에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역으로 이러한 소수자 집단을 지칭해 온 정책개념이 새로운 사회적 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기도 함(예: 다문화))

* ‘장애는 다양성이다’ 캠페인

-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장애를 고객의 다양한 특성 중 하나이자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해 장애가 있는 직원을 적극 채용함

* 나이 다양성(age diversity) 개념

- 기존의 노인정책, 청소년정책, 청년정책 등과 같은 정책대상의 분절에 기반한 접근은 문화다양성 정책에는 부적절
- ‘나이 다양성’ 개념은 이러한 분절된 정책개념에 내포된 나이에 따른 위계나 차별(ageism)을 없앴으로써 다양한 표현을 보장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는 정책 방향을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수단이 됨

- 따라서 기존의 소수자 집단을 특정하는 일상어를 정책개념으로 채택하는 대신 사회적 차별이나 혐오, 복지나 시혜, 치료 관점을 긍정적 · 보편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개념 창출

▶ 문화다양성 인식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지표 개발

- 매년 문화다양성 지표개발과 지수화 실태조사로 한국 사회 문화다양성의 인식과 수준을 제고,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
- 인식조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 실태조사의 범주와 대상, 인식조사 관련 항목 등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추진과제 02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문화생태계 모델 개발

- ▶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생태계의 가치사슬 단계(창조, 유통/전파, 향유 등)에 따른 정책 방안 도출

- 문화적 표현 기회 확대 및 접근성 증진을 위해 이중언어 교육과 다언어 문화서비스 확대, 장애의 문화적 표현과 체험 기회 확대,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과 문화활동 지원, 북한 이탈주민의 문화교육과 유대강화 프로그램 지원, 재외동포의 사회문화적 표현 기회 확대 등의 구체적 사업 발굴
- 다양한 문화정체성이 문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 접근성과 참여 제고(문화다양성 쿼터제 도입)
- ▶ 상호문화주의적인 문화 간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개발
 - 한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의 사업을 참여자 간 교류, 집단학습이나 협동학습, 또래학습, 공유·협력형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다수자/소수자를 구분하거나 특정하는 방식의 참여자 구성을 넘어서는 방식의 프로그램 개발 추진
 - 문화 간 상호이해 증진 프로그램 개발, 지역 간 문화교류와 협력 프로그램 확대
 - 지역 내 다양한 소수자 문화정체성 표현 증진·교류 강화
 - 연령/세대 간 협력형 문화 프로그램 개발
 - 문화기반시설의 쌍방향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확산

추진과제 03

문화정체성에 기반한 예술 지원의 다양성 증진

- ▶ 장애, 젠더, 지역, 인종, 종교 등 문화정체성에 따른 문화예술 지원 비중 확대
 - 다양한 문화정체성이 차별받지 않고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지원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문화예술과 문화산업 분야의 지원사업에 (가칭) '다양성 쿼터제'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정체성 성찰, 사회적 이해와 관용을 증진할 예술작품 또는 문화콘텐츠 창작 지원, 우수 작품과 콘텐츠의 전파·유통 지원 실시
- ▶ 문화예술, 문화산업, 체육 분야의 종사자, 전문예술인, 크리에이터, 체육인 등의 양성과정 관련 '문화정체성을 존중하기 위한 교육 지침' 마련

04 언어문화 다양성 실현

○ 개념

▶ 언어문화다양성

-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 도구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님. 언어에는 공동체 문화의 총체가 담겨 있으며 구성원 개인의 자아인식도 언어를 매개로 형성되고 표출됨
- 따라서 어떤 언어의 소멸은 그 언어로 표현되는 공동체의 사고와 문화의 소멸을 뜻하며, 인류의 소중한 자산을 잃는 것임. 따라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진흥하려면 우리 언어의 시간적·공간적 다양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함

▶ 언어문화다양성과 지역어

- 지역어는 어떤 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로 그 지역의 역사와 전통, 언어문화와 지역민들의 정서가 담긴 살아 있는 문화유산이며, 현재의 국어를 견고하게 지탱하는 한 부분임
- 우리말은 표준어와 다양한 지역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지역어를 보존하고 진흥하는 것은 우리말을 더욱 촘촘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일임

▶ 특수언어: 수어와 점자

- 주로 농인이 사용하는 한국수어와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점자를 '특수언어'라고 함
- 농인과 시각장애인이 언어문화의 주체로서 언어·문자 사용 권리를 누리도록 제도적·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

○ 추진 배경

▶ 언어다양성은 문화다양성의 근간

- 언어는 지식과 문화를 만들고 표현하며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므로 문화다양성을 유지하려면 언어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존·유지·촉진할 필요가 있음

▶ 지역어의 보존과 진흥 필요

- 경제력 상승, 한류 확산 등으로 한국어의 대외적 위상은 높아지고 있으나 대내적으로는 급속하게 진행된 산업화, 매체의 발달, 표준어 보급 정책 등으로 각지에 분포한 다양한 지역어들이 소멸될 위기에 처함

의제4.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제주 방언은 2010년 12월에 유네스코로부터 '치명적 절멸 위기의 언어'(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로 지정되었음
- 지역어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새로운 문화콘텐츠 생산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진흥 정책 추진 필요

▶ 특수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필요

- 한국수어, 점자 사용자로서 농인과 시각장애인은 교육·문화·직업 등 각 분야에서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지 못함
- '16년 「한국수화언어법」, '17년 「점자법」이 시행됨으로써 농인과 시각장애인의 언어권 보장과 언어문화다양성을 넓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기초 자료 수집·연구, 다양한 유형의 언어자료 보급, 교육자료 개발, 인식 개선 사업 등 농인과 시각장애인의 언어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의 체계적 추진 필요

추진과제 01

지역어 보전과 진흥으로 언어문화 다양성 증진

- ▶ 지역어를 보전하고 진흥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 ▶ 지역어 사용 의식과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어 정책 방향 마련
 - 소멸 위기에 놓인 산간 도서 지역 어휘를 조사하고 채록
 - 지역적·사회적 다양한 변인에 따른 언어 변이를 조사하는 등 언어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연구·조사 실시
- ▶ 지역어 자료 아카이브의 구축과 활용
 - 지역의 특색 있는 언어문화를 담은 지역어 자료를 수집하여 보존·연구·전시에 활용
 - 지역어가 다른 문화자원과 결합하여 문화콘텐츠로 활발히 활용되도록 지역어 문화콘텐츠를 구축하고 산업적으로 개발되도록 지원
- ▶ 지역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와 지역어 진흥 행사 지원
 - 지역어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지역어 사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추진과제 02

농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수어 진흥

- ▶ (수어)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언어로서 한국수어 위상 강화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각 지역에서 사용되는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한국수어 원시말뭉치 구축
- 이미 구축한 원시말뭉치를 정밀 전사해 주석말뭉치 지속 구축
- 말뭉치 전사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한국수어 말뭉치 전사 연수회' 운영
- 말뭉치 구축 및 전사 지침을 수정·보완하여 교육자료로 활용
- 한국수어교원 양성·자격제도 운영,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 한국수어사전 편찬, 한국수어 문화정보 구축 등
- ▶ (점자) 한글과 효력이 같은 문자로서 점자 위상 강화
 - 점자생활에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점자규범 정비
 - 2017년 개정된 한국점자규정에 대한 해설집을 제작·보급하여 개정 규정 홍보 확대
 - 온라인 점자 규정 해설 교육 자료를 제작해 점자 규정 보급
 - 언어생활 다변화에 따라 점자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점자규정정비위원회의 상시 운영 추진
 - 점자 전문가 양성, 점자출판시설 지원, 점자 교재 개발 등

05 전통문화유산 보호와 현대화

○ 개념

- ▶ 전통문화
 - 1989년 제2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한 「전통문화 및 민속보호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에서는 전통문화를 “민속(또는 전통문화와 대중문화)은 문화적·사회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공동체의 기대까지 반영한 것으로, 단체 또는 개인들이 표현하는 문화공동체의 전통에 기초한 창조물의 총체”라고 정의함
- ▶ 창의성의 원천으로서 문화유산
 - 창조는 문화적 전통에 의존하는 동시에 다른 문화와 접촉하면서 풍성해짐

- 이 이유로 모든 유형의 유산을 보존하고 고양하며 인간의 경험과 염원의 기록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함. 이렇게 함으로써 창의성을 진작하고 진정한 문화 간 대화를 고무할 수 있음(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2001)

○ 추진 배경

- ▶ 전통지식과 전통적 문화표현의 보호와 증진
 - 전통적 문화 표현을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이 민족과 개인들에게 생각과 가치를 표현하고 남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
 - 무·유형적 부의 원천인 전통지식, 특히 토착민 지식체계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전통지식의 기여 그리고 그 전통지식의 적절한 보호와 증진 필요
 - 전통적 문화표현을 창조·보급·배포하고 그 문화적 표현들을 활용하는 것은 공동체의 문화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 2005)
- ▶ 전통문화는 문화 중에서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라는 시간적 연속성을 지니며, 독창과 변형에 따라서 미래에 강한 활력이 되고 새로운 의미를 발휘할 가능성을 지님
- ▶ 전통문화는 문화정체성의 원천이며 고유성과 보편성이 내재된 세계적 문화소통의 자산이고 새로운 문화콘텐츠와 관광자원을 위한 자원이기도 함
- ▶ 2005년 ‘한브랜드화 지원전략’, 2007년 ‘한스타일 육성 종합계획’, 2012년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전략’ 등에 따라 전통문화 세부 분야별 법·제도 및 조직 등 기초 정책기반이 마련되었고 ‘창덕궁 달빛기행’,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등 국민적 호응도 높은 전통문화정책 사업이 개발·추진되어 전통문화의 가치를 확산해 옴
- ▶ 그러나 정책 추진 체계상 각 부처의 세부 분야별 독자적 정책 추진으로 분야 간 연계성이 낮고 전통문화정책의 통합적 관리체계가 부재하며, 한스타일 6대 분야 중심 정책이 지속되면서 그 외 분야는 정책 대상에서 소외됨
- ▶ 정기적 인식조사와 실태조사가 부재하여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였음. 예를 들어, 최근 고궁 주변의 퓨전한복 유행, 전주 한옥마을의 ‘한(韓)로윈’ 파티 논란 등 젊은 세대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 ▶ 고령화, 지방화, 여가 증가로 국민의 문화재를 포함한 전통문화 향유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의 기술변화에 대응한 정책 기반 고도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추진과제 01

전통문화 정책의 안정성 확보와 체계적 추진

- ▶ 전통문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 정비 검토
 - 전통문화 분야의 기본법 역할을 수행할 법률 제정이나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법안에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 입법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
- ▶ 전통문화 정책 추진 협력체계 구축
 - 전통문화는 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있고, 우리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타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자산임. 문화 관계 부처와 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와 그 관련 기관, 단체와 관련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함
- ▶ 각 민관협력 활성화 등 통합적·효율적 협업체계 마련
 - 전통문화와 문화재 정책을 통합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 제3섹터 역량강화·협업체계 구축으로 정책 거버넌스 재정립
 - 국내외 유관기관 협업체계 마련, 콘텐츠 공동 활용 확대

추진과제 02

지역 전통문화·생활문화·공동체문화 현황 조사, 발굴·활용

- ▶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인식조사 추진
 - 지역소멸, 인구 절벽 시대를 대비하여 지역의 전통문화·생활문화·공동체문화 보존 상태와 자원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에 따른 체계적 지원 방안을 마련
- ▶ 인문적·지리적 정체성에 기반한 전승문화·생활문화·공동체문화의 발굴과 지원
 - 전통적인 생활문화와 공동체 문화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재 단위의 발굴·보존을 넘어 공동체의 생산양식과 전승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 발굴로 전환
 - 기존의 민속문화 중심에서 현대에 부합하는 생활문화와 공동체문화로 발굴·보존 대상의 확대 지원
 - 전승자 중심의 지원에서 공동체와 마을 단위의 집합적 주체 대상 지원으로 확장
- ▶ 공동체 내 생활문화와 생활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확산
 - 생활문화와 생활기술을 공유하고 전승하기 위한 (가칭) 생활문화마을, (가칭) 마을장인 지정·지원
 - 지역 내 공유공간을 (가칭) 생활기술전승센터로 지정하여 운영·지원

▶ 신규 전통문화자원 발굴

- 통일준비 시대, 다문화사회를 맞이하여 기존의 특정 종목과 기술 보존 중심의 정책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전통문화자원을 발굴해 문화다양성에 기여

▶ 국학 자료의 수집·보존으로 전통 인문자산의 소멸 방지

- 연구·보급, 창작소재 데이터베이스화 등으로 활용 유도

추진과제 03

전통문화·공연 향유 프로그램 확대

▶ 세시풍속과 전통문화의 확산·일상화 추진

- 전통문화와 연계된 대표 프로그램을 발굴·사업화
- 지역 마을공동체 민속잔치·마을잔치 활성화로 마을 공동체 문화 재현·전통예술 보존

▶ 전통예술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위한 창작 활성화

- 지역의 전통문화 양식과 문화유산 자원을 공연 및 창의적 콘텐츠로 활용
- 전통문화 예술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예술 전문방송 서비스 추진

추진과제 04

현장·지역 중심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과 전승

▶ 지역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에 접근할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활성화

- 지역 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국민들이 문화재를 향유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문화재 교육을 다양하게 활성화하여 문화재에 대한 인식 증진
- 항일독립문화유산, 철원 노동당사 등 지역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호·활용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유산의 지역발전 자원화에 기여

▶ 매장문화재 발굴 지원을 확대해 국민 부담 완화

- 매장문화재 보호에 따른 국민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제도 운영에서 공익·사익 간 조화 도모
- 소규모 건설공사 시행자에 대한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 지원 범위 확대
(현행: 연면적·대지면적 제한 → 개정: 대지면적만 제한)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개정 전	개정 후
발굴조사 지원기준(면적 제한) - 단독주택, 개인사업자 : 대지면적 792㎡, 연면적 264㎡ - 농어업시설, 공장 : 대지면적 2,644㎡, 연면적 1,322㎡	발굴조사 지원기준 완화 - 단독주택 *개인사업자는 연면적 제한 유지 : 대지면적 792㎡ - 농어업시설, 공장 : 대지면적 2,644㎡

- ▶ 정보통신기술, 최신방재기술을 활용한 현장별 방재시스템 구축·고도화
 - 침입·이동감시센서, 영상분석기술 등을 문화재 현장에 도입하여 위험요소 사전 제거
- ▶ 전통예술에 특화된 연습장, 실험무대, 공방 등 창작과 유통의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민간단체의 자생력 강화 지원

06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국내외 관광객 정책 마련

○ 개념

- ▶ 국제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인의 국내 방문과 내국인의 외국 방문이 늘어나지만 우리나라의 문화다양성 보호는 여전히 우리 영토와 내국인 범주에 머무름
- ▶ 문화다양성의 개념은 문화다양성의 글로벌 차원을 고려하여 관광, 업무, 교육 등의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함으로써 외국인이 국내에서 인종적·문화적·종교적 이유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확장된 범주의 관광정책이 필요함
- ▶ 관광은 외화벌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적 수단일 뿐만 아니라 관광개발로 독특한 지역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참여로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다양성의 보호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

- ▶ 국가 간 교류가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국외여행은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 국민이 타국 문화를 경험해 문화다양성과 글로벌 관점을 함양하는 학습 기회이자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되어야 함

○ 추진 배경

- ▶ ICT 발전으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진 현대사회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의 정책적 범주는 관광·비즈니스·유학·이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외국인과 외국을 방문한 내국인까지 포괄해야 함
- ▶ 우리 국민 스스로 방문하는 주요 국가의 역사에 대한 이해와 문화수용을 높이는 문화교육을 해야 하며 사전에 방문국 문화를 이해하고 관광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과 관광문화가 형성되어야 함
- ▶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은 외화벌이와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경제적 가치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나,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늘어나는 등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 상황에서 관광은 우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다양성 보호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 관광은 문화다양성에 기반하여 풍성한 지역문화가 창출된 성과이자 지역이 얼마나 고유성을 확보하고 독특한 문화적 매력을 지녔는지를 보여 주는 지표로 이해되어야 함. 따라서 지역문화의 가치를 현실화하는 필수요소로 관광의 역할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 다양한 문화적 가치가 수용되는 열린 글로벌 국가 실현: 다양한 인종·국적의 사회적·지리적 공존은 현대사회에서 코스모폴리탄 도시로서 문화적 잠재력을 의미하며 글로벌 문화다양성을 배경으로 조화롭고 자유로운 문화적 교류로 우리 사회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함
- ▶ 지역문화와 관광이 시너지를 발휘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 지역의 정체성이 반영된 문화적 매력으로 관광객이 모여들고 관광개발로 고유한 지역 문화가 보호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는 지역문화와 관광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문화적 다양성이 증진됨

추진과제 01

관광영역에서 발생하는 문화갈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 ▶ 관광 참여 과정에서 국내외 관광객의 문화와 현지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화갈등 양상과 정책적 대안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 실시

* 조사·분석의 주요 범위: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경험하는 문화소외·문화갈등, 지역 주민 이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관광객에게서 경험하는 문화갈등, 우리 국민이 국외여행 중 겪는 문화갈등·문화이해 부족 등

- ▶ 소수 문화권·언어권에 대한 콘텐츠·인프라를 확충해 문화 포용성 증진
- ▶ 문화갈등이라는 관점에서 규정하기보다는 국가별로 맞춤형 콘텐츠·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소수 문화·언어권 또는 문화정책을 좀 더 강화

추진과제 02

‘공존하는 관광’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 우리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함께 만족하는 관광을 하기 위한 여행문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문화이해·문화수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공존하는 관광을 위해 ‘Travel Citizen’, ‘Localhood’ 등의 개념을 국내 여건에 맞게 적용하는 연구 진행
- ▶ 공존하는 관광을 위한 관광서비스·관광안내·관광인프라의 보완: 소수언어 안내, 식품성분 영문표시(알레르기, 할랄푸드 등) 등
- ▶ 장기적으로 관광객과 국민이 ‘공존하는 관광’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추진과제 03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글로벌관광문화플라자 건립

- ▶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과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지원하는 종합적 문화컨설팅센터를 양성하고 글로벌 관광문화에 관한 정보제공·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는 ‘글로벌관광문화플라자’ 건립

추진과제 04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재외문화원 등 한국관광 홍보 기능 강화

- ▶ 기존 해외 진출 기관의 현지 네트워크를 내실화하여 한국 관광홍보 기능과 우리나라 관광객들의 해외여행 정보제공 기능 강화

의제5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은 지속가능한 문화 환경을 만드는 데 가장 필수적인 문화정책의 과제이다”

-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은 문화콘텐츠뿐 아니라 예술의 영역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 한국의 문화콘텐츠 시장은 2000년 이후 국내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지만, 특정한 장르에 쏠림현상이 심하고, 유통과 배급에서 소수 콘텐츠의 독점이 심해 다양한 시장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들려면 유통독점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창작자, 제작자, 유통사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가 필요
- 예술계 역시 장르별로 모두 창작과 배급의 균형 있는 순환구조가 마련되지 못해 관객들이 다양한 공연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못하고 뮤지컬, 대중음악 등 인기 있는 소수 공연예술 분야만 예술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새로운 관객 개발이 필요하고,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이나 예술단체에서 다양한 공연이 관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는 노력이 필요. 민간 공연예술 창작단체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민간에서 제작한 작품들이 극장에서 관객들에게 호응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 다양한 공연예술

콘텐츠가 다양한 극장에서 여러 관객을 만날 수 있도록 공공지원체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함

- 문화콘텐츠와 순수 예술 분야뿐 아니라 체육과 관광 분야 역시 공정하고 다양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함. 특히 엘리트 체육계의 선수 선발과 운영에서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고, 선수들에 대한 지도부의 공정한 관리와 대우가 필요함. 또한 비인기 종목 스포츠들이 차별받지 않고 육성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관광산업 역시 국내 관광업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큰 기업에서 작은 기업까지 다양한 기업 생태계가 유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함

대 표 과 제

1. 예술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
 2.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체계 마련
 3.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
 4. 문화콘텐츠 유통과 노동 불공정 개선 법률 제정
 5. 국공립 문화기반시설 운영혁신과 민간 예술단체 창작 다양성 실현
 6. 공정하고 다양한 스포츠 문화 조성
 7. 출판의 다양성 실현
 8. 관광산업의 공정 상생을 위한 지원
-

01 예술의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

○ 개념

- ▶ 예술생태계는 예술의 다양한 장르와 창작물들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균형 있게 제작되고 유통되는 환경을 의미
- ▶ 예술생태계는 상업적으로 인기 있는 장르나 작품만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예술적 경향과 취향이 공존하는 창작-제작-유통의 선순환 구조가 가능한 것을 의미
- ▶ 예술의 종다양성은 시장 경쟁논리와 상업적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다양한 예술 장르와 창작물들이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받고 예술 취향이 다양한 관객들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말함
- ▶ 예술생태계의 종다양성은 상업적 이해관계로 다양한 예술창작물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고, 각각의 예술창작의 경향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함
- ▶ 예술생태계의 종다양성은 기본적으로 예술창작의 시대적 변화와 진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 기존에 존재하는 예술 장르들뿐 아니라 새롭게 부상하는 장르들이나 경향이 단명하지 않고 기반을 다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비주류 예술장르와 독립예술 분야뿐 아니라 새롭게 등장하는 다원예술, 융합예술, 커뮤니티예술, 다문화 예술도 예술생태계를 다양하게 만드는 자원으로서 이러한 예술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 ▶ 예술생태계의 종다양성은 다양한 예술창작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생태계라는 개념이 항상 변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듯이 하나로 고정된 개념은 아니며,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 ▶ 창작활동은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데 참여하는 제반 활동을 말하며, 광의로는 제작활동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음

○ 추진 배경

- ▶ 취지와 배경
 - 클래식, 국악, 연극, 무용, 문학 등 다양한 예술장르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예술의 공공성, 공정성, 균형성을 위해 장르들이 모두 고르게 잘 발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예술생태계의 종다양성을 위해 전통적인 예술 장르에 속하지 않고 새롭게 부상하는 예술 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원체제와 환경이 필요
- 예술생태계의 종다양성은 일차적으로는 예술 장르들이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 수용의 다양성과 새로운 관객 개발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 예술시장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예술창작물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는 없지만 비주류 예술장르들이 예술생태계의 다양성을 견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현황과 문제점

• 비주류문화예술

- 독립문화예술은 기존 문화예술의 장르에 기반하면서도 주류 문화예술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비주류 문화예술에 속한 것을 포함하며 예술 장르별로 차별화됨. 문학의 경우에는 새롭게 창간된 신생문학 잡지나 공상과학(SF), 사이버문학, 라이트노블 등이 해당될 수 있음
- 공연예술의 경우에는 국악이나 연희처럼 전통공연이지만 실제로 오늘날 대중의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마임이나 비언어적(논버벌) 공연처럼 언어와 노래에 기대지 않는 신체예술 포함
- 대중음악의 경우 케이팝 중심의 주류 음악이 아닌 록, 재즈, 국악 등 장르음악들도 독립문화예술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 시각예술의 경우 대안공간이나 독립미디어아트가 해당되고 만화나 웹툰처럼 대중이 즐기지만 실제로는 문화예술의 위치를 쉽사리 획득하지 못한 분야도 포함

• 다원문화예술

- 다원문화예술의 출발은 전통적 장르 예술에 포함시킬 수 없는 새롭게 떠오르는 복합예술이나 융합예술을 지칭
-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도 다원예술이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사용. 최근 등장하는 거리예술, 공공예술, 미디어아트나 로봇예술 등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함께 등장하는 융합예술, 창작스튜디오 등 새롭게 형성되는 대안공간, 다양한 문화예술축제 등이 여기에 포함
-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잔다리페스타’, ‘서울여성영화제’ 등 다양한 다원적 문화예술 축제도 있음

• 커뮤니티 문화예술

- 도시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모든 영역이 자본의 논리와 시장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에 커뮤니티, 즉 공동체 문화의 필요성 부상. 일상예술의 형태로 나타나는 공동체문화뿐만 아니라 주거와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공유문화, 기술과 디자인 등 우리가 일상에서 소비하는 것을 직접 제작해 새로운 산업 시스템을 추구하는 메이커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커뮤니티 문화예술이 등장
- 한국 사회에서는 1990년대 후반을 지나고 2000년대를 거치면서 도시 재개발이 급속하게 전개되면서 마을공동체의 위기 또는 붕괴가 가속화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새로운 방식과 연대의 공동체가 등장. 대표적으로 ‘성미산마을공동체’와 ‘삼각산재미난마을’, ‘예술과마을네트워크’(예마네), ‘해방촌 빈가게’, ‘예술세상 마을프로젝트’ 등의 사례가 있음
- 메이커문화는 커뮤니티 문화예술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흐름. 대량생산과 시장경제 위주의 시스템에서 좀 더 인간의 조건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생산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로써 문화와 공간, 기술과 디자인, 제작과 유통 등 산업의 영역까지 모든 과정에서 잃어버린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는 적극적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함
- 문화귀촌 예술은 소비주의에 찌든 대도시 삶의 방식에서 떠나 새로운 삶의 공간을 개척하는 모임들이 생겨나는 것. 도시 문명과 자본주의의 물질적 성공이 제공하는 편리성과 효율성이 아니라 생태적이고 문화적인 지속가능한 삶의 방식 준비. 이는 ‘문화귀촌’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과거 인생 이모작이나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하는 귀농이나 귀촌과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형태. 그 과정에서 세대적으로 20대나 30대 젊은 층에서 귀촌을 선택하는 사례 증가

• 다국적 문화예술

- 다국적 문화예술은 의상이나 음식 등 기본적인 일상문화의 측면과 다양한 축제와 커뮤니티 문화 등 새롭게 한국 사회에서 형성되는 문화로 구분.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거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문화예술을 알리거나 자율적인 형태의 커뮤니티 문화를 형성
- 다문화축제의 경우 서울시를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개최. 대표적으로 서울다문화축제가 있는데 다문화음식체험, 다문화의상체험, 다문화놀이체험, 다문화악기체험, 각국의 전통문화예술체험 등으로 구성. 지자체별로는 성북구에서 2013년 6회째로 ‘성북다문화음식축제’를 개최. 이밖에 전남 해남군도 ‘다문화가족음식축제’, ‘다문화안산국제거리극축제’, ‘다문화어울림축제’ 등이 있음
- 다문화 주체 밴드나 예술단체, 문화기획그룹 등은 다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 문화를 형성. 그중 다문화 밴드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밴드도 있고 다양한 국적을 가로지르는 다문화 커뮤니티의 사례가 있음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기대효과

- 예술의 다양한 자원과 창작물 그리고 그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다양한 예술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음
- 새롭게 부상하는 예술의 창작 분야를 독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술의 장을 새롭게 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예술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함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의미 확대
-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추진과제 01

예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기지원 공모사업에 '예술다양성 지원 분야'를 신설하여 전통적인 장르 안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분야와 비주류 예술을 체계적으로 지원
- ▶ 예술다양성 분야에는 독립예술, 다원예술, 융합예술, 커뮤니티예술, 다문화예술이 해당될 수 있음. 이 분야를 별도로 묶어 장르지원과 다르게 새로운 범주를 설정하여 독자적으로 지원
- ▶ 예술다양성과 관련된 창작 및 활동지원뿐 아니라 규모가 작은 예술다양성 축제들을 선정하여 지원예술 분야에서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제반 인력에 대한 적절한 대가 지불 기준을 공표하는 '공정보수기준 공시제도' 도입

추진과제 02

다원예술의 '창작-제작-유통' 생태계 조성

- ▶ 예술과 대중문화의 접목, 다양한 장르들의 융합과 관련된 실험적 창작이 실제 제작·유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 ▶ 예술과 일렉트로닉, 예술과 게임, 예술과 스포츠와 관련된 창의적인 창작물들이 관객들이나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 예술 창작물들을 대중화하고 대중문화의 예술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기관과 상호 협력 사업들을 발굴·확대

추진과제 03

예술-기술 융합, 관객 체험형 문화공간 조성: 한국형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 건립

- ▶ 예술과 기술이 융합하여 새로운 상호작용형 창작물(미디어아트, 로봇, 가상현실 콘텐츠, 홀로그램 형상물 등)을 기획 제작하여 관객들이 쉽고 즐겁게 융합예술 작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뮤지엄 건립
- ▶ 오스트리아 린츠시에 있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는 1996년 개관하여 유럽을 대표하는 미디어아트 전시체험 문화공간, 전 세계 미디어아트의 흐름을 주도할 뿐 아니라 해마다 해외 관람객 수십만 명이 방문
- ▶ 창의적인 예술의 상상력과 첨단 과학기술이 융합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합예술의 새로운 창작 플랫폼이자 관객들의 체험과 참여를 높이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

추진과제 04

커뮤니티 예술을 지원해 예술 공동체 활성화

- ▶ 도시의 커뮤니티 예술이 도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거리예술, 공공디자인, 공공설치미술의 프로젝트 확대
- ▶ 마을과 도시재생 활성화에 참여하는 문화예술 분야 커뮤니티 그룹들의 협동조합 결성 지원
- ▶ 커뮤니티 예술활동을 하는 문화예술 그룹들이 자생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예술과 기술이 융합하여 새로운 상호작용형 창작물(미디어아트, 로봇, 가상현실 콘텐츠, 홀로그램 형상물 등)을 기획 제작함으로써 관객들이 쉽고 즐겁게 융합예술 작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뮤지엄 건립

추진과제 05

국내 다문화 예술인과 이주민을 위한 문화센터 설립

- ▶ 해마다 결혼이주여성 10만 명 증가, 다문화 인구 200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에 이들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체험을 유지하는 전문적인 문화공간 설립 필요
- ▶ 다문화 가족들을 위한 지원센터는 많이 만들어지지만 문화예술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문화공간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 현재 민간에서 독립적으로 만든 이주노동자문화센터가 유일함
- ▶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 한국에서 활동하는 다문화 예술인들과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국내에서 자신의 문화정체성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문화센터 설립은 문화다양성을 확산하는 데 필요한 지원

02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공정한 대가체계 마련

○ 개념

- ▶ 창작활동은 예술작품을 만들어 내는 데 참여하는 제반 활동을 말하며, 광의로는 제작활동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연극을 한 편 만드는 데는 희곡 창작만이 아니라 연출이나 디자인 등 크리에이티브 스태프, 무대 구현을 위한 배우, 기술 스태프, 공연의 기획과 마케팅을 담당하는 스태프, 공연장에서 공연 진행을 담당하는 제반 인력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임. 따라서 '예술 창작활동'은 '예술노동'과 동일한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 대가는 투입된 노동에 적정 수준의 보상을 받는 것으로 임금 또는 용역 대가, 사례비 등을 의미함

○ 추진 배경

- ▶ 취지와 배경
 - 예술계에서는 활동 대가에 대한 사전 계약이 미비하고, 대가를 체불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며, 적정 보수에 대한 기준 체계가 없어서 불공정 지급 사례가 발생
 - 예술인복지법 제정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으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보급하고, 공공지원 부문을 중심으로 계약서 체결 의무화를 진행하지만 예술현장에서는 여전히 불공정 관행이 지속됨
 - 공공지원사업도 프로젝트 베이스로 지원금을 수령하여 사업이 진행되면서 프로젝트 참여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수단가가 설정되지 않음. 따라서 참여인력의 최종 인건비(사례비)는 사업책임자에 따라 임의로 배분되며 예술계 내부에서 위계폭력이 일어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함
 - 한편 문학작가의 경우 인세나 원고료 방식의 저작권 설정이 가능하지만, 미술작가의 경우 작품 판매 외에 전시에서 사례비는 책정조차 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상황에 있음
 - 예술작업에 참여하는 제반 인력이 적정 수준의 대가를 받고 일하는 환경 조성이 시급한 상황임

의제5.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 현황과 문제점

- 201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국 문화예술분야 단가 조사’ 연구에서 각 장르의 장르별 단가 구조와 최저·최고 단가를 도출하려 했으나 적절한 결과 도출은 하지 못했음
 - 정산서를 기준으로 조사하지 않고 예술현장에서 창작·제작 구조와 실태를 조사하여 다시 설계해야 함
 - 이 연구에서는 제작 참가 인력 구조를 기반으로 장르별 단가 구조를 제시한 바 있음

참고_연극 장르의 중구분 항목

대구분		중구분
인건비	창작진	대본
		음악(창작)
		안무(구성)
		디자인
	제작운영진	연출
		음악(지도)
		안무(지도)
		무대기술
		기획-홍보-운영
	출연진	연기
		연주
		해설(사회자)
	기타사례비	
제작비	무대제작	
	대여	
장소사용료	대관료	
마케팅	총제작비의 20%	
진행비	총제작비의 10%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분야단가조사, 2010.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문화예술 공모·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여전히 인건비성 사례비에 ‘국가노임단가’를 적용 요청. 그러나 해당 항목의 정부노임단가가 작성된 적이 없어 사실상 관행적으로 편성된 기준을 준용하는 상황임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한 지자체에서 2017년에 시행한 보조사업 공고문 일부

- 보조사업 관련 계약 및 인건비성 사례비 국가노임단가 적용
 - 물품구입(임차), 조명, 음향, 의상, 분장은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와 계약 의무
 - 단, 인력(무대예술종사 기술자)만 운용할 경우는 정부노임단가 적용
 - ※ 도 문화예술과 보조사업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
-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항목
 - 단체대표나 본인(개인)에게 각종 회의 거마비 등 인건비성 사례비 집행 금지(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감독비, 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작품비 등)
 - 단체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기본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수도세 등 단체 운영경비
 - 사업준비 또는 진행비 성격의 회의비(식비), 간담회비, 다과비 등의 식대, 경비 및 행사 기념품 구입비 등
 - 행사 답례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등 준비비용
 - 단순 진행비 등 업무추진비(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성격의 비용
 - 각종 경연대회 관련 행사는 신청할 수 없음
 - 기타 해당 사업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간접비용
 -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시·도기획지원사업의 경우 별도 지침 적용

– 특히 문화예술사업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인건비성 경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도 주관단체가 운용할 수 있는 인건비는 부재하고 그 외 사업 준비나 행사 진행에 따른 준비 비용 일체를 지급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등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한편 국내 예술가 사례비에 관한 논의는 미술에서 가장 활발히 전개되어 이 분야에서 개념을 구체화한 뒤 다른 분야로 확산해 나갈 수 있음

– 미술 분야 작가보수제도 논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 '13. 12: '미술생산자모임' 제1차 공개토론회에서 작가 사례비 문제 제기
- ▷ '14. 9: '미술 진흥 중장기 계획' 작가보수제도 및 표준계약서 도입 계획 발표
- ▷ '14. 11: 서울시 창작공간 주최 심포지엄 '노동하는 예술가, 예술 환경의 조건' 개최
- ▷ '14. 12: 아티스트 피 연구 및 개발을 위한 착수보고회 '미술인 보수지급제도(아티스트 피) 개선방안 연구'
- ▷ '15. 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미술생산자모임' 제2차 공개토론회에서 작가 사례비 문제를 제기하고 제2차 자료집에서 해외 사례, 인터뷰 등 발표
- ▷ '15. 7: '미술인 보수 지급제도 도입방안 연구'
- ▷ '17. 9: 6개 국공립미술관 '미술작가 보수제도' 시범운영 실시
- ▷ '18. 6: '미술창작 대가기준 마련 연구' 및 공개토론회 실시

의제5.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 '18. 현재: 법제화 추진 중('미술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 예정)

- 중견·원로 작가 월 472만 원, 신진작가 월 236만 원
- 월임금 기준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를 기준
- 전시 참여율, 전시 기간, 작품 종류, 전시예산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기대효과

- 공공부문에서 예술 분야 참여 인력 보수 단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예술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할 수 있음
- 예술인들에게 자기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예술지원제도에서 예술인 복지를 강화할 수 있음
- 적정 단가가 정해지지 않음에 따라 일선 예술지원 행정에서 겪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음
- 미술작가 전시 관련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을 시작으로 다른 분야 작가 사례비 도입으로 확산 기대

추진과제 01

공정보수기준 공시제도 도입

▶ 예술 분야에서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제반 인력에 대한 적절한 대가 지불 기준을 공표하는 '공정보수기준 공시제도' 도입

- 관행과 하도급 구조에 따라 사실상 개별 예술인은 산업 내에서 자신의 활동 대가에 '교섭력'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임
- 따라서 통상적인 비교용관계 또는 실질적인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유형의 보상체계에 대해서는 개별 합의 또는 계약을 넘어서는 강제적 기준으로 기능해야 하고, 이에 대한 예외로서 일부 영역에 유예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원사업으로 본 주요 장르 단가 현황

장르	단가 내용
연극	대본창작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연출 최소 3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 출연료(단역, 회당) 최소 20만에서 100만 원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장르	단가 내용
음악	작곡 최소 30만 원에서 2,000만 원, 총예술감독 300만 원에서 2,000만 원, 연주자(솔리스트, 회당) 30만 원에서 2,000만 원
전통예술	창작대본 3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작곡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총예술감독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판소리 중 고수 50만 원에서 150만 원
무용	창작대본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예술총감독 100만 원에서 500만 원, 기술크루(작품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무용수 군무 최소 5만 원에서 20만 원
문학	문예지 제작의 경우 소설(1편) 30만 원에서 200만 원, 교정교열비(총비용) 150만 원에서 400만 원, 문학행사의 경우 강사료 35만 원에서 100만 원, 심사비 최소 30만 원에서 100만 원
시각	액자 구입비 최소 20만 원에서 150만 원, 설치인건비(1일) 10만 원에서 120만 원, 리플릿(3단 고급형) 최소 15만 원에서 60만 원, 작품운송(시내 탑차) 최소 20만 원에서 380만 원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분야 단가 조사, 2010.

- 예술사업의 특성상 총사업비에 따라서 개별 단가의 적용이 탄력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 보수기준은 적정단가의 기준으로 제시하여 사실상 최소단가의 기능을 하도록 함. 이와 함께 공공지원의 특징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높은 최고단가를 제한하기 위한 '최고단가 상한제(이를테면, 적정단가의 4배 기준)'를 적용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함
- ▶ **공정보수기준 공시 제도 논의 시 해마다 장르별 공정단가 논의 절차(일종의 기본협상 성격)를 마련해야 함²⁹⁾**
 - 보수기준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매년 초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부터 사업예산이 편성되는 8월까지 공정보수기준 설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 진행

공정보수기준 장르별 단가 기준 논의 절차 예시

2월	문화부에서 당해 연도 공정보수기준 결정에 대한 고시를 실시하고, 고시의 내용에는 9월에 차년도 공정보수기준이 공표된다는 사항이 들어감
3월	공정보수기준 협상이 필요한 사용자 또는 예술인(노동자) 측이 협상 당사자를 지목하여 협의 게시 신청을 접수함. 기본적으로는 개별 사업장별 협상은 배제하고 장르별 또는 산업 소분류별 협상대상만 진행함

29) 이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 미래비전과 전략연구』, 2017, 117쪽의 내용을 전재함.

의제5.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4월	협상 대상을 공표하는데, 민간 사용자 단체 등이 지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정부 내 또는 지방문화재단 내에서 선임한 협상단, 중앙정부(문화부, 문예위 등)가 협상 당사자로 지정되어 진행함
7월	6월 말 최저임금 결정 시기 전후로 월 최소 2회 이상의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7월 말에 잠정 합의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함. 이 결과에 대해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예술가, 산업 내 이해관계자 또는 정부 등이 의견을 청취함
8월	최종 확정 협상 당사자가 간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부가 7월 잠정합의안과 기존 단가에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고려하여 공고함

추진과제 02

예술가 사례비의 제도화

▶ 예술가 사례비의 제도화

- 대상: 공공기금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예술인
- 요건: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예술인이 공공기금 지원사업에 신청할 때 '예술가 사례비'를 일괄 책정
- 기타 제작지원금(비용)과 저작권 보상은 영역별 차등 지급 기준을 적용
- 사례비 산출 방식(예시)

개인전 작가의 보수(전업 준비 기간 1개월 기준)

- ① 작가 사례비: 1개월 최저 임금 일괄 책정(신작, 구작 여부에 관계없이 책정)
 - ② 저작권료: 구작 출품 시 대여료 계산
 - 전시 평균기간×작가 경력×전시 특수성(순회전 등)
 - ③ 신작(재설치)의 제작지원금 및 전시조성비: 전시 규모와 기관의 예산 여부에 따라 차등 책정
 - 전시예산×제작지원금 대비 비율(작가 수 반영)
 - 상한선 책정 후 실비 지급
- 작가 보수=①+②+③

- 예술가 사례비 개념의 구체화: 예술가 보수 개념을 연역적 방식으로 하위 개념으로 재분류한 후 기존 차등 적용 기준들 중에서 각 하위 개념에 가장 적합한 기준 1개만 적용하는 방식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추진과제 03

예술지원의 공정하고 다양한 심사제도 도입

- ▶ 문화예술 지원심사 공정성을 위한 심사위원 · 심사제도 개편
 - 공모지원 분야의 심사위원 전문성 강화와 심사위원 풀 확대
 - 심사제도의 경우 다면평가제도 도입과 충분한 심사시간 보장
 - 주요 사업의 경우 사업발표와 면접으로 심사할 수 있는 대상 확대
 -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방안 마련
- ▶ 문화예술 지원심사 투명성을 위한 심사공개의 원칙 확대
 - 현재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단계에서 심사 점수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 대한 촬영을 의무화 추진
 - 심사결과 공개 시에 가능한 심사정보를 지원자 모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추진
- ▶ 예술가 생애주기별 지원의 다양화 실현
 -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신진예술가, 중진예술가, 대표예술가(단체)로 성격을 분류하여 지원 정도, 지원 기간, 지원 내용 등을 차별화해서 진행
- ▶ 지원 사업 중 다년도 지원 사례들을 확대
 - 예술단체의 다년 지원과 극장과 매칭, 창작과 공간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와 배급의 확대, 안정화 등의 사례는 유럽에서 일반화됨
 - 해당 연도만 지원하는 제작 도식에서 전환해서 다년간 지원해 결과물이 실질적으로 다양화될 수 있도록 함
- ▶ 사업명 예술가(작품)의 매개 지원 도입
 -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기획자(사), 극장이 민간예술가와 함께 계획하는 사업들에 대한 지원
 - 단년 또는 다년 지원으로 창작, 배급, 판매 확대로 이어지는 시너지를 생산할 수 있음
 - 유럽의 공연장들이 프로그래밍을 위한 파트너로서 프로듀서들과 함께 기획하는 사례가 빈번, 극장들과 예술축제들과 연계하는 동력
- ▶ 사업명 연간 사업의 일회성 지원 심사를 사업 성격과 주기별로 지원 심사 상시화, 다양화
 -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창작 심사, 기획사업 심사, 배급심사, 공동사업 심사, 다년 지원 심사 등 다양화
 - 창작지원, 공간지원, 홍보-마케팅지원, 배급지원 등 한 작품을 창작하여 더 많은 시민에게 수용되기까지 과정이 중복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차단되었던 제도를 정상화

03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

○ 개념

- ▶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은 예술교육, 예술창작과 제작, 예술배급과 유통시장에 두루 걸쳐서 만연하는 상황
- ▶ 문화예술계의 불공정은 크게 보아 권력과 위계에 따른 불공정, 계약상 불공정, 보상에 대한 불공정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함
- ▶ 권력과 위계에 따른 불공정은 권력을 진 소수 상층부 예술인과 힘이 약한 예술가들 사이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 권력과 위계를 이용하여 공정하지 않은 요구와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 ▶ 계약상의 불공정은 창작활동이나 예술활동에서 갑과 을의 관계로 계약해야 할 때, 계약하지 않거나 계약하더라도 예술활동과 노동에 참여하는 을의 조건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를 말함. 갑의 권리는 많은 반면 을의 의무는 지나치게 많이 부과되는 계약관계를 말함
- ▶ 보상에 대한 불공정은 계약에 따른 을의 보상에서 저작권 권리 보호와 보상, 활동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 추진 배경

- ▶ 취지와 배경
 - 현재 문화예술계는 창작활동에 따른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매우 부족한 상황(서면계약 체결 경험 25.5%, '15년 기준). 서면계약 미체결로 불공정 피해와 분쟁 발생 시 입증 어려움. 예술계에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 가난한 예술인들의 안타까운 죽음과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음. 그동안 예술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보완해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2013, 2016)되었고, 예술인 신문고 등이 신설됨. 예술인 신문고 도입 이후 신고건수가 계속 증가 추세(2014년 91건, 2015년 95건, 2016년 150건, 2017년 165건, 2018년 1월 63건)임. 기회의 공정성, 관계의 공정성, 보상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창작환경을 조성해 예술가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예술계 현장의 창작과 활동에 필요한 재원은 대부분 국고 재원의 민간 경상보조로 마련됨.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문화재정의 상당 규모가 민간 경상보조 항목으로 집행되며, 2016년 결산 기준으로 1조 6,0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는지는 의문이 있음. 예술가들이 창작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고 불공정한 환경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함

▶ 현황과 문제점

- 서면계약과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관련 현행 법령

「예술인 복지법」

- 서면계약 의무(제4조의3)

- 표준계약서의 보급(제5조)

제4조의3(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

- ①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이하 “문화예술용역”이라 한다)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6.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 ③ 제5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5조(표준계약서의 보급)

- ① 국가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서면계약서 의무(제7조 제2항)

-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의무(제8조)

제7조(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①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1. 계약 기간·갱신·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계약 당사자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및 매체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예술인의 인성교육 및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
5. 상표권, 초상권, 콘텐츠 귀속에 관한 사항
6.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
7.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8.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에 관한 사항
9. 부속 합의에 관한 사항

③ 제8조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8조(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 또는 서로 다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사이의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표준계약서 사용 및 확산

제3조의5(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

- 표준계약서(제25조)

제25조(표준계약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콘텐츠사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및 제20조에 따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을 해결하는 현황 사례들

• 국내 유사 사례

- 서면계약 의무 규정: 근로자(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기간제법)에 따른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의무화(미작성 시 즉시 과태료 부과)
- 표준계약서 고시 제정: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표준도급계약서' ▲산업통상자원부 '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 만화·영화·게임 등 '콘텐츠분야 표준계약서'
- 전자계약 시스템 운영: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국토교통부),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A사, B사 등)

• 해외 주요 사례

- 캐나다 일부 주(州)에서 ① 주법(州法)*에 근거해 서면계약 체결 의무 부과, 서면계약 필수 포함사항

의제5.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규정, ② 표준계약 양식**, 계약 체크리스트, 계약 관련 워크숍 등 개발·보급

* 서스캐처원(Saskatchewan) 주 「예술 직업법(The Arts Professions Act)」, 퀘벡(Quebec)주 「시각 예술, 공예, 문학 분야 예술가의 직업적 지위 및 기획업자와의 계약에 대한 법」 등

** 계약서 양식 개발은 예술인 단체 주도로 함

• 국내 현황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신문고(2014~) 및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2017. 12 개소)
- 서울시 문화예술 불공정피해 상담센터(2017 신설)

• 해외 주요 사례

- 캐나다: 「예술인 지위법」에 근거하여 캐나다 산업관계위원회(Canadian Industrial Relations Board, CIRB)에서 예술 분야 불공정노동에 대한 신고접수 및 예술인과 사업자 간 조정업무 수행
- 특히 2010년 40% 초반대였던 민간경상보조 사업비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 2014년부터 50%를 상회하게 되었고 2016년에는 전체 결산액의 5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특히 기금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지출되는 경향이 큰 재원임)
- 이런 재정구조는 정부부처 중에서 농림식품부와 보건복지부 외에 가장 큰 국고보조사업 비중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의 공모나 지원사업이 중요한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의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줌
- 연도별 문화예산 중 민간 경상보조 사업비의 비중이 높은 추세

각 연도 문화예산 중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현황(단위: 백만 원, %)

구분	10년 결산	11년 결산	12년 결산	13년 결산	14년 결산	15년 결산	16년 결산
민간경상보조	802,132	788,781	909,190	1,033,610	1,339,331	1,678,972	1,683,557
세출결산(일반회계)	1,918,939	2,058,270	2,243,859	2,511,316	2,506,899	2,718,295	3,171,146
민간경상보조 비율	41.8	38.3	40.5	41.2	53.4	61.8	53.1

* 각 연도 결산서, 재구성.

▶ 기대효과

- 예술계 표준계약서 도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창작활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고 창작활동에서 불공정한 관행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 예술계에 만연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예술계의 위계와 권력관계 따른 부작용이 해결되고, 평등한 관계를 조성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공공부문에서 문화예술단가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문화예술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정립할 수 있음.
문화예술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예술복지제도와 예술지원제도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음.
적정단가가 정해지지 않음에 따라 일선 문화예술지원 행정에서 겪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음

추진과제 01

표준계약서 확대와 서면계약 의무화

- ▶ 서면계약 체결 매뉴얼 개발·보급('18년): 「예술인 복지법」상 서면계약 의무 기재사항 안내, 예술인이 계약할 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된 매뉴얼 개발·보급
- ▶ 서면계약 의무화 제도 이행 추이 정례적 점검('18년~, 매년 시행): 문체부-고용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형 문화예술기획업자 대상 서면계약 체결의무 준수 여부 등 현장 점검('18년~)
- ▶ 서면계약 미체결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 강화('19년~): 서면계약 미체결 시 제재 절차 명확화*('예술인 복지법」개정, '18년~)
 - * 현행법상 미체결 적발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서면 계약 미체결 상태의 지속에 대한 판단·시정조치 부과 등 상세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필요
 - 서면계약 미체결 신고접수 창구 마련·과태료 부과 등 제재('19년~)
- ▶ 현업·예비예술인을 위한 계약·저작권 교육 확대('18년~)
 - (현업) 저작권위원회 공동으로 상·하반기 정기 계약, 저작권 교육 및 주요 직군별(일러스트레이터, 시나리오작가·사진작가) 특화 과정 신설
 - (예비) 학교·학과별로 신청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법률가·교수 등)를 파견해 예비 예술인을 위한 계약·저작권 심화교육(3시간) 추진

추진과제 02

예술계의 불공정 관행 신고센터 역할 확대

- ▶ (가칭) '불공정행위 상설 신고·상담센터' 개소('17. 12)
 - 법률상담, 불공정행위 발생 시 구제절차 등 예술인이 상시 방문하여 법률전문가·예술현장 전문가에게 상담 가능한 신고·상담센터 마련
 - * 예술인복지재단 조사전담팀(노무사 3명, 변호사 1명)과 위촉 변호사(7명)를 통해 방문 및 예약상담 지원, 예술인 신문고 오프라인 신고접수 창구 운영

의제5.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 예술인 신문고 신고채널 확대('18년~)

- 예술분야 협회·단체를 통한 불공정 행위 신고접수 대행창구 연차별 확대('17년 6개*→ '20년 15개) 및 지역문화재단에 신고접수 창구 마련

* (연극) 한국연극협회, 서울연극협회, (뮤지컬) 한국뮤지컬협회, (영화) 영화인 신문고, (방송실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음악) 대한가수협회

▶ 예술인 신문고 신고사건 합동조사 진행('18년~)

- 예술인 신문고 신고사건 중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해당 예술 분야 협회·단체와 합동 조사 진행

추진과제 03

예술창작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와 합리화

- ▶ 문화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구축: (가칭) 문화예술생태계 공정 가치사슬에 대한 규정 마련. 다소 선언적 내용이라 하더라도 공정 환경에 대한 생태계 내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필요하다면 전체 산업군 내의 이익구조가 어떻게 분배되는지 조사·발표하는 것을 의무화함

* 문화장르별 창작(생산)-유통-소비구조 실태조사 및 창작(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가치 분배 현황에 대한 조사, 총매출액 기준 산업평가 지표 외에 창작자 권리 및 수익배분을 고려할 수 있는 지표 개발 등

- ▶ 문화예술 영역의 적정한 비용 지불 기준 공표: 공정보수기준 공시 제도 도입: 관행과 하도급 구조에 따라 사실상 개별 예술인은 산업 내에서 비용에 대한 '교섭력'이 극히 제한적인 상황임. 따라서 통상적인 비고용 관계 또는 실질적인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유형의 보상체계에 대해서는 개별 합의나 계약을 넘어서는 강제적 기준으로 기능해야 하고 이에 대한 예외로 일부 영역에 대한 유예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04 문화콘텐츠 유통과 노동 불공정 개선 법률 제정

○ 개념

- ▶ 문화콘텐츠 유통은 제작자가 만든 콘텐츠가 플랫폼 등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전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 문화콘텐츠 유통의 불공정은 제작과 유통을 특정 기업에서 겸하는 등 제작·유통과정에서 과도한 시장 지배적 지위나 콘텐츠 유통 플랫폼의 영향력 강화로 발생함
- ▶ 이러한 유통 불공정으로 유통망에서 특정 콘텐츠만 유통·소비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 제작사와 산업 종사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움
- ▶ 문화콘텐츠의 유통 불공정과 함께 노동 불공정도 심각한 상황임. 노동 불공정은 문화콘텐츠 기층 종사자들의 임금조건이 열악하고 노동시간을 포함해 산업현장의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을 말함

○ 추진 배경

- ▶ 취지와 배경
 - 문화콘텐츠산업의 규모(2005년 57조 원→2015년 100조 원으로 2배 증가)가 계속 커지면서 생산-유통-소비의 순환구조와 제작자-배급자-창작자 간의 수익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
 -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는 지난 5년간 평균 5.6%씩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연평균 4.2%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 같은 기간 OECD 국가 GDP 성장률은 3.4~3.8%로 콘텐츠 시장 성장률이 전체 경제성장률에 비해 높은 편
 - (국가별 비교) 미국 시장이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우리나라 시장 규모는 세계 7위 수준 유지

순위	국가	시장규모(백만 달러)	순위	국가	시장규모(백만 달러)
1위	미국	780(37.5%)	6위	프랑스	69(3.3%)
2위	중국	217(10.4%)	7위	한국	52(2.5%)
3위	일본	177(8.5%)	8위	캐나다	49(2.4%)
4위	독일	100(4.8%)	9위	브라질	39(1.9%)
5위	영국	97(4.7%)	10위	이탈리아	38(1.8%)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 해외콘텐츠시장 동향조사」.

의제5.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 * 위 수치는 국가별 내수 소비시장 규모만 산출한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시장통계로 산업 전체 통계와 차이가 있음
- 문화콘텐츠 산업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지만 그중에서 유통불공정은 매우 심각한 상황
- 문화콘텐츠 유통플랫폼의 막강한 영향력으로 중소 제작사와 산업 종사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움
- 문화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콘텐츠 유통과정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감 있게 성장하려면 유통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들이 개선되는 것이 과제
- 문화콘텐츠 산업의 시장 불균형 원인 중 하나는 유통 플랫폼의 과도한 영향력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
- 문화콘텐츠 분야의 기층 노동인력이 어려운 생활환경에 시달리는 실정
 - 중소 제작사 붕괴로 기업구조 양극화*, 콘텐츠 획일화 발생
- * 기업 수로는 전체의 7.8%에 불과한 매출액 10억 원 이상 기업이 전체 콘텐츠 산업매출의 86.1% 차지
- 제작기업과 제작종사자 간 고용관계에서도 저임금, 임금 체불 등 불공정 관행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논란 계속
- 방송 스태프의 76.2%가 서면계약 없이 제작에 참여. 급여 체불 경험 42.3%('17. 9). 여전한 패션업계 '열정페이'…… 브랜드 절반만 최저임금 준수('16. 12. 6, 연합뉴스)
- 문화콘텐츠 시장의 근본적인 불균형 원인은 대중의 문화적 취향인가? 유통의 불공정행위인가?
- 문화콘텐츠의 종다양성 부족과 산업생태계의 근본적 쏠림현상은 콘텐츠가 다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콘텐츠 유통(제작사, 투자사, 유통망)의 시장지배적 구조로 특정 문화콘텐츠만 유통·소비되는 것이 쉽기 때문으로 분석

▶ 현황과 문제점

- 문화산업 관련 다수 법에 공정 환경 관련 조항이 있으나 분야별 규정 수준이 상이하여 장르 간 법제도적 일관성 부족
-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 규정만 존재하고 위반에 따른 제재조항이 없어 정책목적(공정 환경 조성)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부족
 - 불공정행위가 시정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지속됨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법률	공정환경 관련 조항	비고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콘텐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일반 규정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정부 사업 제시 표준약관 등 제정 및 시행을 권고할 수 있는 정부 역할 제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없음
「콘텐츠 산업진흥법」	제24조(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텐츠 상품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일반 규정 콘텐츠산업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사업 제시 불공정행위 시 문화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 요청 가능 제25조(표준계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계약서 마련 및 사용권고 조항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 없음
장르별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보다는 음반 등의 '유통질서 확립' 등에 관한 규정만 존재 「만화산업진흥법」, 「애니메이션산업진흥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 불공정행위 금지에 관한 일반 규정만 존재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공예문화산업진흥법」 - 해당 조문 없음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 다수 존재, 표준계약서 사용 시 재정지원 우대 조항,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제재조항 존재	공정환경, 불공정행위와 관련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법도 있으나 선언적으로만 언급한 법도 있는 등 장르별 규정 수준 상이

▶ 문화콘텐츠 분야별 유통 불공정 현황

• 영화산업 분야

- 2016년 흥행영화 상위 10위 내 영화의 평균 스크린 수는 1,430개로 전체 스크린 수 2,575개의 55%로 절반 이상 차지
- 전체적으로 5대 배급사의 관점점유율은 낮아지는 추세
- 다만 여전히 5대 배급사의 영화배급 편수(2016년 기준 71편)는 전체 편수의 4%에 불과하지만, 관점점유율은 전체의 62% 비중으로 여전히 상위 배급사의 점유율이 높은 편

의제5.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 4대 배급사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과 관객점유율은 각각 77.2%, 53.1%로 높은 편
- 특히 A사의 경우 2016년 24편 배급은 전체 편수 1,692편의 1.4%에 불과하지만 A사 배급 영화의 관객 점유율이 17.2%라는 점에서 단일 배급사 점유율이 매우 높은 편임

• 음악산업 분야

- 2017년 주요 5대 연예기획사의 매출액은 총 9,586억 원(A사 3,654억 원, B사 3,499억 원, C사 1,167억 원, D사 1,022억 원, E사 244억 원)
- 2010~2013년 음반 발매된 자료에 따르면 매년 1,200여 장의 음반이 출시되지만 이 중에서 아이돌 그룹이 차지하는 비율은 5% 미만. 그러나 방송 출연비율은 순위 프로그램의 경우 80% 상회, 전체 음악프로그램(본격음악프로그램, 성인가요프로그램 포함) 중에서도 70% 상회
- 음원유통 문제에서 가격제도, 징수주체, 수익배분에서 유통시장에 절대 유리하게 진행. 창작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음
- 주요 음원 사이트를 중심으로 음원 사재기 사례들이 근절되지 않음. 2013년에 3대 연예기획사가 공동으로 다른 경쟁 연예기획사들이 소속 그룹들의 신곡 음원 차트를 올리기 위해 회사에서 음원을 사재기한다고 경찰에 수사 의뢰. 2014년 9월에 ○○소속 가수 ○○○가 자신의 트위터에 음원 사재기에 대한 문제제기(경쟁 아이돌 그룹 A, B 등 소속사의 음원 사재기 문제제기)

• 출판산업 분야

- 동네서점 거의 폐점. 대형서점 중심 판매
- 2013년 기준 7대 대형 서점 매출액 1조 6,772억(0.4% 성장), 영업이익 70억(56.5% 감소)
- 재무제표를 공시한 7대 대형 소매서점의 도서 매출은 2013년에 1조 6,7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원, 0.4% 성장에 그쳤고, 영업이익은 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억 원, 56.5% 감소. 이에 따라 2012년에 겨우 1%를 유지했던 영업이익률도 2013년에 0.4%로 낮아져 수익성이 더욱 악화
- 온라인 서점과 오프라인 서점을 모두 영위하는 우리나라 최대 서점 A사는 최근 4년 동안 처음으로 전체 매출이 감소(-3.7%)하고 영업이익이 3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0%대에 그치던 영업이익률은 -1%로 감소

• 게임산업 분야

- 게임산업의 규제로 전반적으로 시장이 위축되었지만 여전히 가장 강력한 문화콘텐츠 자본을 보유(게임산업의 경우 2015년 매출액은 10조 7,223억 원 규모, 2016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10조 8,945억 원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 수출액은 32억 7,735만 달러(전년 대비 2.0% 증가)로 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의 약 5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다만 게임산업의 경우 게임개발자(사)와 유통사 간의 불공정 계약이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저해할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려가 예상됨. 가령 첫째, 퍼블리싱 계약 시 독소조항 삽입(계약상에 명시된 출시 일정 준수 등 조항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개발사 대표의 배상 책임 조항이 계약서에 추가되는 사례 등), 둘째, 퍼블리셔의 일방적인 계약 중단(개발사가 퍼블리셔의 요청사항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 등), 셋째, 재계약 시 계약조건 변경(게임이 흥행하는 경우 재계약 시 퍼블리셔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변경)하여 계약 등이 발생할 경우 게임개발자의 권익에 침해가 발생할 것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

▶ 기대효과

- 문화콘텐츠 유통의 독점으로 콘텐츠 다양성 훼손을 유통 불공정 관련 법제화로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콘텐츠 유통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안이 장기적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과도한 영향력과 높은 이익 비율을 낮추는 과정에서 특정 플랫폼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장치 마련
- 콘텐츠 유통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사재기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건강한 유통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
- 공정한 콘텐츠 유통환경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협치 기능을 강화할 기회 마련

추진과제 01

콘텐츠시장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등 기반 마련

- ▶ 문화 분야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 추진
 - (가칭)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등
- ▶ 불공정행위 정기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실질적인 개선 유도
- ▶ ‘스크린 점유 상한제’ 도입, 스크린 독점 해소, 극장 부율제 조정 검토 등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문제 적극 대처
- ▶ 베스트셀러 사재기, 음원사재기, 콘서트티켓 예약 독점 등 콘텐츠 유통과정의 불법행위 근절안 마련

추진과제 02

콘텐츠 유통 불공정 개선과 감시 위한 제도화

- ▶ 문화콘텐츠 종다양성 확보와 유통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 문화콘텐츠 영역별로 해당 세부 분야에 다양성이 얼마나 실현되는지, 유통 불공정행위가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연례 실태조사 의무화
- ▶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역할 강화. 콘텐츠 유통 등 불공정 문제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창작자-제작사-유통사가 함께 참여하는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역할 강화

추진과제 03

콘텐츠 불법 유통과 불공정 거래 관련 관리·감독과 제재 근거 마련

- ▶ 불공정행위의 정의 및 열거 규정으로 개념 명확화
- ▶ 콘텐츠부문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정례화, 관련 자료제출·보고 의무화로 관리
- ▶ 정부사업 시 표준계약서 사용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 ▶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대외공지, 벌칙(과태료), 재정지원 중단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유관기관의 협력 규제가 가능하도록 함
- ▶ 표준보수·보수에 대한 책임, 근로계약 명시, 표준계약서 사용 등 콘텐츠 분야 근로자,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추진과제 04

공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 근거 마련

- ▶ 콘텐츠 공정상생협의체(라운드 테이블) 설치, 공정상생센터 운영* 근거명시
 - * 주기적 실태조사, 신문고 기능, 법률 상담 서비스 등 제공
 - (조정·중재 강화) 중재기능을 도입해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 * 중재는 제3자가 '중재안'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정기능보다 분쟁해결에 적극적

05

국공립 문화기반시설 운영혁신과 민간 예술단체 창작 다양성 실현

○ 개념

- ▶ 국공립 문화기반시설은 중앙정부가 소유하는 예술의전당이나 국립극장, 국립극단을 포함해 광역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세종문화회관, 지역 문화전당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문예회관, 문화원 등으로 구분
- ▶ 공연예술 분야의 국공립단체들은 소속 단원이 있는 경우 대부분 자체 기획제작 중심으로 운영
- ▶ 소속단원이 없는 문예회관의 경우 주로 기획초청공연이나 대관공연 중심으로 운영
- ▶ 민간예술단체는 극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안정적인 제작공간을 확보하여 기량을 높일 기회 부족
- ▶ 공공재원을 사용하는 국공립 문화기반시설과 그렇지 못한 민간의 공연예술 창작단체가 분리되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

○ 추진 배경

- ▶ 취지와 배경
 - 중앙정부의 계획으로 설립된 전국 200개 이상 공공문화기반시설(문예회관)의 가동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민간예술단체 대관에 의존해 정상적인 예술생태계의 기반 역할을 못함. 아울러 민간예술단체와 제작 여건 차이가 크고, 협업은 미약하여 창작다양성을 위축시키는 현상이 유지됨
 - 공공극장을 매개로 한 예술시장의 환류체계로 예술시장의 활성화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술가(단체)/작품-공공공연장/제작 또는 구매(1차 시장)→공연/관객의 구매(2차 시장)→배급/투어공연(공연장구매/관객구매)(3차 시장)으로 이어지는 예술가(단체) 창작 기반의 공연예술 생태계 선순환/환류 기반으로 재조성

▶ 현황과 문제점

- 2015년 현재 문예회관연합회 회원사 총 232개(공연장 수 362개) 전국에 설립 · 운영
- 총 362개 공연장에서 공연한 건수는 총 17,431건(평균 48.2건)으로 총 24,686일(평균 68.2일) 공연일수 동안 총 36,604회(평균 101.1회) 공연을 했음. 문예회관이 기획한 공연 건수는 총 4,542건(극장당 평균 12.5건)을 7,927일(평균 21.9일)간 9,626회(평균 26.6회) 공연했음
※ 대관료 면제의 단순 기획공연 포함(예술경영지원센터 간행 「공연예술 실태조사」와 한국문예회관 연합회 간행 「2015년 문예회관 운영현황 조사」 참고)
- 문예회관이 직접 기획하여 민간예술단체와 공동으로 제작하고 나아가 문예회관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제작 · 기획하여 유통을 활성화함. 공공예술기반시설은 자체 제작 사업과 대관 중심이 아니라 공동제작 · 구매 · 유통이 중심이 되어야 함

▶ 기대효과

- 공공문화기반시설이 보유한 제작 환경을 민간과 함께 협력하여 기반시설과 공연콘텐츠가 함께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지역의 공공문화기반시설을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극장 공실률을 줄이고 지역의 공공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음
- 기획-제작 능력을 향상시켜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작품이 관객들과 많이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중앙집권적 공연예술 콘텐츠가 지역 특성에 맞게 고유한 콘텐츠로 확산되어 공연예술 기획-제작의 분권화를 이룰 수 있음

추진과제 01

공공극장 운영에서 지역의 민간단체와 공동 제작지원 중심으로 재편

- ▶ 공공극장의 미션의 혁신. 산하단체 공연이나 자체 제작 중심에서 상주단체 및 민간단체 공연의 공동제작 · 구매 중심으로 변화
- ▶ 민관의 공동 거버넌스 형태로 전환
- ▶ 공공극장 네트워크 내에서 공동제작 · 공동구매 · 공동배급 활성화
- ▶ 재원의 효용성도 극대화
* 프랑스, 영국 등 공공극장의 기반이 민간예술가(단체)의 주 활동무대가 된 사례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추진과제 02

문예회관을 대관 중심에서 기획 중심으로 운영

- ▶ 지역 및 전국의 민간예술단체의 활동과 계획 파악. 각 공공극장과 맞는 사업 개발, 프로그래밍하는 문예회관
-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성격별로 통합하여 사업이 개발된 공공극장 우선으로 자원 투입, 시범적 실행

추진과제 03

문예회관연합회의 네트워크를 공동제작·공동배급의 네트워크로 성격 전환

- ▶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서 개발된 사업을 공동제작과 공동배급 파트너십으로 나누어 연대하여 진행
- ▶ 민간예술단체의 하나의 계획에 여러 공공극장이 참여하여 공동제작·공동배급함으로써 작품의 생명이 길어지고 수용의 폭이 넓어지게 함

추진과제 04

공연예술 민간기획사의 매개 역할 강화

- ▶ 민간 기획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 창작사업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공공극장의 파트너로서 콘텐츠 및 사업 개발의 한 축 담당. 민간예술단체-기획자(사)-공공극장(들)-관객-시설극장 등으로 환류되는 축을 구성
- ▶ 극장 기획+민간 기획→민관(하나 또는 여럿) 공동제작→공동배급→수용 확대→민간사업으로 장기화

06 / 공정하고 다양한 스포츠 문화 조성

○ 개념

- ▶ 스포츠에서 공정성 문제는 문화예술계 지원 제도의 공정성만큼 중요한 과제. 스포츠 공정성은 선수선발의 공정성, 심판판정의 공정성, 스포츠 교육의 공정성으로 세분화할 수 있음
- ▶ 선수선발의 공정성은 올림픽, 월드컵, 세계선수권대회, 전국체전 등 각종 스포츠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대표로 선발하는 과정에서 공정하게 선발해야 하는 것을 의미
- ▶ 심판판정의 공정성은 경기 중 심판이 특정한 팀에 유리하도록 판정하지 않고, 자신의 권한과 전문성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판정하는 것을 의미
- ▶ 스포츠 교육의 공정성은 특정한 교육기관에 특정한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입시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선수들이 공정하게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학원 스포츠 안에서 선수들이 폭력과 선발 불이익에 노출되지 않도록 입학과 교육과정에 공정한 규칙과 규율을 만드는 것을 의미
- ▶ 스포츠의 다양성은 공급의 다양성과 향유의 다양성으로 구분할 수 있음. 공급의 다양성은 특정한 스포츠 인기종목만 아니라 비인기종목까지 다양하게 육성하는 것을 의미함. 향유의 다양성은 국민들이 축구, 농구, 야구, 배구 외에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클럽을 즐길 수 있는 것을 의미

○ 추진 배경

- ▶ 취지와 배경
 - 선수 선발과 관련된 공정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임. 국가대표선발전이나 경기 주전 선발에서 특정 대학 출신이나 선후배 사이의 관계로 공정하지 않게 선발되는 사례들에 대한 선수들의 항의가 있었음
 - 체육특기생들이 진학할 때 유망주 선수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같은 학교 소속 선수들을 함께 입학시키거나, 반대로 실력이 안 되는 학생들이 선수선발권이 있는 학교의 코치진과 담합해 입학하는 비리 사례들이 줄곧 있어 왔음
 - 선수들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코치와 선수, 선배와 후배 사이에 폭력사건이 발생하여 선수들의 인권이 유린되는 경우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상황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체육인이 존경받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스포츠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과 페어플레이가 강조되는 건강한 스포츠 문화 정착 필요
- 전문선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생선수에게 교육받을 권리,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전문선수로 육성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함

▶ 현황과 문제점

- 입시비리, 파벌, 심판매수, 약물복용, 폭력 등 공정성 훼손 및 선수자원 고갈에 대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의 정비 필요
예) 체육특기생 입시비리 ○○대 교수 체포(2017. 9), 축구특기생 입시비리 사건으로 중·고교·대학 감독과 심판·학부모 기소(2013. 7), ◇◇대 야구부 양모 감독, △△대 야구부 모 감독 입시비리 금품 수수로 긴급체포(2012. 12)
- 문체부는 모 대학 부정입학 사건을 계기로 체육특기자 대입전형 비리가 발각될 경우 선수와 지도자 모두 영구 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대책안 발표(2016. 12)
- 저출산으로 인한 선수자원 고갈, 선수 양성체계 연계성 부족* 및 체육계 공정성 훼손으로 엘리트체육의 개혁 필요성 제기
* '17년 기준, 국대 786명 대상 꿈나무 출신 12.7%, 청소년 15%, 후보 75.2%
- 스포츠 공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스포츠 공정·인권 등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기관 설치, 체육특기자 제도 개혁 등 추진이 필요
- 선수 육성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환경 조성, 체계적·과학적 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국가대표 육성 체계 개편이 필요

▶ 기대효과

- 체육계의 부조리를 해소하고 건강한 스포츠문화로 스포츠 가치 확산
- 국제 스포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전문 체육 시스템 마련

추진과제 01

(가칭)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운영

-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또는 가칭 스포츠윤리센터 설립법을 제정해 독립기관화 추진

- ▶ (역할과 기능) 스포츠 공정과 인권 업무, 적폐 척결과 분쟁 조정

추진과제 02

체육특기자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공론화 추진

- ▶ 체육특기자제도 입시비리를 개혁하기 위한 비상설기구로 운영하여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려고 (가칭) ‘체육특기자제도 공론화위원회’ 설립
- ▶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론조사, 시민참여단, 현장 청책(선수, 학부모, 지도자 직접 참여), 전문가 토론, 공청회 개최 등 민주적 절차를 거쳐 대안 제시
 - * 폐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시 현재 초등학교 3학년 대상 10년간 유예기간 선정, 점진적 폐지, 기초·비인기종목 붕괴 우려, 대안으로 체중-체고-체대의 전략적 운영, 스포츠클럽에서 전문선수 체계적 육성 등 쟁점에 대한 지속적 대안 마련

추진과제 03

스포츠 공정 인식 개선과 정착

- ▶ 전국규모대회 개최 시 가맹단체, 선수, 지도자, 심판, 학부모 대상으로 스포츠공정 지속적 홍보 강화
 - *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서 전국체전·소년체전 때 스포츠인권·공정에 대한 홍보활동
- ▶ 스포츠 가치의 핵심인 페어플레이(Fair Play), 존중(Respect) 캠페인 활성화
 - * 영국/유럽/일본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존중(Respect) 캠페인을 실시해 선수, 지도자, 심판, 서포터스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 정착에 큰 기여. 예술 분야에서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제반 인력에 대한 적정한 대가 지불 기준을 공표하는 ‘공정보수기준 공시제도’ 도입

07 출판의 다양성 실현

○ 개념

- 출판은 문자와 이미지로 지식과 정보를 생산·축적·전수하여 문화를 형성하는 원천 콘텐츠산업으로서 여타의 다양한 콘텐츠산업을 뒷받침하는 기간산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성격을 지님
- 인간 지식의 전파와 전수는 기본적으로 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좋은 책이 얼마나 다양하게 많이 출간되느냐는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인권과 민주주의 성숙도를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는 점에서 출판 미디어의 다양성 실현은 민주주의와 지식문화사회의 근간이 됨
- 출판의 다양성 실현은 무엇보다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어 있음. 출판사들이 출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출판물을 자유롭게 출간하는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사회 곳곳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일이 가능함
- 출판의 다양성은 출판사들이 책을 계속 만들겠다는 의욕을 가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구조에서만 실현될 수 있음. 출판사들이 노력한 만큼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책을 계속 출간하려는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출판에서 다양성 실현은 부가가치 창출만이 아니라 문제해결 능력으로서 창의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중요. 종다양성과 함께 창의성이 넘치는 출판문화산업생태계를 구축하려면 출판의 자유와 지속가능한 산업구조가 법·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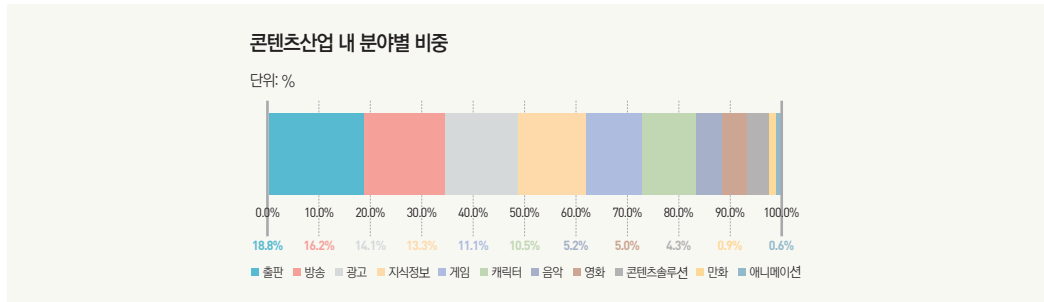
○ 추진 배경

▶ 취지와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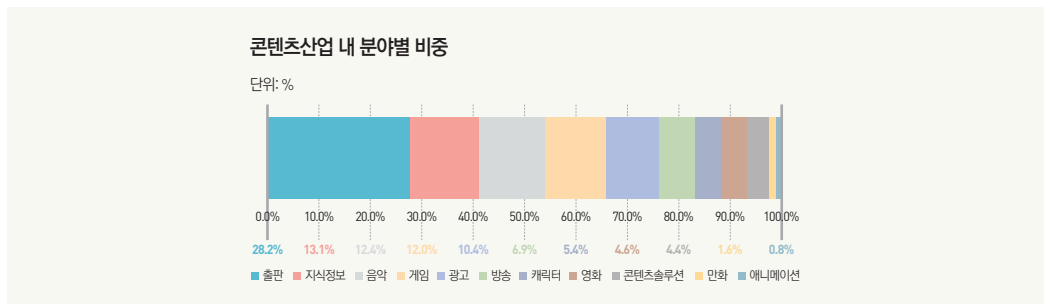
- 출판산업은 여타 콘텐츠산업에 문자와 이미지를 제공하는 원천 콘텐츠산업으로서 매출 규모,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에서 다양성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의제5.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2017년 콘텐츠산업 매출 성과



2017년 4분기 콘텐츠산업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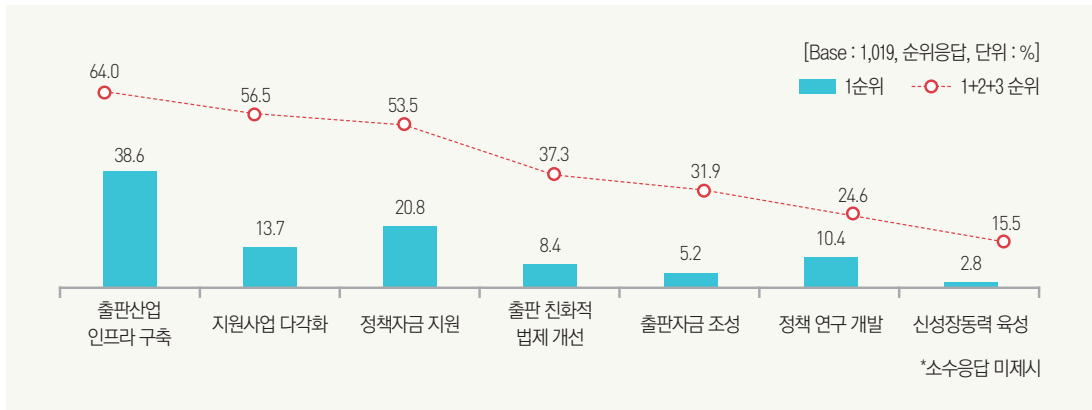


※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년 4분기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 2016년 말 기준 출판사 수는 5만 3,574개이며, 발행 실적이 있는 출판사 수는 7,209개사로 전년 대비 12.4%(795개사) 증가하였으며, 2017년 상반기 신간도서는 4만 2,922종, 월평균 7,154종으로 2016년 상반기 대비 11.4%(4,386종) 증가함. 이러한 수치는 생산, 판매, 소비지수 모두가 감소한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불황 속에서도 출판 생산 활동의 왕성함을 보여 주는 것임(「2017년 상반기 KPIPA 출판산업 동향」)
- 출판산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안정된 산업으로서 고용효과가 높으며, 중등교육과 대학교육, 공공도서관, 각종 독서운동,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대형서점과 중소서점, 인쇄업 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전후방 연관효과도 큰 산업임
- 이와 같은 출판의 문화적 가치, 경제적 가치, 다른 문화산업과 높은 연관효과에도 출판산업은 국가적 관심과 지원에서 줄곧 소외되어 왔음. 특히, 2000년대 이후 출판산업은 '사양산업'으로 취급되며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 만화, 게임산업 등이 받은 관심과 지원과는 비교할 수 없이 소홀한 정책적 혜택을 받아 왔음
- 「2017 출판산업 실태조사」에서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출판산업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인프라 구축이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원사업 다각화 56.5%, 정책자금 지원 53.5%, 출판친화적 법제 개선 37.3%, 출판자금 조성 31.9% 순으로 나타났음



※ 출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7 출판산업실태조사(2016년 기준)」, 출판산업체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

- 출판 미디어의 다양성을 실현하려면 출판의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에 대한 국가적 철학과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출판산업 현장의 요구를 담은 자생력 있는 출판문화산업생태계를 설계하는 정책 혁신이 필요

▶ 현황과 문제점

- 출판산업에는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사업체들이 공존하는 만큼 상생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 출판문화산업생태계의 종다양성과 상생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산업구조를 꼽을 수 있음
- 2017. 1. 출판도매업계 2위인 송인서적 부도는 어음 결제 관행 탈피, 전근대적 유통 구조 개편, 출판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등 출판유통 '선진화' 구축의 과제를 남겼음 · 2014. 11. 21. 도서정가제 강화는 중소서점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소형 출판사나 신생 출판사에 대해 일부 인터넷서점은 여전히 낮은 공급률을 요구하며 중소서점업계에서도 공급률 인하와 온·오프라인 소매상 공급률 표준화를 요구하는 등 출판사와 서점 간 공급률 문제가 민감한 과제로 남아 있음
- 도서정가제가 강화되었음에도 편법 할인이 성행한다는 것 또한 문제. 현행 도서정가제는 정가의 15% 직간접 할인율을 허용하고, 최고 40%의 제3자(카드사) 카드 할인, 사실상 반값 할인인 인터넷 서점의 '바이백'(발행 후 6개월 이상 도서로 제한) 및 신간 판매량의 구조적 축소(신간의 중고도서 시장

의제5.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판매량 확대), 각종 쿠폰 발급에 따른 우회 할인, 전자책 할인용 편법인 '10년 대여'까지 허용함(『2017 한국출판연감』)

- 출판정책의 혁신과 출판예산의 증액 필요
- 출판정책은 공공영역의 과제와 민간영역의 과제를 구분하여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혁신되어야 함. 특히, 민간영역의 사업은 민간으로 이전하여 자생력 있는 출판문화산업생태계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종도서 선정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 필요
- 세종도서 선정지원 사업의 경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에서 출판의 자유와 다양성의 가치 확산을 위해 민간위탁의 사업방식을 권고한바 있음
- 도서의 우수성을 심의하는 사업을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것 자체가 검열 문제를 낳으며, 상위 행정기관이나 권력기관의 부당한 개입이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민간참여 (가칭) '세종도서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문화민주주의(공공성과 개방성)의 원리가 보장되는 절차와 운영방식으로 민간협치 확립
- 2018년 출판예산은 문화재정의 0.8%에 불과함. 출판산업의 문화적·경제적 가치, 타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매우 적은 규모

▶ 기대효과

- 출판유통 환경을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출판유통문화 확립,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우수출판 인프라 구축, 출판 혁신성장 동력 확충, 출판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출판문화의 새로운 발전 견인
- 책과 출판에 대한 국가 철학 마련, 예산 증액으로 다양한 콘텐츠의 창작·생산·전파·유통·접근·향유를 지원함으로써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상승효과를 일으키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

추진과제 01

출판유통 통합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민간 참여 모델 마련

- ▶ 저자-출판계-유통계-소비자가 상생·균형 발전하는 건강한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출판유통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해 출판유통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판물의 ISBN 기반 서지정보 중심의 생산·유통·판매정보를 수집·관리·분석·서비스할 수 있는 출판유통정보 통합 전산망 구축 필요성 대두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출판사 발행도서 또는 유통사(물류사, 대형·온라인서점, 지역서점) 입고도서의 서지정보와 판매·재고 정보를 통합하는 메인(내부) 시스템과 도서정보(ISBN 기반 메타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실시간 업데이트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 통합(서지정보통합시스템)
 - * 전자책유통협업시스템, 재정가공표시스템, 출판유통정보시스템
- 내부(메인)시스템과 서지정보통합시스템, 외부시스템(SCM(대형서점, 도매상),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국립중앙도서관), 서점ON(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연계·구축
- ▶ 출판유통을 선진화하기 위한 통합적인 유통 시스템 마련과 관련하여 공공성 확보와 민간의 적극적 참여로 출판유통 시스템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살릴 수 있는 합리적 모델 필요
- 출판유통 통합 시스템 운영에서 공공성의 필요성: 출판유통 통합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17년) 및 동 시스템 구축 추진단 구성·운영('18. 2~) 중 출판유통계 의견수렴 결과 유통계(도매업계, 서점계)는 정보의 수집·관리의 공공성을 요구함
 - 유통통합 시스템 구축·운영 중 기관·단체와 출판·유통계 간 이견을 조정·중재하기 위해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 필요
 - * '01년 '출판유통현대화 사업'은 출판유통계 상호 불신과 출판계 재원 미확보로 실패
 - ISBN 발행 및 출판유통 통합 시스템을 민간에서 운영하는(수익 추구) 해외사례 : 민간이 관련 시스템 구축에 전액을 투자(영국, 미국 등)/국고가 투입된 경우 공적 단체에서 운영함(북넷 캐나다)
 - 우리나라의 경우 출판유통 통합 시스템 연계·통합 대상 관련 시스템*도 대형유통사의 SCM(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공공기관·단체에서 운영함
 - *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납본관리시스템(이상 국립중앙도서관), 개방형전자책유통협업시스템, 간행물재정가공표시스템, 지역서점 포털: 서점ON(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유통정보시스템
- 출판유통 통합 시스템 민간 참여의 필요성
 - 현재 출판유통 통합 시스템 구축·운영·서비스 등 사업 전반을 위한 민관협의체인 '출판유통협의회'(추진사업단, 실무추진단)가 운영 중이나 출판유통 통합 시스템의 성패는 정보의 집적과 그 정보의 투명한 제공·활용을 가능케 하는 운영주체의 주도권에 달려 있음
 - 출판유통 통합 시스템은 출판 유통계가 참여하여 생산·판매정보를 제공할 때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음. 출판업계와 서점·유통업계 전체가 참여하여 정확하고 투명한 도서정보와 유통정보가 시스템에서 통합되고, 소비자들에게 도서정보를 쉽게 노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출판산업 매출이 증가하는 등 출판문화산업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때 출판유통 통합 시스템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의제5.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해외 유사 시스템 비교 분석

항목	캐나다 BookNetCanada	독일 MVB	일본 JRO	프랑스 CLIL
운영기관	출판협회와 서점협회 주도로 설립된 비영리기구 (non-for-profit)	출판서점협회 산하 마케팅과 도서유통 전문 서비스 영리기업	출판협회, 잡지협회 포함 출판 관련 5개 단체연합기구 산하 사단법인	출판유통 선진화를 위한 전문가 협력위원회 (출판인, 유통인, 서점인 각 11명)
추진사업	① 출판유통 선진화사업 ② 표준화 및 인증사업 ③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① 출판유통 선진화사업 ② 표준화 및 인증사업 ③ 브라질 진출	① 출판유통 선진화사업 ② 표준화 및 인증사업 ③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① 도서총목록, 전자책총목록 구축 ② 표준화 및 인증사업
서비스	① 비블리오세어 ② 세일즈데이터 ③ 카탈리스트	① 파우엘비 ② 베스트셀러 통계 서비스 ③ 파우엘비틱스	JPRO-도서정보 등록, 출판권등록, 판매촉진정보 등록	① 딜리콤 ② 허브 딜리콤
도서정보 (메타데이터) 등록료	ONIX파일 전송 시 무료, 웹폼 이용 시 레코드 10개당 50달러	출간된 시간 1~3년 도서정보 품질 금메달 27달러, 동메달 51달러	종이책 1,000엔, 전자책 500엔	회원사는 대부분 유통사, 수입의 2/3 유통사, 1/3 서점
도서정보 등록건수	약 270만 건	약 210만 건	약 120만 건	약 140만 건
도서정보 품질관리	유효성(validation) 검증	유효성(validation) 검증 등급심사, 등록수수료 차등적용	유효성(validation) 검증 등록대행 서비스 제공(신청 출판사 대상)	전자주문을 위한 서비스로 출판사가 도서기획 단계부터 도서정보를 관리함
도서정보 배포	웹서비스(표지이미지, 워드프레스플러그인, 소피파이플러그인 등) 카탈리스트의 도서정보 반출 및 제공 기능, 세일즈데이터 연계	도서정가의 공시, 파우엘비틱스의 각종 프리미엄기능(언론인, 블로거, 독자, 판매에이전트 등에게 배포)	도서 출간 전 사전정보(근간정보)의 배포, 출판권 정보의 일반인 공개, 판매촉진정보를 활용해 도서 마케팅 기능, 판매촉진정보의 배포	서점과 유통사의 전자 방식의 주문(ED)을 위한 도서정보 제공, 전자책의 판매와 전자거래 서비스
이용방법	유형별 회원가입 후 회원제 서비스	유형별 회원가입 후 회원제 서비스	유형별 회원가입 후 회원제 서비스	유형별 회원가입 후 회원제 서비스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추진과제 02

도서정가제의 보완과 정착, 공정한 출판생태계 조성

- ▶ 도서정가제를 보완해 정착시키려면 2018년 3월 출판계가 발표한 '건전한 출판·유통 발전을 위한 자율협약'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책이 문화적 가치로 경쟁하고 독자가 적정 가격에 새로운 양서를 꾸준히 접할 수 있도록 출판계의 자발적 노력 독려
 - * 자율협약의 주요 내용: ① 공정하고 투명한 베스트셀러 집계·발표, ② 도서정가제 보완, ③ 작가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중고도서 판매·중개와 전자책 대여 기간 조정, ④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출판계의 자정 노력 강화
- ▶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출판 분야의 근로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계 부처 협의로 개선 방안 마련
- ▶ 출판사와 서점 간 공급률 문제는 협의체를 통해 유통채널별·서점별·출판사별·도서 분야별 공급률 차이를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과제 03

출판산업생태계를 위한 정책 마련

- ▶ 민간에서 구성한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의 저작권법 개정 노력이 결실을 맺으려면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
- ▶ '공공대출권', '사적복제보상금'제도 등 출판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창작자와 출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정책 도입 검토
- ▶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자와 출판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양한 형태의 위법한 복제·전송·배포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민관협의체는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연구로 대응
- ▶ 저작권 관련 위원회와 공공기구들을 현재의 산업 현실과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개편

추진과제 04

출판정책의 재정 기반 확대와 출판 혁신성장 동력 확충

- ▶ 출판예산의 증액, 출판기금 조성, 출판펀드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건전한 출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재원 마련

의제5.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 출판펀드를 조성해 중소 출판사에 대한 금융 투자 확대
-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의 출판기금 발전적 확대
- 출판예산을 통한 우수 출판콘텐츠 육성 지원 인프라 구축
- ▶ 전자책, 오디오북, 웹소설 등 출판 콘텐츠를 본질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출판시장을 육성하고 혁신 성장 지원
- 멀티미디어형 전자책 제작 지원
- 4차 산업혁명과 출판 콘텐츠의 융·복합을 위한 북테크 개발 지원
- 오디오북 제작 인프라 구축, 오디오북 체험 지원을 통한 수요 창출
- 다양한 출판 비즈니스 모델 소개
- 출판 콘텐츠 IP를 활용한 OSMU* 등 고부가가치 창출 지원

*One source multi-use : 하나의 자원을 토대로 다양한 사용처를 개발

추진과제 0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

-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구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핵심사업에 집중
- 공공성이 요구되는 출판 인프라 구축·운영
- 출판·유통의 다양성 확보
- 출판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 간 이해 조정
- 민간이 직접 하기 어려운 실험적 분야, 장기적 관점의 인력 양성
- 책 읽는 문화 조성
- 출판 국제교류 전략 수립·네트워크(플랫폼) 구축·제공
- ▶ 문화예술·콘텐츠 등 다양한 문화기관과 상시적 협업 네트워크 구축
- ▶ 출판·유통 등 출판 생태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 민주적 운영 지속
- ▶ 공공재정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전·사후평가, 환류절차 강화·선정 과정 개선

추진과제 06

출판의 다양성 확보

- ▶ 1인 출판, 독립출판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양질의 출판물을 발간할 수 있도록 컨설팅, POD(Print On Demand) 장비 대여 등 종합적 지원 서비스 제공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 독립서점이 큐레이션, 문화행사 개최 등으로 지역 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서점 간 네트워킹 강화, 지역서점 통합전산망 연계 구축, 문화활동 지원, 지역서점 지원 조례 확산, 서점 창업 지원 등 추진

08 관광산업의 공정 상생을 위한 지원

○ 개념

-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 관광산업의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저가경쟁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 및 최근 글로벌 예약기업(OTA)의 영향력 확대 속에 중소기업체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관광상품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적절한 규제와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요구됨
- 관광산업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관광 서비스의 질 향상
- 관광산업의 급속한 성장에도 저임금·감정노동·비정규직 문제 등 관광산업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향상되지 못함. 제도적·정책적 지원으로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수 인력 확보, 관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함

○ 추진 배경

- ▶ 취지와 배경
- 관광산업의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글로벌 OTA의 영향력 확대
-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국내 관광산업 현실에서 저가 패키지상품으로 대표되는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글로벌 OTA의 시장지배력 강화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심화함. 관광산업 생태계의

불공정성을 개선하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면 정책적 개입이 요구됨

- 관광산업 종사자의 열악한 고용환경과 감정노동 스트레스
- 호텔 종사자·여행가이드 등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관광산업 종사자들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객과 직접 대면에서 발생하는 감정노동으로 어려움을 겪음. 이것이 관광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요구됨

▶ 현황과 문제점

- 관광산업에서 갑을관계로 여행상품의 질적 저하
- 항공사-여행사, 도매여행사-소매여행사, 송객여행사-현지여행사(랜드사) 등 유통구조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저가상품, 덤핑경쟁, 송객보증금 요구, 쇼핑수수료 등의 후진적 관행은 옵션과 쇼핑 강요, 불친절, 바가지요금 등을 야기하여 관광상품의 질 저하와 관광객의 불만족으로 이어짐
- 최근 관광산업은 독과점 형태로 시장을 장악한 글로벌 OTA의 영향력이 증가함으로써 과도한 예약수수료와 우월적 시장지배로 중소형 숙박업은 어려움을 호소함. 또한 글로벌 OTA의 상업적 목적으로 특정 숙박업소나 관광 목적지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관광의 다양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존재함
- 감정노동의 노동가치 인정 등 관광산업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
- 관광산업 종사자들은 높은 노동강도와 비정규직 중심의 채용, 열악한 근무환경, 사회적 저평가 등으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관광 서비스의 질적 수준 하락으로 이어짐
- 호텔종사자, 여행가이드, 면세점 판매원, 카지노 딜러 등 관광산업의 각 영역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고객(관광객)들을 직접 상대하는 대표적 감정노동자로서 폭언, 폭력, 성희롱, 반복 민원, 환불 요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감정노동에 스트레스를 호소함

▶ 기대효과

- 건강한 관광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고부가가치 관광 경험 제공
- 관광산업의 유통구조 각 단계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후진적 관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을 실시하면 저가 위주의 가격경쟁이 아닌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한류, 웰니스, 의료, MICE 등 다양한 테마를 담은 명품 관광상품을 개발해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기대됨
- 질 좋은 관광산업 일자리를 창출해 관광 서비스 향상
- 관광산업은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산업으로 관광산업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감정노동에 대한 처우 개선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우수한 인재들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관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음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추진과제 01

관광산업 생태계에 대한 통합적 조사 분석

- ▶ 관광상품의 생성·유통·소비 전 영역에 걸친 관광산업 생태계 현황을 파악
- ▶ 빅데이터 분석, 인터뷰 조사, 설문조사 등 정성적·정량적 연구방법을 활용해 영향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
- ▶ 조사 분석의 주요 범위: 관광산업 내 갑을관계와 갈등구조, 관광산업 종사자 근로여건과 감정노동 현황 분석, 감정노동 정책사례 분석, 글로벌 OTA 관련 사례 분석 등

추진과제 02

관광산업의 상생 생태계를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

- ▶ 관광 분야 거래주체 간 공정성을 보장하고 '공정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마련. 기업-소비자 간 공정거래질서뿐만 아니라 기업-기업 간 공정거래질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정책개발
- ▶ 사업 예시: 국내·국외여행 표준약관 개선, 여행상품 가격 투명화, 불공정관광 신고센터 운영, 가이드 표준수당제, 공정관광 상품 발굴·인증 등

추진과제 03

관광산업 종사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

- ▶ 관광산업 종사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직종별 표준계약서·분쟁조정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정규직 전환 확대 및 용역근로자 처우개선, 사회보험 적용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체불 노동자 생계보호 등을 위한 제도 마련
- ▶ 관광산업 종사자의 감정노동을 관리하기 위해 감정노동 현황에 대한 평가·관리·교육·해소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수 있으며, 가이드라인 또는 매뉴얼의 제작·보급, 심리상담소 설치, 산재인정 범위 확대, 직무 재설계로 업무 공간과 시간 조정 등의 제도 마련

의제6 지역 문화분권 실현

“문화분권은 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고유한 문화 양식을 보호·확산하며, 지역 시민들의 문화향수와 문화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문화정책이다”

-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고(복지), 사람다움(교육)을 가꾸며, 사람답게(문화)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 인간의 품위와 생명의 존엄은 모든 가치 중의 가치이며 개인의 문화 권리와 공동체의 문화 활동으로 구현
- 「문화기본법」 제2조에서는 ‘문화의 가치가 교육, 환경, 인권, 복지, 정치, 경제, 여가 등 우리 사회 영역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다하며, 개인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문화의 기본이념으로 채택
- 개인으로서 시민은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의미를 생산하고 가치를 표현하는 주체. 이는 어디서 살더라도 지켜져야 할 개인의 기본 권리이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지역사회가 개인들의 다양성으로 활력이 넘쳐나고 개인과 공동체가 일하며 꿈을 키우는 공간이자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지역문화정책은 시민의 문화적 권리와 문화의 사회적 가치를 지역과 생활이라는 장소와 공간에서 실현해야 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할과 기능을 나누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권력과 권한, 자원을 분권화해야 함
- 지역분권과 자치관점에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타 부처와 협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함
- 지역문화정책은 민이 주도하고 관이 보완하는 협치로 실현 가능함. 형식적인 자문 방식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문화적 욕구를 해결하도록 주민 주도로 협치를 제도화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분권과 협치로 지역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시대를 열어야 함
- 문화분권을 차별화하기 위해 지역문화자산의 고유성과 문화적 향유의 보편성을 구현하고, 이를 실행할 문화 전문인력의 확보, 지원기구 및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필요함

대 표 과 제

1. 지역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 조성
 2. 지역문화의 고유성 유지·발전
 3. 지역문화 거점기관 운영 혁신과 지원체계 마련
 4. 문화 협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
 6.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

01 지역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 조성

○ 개념

- ▶ 문화권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문화기본법」 제4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문화기본법」 제5조 2항)
-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며(「문화기본법」 제5조 1항),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지방자치의 본질은 각 지역이 스스로의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펼치는 데 있음. 그러므로 중앙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고, 지역의 환경에 따라 살림을 꾸릴 수 있는 형편이 다름으로써 나타나는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함
- ▶ 생활문화는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가리킴(「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2항)

○ 추진 배경

- ▶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주적인 재정운영과 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으며 문화 분야도 이와 다르지 않음.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은 일상 속의 문화권리를 확보해 문화민주주의의 실현과 개인, 지역, 국가 간 문화적 다양성의 보호 그리고 참여에 기반한 지역 시민자치 구현과 관련되어 있어 문화자치가 지방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중앙주도 문화재정 운영은 공정성·투명성·효율성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도 전체 예산 중 문화예산의 비율이 상당히 낮고, 문화를 도구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팽배해 있어 단체장 임기에 맞추어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과 과시성(문화시설이나 건물 건립 등),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선심성(축제나 대형 이벤트, 행사 등) 사업에 문화예산을 집중하는 상황임. 즉,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대가 곧 문화 분야의 재정 확충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역문화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지역문화 재원을 확충해 지역에서 필요한 문화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제고하여 문화자치의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음. 지역 간 문화재정의 격차에 따라 문화향유 격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 균형 발전 사업에 집중하여 모든 사람의 문화권을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함
- ▶ 분권에 따라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지역문화의 공급과 수요 부문이 결합된 지역문화자치지수를 개발하여 지역문화 여건 진단에 따른 맞춤형 지역문화지원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최근 일련의 사회변화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긴 결과이며 그 해법 또한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산업화 시대에 유효했던 중앙집권적 체제로는 현재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다원적인 사회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드러남
 - 지역 중심의 사고로 전환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높이고 분권이 실질적인 자원 분산으로 이어지게 하는 정책이 필요함
- ▶ 마을문화는 자발적인 참여로 새로운 변화의 촉매제임
 - 마을은 대면적 관계가 일어나고 일상의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단위로, 마을 문화활동을 매개로 폐쇄적인 공동체, 파괴된 공동체를 새롭게 구축 또는 회복할 가능성이 있음
 - 마을합창단, 마을풍물단, 마을축제, 마을오케스트라 등 마을문화를 활성화해 마을 혁신을 도모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뉴딜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역에 남아 법인을 설립하고 지역 주민과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며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성북신나협동조합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예술, 교육,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청년단체 유입과 각 단체 재능을 활용한 마을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 풀뿌리 문화에 기반해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문화민주주의를 정착할 수 있음
 - 지방자치의 원리는 행정단위를 시군구에서 읍면동 또는 아파트 등 공동체 마을단위로 좁혀 나가는 것에서 시작함
 - 마을이야말로 쓰레기, 주차, 방과 후 돌봄, 환경 가꾸기, 문화유산 돌봄, 공동체 문화 등 일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주민들의 욕구와 요구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단위임
 - 생활문화의 활성화는 마을문화를 토대로 할 때 힘과 역동성을 가질 수 있음
 - 마을문화 활동에 참여하면서 동네 문제를 개선하고 생활정치의 힘을 배울 수 있음

의제6. 지역 문화분권 실현

(사례 예시) 주민자치회에 문화분과 개설, 마을문화유산 돌봄 모임, 문화프로그램 운영

- ▶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라 대다수 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음.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높아지고 문화를 향유하는 과정 자체가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가 되어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하는 한 측면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생활문화를 확산해 일상 속에 문화를 누리는 여가가 있는 삶을 달성할 수 있도록 문화가 일상이 되는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함
- ▶ 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필요함. 노약자를 위한 문화 전문 공간과 치유, 상담 등의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배치가 필요함

추진과제 01

지역문화진흥 재원의 지속적 확충

- ▶ 지역별 문화진흥에 필요한 예산의 정부지원 확대
- ▶ 지역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본재원으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의무화와 운영 지원
 - ※ 포괄보조금 등 기금 조성 및 운용을 위한 재원대책 적극 강구
- ▶ '지속적인 지역문화 재원 확충 방안' 관련 연구 추진

추진과제 02

포괄적 보조사업 확대

- ▶ 포괄적 보조사업 확대, 성과 평가와 평가 환류 시스템 구축

추진과제 03

지역 주민 참여문화예산제도 지원

- ▶ 지역 문화예술인/단체, 기관 및 시설/공간,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의 문화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협치 체계 구축 지원
 - 지역 문화예술인/단체, 기관 및 시설/공간,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 예산 요청
 - 매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과 예산 설명회 개최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추진과제 04

지역문화 정책기반으로서 문화정책 전담기관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활성화

- ▶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문화정책의 조사·연구·개발·집행에 필요한 문화정책 전담기관 지정
 - ▶ 지역문화 관련 조사 결과와 통계 관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 조사·연구·개발 지원에 필요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 ※ 추진근거: 「문화기본법」 제11조(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추진과제 05

지역문화자치를 위한 새로운 지표 개발

- ▶ 공급 지표 중심으로 설계된 ‘지역문화지수’에 수요 부문을 결합하여 ‘지역문화자치지수’ 개발
- ※ 공급(시설, 인력, 기관, 프로그램, 문화예술인/단체 등), 수요(문화향유 수준, 만족도, 생활문화동아리 등)
- ▶ 지역 간 문화 여건을 진단하고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맞춤형 지원 등 정책을 연계하여 실효성 제고
 - ▶ 지역문화 실태 조사를 2년 단위 조사로 정례화하고,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 실태 조사 의무화

추진과제 06

생활문화를 일상 속에 누리는 여가가 있는 삶의 방향 정립·지원 다각화

- ▶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동호회 발표·교류 활동 공간, 강사 등 지원
 - ▶ ‘문화가 있는 삶’이 실현되도록 ‘문화가 있는 날’ 사업 개선
- 이벤트 중심의 행사성 사업 지원 지양, 일상생활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 전환

추진과제 07

누구나, 어디서나 문화적 삶이 가능한 지역 만들기

- ▶ 장기적으로 문화향유 시설이 부족한 지역부터 우선 지원하는 등 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 추진
- ▶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문화활동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인력 등 지원

추진과제 08

지역의 문화인력 양성과 활동 지원

- ▶ 인력양성 전문기관*을 지정·지원하여 지역 청년문화 활동가·문화 관련 대학 졸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지역문화콘텐츠를 개발·발굴하기 위한 기획 인력 양성
 -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문화 창업 지원(문화예술콘텐츠, 관광 등)
 - 지역에서 문화와 관련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할 수 있는 인력 발굴과 정주 지원
 - ※ 대학,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 기관·단체-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확대해 전문인력을 문화시설에 배치함으로써 문화매개자 교육과 일자리를 유기적으로 연계
- ▶ 청년들이 문화활동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문화청년 일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추진-청년 문화활동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문화 분야 일자리 창출 및 지역문화의 새로운 성장 기반 마련
 - ※ 문화청년 일만 시간 과정: 준비-진입-활동-정착-재도약-재충전

추진과제 09

읍면동에 청년 중심의 ‘문화일꾼’ 배치 추진

- ▶ 문화일꾼을 읍면동 주민연계 시설에 배치
- ▶ 지역밀착형 문화일꾼들의 역할로 생활문화, 문화동아리, 마을미디어 활동 등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수권 확대

추진과제 10

지역문화기관/기구, 시설/공간, 문화현장의 네트워크 구축

- ▶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 내에 존재하는 시설, 공간, 인력의 연대 틀 구성
- ▶ 정보 공유와 자산 공유로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 촉진
- ▶ 정보 플랫폼, 인적 네트워크 구축, 공간/시설 공유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추진과제 11

지역문화정보 플랫폼 구축

- ▶ 지역문화정보와 생활문화·여가공간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
- ▶ 지역문화 현황 등을 기반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술을 활용한 지역별 문화지도 구축·제공
- ▶ 지역예술인/단체 실태조사 등으로 지역의 문화자원과 문화자산에 대한 데이터 구축
- ▶ 전국단위 관광발전 동향을 분석하여 지역 관광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관광발전지수 측정, 지역에서 활용하도록 제공
 - ※ 지역관광발전지수(종합지수)는 관광수용력·관광소비력·관광정책역량지수 등 21개 항목 지수값을 산출하여 지역관광발전 수준 측정

02 지역 문화의 고유성 유지·발전

○ 개념

- ▶ 지역문화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함(「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정의 1항)
- ▶ 지역문화의 고유성이란 특정한 지역의 공간과 생활 범위 안에서 역사와 인적·물적 교류 단위로서 지역민의 생활문화, 전승되어 온 생활양식과 전통문화, 미래의 창조문화 등을 포괄하는 의미임. 지역문화는 지역정체성의 발견과 그에 근거한 지역공동체의 생성과 지역 발전의 기초가 됨
- ▶ ‘문화도시’는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임
 - 정책적으로는 “시민이 공감하고 즐기는 도시문화의 고유성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사회성장

의제6. 지역 문화분권 실현

구조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체계를 갖춘 법적 지정도시”로 개념을 정의할 수 있음(2016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도시재생과 문화재생

- 도시재생은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 활용으로 경제적·사회적·물질적·환경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임(「도시재생법」 제2조)
- 문화재생은 ‘각 지역이 지향하는 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지역을 재생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제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종합적 정책 또는 사업’임

○ 추진 배경

- ▶ 2001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1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은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자국의 문화를 유지하고 종의 다양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음
 - 유네스코는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주요한 행동계획으로 구전 문화유산과 무형 문화유산을 포함하여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과 가치향상을 위한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고, 특히 원주민의 전통지식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현대 과학과 지역 특유의 지식을 서로 결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촉진해야 한다는 방침을 채택함
- ▶ 문화도시와 문화마을 정책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그동안 문화특화지역 사업과 지역거점 문화도시 사업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 왔음. 해외에서도 유럽문화수도, 아메리카 문화수도,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등으로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2006년부터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중앙수도·지역협력형 사업으로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지역중심·중앙지원형 사업으로 부산 영상문화도시 조성사업,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14년부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 현재 총 51개 지역(문화도시형 26개, 문화마을형 21개)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지금까지의 문화도시 활성화 사업은 도시 브랜드 창출, 관광객 유입 등 성과가 존재하나 법적 기반 없이 정부계획이나 정책사업 수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한계가 있음. 그 과정에서 도시의 브랜드 홍보를 강조하여 상대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개선에 소홀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또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사업 추진으로 지역별 고유한 개성과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존재함. 또한 국토기본계획과 연계한 산업 위주 접근과 하드웨어 건립 위주의 사업 추진이 문제로 제기되어 있음
- 문화적 지역재생은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그 과정에서 도시가 유지되어 온 맥락을 이해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역사, 문화,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문화적 지역재생은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물적·인적 토대가 되며 공동체 복원과 회복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음
 -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지역 사회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려면 문화적 도시재생 등 문화적 관점에서 혁신적 접근을 위한 종합적인 문화계획이 필요함
- ※ 게이츠헤드(영국), 셰필드(영국), 볼로냐(이탈리아), 프라이부르크(독일) 등은 1990년대에 도시재생 과정에서 문화계획을 수립해 문화 중심으로 공간과 도시를 성공적으로 재구성함
- ▶ 문화도시, 문화적 도시재생은 지역 주민과 예술인, 문화기획자 등이 참여하여 지역문화의 창의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며, 모든 문화적 계획에 필수사항인 지역의 문화전문 인력을 지역사회에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발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지금까지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역문화 보전에 대한 지역축제 지원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축제 간 차별성 부족과 과도한 상업화, 축제의 사회적·경제적·생태적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부정적 편견으로 지역축제의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고유성을 상실하고 전시성 이벤트 행사가 급증했으며, 과시성 행사로 축제가 남발되면서 예산집행에서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형태가 아닌 관 주도나 행정편의적 방식으로 축제가 기획·조직됨에 따라 오히려 지역축제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추진과제 01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지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조성사업 본격 추진

- ▶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
- ▶ 장기적으로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관점 아래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살리는 문화도시 지정 확산
- ▶ '19~'30년까지 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50여 개 문화도시 지정(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대상)

- ▶ 문화적 장소, 문화콘텐츠, 문화전문인력 통합 지원으로 도시문화 활성화 지원
- ▶ 지자체-시민-전문가 협의체로 지역중심·시민주도형 추진체계 구축, 문화도시 간 협력체계 활성화

추진과제 02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사업 확산

- ▶ 지역의 문화·역사, 도시문제, 주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유휴 다중이용 공간의 문화적 활용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 ▶ 도시재생 등 주요 정책과 계획 추진 시 사전에 문화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제도화 추진
- ▶ 농·산·어촌의 문화적 재생(가칭 '문화농사 사업')으로 문화예술인·문화청년의 귀촌 등 활력이 넘치는 지역 조성 추진

추진과제 03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역특화 콘텐츠 육성

- ▶ 지역 내에 콘텐츠 기업 육성 거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양성 및 창업 활성화·기업 육성 지원
 - ※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18년 10개), 지역거점형 기업육성센터('18년 4개 예정)를 장기적으로 주요 광역·기초 지자체로 확산
- ▶ 지자체와 협력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콘텐츠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 콘텐츠펀드'를 신설하고 지역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활성화
- ▶ 지역의 문화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 특화콘텐츠 육성 지원
 - ※ 지역의 핵심 스토리를 발굴하고 스토리·문화자원 등과 결합한 지역별 핵심 콘텐츠를 개발

추진과제 04

콘텐츠산업에서 협치에 필요한 중앙과 지역, 지역 간, 지역 내 협력 체계 구축

- ▶ 정부-지방정부-중앙공공기관-지역진흥원이 참여하는 지역콘텐츠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 ▶ 지역이 주도하여 과제를 기획·제안하고 중앙정부가 지원
- ▶ 지역 콘텐츠 거점화·광역화로 규모화를 도모하고 연관 산업 간 연계 및 지역 간 협업 유도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추진과제 05

지역축제 지원체계 개선

- ▶ 축제를 평가해 등급별로 서열화하고 차등 지원하는 방식에서 컨설팅을 실시해 지역맞춤형 축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
- ▶ 축제 지원 및 평가 전담기관 지정
 - 축제 정보 플랫폼 구축·운영
 - 글로벌 축제를 발굴하기 위한 조사·컨설팅
 - 축제 전문인력 보수 교육 지원·협력
 - 축제 빅데이터 구축, 시민축제 평가단 운영

추진과제 06

지역 전통문화 연구와 활용 활성화

- ▶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발굴·연구하고 창조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 개발
- ▶ 지역별 전통문화 교재 개발, 학교와 연계한 전통문화교육 강화
- ▶ 지역의 특수성을 전제로 권역별(역사권) 통합정책 추진

추진과제 07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지역학 육성

- ▶ 마을을 재발견하기 위한 연구·조사 사업 확대
- ▶ 지역문화의 기초 단위인 마을문화 연구인력 양성 사업 지원

추진과제 08

책으로 소통하는 생활(마을)공동체 구현

- ▶ 책마을, 책문화센터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독서문화 기반 마련
 - 지역서점·도서관, 지역 출판계 등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지역 공간을 활용한 출판창업, 저자 창작, 문화활동, 독서모임 등 지원

03

지역문화 거점기관 운영 혁신과 지원체계 마련

○ 개념

- ▶ 지역문화 거점기관이란 생활지역 또는 기초·광역 행정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기반시설과 중간지원 기관들을 말함
- ▶ 문화기반시설에는 「도서관법」상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상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중전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진흥법」상 지방문화원이 있음

○ 추진 배경

- ▶ 자치분권시대에 걸맞게 문화 현장과 활발히 소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 지원기관, 시설, 공간 등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비하고 운영체계를 혁신할 필요가 있음
- ▶ 지역문화 거점기관이 주민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역할에 머문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됨
 - 지역문화의 거점기관으로서 지역문화재단 설립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대부분 지역문화재단이 인사, 조직, 사업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로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자율성을 침해받음.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지역문화 현장과 갈등 해결로 지역문화생태계를 선순환하게 하고 지역문화 현장의 역동성을 높이도록 지역문화기관 운영과 지원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 문화정책의 원칙인 ‘팔길이법칙’이 기초/광역 행정단위부터 이루어져야 지역의 문화사업의 혁신이 가능함. 지역거점기관들은 지역 주민들의 욕구와 문화계 요구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 ▶ 지역 주민과 문화현장의 욕구와 요구를 정책으로 수렴·수용할 때 지역문화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사회자본이 축적되어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작동함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추진과제 01

생활권에 기반한 커뮤니티형 문화공간 확대

- ▶ 대규모 문화시설과 공간의 건립·운영을 지양하고 유휴 공간, 기존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문화공간 확보
- ▶ 문화공간 간 협력체계 구축과 협력사업 지원

추진과제 02

문화기반시설 운영 혁신

- ▶ 문화기반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 주체(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 ▶ 시민문화활동 지원 확대와 공간(공연장, 연습실 등) 개방
 - 아동, 청소년, 시민 대상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생활문화 동아리 등에 공간 개방
- ▶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간 협력사업 확대

추진과제 03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투명성·전문성·독립성·자율성 강화

- ▶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 ▶ 지역문화재단 이사회 구성의 민주성 제고와 투명한 운영(지자체 협력)
- ▶ 현장 소통 강화와 협치로 민관 매개 기관으로서 역할 정립
- ▶ 지역의 문화기관/기구/단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
- ▶ 민간문화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

추진과제 04

지역문화재단 총액예산지원 제도화 추진

- ▶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해마다 일정 비율 출연을 의무화하는 지역문화재단 총액예산지원 제도화 추진

추진과제 05

문화기관의 특성을 인정하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선

- ▶ 문화기관의 특성을 인정하는 출자·출연기관 운영과 평가 개선

04 문화 협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개념

- ▶ 협치는 사전 협의와 공감대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공적 결정 과정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의사결정을 위한 기획 단계부터 평가, 환류까지 모든 단계에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함
- ▶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 '문화 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지역문화실태조사',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2조에 근거하여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현재 2기를 운영 중임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추진 배경

- ▶ 협치는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제도화하여 협치를 위한 조직, 협치를 위한 지원조직 등을 상설로 운영하고, 행정 각 부서에 협치 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함. 협치는 관과 민의 속성을 동시에 이해하는 전문가를 매개로 긴 갈등 조정 시간을 견디며 상시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임
- ▶ 지역문화예술인, 지역문화활동가, 문화예술단체 등의 의견이 아래부터 상향식으로 수렴될 수 있어야 함
- ▶ 예산과 사업 결정권을 쥐고 있는 관이 주도하는 협치는 민이 들러리에 그칠 가능성이 큼. 따라서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새로운 협치가 필요함
 - 협치가 일회성 자문위원회, 토론회, 공청회 등으로 형식화되거나 관료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치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민의 불신이 높음
- ▶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해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토록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설치 후에 제대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을 거쳐 2기가 운영되고 있음.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광역과 기초까지 확대하여 문화분권의 주요 기구로 작동하게 할 필요가 있음

추진과제 01

중앙, 광역, 기초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 ▶ 숙의를 거쳐 각 지역의 문화진흥을 도모하는 지역 공공 기구로서 중앙, 광역, 기초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한 심의 기능을 확대·강화
- ▶ 성별, 세대별, 연령별 균형 있는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주민, 문화예술인, 사회적 약자, 문화 관련 기관과 단체 관계자, 지역문화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
- ▶ 필요시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정책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해 설치 근거 마련

추진과제 02

지역문화, 예술분야 협력체계 구축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지원기구, 광역·기초문화재단,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

05 \\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

○ 개념

- ▶ 관광생태계는 '모두를 위한 관광', '접근가능한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하여 공급자, 기획자, 소비자가 먹이사슬처럼 연결되어 상호 선순환하는 체계를 말함
- ▶ 공정관광
 - 관광객, 지역 주민, 관광 사업체와 자연환경 간의 관계에서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 여행자의 소비가 직접 지역사회로 갈 수 있게 지역사회에 기반한 여행 프로그램
 - 윤리적 여행, 지속가능한 여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책임관광, 생태관광 등 다양한 형태
- ▶ 모든 사람을 위한 '접근가능한 관광'
 - 신체적 특성이나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해 가능한 한 많은 사용자 특히 노약자, 장애인 등의 접근성을 높이는 제품과 서비스 제공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추진 배경

- ▶ 관광 분야에서 지역 분권을 이루려면 관광객의 지방 분산이 필수적인데 관광총량이 급격히 증가했는데도 방한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80% 이상은 서울이나 제주에 편중되어 있음. 외국인 관광객의 관점에서 수도권 이외 지방의 교통·숙박·안내·음식·쇼핑 등 관광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
- ▶ 관광객이 과도하게 몰리는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객의 소음, 쓰레기, 사생활 침해 등 부정적 효과로 이른바 관광지 등지 내몰림이 발생하여 관광객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반관광(Anti-tourism)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 관광산업의 발전 속도와 최근의 관광 경향(트렌드)을 고려할 때 관광객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공존하는 대상으로서 서로 상황을 고려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 단체관광에서 자유여행(FIT)로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경향(트렌드)을 고려할 때 외국인 관광객까지 고려한 지역의 교통·숙박·안내·음식·쇼핑 등 관광 수용 태세를 개선하는 것은 지역이 지닌 매력적인 관광콘텐츠가 실제 관광수요로 연결되도록 해서 관광객 분산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또 관광으로 인한 편익이 지역으로 환원되는 지역관광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의 관광 개발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지역이 지역 주민을 위한 일상공간이자 관광객을 위한 관광공간으로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 모두를 위한 관광에서 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일반적인 취약계층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층, 청소년층,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정 등을 포함함. 관광 복지 차원을 넘어서 관광 참여의 총량을 늘리는 방안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확산이 필요함

추진과제 01

지역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관광생태계 조성

- ▶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각 지역의 전통·문화 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최적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다른 문화권에 전달할 가이드북 제작·보급
- ▶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정 국가의 문화적 성향을 사전 점검단을 활용해 진단하고, 이 지점에 대한 사전지식을 충분히 전달하고 방문선택권 보장

추진과제 02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국형 공정관광모형' 개발

- ▶ 해외사례 · 국내현황 · 지역관광의 문제점을 분석해 지속가능한 지역 상생관광을 이루기 위한 '한국형 공정관광모형'을 개발하고 이에 기반해 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추진과제 03

지역의 외국인 관광 수용태세 개선

- ▶ 매력적인 관광콘텐츠를 보유한 지역이라도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접근성 향상, 서비스 인력 양성 등 외국인 수용태세 개선
 - ※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한 관광콘텐츠는 특수성을 보존하는 동시에 관광 인프라는 글로벌 기준에 맞도록 보편성을 향상해야 함

추진과제 04

비수기를 활성화하는 관광정책 확대

- ▶ 관광객을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근로자 법정휴가 보장, 휴가분산제로 비수기와 평일 여행 확대
- ▶ 고령자와 청소년을 위한 비수기 여행 할인제도와 여행지원 바우처의 확대로 지역 비수기 관광 확대

추진과제 05

모든 사람의 접근가능성을 높이도록 시설과 환경 개선

- ▶ 길 위에서부터 플랫폼(승강장)까지 아무런 도움 없이 접근가능한 환경 조성
- ▶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여행 정보 플랫폼 구축
 - 장애인 숙박자들과 숙박공간을 이어주는 스타트업 플랫폼 구축 지원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추진과제 06

관광편익을 지역으로 환원하기 위한 편익확산제도와 정책 개발

- ▶ 공정관광의 개념에 기반해 관광 분야에서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지역 주민의 삶을 실제로 향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관광개발과 정책의 성과는 관광으로 발생하는 편익이 얼마나 지역사회와 주민에게 돌아가느냐로 평가
- ▶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로 발생한 편익이 지역 주민보다 외지인과 대기업으로 편중되는 불합리한 구조에서 벗어나 교통·문화·정보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편익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편익확산 정책 개발

추진과제 07

도시의 다양한 정체성을 살린 관광 매력도시 육성

- ▶ 관광 잠재력이 있는 도시를 선정해 서울·제주를 대체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매력도와 관광 인프라를 갖춘 '관광매력 거점도시'로 육성
 - 주요 교통거점(공항, KTX역 인근), 광역개발 중심지 등 권역별 핵심도시 선정(도시 브랜드에 부합하는 관광체계 구축→관광매력도 제고→국내외 관광객 유입)
- ▶ '관광매력 거점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법 제정 추진
 - 도시정체성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설계, 도시브랜드 위원회 설치, 관광콘텐츠 개발과 인프라 조성 등

추진과제 08

지역관광 역량과 기반 강화

- ▶ 지역관광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주도형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관광개발 평가와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사업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 ▶ 다양한 숙박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안내체계 개선과 서비스 품질 개선
- ▶ 지역관광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통 연계망 구축, 대중교통 이용에 편익을 제공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관광 활성화
- ▶ 지역 주민 사업체 창업 활성화 지원

의제6. 지역 문화분권 실현

- 지역 '관광두레' 창업·운영 활성화로 지역 주민 주도형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18년 300개 → '30년 2,000개/누적)
- ※ 숙박·식음·체험 등의 분야에서 '관광사업체'를 운영하도록 창업과 경영개선 지원

추진과제 09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

- ▶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역관광 육성
 - 매력적인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숨은 관광지 발굴·개방, 테마별 관광콘텐츠 발굴, 세계적 문화관광 축제 육성, 농·산·어촌 관광 활성화
- ▶ 문화적 지역재생으로 도심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추진과제 10

지역주도형 관광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한국형 DMO* 설립 지원

- ▶ 특정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연계된 조직을 활용해 민·관·산·학 공동으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사업 (상품개발, 홍보 등) 추진
 - 지역 간 조직은 조정·관리·정보 제공으로 지역관광사업 지속 관리, 지역 내 조직은 지역주도형 관광사업 추진
 - 지역 데이터 수집·분석·제공, 주요 업적 평가지표 설정, 지역 관광상품 개발 등 사업 추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 공동 홍보 등

* 지역마케팅조직(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

06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 개념

- ▶ 생활체육은 국민 모두가 건강을 유지하거나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모든 체육활동을 말함
 - 모든 국민이 자신의 생활권역 내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고양하고 풀뿌리 스포츠클럽의 발전으로 다양하고 활력 있는 여가활동과 지역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해짐

○ 추진 배경

- ▶ 100세 시대에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인권으로서 스포츠(행복추구권, 건강권, 문화권) 정책이 필요하며, 보편적 복지로서 누구나 어디서든 즐기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함
- ▶ 통합 대한체육회 이후 사업 우선순위는 여전히 엘리트 체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학교 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간 연계 부족, 각 분야의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클럽 시스템으로 연결하고 수요자 맞춤형 체육시설, 정보, 지도자 접근성 등이 필요함
- ▶ 2016년 말 기준 주 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 인구 비율은 59.5%로 2012년 대비 16.2%p 증가하였으나 시설 인프라가 부족하고 산재한 생활체육 정보를 일괄적으로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함
- ▶ 체육지도자의 질 높은 서비스는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선행조건인데도 체육지도자 선발, 배치, 처우, 전문성 등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음
- ▶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스포츠에 대한 욕구 조사에 기반한 정책 수립 필요함
 - 동기 결핍의 문제, 교통, 비용, 시설 접근성 문제
 - 원하는 스포츠 프로그램 조사
- ▶ 대부분 생활체육정책이 비장애인 위주로 설계되어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는 여전히 낮은 수준('17년 기준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20.1%)이며,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이를 고려한 시설, 지도자, 프로그램의 재설계가 요구됨
- ▶ 개개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하고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공정, 도전, 혁신, 평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며, 공공 스포츠클럽 등 체육활동으로 계층, 성별, 세대 간 소통이 원활해지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의 공동체 의식이 증진됨

- ▶ 생활체육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스포츠 생태계 선순환이 가능해짐

추진과제 01

인권으로서 스포츠(행복추구권, 건강권, 문화권) 정책 추구

- ▶ 보편적 복지 차원의 스포츠 복지 추진
- ▶ 생애주기별 체육 프로그램으로 평생체육 체계 구축
 - 3세부터 100세까지 체육으로 건강하게 살기
 - 평생 즐기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과 지도자 제공
- ▶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맞춤형 생활체육 기반 조성
 - 시군구 단위로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장애인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와 역량 강화 등

추진과제 02

지역 공동체를 확산하기 위한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함께하는 스포츠, 복원하는 지역공동체(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사회적 약자와 함께)

- ▶ 1인-1읍·면·동-1생활체육 클럽 운동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지역공동체 복원
 - 2030년까지 3,503개 공익 스포츠클럽 구성
- ▶ 모든 시민이 즐기는 ‘시민리그제’ 전국적으로 확대(서울시민리그(S리그) 참고)
- ▶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스포츠클럽 지원과 활성화 근거 마련
- ▶ 종목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와 지역 스포츠클럽 리그의 통합 운영 추진
 - ※ 농구 예시(안): 대한농구협회가 학교스포츠 농구클럽, 지역스포츠클럽 농구팀이 모두 참여하는 리그 기획, 시도 농구협회는 리그운영·시설 지원
- ▶ 지역 체육인과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스포츠클럽 운영 장려
 - ※ 스포츠클럽 공모 참가자격 확대와 우대(가점 부여) 등 사회적 협동조합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종합 지원체계 구축 검토
- ▶ 지역 중심의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대회 운영(심판, 시설, 운영요원 등) 지원 확대
 - ※ 스포츠클럽과 문화·예술 동아리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청소년 축제로 개발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추진과제 03

언제 어디서나 즐기는 스포츠 환경 조성

- ▶ 일상에서 편리하게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 집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생활체육시설 확충
- ▶ 공공체육시설 회원제도(멤버십)로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을 함께 이용 가능
- ▶ 은퇴 선수들을 활용하여 필요한 지역에서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 스포츠클럽 체계 중심으로 전문 선수 육성체계 고도화

추진과제 04

협치를 위한 스포츠클럽과 지자체 지역체육단체의 역할 정립

- ▶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스포츠 시설 배분, 예산 지원 등 지역체육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시군구체육회는 스포츠클럽 운영 또는 운영 지원(지도자 파견 등). 지역종목단체는 대회의 조직·운영, 우수선수 발굴·육성 등
- ▶ 비영리법인이 아닌 지역체육단체도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 ▶ 우수 인력지원(인건비 직접 지원, 교육·연수 등 간접 지원), 재정 자립 등 지역체육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의제7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문화자원은 창의시민 · 인재가 연결되어 만드는 개방적인 네트워크와 융합 생태계로 만들어진다”

- 사회의 창의성을 확산하려면 우리 사회가 형성해 온 문화자원*들이 시민적 창의성과 예술적 창의성에 기초하여 연결되고 융합되는 역동적인 장이 다양한 방식으로 창출되어야 함

*문화자원: 인간의 문화적 창조활동의 결과물로 예술, 콘텐츠, 문화유산, 문화경관 등을 망라

- 창의성의 생태계, 창의적 사회공간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형성해 온 문화자원의 질적 성장을 협력 · 지원함. 이러한 문화자원들이 연결되고 융합되는 역동적인 장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문화정책 실현
- 지식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획기적 기획, 혁신적 도전을 장려하는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사회의 창의적 역량을 확대
- 창의적 인재 양성, 문화 분야에 대한 R&D 지원 등 사람과 지식창출을 위한 획기적 지원, 문화벤처 프로젝트 등 혁신적 도전을 응원하는 우리 사회의 창의적 기반과 저변을 확대하는 문화정책 실시

대 표 과 제

1. 창의성과 상상력을 갖춘 시민 · 인재
2. 문화자원 관련 산업의 융합 기반 조성
3. 문화자원과 신기술 · 지식 융합 촉진
4. 문화자원의 기록 · 보존 체계 강화
5. 문화자원 융합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

01 창의성과 상상력을 갖춘 시민 · 인재

○ 개념

- ▶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의 관건은 상상력과 창의성을 갖춘 시민과 인재가 성장하는 환경을 갖추는 데 달려 있음
- ▶ 동시에 창의력과 상상력은 인간을 인간이게 만드는 존재론적 가능성을 구현하는 잠재력의 표현 덕목으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조되는 가치임
- ▶ ‘창의성의 생태계, 창의적 사회공간’을 형성하는 ‘융합 · 실험 · 협력의 공간’ 개념을 적용하여 시민과 인재가 자라는 역동적 환경 조성

○ 추진 배경

- ▶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은 공동체가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할 때 발휘될 수 있으며, 동시에 창의성이 배양 과정이나 원리를 명확하게 정식화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계적 접근이 어려운 대단히 인간적인 요소임
- ▶ 특히 초연결성이 강조되는 21세기에는 과학, 기술, 문화, 인문 등 전통적인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융 · 합적 창조능력과 상상력을 갖춘 시민과 인재의 양성이 개인의 행복은 물론 공동체의 활력 확보에 결정적 요인이 될 것임
- ▶ 교육을 포함한 우리의 사회 시스템은 21세기의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는 창조능력과 상상력을 갖춘 시민과 인재의 성장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음
- ▶ 특히 입시 위주의 지식 주입형 교육, 전통적인 분과 학문 체계를 벗어나지 못한 고등교육은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적 창조성 배양에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함
- ▶ 문화 분야의 인재 양성 시스템은 과거에 비해 지원 규모나 범위 등에서 큰 발전을 가져왔으나 여전히 개별 분야의 전문성 확장이라는 지향점에서 벗어나지 못함. 문화체육관광부 내부/관련 부처 간 협력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분야의 기관 운영은 전통적인 방식의 분절성과 고립성에서 벗어나지 못함
- ▶ 미래 사회에서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 · 협력 · 실험의 공간 마련은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에 필수조건이 될 것임. 개별 분야의 충분히 확보된 전문성을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다양한 융합의 계기와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 모색이 필요함

추진과제 01

아동부터 노년층까지 창의교육 접근 기회 확대

- ▶ 문화예술교육, 스포츠교육 등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확대 추진(관계부처 협의)
 - 변화하는 학교 교육환경(자유학기제 확대, 교과수업 과정 혁신 등)에 발맞추어 교육부, 시도 교육청, 지방정부·문화재단(광역센터) 등과 지속가능 협력체계를 확대하여 교과과정과 연계한 문화예술·콘텐츠 창의교육 및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모델 발굴·확대 적용
 - 문화예술교육, 스포츠 교과과정 연계 모델 적용 시 학교와 지역사회(기관/단체, 공간, 프로그램 등)가 함께하는 창의교육 협업모델로 학교와 사회의 창의교육 프로그램의 창의적 연결망 확보
- ▶ 아동·청소년 등이 창의적 예술을 경험하고 창작하는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 ‘꿈꾸는 예술터’ 조성·운영
 - 유휴공간 등을 활용하여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공간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학교-사회 연계 모델 구축(‘30년까지 시도별 5개 조성)
 - 아동·청소년을 중심 대상으로 지원하고 지역 주민까지 확대하며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예술가, 예술강사 등이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공간 운영과 활동에 참여
 - 프로그램 개발·운영·연수, 학교-지역을 연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간 거점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자원의 협력망 활성화(※ 학교, 문화시설, 예술단체, 복지시설 등 협력망의 거점으로 연계 강화)
- ▶ 미래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를 연구개발·적용·확산하는 ‘창의예술교육 랩’ 도입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연구개발 체계 구축
 - 리서치·연구·개발, 문화예술교육 시범 적용, 우수사례 공유 등의 단계로 지식과 프로그램 확산 체계 구축
 - 문화예술교육, 생활체육, 인문·심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 예술교육자, 문화예술교육단체, 문화예술교육연구기관, 대학연구소 등)

추진과제 02

협력과 협업에 기반한 문화기반시설의 창의공간화

- ▶ 문화공간(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예관, 공연장 등)을 문화적 학습, 자유로운 협업이 가능한 ‘창의적 문화공간(문화공간 혁신프로젝트*)’으로 업그레이드
 - * 문화공간 혁신프로젝트는 기존의 문화공간을 ‘창의성의 생태계, 창의적 사회공간’을 지향하는 융합·협력·실험의 장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임
 - 창의적 문화활동의 기반시설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예관, 공연장 등 공공 문화공간이 고유한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기능을 유지하면서 변화된 문화 환경에 발맞추어 '창의적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문화공간 혁신 프로젝트' 추진

- 창의적 문화체험과 학습, 참여와 창의적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혁신적 개선
(예) 도서관의 생활지식 커뮤니티 공간화 모델, 미술관의 지식·아카이브 공간화 모델 등)

▶ 거점별·주제별 문화공간의 창의적 협력 기획 강화

- 도서관과 미술관, 미술관과 공예관 등 전문 분야, 지역 공공도서관과 아동 보육시설, 문예회관과 노인복지시설 등 거점별 문화공간 사이의 협력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문화공간 운영 기획자들의 창의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창의적 기획 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체계 마련

추진과제 03

융합 연구·교육·시범프로젝트의 협업 기반 마련

▶ 연구기관과 대학, 기업이 지식·창의 기반의 교육자원을 공유하는 협력적 인재 양성 체계로 '콘텐츠 원캠퍼스' 확대 개편

- 공공연구 교육기관과 대학 그리고 민간기업이 각자의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는 기반 위에서 협력 프로젝트 형태로 문화자원 융합형 인재 양성 추진
- 문화기업, 민관 연구소, 정부 출연기관, 해외 관련 기관 등과 광범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며 장기적으로 지역기반 거점 확보
- 신직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설계, 문화자원 융합형 교육 과정 개설 확대
- 문화예술·콘텐츠산업 분야에서 지원하고 교육기관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기관, 기업 등이 협력·연계해 다양한 벤처형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술대학 청년예술가를 위한 창의적 창업, 일자리 기회 확대, 기업-학교-연구기관이 연계한 '청년예술가 일자리 박람회' 개최

▶ 예술과 과학, 문화와 기술을 융합하는 교육-창작 연구기반, (가칭) '융합예술 R&D 센터' 설립 추진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KAIST, 서울대학교, 예술·과학기관 등과 연계해 문화예술, 과학·공학, 인문 등이 결합하는 공동 교육 프로그램 기획
- 창의적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유형의 융합형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 과정에서 인문, 문화, 예술, 과학 기술 등의 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
- 가상현실, 로봇틱스,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연구 결과를 문화콘텐츠와 융합하는 데에 특화된 창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 기획

- 인문적·사회적 상상력을 배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여 연계 전공 형태로 제공해 사업의 융합적 효과 제고
- ▶ **스포츠 분야 융합형 창의인재를 위한 스포츠 융합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 스포츠 분야의 사회적 중요성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공학, 스포츠의학 등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융합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문대학원 설립 지원
 - 스포츠 빅데이터 분석·코칭, 스포츠의학 트레이너 등 미래 사회를 선도할 융합적 영역에 대한 연구와 확산 사업 추진

추진과제 04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책 읽는 문화 조성

- ▶ **생애주기별·취약계층별 맞춤형 독서운동 확대 추진**
 - 영·유아, 청소년, 청·장년 등 기존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증진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년층 독서 활성화 방안 마련(오디오북 등)
 -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을 확대하여 책 읽는 직장문화를 확산하고, 독서문화 프로그램, 큐레이션, 컨설팅 지원 등으로 독서가 기업 경영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 다문화가정, 교정시설, 병영 등 독서 소외지역·소외계층에게 독서문화 활동 기회 제공
- ▶ **여럿이 함께 읽는 사회적 독서를 장려하고 사회 공동체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독서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독서 네트워크를 구축(책읽는도시 협의회 등)하여 전국적 독서문화를 증진하기 위한 공동 사업 전개
 - * 사업예시: 교육부와 한학기 한권읽기, 학교 교육과정 및 공공·학교도서관과 협력·연계해 독서문화 진흥사업 등
 - ** 사업예시: 지자체 독서진흥조례 제정 확산과 실효성 강화, 지자체 독서정책 사례 공유·교육·연수, 대한민국 독서대전과 지역 독서축제(독서대전) 연계 강화 등
 - 독서 동아리를 쉽게 결성·활동할 수 있도록 도서관·카페·서점 등 유희공간을 활용한 공간 제공
 - 독서동아리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해 저자 초청 강연, 네트워크 구축, 독서동아리 한마당 등 활동 지원사업 전개
- ▶ **언론 미디어를 활용해 사회 각 분야와 연계한 융·복합적 독서문화 프로그램 확산**

02 문화자원 관련 산업의 융합 기반 조성

○ 개념

- ▶ 문화자원의 융합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재원의 대폭적 확충과 함께 각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
- ▶ 4차 산업혁명 시대 변화에 부응한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역동적이며 지속가능한 문화 연구개발(R&D) 체계 구축
- ▶ 콘텐츠, 스포츠, 관광 분야의 혁신성장에 필요한 산업 생태계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체계 조성

○ 추진 배경

- ▶ 과학기술 분야의 대규모 연구개발 예산 투입이 한국 경제의 발전을 이룬 것처럼 문화자원의 융합역량을 강화하려면 문화자원의 발굴과 융합적 콘텐츠 기획·제작을 위한 연구사업에 획기적인 투자가 모색될 필요가 큼
- ▶ 반면 '17년 문체부 전체 연구개발 사업 예산은 75,259백만 원으로 국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0.4% 수준에 불과하며 그나마 이루어진 연구 결과 역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함
- ▶ 연구개발의 결과물 관리·분석·적용을 포함해 문화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총괄적인 방향성을 기획하고 관리할 전담 부서와 인력이 부족함. 동시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개발 정책 전반을 기획하고 추진 방향을 총괄·조정하는 협의체는 만들어졌으나 부 전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아우르지 못함
- ▶ 문화자원의 융합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는 과학 분야의 기술 개발 중심 연구개발과 달리 기획력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기획(Planning)과 창작(Production) 중심으로 새로운 연구개발의 특성을 포착하는 개념이 필요
- ▶ 현재의 정부지원 등 공적 자원 투자는 개별 분야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식이어서 새로운 융합적 아이디어를 육성할 가능성이 낮음
- ▶ 창의적 산업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보면 창조적인 사업의 경우 실패 비율이 높으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회 변화의 동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벤처형 사업 발굴·확장을 시도할 필요가 큼

- ▶ 창의적 산업생태계 조성 측면에서 예술, 관광, 체육, 인문 등 전통적인 분야의 경계를 넘어 이질적 요소들을 융합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함

추진과제 01

문화 분야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정책연구·전략기획 지원 강화

- ▶ 문화·체육·관광 분야 연구개발과 전략기획 역량 강화
 - 문화(콘텐츠)산업, 관광산업, 스포츠산업 등 문화산업 생태계 전반의 정책기획과 전략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확보 필요
 - 문화 분야의 전체 연구개발 예산은 여타 국가 연구개발 분야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임('17년 기준 문체부 연구개발 사업 예산은 국가 전체 연구개발 예산의 0.4%)
 - 문화·체육·관광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문화 연구개발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 필요. 과학적 문화정책의 기초가 되는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관광, 체육 등 관련 분야의 정책과 산업 데이터베이스·리서치 기반 강화
 - 문화·체육·관광정책 관련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함께 민간 분야의 문화·체육·관광 정책 현장연구와 전략기획 파트너십 확대
 - 문화콘텐츠 육성 'R&CD'(Research & Contents Development)와 문화플랫폼 육성 'R&PD'(Research & Platform Development)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문화 분야의 연구개발 예산 확대
- ▶ 산업간 융합 영역*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 * 콘텐츠+기기+플랫폼, 미디어+예술, 게임+예술, 예술+관광, 게임+스포츠 등
 - 문화 분야에 적합한 연구개발 개념의 확장과 함께 분야 간 융합 영역을 연구개발의 중요한 영역으로 확장해 나감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이 중소기업 중심의 스포츠·관광 산업 분야에 원활하게 접목될 수 있도록 기술기반을 지원해 산업 생태계 형성
 - 융·복합 스포츠·관광서비스 연구개발 투자 확대
- ▶ 문화 연구개발 개념에 기획·창작(Planning & Production, P&P) 단계 포함
 - 문화자원의 융합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술 기반 연구개발과 차별화되는 기획과 창작(P&P) 중심의 연구개발 개념 확산 추진
 - 젊은 예술가·창작자, 문화벤처의 실험적 시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기획과 창작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추진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문화기술 연구개발 체계를 콘텐츠 연구개발로 전환

- 콘텐츠 창작-제작-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여 융·복합 첨단 콘텐츠 창작·제작·유통 역량 강화
- 기술에 치중된 연구개발을 콘텐츠에 바로 접목하여 서비스 기반 창출이 가능한 과제 중심으로 전환 지원

▶ 미래 지향형 문화 신산업을 위한 국가적 정책체계 확립

-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등 문화 제 분야에서 미래 지향형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지원 체계 정비
- '신기술 기반 융합관광산업육성', '콘텐츠 연계 타 산업 동반 진출 지원', '출판 콘텐츠 가치 증대 기술 고도화 지원', '생활관광·생활체육과 생활양식 산업' 등 미래지향적인 문화·체육·관광 신산업 제시

추진과제 02

문화자원 융합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지원

▶ 콘텐츠 스타트업과 혁신기업 성장 생태계 지원

- 문화콘텐츠 분야 예비 창작자·창업자 대상 시제품 제작, 아이디어 융합·창작·제작 시설, 입주공간 등 지원에 필요한 콘텐츠코리아랩(CKL) 네트워크 운영,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추진
- 창작-창업초기-육성·성장-도약·글로벌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지원
- 지역기반 혁신창업자, 재창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콘텐츠코리아랩(CKL),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육성센터 등을 연결하는 통합 서비스 체계 마련

▶ 문화융합형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생태계 조성

- 여가 확대에 따른 관광 활동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융합형 서비스 요구 확산 경향에 부합하는 산업 혁신 생태계 지원
- 지역관광 콘텐츠 육성 기반 구축, 콘텐츠산업의 자생적 시장 생태계 조성·확산 등으로 문화자원 기반의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
- 관광산업 육성 펀드 조성 확대 등을 비롯해 신기술 연계 스마트 관광기업, 관광플랫폼 기업, 관광콘텐츠 기업 등 사업 유형별로 특화된 지원 체계 마련

▶ 혁신 관광벤처기업 육성('18년 540개 → '30년 2,000개/누적), 관광 창업·일자리·기업지원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중앙 거점) 관광공사 서울센터 활용, 관광벤처보육센터와 관광일자리센터 운영

(지역 거점) 지역 관광일자리와 관광산업 지원 공간 구축

- '혁신적 관광벤처기업 육성', '개별관광객 최적화 온라인 플랫폼 운영', '관광산업 육성 펀드 조성 확대', '스마트 관광 활성화' 등 시대 변화와 기술 발달을 반영한 다양한 융합사업 추진

▶ 스포츠산업을 미래 전략 분야로 육성

- 스포츠산업의 성장 추세, 기술 경쟁력,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해 헬스케어, 가상 스포츠, 스포츠 데이터 분석, 스포츠 중계 기술 등과 같은 미래 성장형 분야로 선정하고 전략적으로 육성
- 기업-지자체(지역거점센터)-대학·연구기관(스포츠산업지원센터)으로 구성된 기능 중심 산업혁신 클러스터*와 '스포츠 창업 여건**' 조성(스포츠 유망기업 '18년 10개 → '30년 50개 육성)

* 지역거점 연구기관, 전문가, 기업, 중앙정부 주체 간 공동기획·연구, 정책 지원 등의 협력 관계망을 구성·운영하는 클러스터형

** 시제품 제작실, 창업 아이템 체험존, 창업교육·강의실, 마케팅 지원 등

03 문화자원과 신기술 · 지식 융합 촉진

○ 개념

- ▶ 콘텐츠, 관광, 체육 분야에서 신기술·지식 융합형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
- ▶ 창작과 실험 단계를 넘어 관광, 체육 등 분야에서 생활 및 서비스 기반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 지원

○ 추진 배경

- ▶ 지난 10여 년간 정보통신기술 확산으로 문화 분야 생태계에서 나타난 디지털 변혁은 초연결화·초지능화와 결합하여 더욱 확장될 전망이다. 또한 개인화 서비스의 진화로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활용,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음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 빅데이터로 수집된 소비자들의 인적 사항·시청 패턴 등으로 특성과 경향을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콘텐츠 추천 서비스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도·교통·숙박·식음·위락 등 관광 정보의 초연결화는 관광객의 행동반경을 넓혀 맞춤형 관광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기반을 마련함
- ▶ 창작·제작 방식의 변화로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혼합현실(MR) 등 실감형 콘텐츠 기술은 문화예술·콘텐츠의 표현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사물인터넷과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하여 스포츠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인공지능이 개인의 특성에 맞는 운동을 추천하고 건강관리를 하는 사회로 진입함
- ▶ 더 많은 데이터, 다양한 서비스를 구비하고 좀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글로벌 미디어·플랫폼이 강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1인 미디어 등 창작(제작)자와 향유(소비)자의 직접 연계, 클라우드 펀딩 확산으로 다양한 소규모 플랫폼 활성화도 가능해짐

추진과제 01

체감형 기술로 아날로그 경험의 확장 지원

- ▶ 문화 기술 발전과 확장된 콘텐츠 개념을 활용한 뉴 콘텐츠 육성
 - 콘텐츠, 기술, 플랫폼이 급속하게 융합되는 상황에서는 문화 기술과 콘텐츠 개념의 확장이 필연적으로 요구됨. 이는 대중의 문화콘텐츠 수요 폭발과 다양화는 물론 콘텐츠의 향후 방식 등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초래
 -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혼합현실(Mixed Reality, MR),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창의적인 융합 콘텐츠 개발 증가
 - 이를 위해 시장 창출형 뉴 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며 뉴콘텐츠센터(New Contents Center) 등을 구축해 문화콘텐츠와 첨단기술의 융합을 지원
 - 특히 생활체육의 확산 경향에 발맞추어 AR, VR 기술을 활용한 스포츠실 보급을 확대하고 스포츠 분야의 뉴 콘텐츠 역시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 추진
 - 아울러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라 전통적인 매체(TV 방송 등)의 편성에 얽매이지 않는 다양한 소재, 장르에 대한 뉴미디어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 ▶ 뉴 콘텐츠 관련 인문·사회적 연구 사업 수행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과 같은 최근의 기술 변화는 인간 존재와 공동체의 의미는 물론 문화활동, 일과 여가 등의 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
 - 이런 변화의 정확한 의미를 인문·사회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뉴 콘텐츠 산업의 발전 방향과 전략을

의제7.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설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흐름과 대중적 수요를 반영한 뉴 콘텐츠 기획 및 확산 추진

▶ 예술-콘텐츠-기술 융합, 관객 체험형 문화공간 조성: 한국형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 건립

- 예술과 콘텐츠,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상호작용형 창작물(미디어아트, 로봇, 가상현실 콘텐츠, 홀로그램 형상물 등)을 기획·제작하여 관객들이 쉽고 즐겁게 융합예술 작품들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뮤지엄 건립

- 창의적인 콘텐츠의 상상력과 첨단 과학기술을 융합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합콘텐츠의 새로운 창작 플랫폼이자 관객들의 체험과 참여를 높이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 '아르스 일렉트로니카'는 유럽을 대표하는 미디어아트 전시체험 문화공간으로 전 세계 미디어아트의 흐름을 주도하며, 해마다 해외 관람객 수십만 명이 방문

추진과제 02

스마트 기술과 지식 기반 관광서비스 발굴

▶ 개인의 다양한 취향에 맞춘 문화자원 융합형 관광콘텐츠를 스마트 기기 기반의 개인화 관광서비스와 연계하여 개발

-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지도 이용, 정보검색, 숙박·교통 예약 등이 편리해짐에 따라 여행 경향(트렌드)도 단체관광에서 개별관광으로 변화
- 여행사에서 온라인 사업모델로 관광서비스의 중심이 이동 중으로, 여기에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이 결합한 맞춤형 관광서비스가 증가할 전망
- 신기술 연계 스마트 관광기업, 관광플랫폼 기업, 관광콘텐츠 기업 프로젝트 연계

▶ 여행 관련 장소, 교통, 결제시스템 등 관광상품과 서비스가 연계되는 스마트 관광도시 구축 추진

- 주요 관광지에 무료 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정보 접근성 제고('18년부터 전국 확대, 585개소 설치)
- '15~'17년 3년간 강원도 18개 시·군 458개소에 1,428개 AP(access point) 설치.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전까지 약 3만 곳의 무료 와이파이 구역 조성 예정

▶ 관광 정보 축적을 고도화하기 위한 통계 개선, 빅데이터 활용 국내외 관광객 행태와 특성 모니터링 등 개인화 관광서비스 활성화 기술 지원

- 한국관광공사가 보유한 관광콘텐츠, 스마트 투어가이드를 기업이나 일반 국민이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 공유민박업 도입 등 새로운 융합형 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기술력·유통망을 갖춘 관광플랫폼 기업과 관광콘텐츠 기업 간 협업 지원
 - 공유경제 확산으로 숙박공유 서비스가 도시·관광지를 중심으로 확산
- ▶ 지역(장소)·콘텐츠·테마 등 문화자원 연결형 문화관광 콘텐츠 기획 확대
 - 테마여행 10선과 문화관광축제 육성, 테마별 관광콘텐츠 발굴, 지역 특화 관광 명소 조성육성, 지역 관광 중간 지원 조직 설립, 지역 관광 콘텐츠 육성 기반 구축
 - 공연, 지역 문화 축제, 궁궐·향교·서원의 전통문화 유산, 다도해와 명산과 같은 자연 생태계 등 지역 문화자원을 특화된 관광콘텐츠로 발굴해 산림 관광, 해양 관광, 문화 예술 관광 등으로 발전
 - '관광두레', 관광형 마을기업, 농촌·생태 관광 주민 협의체 등 지역 주민사업체의 창업을 활성화해 지역 주도형 관광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며, 특히 행안부,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업의 효과 제고 도모
- ▶ '걷기 문화'를 주제로 한 여행·문화 프로젝트 확대
 - 걷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으로 여가시간이 많아지면서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음. 걷기라는 활동에 자연환경, 역사, 종교, 건축, 문화 등 다양한 인문적 서사가 결합되면 독특한 관광자원으로 개발 가능
 - 이 사업으로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이 재발견되거나 만들어질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 등 첨단기술이 활용되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관광자원의 개발과 문화예술자원과 연계한 관광콘텐츠로 발전 가능('문화예술 따라서 걷기', '역사 따라서 걷기', '종교 따라서 걷기' 등)
 - 길을 따라 걸으며 자연과 문화를 두루 체험하는 '걷기 여행길(코리아 둘레길)' 조성 확대

추진과제 03

신기술을 활용해 스포츠 본연의 가치를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스포츠 발굴

- ▶ '스포츠는 건강·경쟁·소속감·즐거움 등 인간 본연의 욕구를 포괄적으로 내포, 기술적 뒷받침을 받아 다양한 서비스와 신산업 창출 가능

스포츠 가치		주요 기술		신시장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 경쟁(성취감, 승리감) • 화합(소속감, 연대) • 즐거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인터넷 • 빅데이터 • 인공지능 • 가상/증강 현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한 운동, 건강관리 • 데이터에 기반한 훈련, 코칭 • 팬 지향 관람 서비스 • 가상스포츠

- ▶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훈련과 맞춤형 운동관리, 실감형 스포츠 콘텐츠 발굴, 선수·경기데이터 실시간 제공 관람 플랫폼 개발 지원 등
 - 한국형 운동 신체 표준 지표 개발, 스포츠 빅데이터센터 구축, 생활 밀착형 가상스포츠실 보급, 프로스포츠 전용 구장에 스마트 관람 플랫폼 구축 지원 등
- ▶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5대 전략 분야를 선정해 기술개발(R&D)을 추진하고 실내 가상스포츠, 드론·로봇 스포츠 등 새로운 유형의 스포츠 발굴 및 리그 활성화 지원
 - 스마트 운동관리, 가상스포츠, 스포츠 데이터 분석, 스포츠 중계기술, 스포츠 관람 서비스 등

04 문화자원의 기록·보존 체계 강화

○ 개념

- ▶ 예술, 관광, 체육 등 문화 제반 분야의 유산과 자원에 대한 기록화 플랫폼을 지원하는 체계 마련
- ▶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자원을 원형보존의 원칙의 구현 위에서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일상문화로 연결하는 사업 시행
- ▶ 문화자원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 확산이 사회적 지원 확대로 연결되고, 경쟁력 있는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보

○ 추진 배경

- ▶ 2000년 이후 문화정보화사업을 추진해 디지털 기반 정보화 사업의 체계는 부처별·기관별로 갖추었으나 근본적으로 기관과 단체가 생성하거나 기획·활동으로 생산한 문화자원의 기록·보존 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 ▶ 문화자원의 보존을 프로젝트 단위의 접근을 넘어서 기록화 주제 발굴, 기록화 전담 기관 지정과 전문인력 채용, 민간 보유 공익적 자료에 대한 보존 체계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 전통문화 유산의 보존·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폭넓은 보존 노력과 더불어 시대 상황에 맞는 활용 방안 역시 모색할 필요가 크며, 우리 전통을 포함한 문화유산의 콘텐츠화 지원 사업으로 우리의 문화 정체성을 재발견함
- ▶ 동시에 전통 문화유산을 포함한 문화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로 만드는 사업을 전개해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구현해야 함

추진과제 01

문화자원의 기록·보존·활용 체계 개선

- ▶ 문화기관과 문화자원의 아카이빙 플랫폼에 대한 지원 확대
 - 국가와 민간에서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를 지닌 문화자원의 기록과 보존체계의 일상화와 노력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존중이 중요
 - 기록 자료를 보유한 국공립 문화기관의 보존 활동에 제도적 체계(전담 인력, 자원 마련 등) 마련 필요 (※ (예) 예술자료관 구술사 프로젝트, 국립현대미술관 건축 아카이브 프로젝트 등)
 - 공익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전개한 민간 문화예술단체, 생존·유고 예술가와 장인 등의 기록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아카이빙 플랫폼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국공립 문화기관에 대한 아카이빙 플랫폼을 민간의 문화기획자, 연구자, 창작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 다원화 필요. 이를 바탕으로 폭넓은 창의적 문화기획 활동이 가능한 지적 토대 마련
- ▶ 우리의 전통적인 의식주에 관한 자료, 유·무형 문화재, 각종 문화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추진
 - 복식, 음식, 한옥, 한글 등 고유의 문화 자산에 대한 좀 더 심화된 인문학적·문화적 연구 사업 추진
 - 온돌, 나전칠기, 도자기, 인삼, 김치 등 우리 고유의 문화 자산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편성을 확보하는 각종 연구사업 지원
 - 연구로 발굴된 콘텐츠는 핵심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으로서 관리·활용을 강화하여 향후 다양한 콘텐츠로 재생산 유도

추진과제 02

한글문화자원의 발굴과 가치 확산

- ▶ 한글 기반 문화자원의 체계적 수집·관리
 - 한글의 시대상과 사회적 현상을 담아내며 이를 공유할 수 있는 한글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의제7.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 근현대 한글문화자원 연구·기획 전시, 한글문화 관련 인물과 사건 중심의 자료 조사
- 한글 창제 이전 향가, 구결, 이두 등에서 근현대 자료에 이르기까지 한글의 가치를 담은 다양한 자료 수집
- 문자·문헌 자료 외에 디자인, 예술,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유형의 한글자료 수집 확대
- 한글의 산업화·정보화, 한글 운동, 사전 편찬 등 시대별 문화현상을 반영하고 재외동포의 한글 교육·생활사, 이민사 자료 등 한민족의 문화 정체성을 상징하는 자료의 개발과 수집
- ▶ 다양한 한글문화 체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한글문화의 가치 확산
 - 가상현실·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감성형 한글 체험관 구축 및 콘텐츠 개발
 - 한글 체험전시관(한글놀이터, 한글배움터) 운영, '한글 글꼴, 멋글씨(캘리그래피), 문학, 전통 음식, 전통 춤'과 연계한 한글문화 체험교육 기획, 교육 운영
 - 교육 콘텐츠와 교구재 보급, 교사연수 지원, 강사 파견 등 국내외 한글문화 체험 교육 지원
- ▶ 국어 어휘역사 사전 편찬으로 우리말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완성
 - 우리말이 변해 온 모습과 정보를 풍부한 세기별 사용례와 함께 제시, 신뢰할 수 있는 국어 어휘 역사 정보 제공
 - 국어 어휘에 대한 언어적 정보뿐만 아니라 역사, 지역, 문화 등 어원과 관련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당대의 언어문화와 생활상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

05

문화자원 융합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

○ 개념

- ▶ 문화자원의 융합적 역량 축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관련 분야의 법·제도 개선 등 제도적 정비 추진
- ▶ 4차 산업혁명으로 특징지어지는 최근의 변화는 기술-콘텐츠-제조-연구 등과 같은 전통적 방식의 지원과 투자 전략에 근본적 변화 요구

○ 추진 배경

- ▶ 4차 산업혁명 개념이 시사하듯 현재의 변화는 전례가 없는 매우 급격하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짐
- ▶ 법·제도 등이 관련 산업과 분야의 발전 방향과 전체 틀을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적실성 있는 제도 개선과 정비는 재정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활동임. 제도와 규정이 급격한 시대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관련 제도의 개선은 시급한 과제임
- ▶ 지원제도를 포함해 관련 규정과 법률은 변화의 폭과 깊이를 고려해 정비할 필요가 크며, 무엇보다 콘텐츠/기술/플랫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변화 양상을 적절하게 반영해야 함

추진과제 0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재규정

- ▶ 문화자원의 콘텐츠화·융합역량 제고와 관련하여 새롭게 등장한 직업군에 대해 문화 분야 특성을 반영하여 재규정 추진
 -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신규인력 채용 평가 기준, 업무능력 평가 기준 등과 연결하여 활용
 - 문화자원의 콘텐츠화·융합역량 제고와 관련된 직업군의 경우 최근 새롭게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여타 산업 분야의 전통적 직업과 다른 특성을 띠는 경우가 많으므로 문화 분야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 필요
 - 국가직무능력 표준이 신규 인력 채용에 필요한 평가 기준이나 업무능력 평가 등과 연결되므로 문화

-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좀 더 적극적인 직무 개발에 활용되도록 보완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에 문화 분야 특성을 반영한 직무 개발 추진

추진과제 02

문화 분야 세제 등 지원제도 개선 추진

- ▶ 문화콘텐츠 연구개발 등 관련 분야 세제지원제도 정비
 - 문화자원의 융합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사업이 문화의 특성상 기존의 과학기술과는 다른 유형에 속하지만, 이런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세액 공제 등이 이루어지지 못함
 - 문화콘텐츠 기획과 창작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세제 지원 방안 마련을 포함해 동 분야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현실성 있는 지원 방식 연구와 도입 필요
 - 현재 제조업 기술, 연구소 중심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범위에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도 포함되도록 추진
 - 문화콘텐츠 기획·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시나리오 구입비, 외주 작가비, 원천 콘텐츠(LP) 구입비에 대해 세액공제 확대 추진
 - 음반제작과 공연제작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세제 지원
- ▶ 문화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시행
 - 중소 관광업체, 문화·체육 분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제도적 지원 방안 연구·확대 추진
 - 외부 환경과 계절 수요에 민감한 관광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 개선을 포함한 세제 지원, 관광사업체의 외국 인력에 고용특례제도를 적용해 구인난 해소, 관광진흥개발기금 용자 대상 다양화, 소규모 관광사업체 신용보증 공급 확대, 공유민박업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 방안 모색

의제8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한반도 · 세계시민의 문화협력은 미래와 평화를 위한 가장 앞선 실천과제이다”

- 지속가능한 남북한 문화교류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문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국제문화교류 협력의 이정표 제시
-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남북한 문화협력을 진취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국제문화교류와 협력의 새로운 방향 전환을 이루어내는 문화정책 실현
- 문화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상상, 평화공동체를 지향하는 호혜적 인식 확대, 문화를 통해 적극적 교류협력, 글로벌 문화산업 시장진출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전환점 마련
- 문화상호주의적 접근을 토대로 문화를 통해 적극적 교류협력과 문화산업 글로벌 시장진출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문화정책 실현

대 표 과 제

1. 문화·체육·관광 분야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획기적 전환
2. 문화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적 지원
3. 지원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국제교류 확대
4. 한반도 평화를 여는 문화의 섬 · 문화로드 프로젝트
5. 아시아 문화교류 확대와 국제교류협력 기반 조성

01 문화·체육·관광 분야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획기적 전환

○ 개념

- ▶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업 다변화로 문화 분야 교류협력사업 활성화 도모
- ▶ 문화 분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다변화·체계화·내실화로 지속가능한 남북 교류협력 모델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의 여건 조성
- ▶ 남북 교류와 통일에 대비한 남북 소통 환경 조성, 민족 동질성 회복과 향후 문화적 통합 기반 마련

○ 추진 배경

- ▶ 분단 이후 남북 문화교류는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조제로 활용되었음. 그동안 추진된 문화예술, 문화유산, 관광, 스포츠, 종교 분야의 교류협력사업 역시 일회성이거나 한시적으로 진행됨
- ▶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서 '문화'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08년 금강산 관광객 총기 사망사고 이후 남북한 간 모든 교류는 사실상 단절되었지만 스포츠 교류는 남북한이 호혜적 태도를 견지하였고,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은 그 사례임
- ▶ 문화유산(개성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 남북 문화유산 답사, 북한 고구려 고분군 공동 실태조사 등), 문화예술(남북한 예술가 교류 프로그램, 한국예술단 평양공연, 남북 평화비엔날레 등), 관광(금강산 관광), 체육(경평 축구대회, 남북 체육교류, 아시안게임·올림픽 공동입장, 단일팀 구성 등), 종교(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지도자 교류 및 협력사업(서산대사 추계제향, 신계사 복원 및 남북합동 법회, 영통사 복원 및 남북합동 법회, 대각국사 의천 열반 다례제 봉행 등) 등 남북 문화교류협력사업을 재개하고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함
- ▶ 분단 65년이 지난 지금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이는 언어적 측면뿐 아니라 우리 전통문화와 문화예술,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표출되나 민족동질성 회복에 대한 접근은 대단히 미약한 수준임
- ▶ 남북한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들이 남북 관계 경색에 따라 복측과 교류 없이 제한적으로 진행되거나 중단됨. 이러한 상태를 방지할 경우 남북한 문화적 이질감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교류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협력사업이 한계에 직면할 개연성이 높음

- ▶ 대북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통일 대비 남북 언어통합 관리정책 수립과 문화기반 동질성 회복 종합계획 마련이 필요함. 또한 미래 통일세대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남북한이 공유가능한 문화원형을 발굴·보존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추진과제 01

지속가능한 남북 문화교류협력 기반 마련

- ▶ 지속가능한 남북 문화·관광·체육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안정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가칭) '남북 문화교류협력 협약서' 체결 및 '남북 문화교류협력추진위원회' 구성. 중장기적으로 교류 채널 제도화를 위한 '남북 문화협정' 체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항을 개정하여 제4호 '협력사업' 외에 문화교류협력사업을 규정하는 제5호 신설
 - (가칭) '남북문화교류협력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남북 문화예술인 교류협력사업 및 남북 관광, 스포츠, 국제경기대회 공동 유치 등 지원과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사회 분야와 문화 분야 간 분리 입법의 필요성 강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남북문화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가칭) '남북 문화교류협력진흥원(위원회)' 설립
 - 남북협력기금 외에 '남북문화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여 자원 기반 마련
- ▶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백서」 발간 및 사업추진 매뉴얼 발간·보급
 - 남북 문화교류협력 사업의 실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 백서, 분야별 백서, 사업별 백서 등으로 발간
- ▶ 북한 관광과 남북 교차관광을 재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정비
 - 남북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조직 등 기반 정비, 단계적·점진적으로 남북관광을 확대하기 위한 체계적 정책수립, 금강산 관광 복구 매뉴얼 마련

추진과제 02

남북 문화 · 예술 · 체육 · 관광 교류 확대와 활성화

▶ 남북문화유산 공동실태조사 및 남북 종교지도자 정례회의 추진

- 분야별 남북 예술인 교류사업 활성화, 남북 문화유산 공동실태조사(고구려 고분군 등)
-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공동 추진, 종교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남북 종교지도자(한국종교인 평화회의, 조선종교인협의회) 정례회의 추진
- 남북 종교연합단체와 개별 종교단체의 인적 교류와 종교문화행사(종교 기념일 등) 교류 활성화
- 예술, 영화, 대중문화 등 콘텐츠 분야 남북교류 확대 및 상호 전시 · 공연 등 협력사업 발굴

▶ 남북 관광 협력사업 개발: 금강산 관광을 넘어 남북 교차관광 활성화

- (가칭) 남북 금강산 문화관광지구 관리위원회 설립 운영 등 제도적 안정성 확보 및 관광객 편의 · 안전 확보 대책 마련
- 남북관광을 활성화해 인바운드 국제관광의 전기 마련: 남북축 관광루트 개발(사례: ‘백두산-한라산’ · ‘설악산-묘향산’ 등 교차관광)

▶ 지속가능한 남북 체육 교류협력사업 기반 마련: 국제대회를 발판으로 공동개최, 공동진출 등 체육 교류 확대

- 한반도 통일체육 로드맵 수립, 북한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인프라와 프로그램 보급, 예산(기금) 지원을 위한 법 · 제도 정비, 남북 스포츠 관계자 정례회의 추진

▶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 공동개최 추진

- 남북공동유치단을 구성해 2030년 FIFA 월드컵, 2032 하계올림픽 등 국제대회 남북공동유치
- 2020 도쿄하계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 공동 진출
- ‘세계한인체육대회’, ‘IOC-UN 평화와 개발을 위한 국제스포츠 포럼’ 등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해 남북이 평화와 화해의 중계자 역할로 자리매김
- 태권도 남북교류를 활성화해 경쟁력 강화(태권도 시범단 · 기술 교류 및 공동 품새 개발 등)

추진과제 03

남북 문화 동질성 회복 프로젝트 추진

▶ 남북 공유문화(문화원형) 발굴 프로젝트 추진

- 개성 역사유적지 등 북한의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및 보존관리 남북 협력(공동조사 및 보존사업) 확대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DMZ 분단기록(세계 최장 · 유일의 분단과 이산가족 등), 분단가요, 바둑 · 씨름 등 여가문화, 태권도 등 무예문화(무예도보통지 등), 전통공예문화, 남북 음식문화(염장 음식 등), 언어문화(표준어와 사투리), 소리문화(민요와 노동요), 말[馬]문화(백두에서 한라까지) 등 남북한이 공유하는 문화원형 발굴 프로젝트 추진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 추진
- ▶ 남북 언어를 통합하기 위한 언어 실태 연구와 학술 교류 확대
 - 남북 언어를 통합하기 위한 국제학술회의,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 등 학술교류 정례화 추진 및 발전 방향 모색
 -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겨레말큰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은 2005년부터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총 25회 개최하였고, 언어 통합을 위한 국제학술회의는 1996년 이후 총 13차례 개최(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2009년부터 북측 불참, 최근 재개 합의)하여 진행
 -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북한어 어휘, 표현, 발음, 억양 등 언어 실태조사 실시 등 향후 본격적인 북한 지역어의 현지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 실시
 - 남북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원활하게 소통 · 협력하기 위한 남북 전문용어의 분야별 통합 방안 수립, 전문용어 통합 관리 시스템 마련(체육, 교육, 자연과학, 예술, 산업, 의학, 법률 · 행정 등)
- ▶ 민족 동질성 회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탈북민 언어 소통 지원과 남북 언어 관련 국민 인식 제고
 - 남북 언어 현실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남북 언어문화 관련 대국민 교육과 홍보 강화
- ▶ 남북 문화유산 · 문화재 상설전시 추진
 - 삼국 · 고려 · 조선시대 유물 교류전(고구려 대 신라 · 백제/고려/조선)
 - 우리 민족 기록유산 남북 공동 전시(조선왕조실록 4대본, 삼국유사, 삼국사기 등)
- ▶ 남북한 도서관 교류 협력사업 전개
 - 남북한 서지표준화, 분류체계 등 도서정보 시스템 공유 · 고문헌 공동조사, 디지털화 추진(국립중앙도서관, 인민대학습당)
- ▶ 청소년 등 미래 통일세대를 위한 문화동질성 회복 프로그램 개발
 - 통일문화아카데미 운영, 남북 청소년 평화문화프로그램, DMZ 평화캠프, 남북 생활(여가)문화 체험 공간 조성 등

02

문화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위한 전략적 지원

○ 개념

- ▶ 지속가능한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급변하는 콘텐츠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글로벌 시장 전략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준비
- ▶ 문화 상호주의 정신에 기반하여 국가 간 문화협력 · 발전의 토대 강화
- ▶ 콘텐츠 해외 진출의 지속가능한 발전도모, 한국문화콘텐츠의 국제경쟁력 확보, 문화산업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추진 배경

- ▶ 1990년대 후반 드라마를 시작으로 진행된 한국의 글로벌 문화 경향(트렌드)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한강의 기적’, ‘IT강국’을 넘어 ‘한류(韓流)’라는 새로운 축을 형성함
- ▶ 반면, 험한 · 반한 정서와 함께 위기를 맞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콘텐츠의 획일성, 열악한 수익구조와 과열 경쟁 등 문화산업 저변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위기를 맞을 수 있음
- ▶ 급변하는 글로벌 콘텐츠 유통체계, 플랫폼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의 기획과 제작 방식이 선제적으로 글로벌 유통을 전제로 하는 시장 전략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 ▶ 문화콘텐츠의 글로벌 유통체계, 플랫폼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콘텐츠 제작의 기획과 제작 방식이 선제적으로 글로벌 유통을 전제로 하는 시장 전략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 ▶ 문화적 차원에서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해 나가려면 한국의 문화를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지구촌 문화와 결합한 교류협력으로 발전시켜야 함
- ▶ 콘텐츠 제작환경, 미디어와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콘텐츠 해외진출 방식이 전환기를 맞이함. 특히 글로벌 플랫폼의 등장으로 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방식이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해야 함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추진과제 01

문화콘텐츠 세계시장 진출 지원 확대

- ▶ 문화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 문화산업통상 지원체계’ 구축(관계부처 협의)
 - ‘통합적 문화산업통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의 문화산업 해외 시장 진출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체계 구축(※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진출 지원부서, KOTRA, 해외문화원 등 전략적 협력체계 수립 등)
- ▶ ‘글로벌 원빌드(One Build)’ 시장 전략 지원체계 마련
 -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고려한 콘텐츠 기획, 제작을 지원하는 콘텐츠산업 지원체계(글로벌 원빌드 제작지원센터 구축 등) 마련(※게임콘텐츠 해외진출 전략을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산)
- ▶ 장르별·국가별·대륙별 콘텐츠 해외 진출 기반 강화
 - 콘텐츠산업 장르별 특화 마켓·페어가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도록 전략적 지원과 협력(예: 부산국제영화제 PPP, 서울패션위크 등)
 - 전통공연·시각예술, 패션, 스포츠, 관광, 의료 등 한류의 국가별·대륙별 선호도에 부응하는 맞춤형 문화교류협력 지원
- ▶ 한국문화콘텐츠로 국제교류협력을 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 저작권, 표준계약서, 교류전시·판매, 홍보·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문화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국제문화교류 에이전트 등 전문인력 양성
- ▶ 문화, 예술, 콘텐츠, 관광 분야에 대해 해외 반응을 분석하는 ‘문화통상 빅데이터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추진과제 02

입체적(지역/주체 등) 국제 문화교류 활동 지원체계 구축

- ▶ 국제 문화교류의 흐름과 양상을 반영하는 협력적 지원체계 마련
 - 최근 국제교류 방식이 수신형 또는 발신형 일방향에서 쌍방향 교류 또는 3개 이상 주체가 참여하는 다자간 교류방식으로 변화
 - 순수예술·전통문화 프로젝트 중심의 교류에서 문화전반·정책교류·연구·문화산업 분야까지 교류 분야 확장
 - 국제문화교류를 주도하는 주체가 중앙에서 지역으로,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중심축 이동

- 과거에는 공연·전시 등 결과물(end-product) 중심 교류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프로젝트 기반, 과정 중심 교류 부상
- ▶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콘텐츠 협력, 지방정부와 민간 문화교류 지원 시스템 구축
 - 한국의 문화자원(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레지던시 등)과 문화관광 콘텐츠의 교류협력 시스템 구축
 - 지자체와 민간의 문화교류는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단발성 행사의 성격을 띠므로 지자체와 민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형태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필요
- ▶ 해외문화원, 세종학당 등 운영 사업 예산과 전문인력 파견 확대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이 현장 인력 수요에 부응하지 못해 전문인력 양성 규모 확대 및 체계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
 - 해외문화원, 세종학당 등 관련기관/기구의 예산규모와 전문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해외 국가와 협력가능한 문화 시장조사·연구기능 확대
- ▶ 주재국의 문화예술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조사·연구기능 강화
 - 다수의 국제문화교류 업무 추진주체가 네트워크의 한계로 문화교류의 어려움을 겪으므로 기반조성 차원에서 다양한 온·오프라인 네트워크 구축 필요
- ▶ 권역별 차별화,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상승효과 제고
 - 주요 교류대상 국가가 5개국(중, 일, 미, 프, 독)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므로, 북방·남방 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아메리카 등 교류대상 권역과 국가를 다양화할 필요

03 // 지원과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국제교류 확대

○ 개념

- ▶ 국가 간 문화예술인·청소년·청년을 위한 문화교류 활성화, 국제기구를 통한 문화협력 다각화
- ▶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위상을 정립해 현지 수요 기반 문화인프라·문화플랫폼 지원사업 전개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추진 배경

- ▶ 한국의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한국 공적개발원조 재정 대비 0.44%인 116억 원 수준이며 체육·관광 분야를 제외한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 예산은 43억 원에 불과함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재정 대비 문화 공적개발원조 재정 규모

구분 (%: 정부 대비 비중)	2014	2015	2016	2017
정부 ※ 유상·무상원조 통합 수치	2조 2,666억 원	2조 3,782억 원	2조 4,394억 원	2조 6,359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 무상원조 수행	116억 원	119억 원	131억 원	116억 원
	0.49%	0.5%	0.54%	0.44%
문화 분야 ※ 체육·관광 제외	3.3억 원	4억 원	36억 원	43억 원
	0.14%	0.17%	0.14%	0.16%

- ▶ 소극적 문화예술 교류, 전시, 협력사업에서 벗어나 한국의 우수한 문화인프라, 콘텐츠, 법·제도, 시스템 등을 적극적으로 개도국과 아시아 국가에 지원함으로써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단체의 협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국제교류를 확대함
- ▶ 어린이·청소년 세대가 더욱 활발하게 전 세계인과 소통하고 교류·체험할 수 있는 국제문화플랫폼을 개발·확대하여 우리 문화뿐 아니라 전 세계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함

추진과제 01

문화예술인·청소년·청년을 위한 문화교류 활성화

- ▶ 국가 간 문화·문화인력 교류 확대
 - 문화동반자사업, 아시아예술계 인력양성 사업 등 해외 예술인력 국내초청 프로그램의 심화, 국내 문화인력의 해외 파견 확대 추진 등 쌍방향 예술인력 교류 프로그램으로 확대
- ▶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국제문화교류 플랫폼 구축
 -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해외 청소년 문화통신원 양성, 해외 청소년 방한 수학 여행단 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 한국 어학연수 등 갭이어(Gap Year) 문화홈스테이 지원 방안 마련, 해외 어린이·청소년 대상 한국

문화체험단 운영

- 선진 문화 경향(트렌드)을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사절단 운영

추진과제 02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적극적 추진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의 위상 정립

- 정부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총괄조정기구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문화 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확대와 위상 제고, 협력사업 성공모델 개발 등(※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정한 우리나라 중점 협력국 24개국 국가협력전략(CPS) 분야는 주로 지역개발, 교통, 물관리, 보건, 교육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명시적으로 문화 분야는 미포함)
- 전체 공적개발원조 예산 중 문화영역 공적개발원조 비율 확대 추진('18년 현재 0.4%)

▶ 현지수요 기반 문화인프라 · 문화플랫폼 지원사업 전개

- 개발도상국 대상 어린이 · 청소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복합문화관 등 현지 수요와 환경에 부합하는 개발도상국 대상 문화 분야 인프라 구축 지원

▶ 예술교육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확대

-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공적개발원조 국가들의 한국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예술교육기관으로 확대
- 현행 문화동반자 사업을 확대해 공적개발원조 국가들의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교류와 지원을 확대
- 아시아 국가 중심의 청년예술 전공자 지원사업인 한예중 AMA 장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동유럽, 아프리카, 남미 등 전 대륙의 공적개발원조 국가에 확대하여 추진
-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기초를 수용하여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공적개발원조 국가 간의 예술인 교류와 협력 프로그램 확대

▶ 문화콘텐츠 공적개발원조 사업 발굴 및 추진

- 문화유산(3D, 입체영상 등 개도국 문화유산 발굴 · 보존사업 등), 문화예술(개도국 전통문화예술 발굴 · 보존사업 등), 문화산업(영상콘텐츠, ICT 기반 인공지능 문화콘텐츠 산업 전수), 관광(관광콘텐츠 개발지원과 한국 성공사례 전수-문전성시 사업 등), 체육(엘리트 체육 감독, 선수, 노하우 전수와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지원), 저작권(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환경 조성) 등 분야별 문화 공적개발원조 사업 확대 추진

▶ 스포츠 분야 공적개발원조 확대와 '드림 프로그램' 확대 추진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1국가 1종목 매칭 지원, 신남방 국가 대상 체육교류협력 등 사업 간 연계 강화와 전략적 교류 확대
 - 스포츠 지도자(감독, 코치), 행정가 등 심화과정을 운영해 사후 네트워킹 강화
 - 평창동계올림픽의 경험을 토대로 개발도상국 대상 '드림 프로그램*' 확대 추진
- * 동계스포츠 불모지 국가의 선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초청 프로그램

04

한반도 평화를 여는 문화의 섬·문화로드 프로젝트

○ 개념

- ▶ DMZ, 백령도 등 갈등과 분단의 공간을 화해와 만남, 평화의 공간으로 전환하는 문화 프로젝트 전개
-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마중물로서 전 세계인이 문화를 모티브로 만나고, 교류하고, 협력하면 평화의 거점으로 전환

○ 추진 배경

- ▶ 백령도를 포함한 서해 5도는 남북 분단 현실을 반영하듯 군사·안보적 측면의 전략적 요충지임. 그러나 연평도 포격사건(2010년)과 천안함 침몰사건(2010년), 꽃게잡이 어선 분쟁 등 남북 분단의 현실적 고통을 최전방에서 감내하는 지역임
- ▶ 서해 최북단 백령도는 면적이 51km²(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이고 자연활주로와 단순 면적 기준으로 수십만 명이 상주할 수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인데도 군사·안보적 거점으로 고착되었음
- ▶ DMZ(총길이 약 240km, 남북 각 2km씩 총 4km 비무장지대)의 경우 갈등과 분단의 정치적 공간으로 고착되어 있음
- ▶ 백령도와 서해5도, DMZ는 군사·안보적 대립과 갈등이 가장 첨예한 지정학적 환경에 처해 있는 지역임.

이런 이유로 이 지역은 한반도 생태환경의 보고이자 문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무형 콘텐츠가 풍부한 지역임

추진과제 01

‘백령도 문화(평화)의 섬’ 프로젝트 추진

▶ ‘백령도 문화(평화)의 섬’ 프로젝트 추진

- 백령도와 서해5도, DMZ는 군사·안보적 대립과 갈등이 가장 첨예한 지정학적 환경에 놓여 있으면서 한반도 생태환경의 보고임
-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전 세계인이 문화를 모티브로 만나고, 교류하고, 협력하면 평화의 거점으로 전환될 것임
- 백령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한 ‘문화·관광 자원’을 전략적·정책적 수단으로 결합할 경우 동북아시아의 평화(문화)의 섬으로 탈바꿈 가능. 생태형 문화관광을 지향하는 공간으로 구상
- 1단계 안보기반시설(반공호, 갯도)을 국제예술가 레지던시 시설로 전환하여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평화아티스트 등이 참여하는 ‘국제평화문화예술축제(가칭)’ 등을 개최하고 그들이 상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2단계 천혜의 자연·생태환경(자연활주로, 섬 면적 등)을 활용하고 한중일 평화자본을 유치(특별경제자유구역 지정 등)해 전략적 문화정책으로 추진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연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인천공항 환승객(2박 3일 비자면제)의 유입 효과는 물론 동남아 관광객을 유치해 군사적 긴장완화 도모
- 3단계 서해 5도와 한반도의 서해·남해에 흩어져 있는 섬(3,300여 개) 자원 개발을 촉진하고, 여가·레저·수상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동남아 문화관광산업이 동북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 마련

추진과제 02

DMZ 문화로드 프로젝트 추진

▶ DMZ 문화로드(Culture Road)·유라시아 평화문화철도(Peace Culture Rail) 프로젝트 추진

- 세계평화운동가, 예술가, 종교지도자 등 평화의 순례길(Peace Road)을 조성하고 평화관광의 상징적 공간으로 조성
- DMZ 거점지역에 평화공원(Peace Park) 조성—동부권 편지불(강원도 양구 해안분지, 남북 12km, 동서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66km, 면적 447km², 여의도 6배 면적), 중부권 임진각 내 평화누리공원, 서부권 강화 교동도 등
- 남북한 철도, 유라시아철도 연결 구상과 연계하여 문화적 차원에서 남북의 길이 연결되는 '유라시아 평화문화철도' 프로젝트 구상 추진
 - ▶ 문화로 여는 평화 페스티벌 확대 추진
 - 현재 진행 중인 DMZ 국제다큐영화제뿐 아니라 '문화로 여는 평화'를 주제로 DMZ 비엔날레, DMZ 평화음악페스티벌 등 개최
 - DMZ 접경지역에 남북한과 세계의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평화를 위한 다양한 페스티벌, 예술행동 프로그램 개최('DMZ피스트레인뮤직페스티벌' 참고)

05 아시아 문화교류 확대와 국제교류협력 기반 조성

○ 개념

- ▶ 아시아 문화의 교류, 연구 등으로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아시아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다각화함
- ▶ 글로벌 문화국가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체계적·종합적인 국제문화교류·협력 사업 전개

○ 추진 배경

- ▶ 우리 문화를 해외에 홍보하고 전파하는 일방향적 문화교류를 넘어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쌍방향적 문화교류 협력사업 전개가 요구됨
- ▶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아시아 동시대 문화예술의 교류와 창조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왔으나 아시아 각국과 문화교류 활성화와 협력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 전개가 필요함

- ▶ 문화동반자 사업과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동아시아문화도시 등의 사업이 시행 10년차 이상을 맞이하여 좀 더 진일보한 협력 방안 구상이 요구됨. 또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국제교류협력사업의 확대·연구·조사사업 등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음
- ▶ 유럽, 미주 중심의 문화교류에서 벗어나 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체계적 접근이 필요함.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5조(국제문화교류진흥 종합계획수립)에 따라 국제문화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임
- ▶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중심의 국제 문화교류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중심으로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함

추진과제 01

아시아 문화교류 협력국가와 사업 다각화

- ▶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와 동아시아문화도시 내실화·고도화: 한중일 공동 추진 문화 사업과 문화 축제 발굴
 - 2007년 이후 10회째를 맞은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의 내실화·고도화를 위한 역량 집중
 - 한중일 공동의 ‘동아시아문화도시’ 브랜드 발전과 선정 도시 간 공동사업으로 3국간 문화네트워크와 협력관계 강화
 - 한중일 문화박람회(전통문화, 문화예술, 문화산업)로 확장하여 내실화하고 관광·스포츠 산업과 문화유산, 종교 분야로 확대하여 한중일뿐 아니라 아시아·세계인이 참여하는 문화축제로 발전
- ▶ 아시아 문화교류 다각화·다양화 확대
 - 주요 교류대상 국가가 5개국(중, 일, 미, 프, 독)에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남
 - 향후 북방(러시아, 몽골, 중앙아 5개국)과 남방(아세안 10개국) 지역, 서아시아 등으로 교류대상 권역과 국가 다양화 필요
- ▶ 북방 지역 문화교류 활성화
 - 국제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러시아, 몽골, 중앙아 5개국 등 북방지역 국가들과 문화교류 활성화 필요
 - 북방 지역 문화동반자를 매개로 국내 연수기관과 현지 문화예술기관 간 협력으로 장기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고 북방지역 문화기반강화 현지교육훈련·워크숍 대상국 확대
 - 북방 지역 문화부 대상 ‘문화기반강화 교육훈련·워크숍’ 수요조사와 맞춤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 ▶ 신남방협력 증진을 위한 아세안 문화교류 활성화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부분대화 상대국' 수립 이래 201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등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음. 아세안은 제2위 투자대상 지역으로 부상
- 아세안 지역은 문화교류에서 한류 중점국가로 국가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해 교류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중요
- 한·아세안 문화포럼 확대: 문화일반, 문학, 연극, 무용, 미술, 영화, 영상, 뮤지컬 등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 정부관계자가 참가하는 문화포럼, 국제문화 심포지엄 등 확대 추진
- 문화예술교육 공적개발원조 확대 실시와 문화예술교육 공적개발원조 신규 수원국 발굴·지원
- 아세안 문화담당 부처 대상 '문화산업 역량강화 교육훈련·워크숍' 수요조사와 맞춤형 협력사업 발굴·추진
-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 혁신방안 마련: 광주 '아시아문화의전당'을 아시아 문화예술의 중심으로 활성화
 - 2015년 개관한 국립아시아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조직 진단, 주요 업무분석 및 내부 역량강화, 첨단기술과 문화예술의 융·복합 플랫폼 지향, 아시아문화교류협력의 거점기관 활성화 방안 모색 등
- ▶ 문화동반자 사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AMA 장학생 및 AMFEK 사업 확대
 - 아시아 문화 전문인력의 교류협력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는 문화동반자 사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AMA 장학생 및 AMFEK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예술교육기관 간의 교류확대를 위한 국제교류센터 건립 추진

추진과제 02

동아시아 자유관광 기반 조성 추진

- ▶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등에서 논의해 단일 관광권역으로서 역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역내 관광 활성화 도모
 - 동북아 공동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는 한편, 장기적 차원에서 경계 없는 역내관광 교류 지향
 - 동북아 공동 관광브랜드 개발(가칭 'Visit East Asia') 및 3국 NTO 협력 마케팅으로 한중일 3국 연계 고품격 크루즈 상품 등 개발
 - 항공노선 확충, 계기별 출입국 편의 제고 등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 기반조성, 장기적으로 항공자유화 추진
- ▶ 전략적 다자협력과 한국형 관광개발 협력 모델 추진
 - 국제기구 등 주체별 특화 분야의 협력을 이끌어 선진국과 협력 채널로 적극 활용, 세계 관광시장에서 한국 관광 위상 제고(※유엔세계관광기구, PATA, OECD 관광위원회, APEC·ASEAN 등 지역기구 등)

- 관광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관광전문 국제기구 유치 검토, 각종 관광 분야 국제회의·컨벤션 유치
- 한국의 관광성공 모델을 전수하고 우리 기업·연구기관 등의 진출과 투자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공적개발원조 사업 발굴 추진

추진과제 03

국제 문화교류와 협력 지원 기반 조성

- ▶ 국제 문화교류 조사연구와 정보제공 기능 강화
 - 국제문화교류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주기적 실태조사, 국제문화교류 관련 연구·학술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 국내외 문화교류 동향, 각종 정책자료, 국제교류 기관·단체별 사업계획과 사업시행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국제문화교류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 ▶ 맞춤형 문화교류 사업 기획과 지원
 - 국제문화교류 협력 주체별(공공, 민간), 영역별(문화정책, 문화예술, 문화산업 등)·해외권역별 국제문화교류 지침 제시,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교류지역 다변화와 효율적 문화교류 시행
 - 수교기념 문화행사 계기 또는 재외문화원과 해외 현지 문화예술단체의 수요를 반영한 우수 공연·전시 프로그램(단체)의 해외 진출·교류 기회 확대 추진
- ▶ 국제문화교류 정책 종합계획 수립
 - 국제문화교류 비전·추진전략 제시, 추진체계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과제 발굴 등으로 국가 간 쌍방향 소통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국제교류 환경조성
- ▶ 국제 문화교류 지원체계 구성
 - 국제교류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국제문화교류진흥위원회 구성·운영
 -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과 단체들 간의 정보공유, 협력을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유관기관·지자체 협의체 구성·운영

의제9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문화는 창의적 사회혁신의 매개,
사회 문제해결 · 미래 사회변동을 준비하는 동반자로
문화가 사회혁신의 동력이 되자”

- 우리 사회 구성원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의제는 삶, 즉 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을 이끌어냄
- 문화정책이 미래 변동, 사회혁신 의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면 ‘문화적 접근’, ‘문화적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새로운 문화정책의 지평을 넓혀야 함
-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 의제—일자리, 교육, 지역문제, 환경과 에너지 등—와 미래 변동 과제—인구변동, 기술진보, 인간소외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문화정책 실현
-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돕기 위해 ‘문화적 접근’, ‘문화적 과정’이 필요하며, 더 나은 삶을 위한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공론 · 학습 · 해결의 문화플랫폼’을 확산하는 문화정책 체계 마련

대 표 과 제

1. 사회 의제를 주도하는 문화정책 협력체계 마련
2. 더 나은 삶을 위한 ‘공론 · 학습 · 해결의 문화플랫폼’
모델 확산
3. 공공문화 서비스와 사회문화적 일자리 전환
4. 문화 공유지 활성화에 따른 지역 · 공간 재생
5. 기후변화에 문화적으로 대응

01 / 사회 의제를 주도하는 문화정책 협력체계 마련

○ 개념

- ▶ 사회 문제 해결, 미래변동에 대응하는 범정부적 협력체계와 문체부 내 외부체계를 마련해 체계적이며 선제적 대응
- ▶ 창의적 의제 설정과 문화적 접근이 가능한 연구, 공론화 체계로 시민, 지역, 현장이 참여하는 다층적 채널 마련
- ▶ 협업 모델을 확대해 지식 기반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 역량 확대

○ 추진 배경

- ▶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문화정책 의제들이 대부분 현장과 지역단위에서 집행됨에도 부처 간, 부서 간, 사업 간 칸막이 행정에 따라 문제의 현장, 삶의 현장 차원에서 종합할 기회가 막혀 총체적이고 중첩적이어야 하는 창의적 사회혁신이 어려운 상황임
- ▶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사회적 의제에 대한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의 지식과 경험, 역량이 미흡하며 타 부처의 정책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를 시도할 기회가 제한적임
- ▶ 일자리, 인구, 에너지, 지역 문제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혁신 의제의 문제 해결에 문화정책이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다각도로 발굴하기 위해 공공-민간, 정부 부처 간 정책 협력 채널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추진과제 01

사회부처 중심으로 협력체계 강화

- ▶ 사회혁신 의제와 문화정책 협력체계 확대
 - 사회문화부총리 도입을 추진하여 사회정책과 문화정책이 통합된 의제 아래에서 사회변동 현안 전반을 파악하고 부처 간 협업 활성화 기반 마련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지역주권에 입각한 현장 주도의 사회혁신 기획과 책임이 가능하도록 부처 간 협력체계를 내실화
-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발전위원회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사회혁신 의제들과 교류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 적용하는 채널 마련
- ▶ **복합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융합형 부처 간 협업 모델 확대**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문화재생, 교육부 창의성 교육과 문화예술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관의 문화예술 교육 거점화, 외교부의 다자 외교와 문화의 역할, 보건복지부 인구 변동과 문화적 해법, 고용노동부 일자리의 개념 전환과 문화적 접근, 행정자치부의 자치분권과 문화분권, 산업자원통상부의 혁신도시 시즌 2와 문화도시 등 융합형 협업 모델 확산

추진과제 02

의제 발굴과 실행 협력체계 구축

- ▶ **미래 변동에 대비하는 창의적 의제 발굴 및 실천 협력체계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내 ‘문화와 사회혁신 의제’ 기획·협력부서 신설-현재 문체부 기획조정실 미래문화전략팀을 사회혁신과 통합의제를 다루는 부서로 확대 개편
 - (가칭) ‘문화와 사회혁신 포럼’을 구성·운영하여 문화정책으로 사회혁신 전반의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획·협력 체계 마련
 - 미래 사회변동 중심의 문화의제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기획·협력체계 운영. 리서치와 포럼 방법론에서도 전문가·시민 심층인터뷰, 소셜 픽션 등 새로운 접근법을 활용해 리서치·연구·컨설팅 작업 추진
- ▶ **문화기반 사회혁신 중간조직 등과 진취적 협력 창구 개발**
 - 부처 간, 부서 간 성과와 역할을 협의하며 세부 과업 실행 단위에서 다분야 간 협력을 기획하고 번안하고 조율할 수 있는 문화기반 사회혁신 전문 중간조직 활성화 지원
 - 현재 행정부처와 산하기관의 제도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실행 중심의 혁신협력 조직 필요
- ▶ **문화기반의 혁신가치 맵핑 체계 마련**
 - 문화기반의 혁신이 지향 가치와 방향성에 대해 인지하고 공감하며 행동할 수 있는 개방형 지표로서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 범문화정책 차원에서 과제의 지표로 용이하게 차용할 수 있도록 시민 개인 차원/소사회/조직/지역/국가의 축과 사회혁신 가치의 축에서 가치 그리드를 개발, 문화기반의 혁신가치 지향과 접근 공유

추진과제 03

문화영향평가의 확대와 실효성 강화

- ▶ 관련 법령을 정비해 평가대상 확대·구체화, 평가결과 환류체계 마련 등 문화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 ▶ 평가지표의 지속적 개선, 계량적 평가도구 개발 등 평가의 체계성 확보, 자체평가 도구 개발, 우수성과 발굴 등 평가의 사회적 확산 도모

02

더 나은 삶을 위한 ‘공론·학습·해결의 문화플랫폼’ 모델 확산

○ 개념

- ▶ 사람, 삶, 삶의 종합적 기획과 성취를 추진할 수 있는 ‘사회혁신을 위한 지식기반 문화플랫폼’ 모델을 정립하고 확산
- ▶ 공론·학습·해결의 문화플랫폼 모델을 확산해 지역 기반 혁신역량 확산
- ▶ 일자리-주거-창업 연계 ‘자율문화지대’로 통합적 혁신 역량을 집결하고 모델 확산

○ 추진 배경

- ▶ 우리 사회는 전 국민의 삶의 문제를 분야별로 나눠 중앙정부의 부처별 해법을 제시하고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섬. 저출산, 고령화, 청년, 지방소멸 등의 문제는 후기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중층적 문제들임
- ▶ 중앙정부가 상대하는 국민, 광역지자체가 상대하는 도민과 시민의 큰 규모를 놓고 설계하는 공급 주도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정책은 한계에 직면함. 우리 사회의 발전 단계와 문제 양상에 맞는 ‘대책’은 소량 다품종의 상향식 다양성으로만 발굴될 수 있음

- ▶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문제들에 대한 창의적 해법의 씨앗을 품고 있는 수많은 미시적 대책과 사례를 연결하고 융합하는 공론과 학습과 해결의 장으로서 문화플랫폼 개념을 적용할 필요가 큼
- ▶ 문화를 통한 사회혁신이 사람의 문화, 삶의 문화, 삶터의 문화라는 관점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에 따라 재발견되어야 한다면 사람-삶-삶터의 문화를 다양하게 기획하게 될 지역의 사회혁신에 성패가 달려 있음
- ▶ 대표적 사회 의제 정책사업들은 지역에서 종합되어야 함. 이는 곧 지방분권, 지역주권의 틀에서 부처별 각종 정책과 자원이 융합 과정을 거쳐 재구성되어야 함. 지역별 사회혁신을 위한 문화플랫폼의 시범적 운영을 문체부가 지역에 적극 장려하며 대표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함

추진과제 01

문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삶 개선 정책 ‘문화로 바꾸는 삶’ 추진

- ▶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지역 고유문화에 기반하여 사회 의제에 대한 문화적 대안을 찾고 지역 주민 간 자발적 소통이 원활하도록 여건을 조성
 -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지방소멸, 세대갈등, 가족해체,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의제에 대한 문화적 대안 모색
 - 사회적 의제를 지역단위에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문화 기반 혁신 접근의 주도적 시도를 지원
 - 사회문제를 예술적 방법으로 리서치하거나 문화 기반의 사회적 인지로 새롭게 지각하고 정의하는 데에서 문화기반의 실험과 예술적 개입의 접근을 정책적 과정으로 통합하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방법론과 가치 개발
- ▶ 지역의 문화기관·문화기획자·예술가 등을 구심점으로 지자체·대학구성원·기업·비영리단체 등의 협업 여건 조성
 - ※ 예시: 네트워킹 공간과 네트워킹 기회 제공

추진과제 02

일터와 삶터가 결합된 '문화지대' 조성 검토

- ▶ 「지역문화진흥법」상 문화지구를 일자리 개념까지 포함하여 확대
 - 도시계획과 연계해 문화 일자리 공간과 생활공간이 결합된 문화지대를 조성하고 예술가와 문화 소상공인 유치 지원
 - ※ 예시: 창작공간, 소규모 가게 · 소규모 사무복합공간의 복합용도 개발
- ▶ 창업 · 창작지원 · 유통 · 교육 등 관련 문화정책 · 사업을 망라하여 통합적으로 기획할 지역 내 중간조직 육성
- ▶ 일자리-주거-창업 연계 '자율문화지대' 구상
 - 일자리, 주거, 작업공간, 창업, 교육 등에 해당하는 문체부의 각종 정책사업을 망라하여 '일시적 자율 문화지대'에서 통합적으로 기획 · 지원하고 이 경험이 해당 지역과 마을의 사회문화 플랫폼으로 발전하도록 함
 - 여타 부처의 정책사업과 해당 주체들과 더 큰 연대와 통합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함. 또 지역과 마을의 통합적 주체 역량 발굴에 노력함
- ▶ 문화지대를 조성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 단기 임차료 안정화 정책(short-term rent stabilization), 가치에 따라 재산세에 변동을 주는 정책(sliding scale for property taxes), 소득세 세액 공제 등

추진과제 03

문화와 사회혁신 분야 프로젝트 기반 '혁신학교' 운영

- ▶ 문화적 지역재생, 마을공동체 육성, 사회적 경제활성화 등 문화적 사회혁신 관련 주제를 학습 · 연구 · 적용하는 기회 제공
 - ※ 중앙 · 지자체 공무원, 지역문화지원기관 종사자, 문화기획자, 예술인 등을 대상
- ▶ 문화와 사회혁신 연계 분야의 프로젝트 기반 혁신학교 운영
 - 문화적 지역재생,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등 사회혁신과 문화협력 분야 주체들의 연구와 협업, 숙련을 위한 프로젝트형 지식공유 학교 기획
- ▶ 공론 · 학습 · 해결의 지역혁신형 문화플랫폼 모델 정립과 확산
 - 지역의 통합적 사회 의제를 논의하고 공동학습으로 해결하는 사회문화플랫폼 모델 구상

03 공공문화 서비스와 사회문화적 일자리 전환

○ 개념

- ▶ 공공문화 서비스 분야에서 기존의 영리/비영리 경제학 구분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생성하는 문화 일자리 정책 마련
- ▶ 공공문화 서비스 분야에서 지역 사회혁신 활동에 기초한 문화 일자리 확대

○ 추진 배경

- ▶ 역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경과적이고 단절적인 일시적 공공근로 일자리가 양적으로 확대된 것에 불과하여 정책 수요자들에게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동기 부여나 의미 형성이 부족하였으며, 문화정책과 연관된 일자리 정책에서도 큰 차별성이 없었음
-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신산업 등장, 기존 산업의 전환으로 유지될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됨. 대다수 임금노동이 소멸되거나 일거에 증발할 경우 막대한 사회적 혼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 점에서 현행 일자리의 개념과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함
- ▶ 공공문화 서비스 분야에서 사람의 문화, 삶의 문화, 삶의 문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기반으로 공공 서비스와 일자리가 결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득 개념의 사회혁신 과제(일)와 새로운 문화일터(자리) 만들기가 요구됨
- ▶ 영리와 비영리의 혼합 영역인 사회적 경제 영역의 잠재적 활동, 임금노동 바깥으로 배제된 여성들의 가사노동, 아동과 청소년·병자와 노인에 대한 각종 돌봄 활동 등 지역의 공공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 영역의 사회문화적인 일들과 그 일로 관계가 형성되는 자리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적극적 평가가 필요함

추진과제 01

공동체형 문화 일자리 확대

- ▶ 지역사회,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다양한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문화 서비스 일자리 창출 지원
 - ※ 문화관광해설사, 생활체육지도자, 예술강사 등
- ▶ 커뮤니티형 문화 일자리 확대: 문화두레
 - 지역단위에서 창의적인 공동체형 일자리를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공동체형 사회문화적 일자리 확대
 - 문화 영역의 일자리 정책부터 방향과 방식을 전환하여 5~10명 단위부터 소량 다품종 일자리를 아래에서 기획하고 위에서 지원하는 수요 중심의 견인정책 도입
 -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두레’ 사업에 생활문화두레, 예술마을두레, 생활체육두레 등의 공동체 활성화와 공공 서비스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창의적인 커뮤니티형 일자리 기획 확대
- ▶ 실패를 응원하고 재기를 돕는 일자리 문화협력 프로젝트
 - 취업, 창직, 창업, 단체결성 등을 시도했다가 중단했거나 실패한 청년과 중년을 대상으로 그 실패 경험 안에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과 아직 발견되지 못한 사회문화적 잠재력에 대해 집단지성으로 배우고 공동의 자산으로 삼으며 팀 결성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 ‘실패자산-문화캠퍼스’ 운영
 - 이로써 2차와 3차의 새로운 시도를 하는 청년과 중년에게는 최소 2년간 일자리를 지원해 지역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협업에 따른 자립이 일어나도록 지원

추진과제 02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비한 정책대응

- ▶ 신직업 발굴, 신직업 관련 진로지도와 교육훈련 프로그램 구축
- ▶ 프리랜서형 근로방식 등 문화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노동 관련 법·제도 적용범위 규정과 지침 제공
 - ※ 주요국은 미래 노동시장의 핵심 축인 프리랜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의 사회적 인식 변화, 법·제도적 규정, 정책적 지원을 확대
- ▶ 문화·체육·관광 분야 인력 활동 조사체계를 갖춰 일자리 현황 파악, 일자리 안정과 근로환경 기준 정보 생산 활동
- ▶ 대학-지역 연계 문화 일자리 만들기 협업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 지역의 대학생들이 전공수업의 일환으로 대학 소재 지역에서 문화와 사회혁신 연계 분야의 영리-비영리-혼합형의 다양한 창업과 창직을 시도하여 대학생 시절부터 스스로 일과 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경험과 기반을 조성함
- 지역활동 연계 장학금을 제공하여 지역 밀착형의 대학생 진로 개발을 대학생이 주도하는 새로운 접근법 추진

04 문화 공유지 활성화에 따른 지역·공간 재생

○ 개념

- ▶ 지역·공간 재생 과정에서 문화적 프로세스 적용을 확대해 사회적 창의성을 증진함으로써 공론화 역량 강화
- ▶ 공공 소유 문화자산 활용에 대해 지자체와 지역민 이니셔티브를 확대해서 민간·현장 파트너십 확대

○ 추진 배경

- ▶ 기존의 전면 철거와 전면 개발식 지역재생이나 특정 지역을 분리해 점처럼 공간 개선을 시도했던 지역재생은 지역 전체의 도시 생태계와 괴리되어 경관 문제뿐 아니라 재생지가 섬처럼 고립됨으로써 도시 정체성에 균열을 가져왔음
- ▶ 지역재생 이후 주민의 자발성과 교류 활성화를 바탕으로 공동체성이 증진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반대로 주민 주도성을 배제하고 관과 개발자가 단기간에 사업을 끝내는 경우가 많았음
- ▶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지역재생 추진 첫 단계에서 최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하는 문화적 접근이 필수적임

- ▶ 문화적 지역재생은 시설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재생지에서 살아가고 관계를 형성할 사람 중심으로 전환함.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이 협치 원리에 따라 지역 전체의 구상과 문제점을 공유하는 가운데 중장기 관점에서 재생지 사업을 기획하는 과정을 선행해야 함
- ▶ 협치 과정에서 재생지의 여러 문제를 공론화할 때 예술적 방법으로 리서치를 진행하고 광의의 문화자원과 잠재성이라는 차원에서 보존할 것과 개선할 것, 전면적으로 바꿀 것을 분석하고 그 상호 작동방식에 대한 설계를 우선해야 함
- ▶ 동시에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운영 주체와 지속가능성을 다뤄야 하며 문화적 공유지를 확대한다는 원칙에 따라 협업적 운영 주체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임

추진과제 01

지역 주민 주도 문화자원의 활용계획 마련·운영

- ▶ 지역·공간 재생 과정에서 문화적 프로세스 적용 확대
 - 지역재생 사업 시행 이전 단계에서 참여자들 간의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촉진하고 새로운 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들어 갈 공통의 문화적 토대를 쌓는 것을 목표로 삼고 추진
 - 관계망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적 도시재생 기획·실행그룹을 발굴하고 공유지의 문화적 활용방안을 수립하며 운영에 일정 역할 부여
 - ‘거버넌스 주도 문화재생 실행 매뉴얼 개발 및 보급’ 등 환경 조성(관계부처 협의)
- ▶ 문화예술인 공공임대주택, 다목적 작업 공간 등 문화 공유 공간 확대
 - 문화적 지역재생 사업은 개방적 네트워크와 다양한 실행그룹으로 조직화되는 과정이 우선함
 - 문화인 공공임대주택, 다목적 작업공간과 메이커스페이스, 문화예술교육, 축제, 일자리, 생활문화·생활체육·생활관광 등의 지원사업을 융합 정책화하여 주민·예술인과 각 분야 전문가의 참여 규모와 협업 단계에 따라 종합적 지원을 하도록 체계를 구축함.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재생 해당지의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문화적 도시재생 추진단(중앙-광역-기초정부) 구성 제안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추진과제 02

문화적 활용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민 역할 확대

- ▶ 공공 소유 문화자산 활용에 대한 지자체와 지역민 이니셔티브 확대
 - 도로, 산야, 군부대, 폐교 등 국유지의 문화적 활용에 대한 민간의 역할 제고
 - 빈집, 빈 상가, 폐산업 시설, 개발중단건축물 등에 대한 정보 공개로 민간 참여형 문화 거점화 확대
 - 활용이 미진하거나 방치된 문화체육시설을 시민사회, 민간에 위탁 추진
 - ‘거버넌스 주도 문화재생 실행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시민의 문화자치권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

05 기후변화에 문화적으로 대응

○ 개념

- ▶ 환경·에너지·생태 중심 문화적 전환도시 계획수립·확대로 기후 변화, 에너지 고갈 등 미래 사회 변동에 대응하는 문화체계 확대
- ▶ 문화도시, 문화시설, 문화행사 등 문체부 추진사업에 에너지 전환 계획을 추진해 사회 의제 참여 확대

○ 추진 배경

- ▶ 기후변화 등의 문제는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문화와 공동체성에 커다란 도전을 제기함. 환경·에너지는 환경부나 산업통상자원부만의 의제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모든 정책과 사업에도 대전제가 되어야 하는 상순위의 사회적 가치임
- ▶ 환경·에너지 문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가장 큰 사회문제가 되었음. 그에 따른 인식도 미세먼지를 넘어

우리의 산업과 소비에 따른 생활문화가 유발하는 미세먼지로 전환되고 있음

- ▶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당위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산업계의 반발이나 속도 조절과 더불어 국민 다수가 생활문화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학습, 토론, 공론화 경험이 많이 부족한 상태임
- ▶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정부가 만든 수많은 문화시설에 대한 환경·에너지 현황을 먼저 조사·발표해서 문화계 종사자의 인식 전환이 시급함
- ▶ 사람-삶-삶터의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는 자연과 생명에서 출발하며 지역과 공동체는 자연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 가는 원천임. 에너지 고갈과 기후변화 등의 당면한 문제에 대해 문화가 갖는 본원적·사회적 가치 모두에서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가장 앞서 직면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함

추진과제 01

환경·에너지·생태 중심 문화적 전환도시 계획 도입

- ▶ 환경·에너지·생태 중심 문화도시 전환모델 계획 수립과 확대
 - 에너지를 적게 쓰고 자급자족형 에너지 전환을 도시와 공동체 전체로 확산하는 캠페인을 관련 문화정책 전반에 걸쳐 도입함
 - 도보 친화적인 무동력 교통체계·생태 친화기술 중심으로 특화된 문화지구, 문화공단, 관광단지 등을 집약한 도시 전환 모델 제시
 - 환경·에너지를 고려한 문화적 전환도시 계획을 수립하여 이 계획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산업통상자원부의 혁신도시 시존 2 사업에 반영되도록 차별화된 가치와 내용을 담음
 - 지역과 공동체의 수용능력을 측정해 도보 친화적인 무동력 교통체계를 도입하는 것부터 공동체 기반의 스마트 디바이스와 모빌리티 활용에 따른 생태 친화기술 중심으로 특화된 문화캠퍼스, 문화공단, 둘레길 축제 등을 집약한 도시 전환 모델을 제시함
- ▶ 환경·에너지 관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
 - 지역의 각종 축제, 이벤트 등에서 환경·에너지 중심의 전환 계획을 포함하고 대안적 사례들에 인센티브를 제공
- ▶ 생태친화 문화예술교육 캠퍼스 조성, 프로그램 확대
 - 적정기술, 제작문화 기반의 활동을 수용하는 생태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환경에너지 관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

2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무엇을 할 것인가?

추진과제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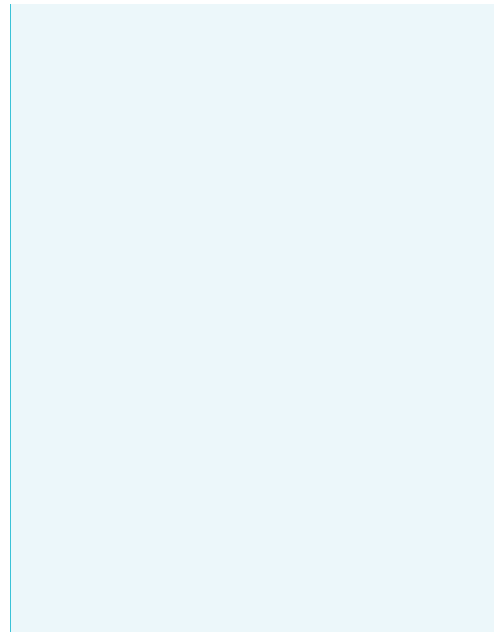
문화시설과 행사에 에너지 전환 개념 도입

- ▶ 문화도시, 문화시설 등 문체부 추진사업에 에너지 전환 계획 추진
 - 에너지 사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의 문화시설에 대한 환경·에너지 현황을 조사하고 탄소발자국을 표시해 해마다 구체적인 저감 목표와 에너지 전환 계획을 추진함
 - 문화도시, 문화마을,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들을 계획할 때 환경에 미칠 영향과 에너지 전환 계획을 포함하도록 해야 함. 이를테면 당인리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상징적으로 친환경 재생에너지 및 자급자족형 에너지 플랜을 핵심가치로 설정함
- ▶ 공공지원 지역 축제와 경기·대회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할 때 환경·에너지 중심의 전환 계획 포함 의무화

의제9.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문화비전2030

사람 이 있는 문화



3부

사람이 있는 문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1. 비전 실행 협치 방안
2. 문화행정조직 혁신
3. 법·제도 개선과제
4. 중장기 재정전략

01 비전 실행 협치 방안

제안 배경

“정책과 제도, 수립과 운영의 방식이자 목표로서 협치”

- 협치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 작동에 민주주의를 더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임
- 정책수혜자들을 문화정책 운영의 주체적 행위자로 설정하고, 정부는 이들의 참여 강도와 정보 균형을 유지하게끔 조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개념으로 협치체계가 조성되어야 함
- 협치는 공공결정 과정의 모든 것임
 -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기획 단계부터 평가 환류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국민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함
- 협치의 제도화가 필요함
 - 협치를 위한 조직, 협치를 위한 지원조직 등이 있어서 상설적·조직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현황

- ▶ 새문화정책준비단이 문화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사안을 선택하는 속의 과정으로 개최한 정책포럼, 현장토론회 등에서 행정에 대한 불신과 개혁의 요구가 노골적으로 드러남
- ▶ 개별 정책사업 내용의 유효성 이전에 문화행정·정책운영의 방식과 지향점에 대한 큰 틀의 혁신이 우선되어야 문화비전의 유효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음
- ▶ 문화행정을 바라보는 불신과 불편함
 - 정책이라는 큰 골조 안에 지역과 현장과 공동체, 예술가를 퍼즐처럼 끼워 맞추는 식의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불편한 인식
 - 참여라는 미명 아래 이뤄진 사업 안에서 성과로 불리고 대상화되어 주체에서 객체로 전복되는 상황 반복
 - 공급형 행정구조와 정책적 통치행태로 지칠 대로 지친 정책수혜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퇴행적인 예술독재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정책 운영구조 개혁에 대한 요구
- ▶ 현장성 확보와 거버넌스

1. 비전 실행 협치 방안

- 문화예술기관의 관료주의적·기능주의적 운영은 계량화 중심의 성과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그 자체로 전문성 상실과 현장성 부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함. 따라서 정책수혜자들이 정책수립과 운영과정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사업구성과 집행의 유효성·투명성 확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요구됨
- 현장의 문화예술 주체들과 정책기관 간 책임·권한·역량을 공유해 정책운용의 위계적 체계를 해소하고 현장과 문화예술기관이 유기적으로 관계하는 바탕을 마련해야 함
- ▶ 민주사회에서 문화정책의 요체로서 협치
- 문화정책 수립이나 운영과정을 시민사회에 개방해야 함. 문화정책의 실질은 시민들의 참여로 결정하고 정부는 그러한 결정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하지만 대부분 정책결정 과정은 행정관료가 주도하거나 합의제 외곽기관이라는 형식만의 거버넌스 체계에서 수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실제 문화정책 과정에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은 단순히 민간위원의 참여라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며, 참여를 넘어 실질적으로 문화(정책)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을 확보해야 함

현행 문화기본법은 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개발을 하는 전담기관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과 같은 외곽기관의 지정(제11조)에서 문화예술정책의 핵심기관으로 설정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설립(제12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결정의 틀을 마련했으나 그 어디에도 이러한 결정을 하기 위한 관·시민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나 그 운영을 위한 이사(임원) 구성 또는 이를 견제하는 별도 조직의 설치/구성 등을 구속력 있는 규범으로 정해 놓은 사례가 없음

문화기본법이 마련한 규율은 기관의 설치와 수권규범 등 권력 분배에 관한 사항이 전부이며 이렇게 분배된 권력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규정은 전무한 실정임

○ 문제점

- ▶ 통합적 정책협의 채널 부재, 중앙정부 중심의 위계적 전달체계
- 공급자 관점, 중앙정부 주도 획일화된 사업·예산 운용
 - 현행 예술정책운영체계는 상위기관의 규정성이 강력하게 작동되는 체계로 정책적 협의 기능은 매우 제한적이며 중앙과 지역 간 재정분담과 행정서비스 전달통로로 구조화되어 지역문화재단 등 중간지원기관의 사업운영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예술현장, 시민 등의 수요자 정책 반영이 불가능한 체계

3부 사람이 있는 문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지역과 현장의 정책수요가 반영되지 못한 하향식 운영체계
 - 국비·지방비를 매칭해 지역협력형 사업이 양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인데도 사업별 자원배분 기준의 정책적 일관성이 미흡함. 지역·사업영역별 정책수요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정책적 자원배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 현재와 같은 단년도·단위사업별 재정운영 원칙을 중기적 관점에서 지역별 재정협약에 따른 포괄적 문화재정 교부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 문화예술현장의 참여구조가 배제된 정책작동체계
- 공공부문 주도·공급자 중심 정책운영체계에서 민간영역·예술현장은 구조적으로 배제된 상태
 - 수직적 관료제의 문화행정체계상 민간·예술현장 주체들은 협치와 거버넌스의 공식적 주체로 참여하지 못하고 지원사업의 수혜자, 문화향유자로서 호출되는 상황
 - 문화민주주의 맥락에서 현장의 예술인, 시민들은 스스로에게 부여된 문화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정책운영의 책임 있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어야 함
 - 정책결정과정에서 적용되는 전문가주의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참여적 문화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함
 - 문화부와 예술위원회 등 중앙의 문화정책기관은 정책형성과 평가, 지역단위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정책사업 추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예산과 사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관이 주도하는 협치는 민은 자문하는 들러리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큼
 -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협치 방식이 필요
 - 협치가 일시적인 자문위원회, 토론회, 공청회 등으로 형식화하거나 관료들의 행태를 정당화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민에서는 불신이 높고 지속가능성 문제가 있음

개선 방향

- | | |
|---------------------|-----------------------|
| ■ 통합적·상설적 정책협의체계 마련 | ■ 중앙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분산·이양 |
| ■ 다양한 형태의 민간조직과 협력 | ■ 정책수혜자의 적극적인 참여 지원 |

- ▶ 문화정책과 지원계획의 수립과 운영 양자에 걸친 협치체계 개발과 정비 작업은 무엇보다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항
 -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거버넌스가 아니라 정부와 시민사회가 일정한 틀 안에서 구성한 협업관계 또는 양자 간의 네트워크가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를 지향함

1. 비전 실행 협치 방안

- 정부는 공적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추출하거나, 정책·서비스 우선순위를 선정하거나, 공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급방식을 발견하는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둠
- 결정 권한은 협력자인 시민사회에 위임하고 정부는 그 결정을 위한 정보와 조건들을 구성·제공하는 방식이 타당함

▶ 통합적·상설적 정책협의체계 마련

- 정책작동체계에 포함된 다양한 운영주체가 참여하는 통합적 정책협의 기구를 설치하여 상설적 정책협력 네트워크로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문화부 직속 기구로 설치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 예술현장 등의 대표성을 기반으로 구성
- ‘정책계획의 수립’과 ‘평가환류’ 단계를 중심으로 통합적 조정, 의사결정 권한 부여

▶ 분권형 문화예술지원체계

- 사업별 특성과 정책수요에 따라 사업·예산 권한을 중앙→광역→기초로 이관·이양
- 현 체계상 사업단위로 예산이 교부되는 운영방식을 실제 사업 운영주체인 광역·기초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포괄적 보조금으로 운영할 수 있게 개편
- 중앙 지원기관과 광역문화재단 간 정책적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여 광역 단위 정책사무와 예산을 광역문화재단으로 이관하고 생활권역 중심의 정책사업은 기초문화재단을 중심으로 개편

기초지자체 단위는 생활권의 일상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촉발되고 장려되도록 미시적 제도와 조직의 장을 마련하는 일에 전념하여 지역문화와 생활문화 정책의 일선으로서 역할을 함
광역과 중앙은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기획 권한과 포괄적 예산집행의 여건을 제공하면서 기초단위가 대처하기 어려운 예술창작지원과 문화산업 지원을 뒷받침한다.

▶ 민관 거버넌스 정책패널제도 마련과 협치 인식 확산

- 당사자주의에 입각 현장 예술인들의 정책집행, 심사, 평가 참여제도 마련
- 전문가주의의 위임 대표성 보완, 활동분야·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비례대표성에 기초한 정책패널 구성
- 문화향유권자로서 국민들은 직접 또는 국회 등을 통한 간접적 방법으로 모든 문화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함

3부 사람이 있는 문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관료주의적 성과관리 지표 지양: 현장성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 기능 강화

- 행정편의성을 배제하고 변화하는 현장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하는 체제를 마련함과 동시에 사업성과 위주의 관리 지표체계를 변화시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사업 평가의 계량적 의존도를 해소하고 사업 평가 운영을 실물지표에서 가치지표로 선화하는 작업 필요
- 사후 평가 위주의 계량화에서 벗어나 연구 기능 등을 확보해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표개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안 마련

▶ 현장과 소통을 구조화하는 소위원회 등 상시적 플랫폼 기능 강화

- 성과 관리의 핵심을 이루는 정부부처 등 상급기관의 감독과 지휘 권한을 현장의 요구와 미래 가치 실현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등 상시적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현장성이라는 개념이 구조화되어 기관 내에 흡수될 필요가 있음. 이로써 문화예술기관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여 문화예술 현장과 문화예술 정책 사이의 괴리를 줄임
- 현장과 소통 부족은 현장의 역량을 기관의 자산이자 역량으로 끌어오지 못함으로써 정부부처와 관계에서 위계성을 강화하게 만들
- 문화예술 현장과 소통 부재는 정부부처와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도 상실하게 만들
- 소위원회 등 기관과 현장 간의 플랫폼 기능을 활성화해 현장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기관 자체의 플랫폼화 시도

실행과제

▶ 문화비전위원회 설립을 통한 『문화비전2030』 실행계획 체계적 추진

- 『문화비전2030』의 지속적·안정적 실행을 위하여 민관협치조직을 설립 및 운영

▶ 문화의제를 사회에 반영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기구 운영

- 현재 복지부, 여가부, 교육부의 장관 등 14개 부처 장관이 참여, 정부의 사회보장정책 전체를 심의하는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총리)가 운영 중임
하위에 국민 여가 증진, 예술교육, 성평등, 예술노동 등의 주요 문화정책개발에 대한 세부 전문위원회를 두어서 예술교육, 고용과 여가, 문화의 조화로운 삶의 정책적 설계, 지역 계층 성평등을 넘어서는 문화복지와 관련 현안 협력사안의 일상적이며 정례적인 협의가 가능토록 함

▶ 중앙, 광역, 기초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 마련)

1. 비전 실행 협치 방안

- 숙의를 거쳐 각 지역의 문화진흥을 도모하는 지역 공공기구로서 중앙, 광역, 기초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한 심의 기능을 확대 강화
- 성별, 세대별, 연령별 균형 있는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주민, 문화예술인, 사회적 약자(소수자), 문화 관련 기관과 단체 관리자, 지역문화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
-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필요시 업무 지원 전담기관 지정
-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해 설치 근거 마련

▶ 문화정책에 대한 사후적 통제 가능성 확보

문화정책을 단순히 행정청의 자유재량으로 규정하는 현재의 법 상태에 대한 근본적 치유가 필요

- 문화예술지원은 문화국가와 사회국가의 틀에 따라 국가의 재량권력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기속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정책에 대한 사후적 통제, 특히 사법적 통제 가능성을 대폭 확대해야 함
-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상대방이 존재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결정할 경우 결정권이 있는 사람/기관은 그 결정의 이유와 근거 그리고 결정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지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결정과정과 관련한 당사자들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 특히 그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들에게 이의신청 기회를 폭넓게 부여해야 하며, 이들이 경우에 따라 사법적 구제절차에 호소해도 문화정책의 적정성, 불가피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피고인 행정청도 더불어 부담하는 체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옴부즈퍼슨(Ombuds-person)과 같은 고충처리담당기관을 설치하여 좀 더 간소한 방식으로 사후적 통제 장치를 확보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협치박람회 또는 보고회 개최

- 협치 성과를 민과 관이 공유하여 축적해 나가는 활동으로 협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도모

▶ 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방형 기관 운영 제도 마련

문화정책담당직의 개방

- 블랙리스트와 관련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사업들이 집중되어 있는 예술정책관과 같은 직무영역은 관료의 순환근무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민간에 개방하여 관료화를 막고 이를 중심으로 각종 지원사업의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공공행정 각 부서에 협치 담당 인력 배치·협치 전문인력 양성

- 협치는 갈등 조정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통을 위한 상시적 업무가 필요하며 관련 전문가가 필요함. 행정도 알고 현장의 속성도 이해하는 협치를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함

3부 사람이 있는 문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 『문화비전2030』 보고서 영문번역 및 영문보고서 발행
 - 각국 문화부와 유네스코 본부에 제공
- ▶ 『문화비전2030』 정책과제별 협치기구 요약

정책과제		협치기구와 제도
• 표현의 자유 보장과 예술인 권리보호		▶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호위원회
• 문화예술인/종사자 노동권과 인권 강화		▶ 문화예술노동권위원회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호위원회 내 소위) ▶ 예술인복지센터
• 예술인복지 통합정책 수립과 확산		▶ 문화예술노동권위원회 ▶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 국가문화정책 협치 강화	범부처차원의 문화정책	▶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문체부 및 산하기관 문화정책	▶ 문화비전위원회
		▶ 문화예술지원기관협의회
		▶ 협치박람회/보고회
		▶ 문화정책담당직 개방제도
		▶ 옴부즈퍼슨(Ombuds-person)제도
• 문화다양성 정책위상 강화		▶ 문화다양성위원회
•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 지역문화참여예산제도

02 문화행정조직 혁신

제안 배경

조직혁신이란 문화행정제도 전반에 대한 ‘권력기관으로부터 문화정책의 자율성과 합리성 확보’,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문화행정체계의 정상화’, ‘문화예술전문기관의 독립성과 기관 내 민주적 운영체계 확보’, ‘국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참여 및 비판에 기초한 문화행정 민주화’ 등의 혁신 조치가 엄중하고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문화비전의 과정이자 결과물’

○ 현황

- ▶ 블랙리스트 사태, 미투 운동 등을 비롯하여 국가 문화행정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과 본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
- 블랙리스트 사태는 ‘권력기관 중심의 문화정책 이권화’, ‘국민들의 참여와 비판 차단 등 문화민주주의 훼손’, ‘표현의 자유와 문화다양성 등 문화기본권 침해’ 등 심각하고 지속적인 문제점이 문화행정 전반에 걸쳐 구조화되었음을 확인해 주었음
- 미투 운동의 경우 문화행정 내의 성평등 구조 확보뿐만 아니라 문화행정 전반에 걸쳐 문화다양성, 젠더 등을 둘러싼 새로운 감수성의 행정문화를 요구함
- ▶ 새로운 문화비전이 실질적으로 추진되려면 비전이 제시하는 ‘내용의 새로움’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과 조직의 혁신’이 동반되어야 가능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문화행정 조직들은 새로운 문화비전이 제시하는 의제들, 내용들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경직되어 있고 관료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
- 이에 조직 혁신은 단순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 편제를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회적 정체성, 비전, 역할, 일하는 방식 등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또 하나의 핵심 과제’로 이해되어야 함

○ 문제점

- ▶ ‘사람과 문화적 가치가 부재한 문화행정 조직 및 기관 운영’: 청와대, 국정원 등 국가 권력의 문화행정 조직

3부 사람이 있는 문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통제와 도구화

- 이명박 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2008. 8),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2013. 3) 등 문화정책/행정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과 통제 반복
 - 헌법, 「문화기본법」 등이 명시한 문화국가의 원리, 문화예술인의 권리 등에 대한 국가권력의 일상적 침해 구조가 존재
-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외부 권력의 압력과 통제로 문화적 가치와 원리를 벗어난 문화행정이 반복됨
 - 국가 문화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 공공기관보다는 청와대, 국정원, 기획재정부 등이 중요 정책과 사업에 대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형적 문화행정 구조
 - 블랙리스트 사태는 국가 권력에 의해 문화행정 조직과 기관의 자율성, 문화적 가치의 훼손 등이 반복되고 일상화되어 발생한 국가조직 범죄의 결과물
- ▶ ‘자율, 분권, 협치’보다는 ‘통제, 공급, 지시’에 익숙한 조직구조와 문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과 문화예술지원체계의 자율성 침해
- 현행 문화행정 체계는 ‘청와대-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공공기관(소속기관)-지역문화예술기관-민간문화예술계’로 위계화·서열화·구조화되어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음
 - 문화행정 조직과 기관은 현장 문화예술 생태계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매우 중요한 분야
 - 현재의 문화행정 조직과 기관은 문화적 가치가 아닌 권력구조와 예산 권한에 따라 정책(사업)과 지원이 결정되는 전근대적 운영 반복
- 문화 환경의 변화에도 중앙정부 조직과 기관 중심의 문화행정으로 공공기관, 지역 지원기관, 현장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일방적인 공급정책(사업) 반복
 -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처에서 인사권·예산권을 바탕으로 소속기관을 일방적으로 관리하며 통제하기 수월한 행정구조
 - 문화예술지원 경로 전반에서 중앙정부의 조직과 기관이 협력 주체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함
- 국가 문화행정 전반(정책의 수립·집행·평가 등)에 대한 개방성, 투명성 등 부재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확인되었듯이 문화행정에 대한 참여·평가 등 사회적 통제구조가 작동되지 않음
- ▶ 참여와 협치가 부재한 문화행정 구조
-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 대다수 문화행정 조직이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됨
 - 대다수 국가 문화행정 조직과 기관에서 위원회, 이사회 등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되지 못한 채 형식화됨

2. 문화행정조직 혁신

- 블랙리스트 범죄와 연계되며 더욱더 심각하고 비민주적인 문화행정이 반복됨
- 대다수 문화행정기관에서 협치를 통한 사회적 통제 부재. 이에 지원정책 · 심의 · 집행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블랙리스트 · 화이트리스트 범죄 작동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대다수 문화예술지원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종속성이 심화됨
 - 일방적인 기관 운영에 따라 정책 · 심의 · 집행 등의 원칙과 절차가 무력화됨
 - 지원 사업 폐기, 심의위원 풀 통제, 지원 절차 개입, 심사 결과 조작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 발생
 - 문화예술 지원기관으로서 자율성, 투명성, 협치 역량 등이 심각하게 퇴행된 상황

개선 방향

- 국가문화정책의 정상화
- 문화행정의 협치 기반 제도화
- 문화기관의 독립성 보장

- ▶ 국가 문화정책을 정상화하고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회적(정부 내) 역할 재조정 · 정체성 확립
 -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개별 문화사업 관리 및 통제'에서 '국가 문화정책 기획조정 및 협치'로 정체성 확립
 - 청와대, 국가정보원 등 주요 권력기관에 의해 일상화되어 있는 문화정책/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결정 구조 개혁. 이를 위해 문화 관련 국정운용 의제, 부처 간 협력 사업 등에서 문화정책 주무부처의 국정 참여와 권한 확대
 -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 역할을 '국가단위 문화정책 기획조정, 국정운용의 문화적 가치 확산, 국가 단위 문화사업 관련 부처 간 협력, 전국 단위 지역문화 연계, 문화 관련 국제 교류, 문화 관련 연구개발 등'으로 확장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재구조화
- ▶ 문화정책과 국정홍보 기능 역할 재정립
 - 표현의 자유, 문화다양성 등을 핵심 가치로 운영하는 문화정책 기능과 국가정보에 대한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소통 · 협치를 핵심가치로 하는 국정홍보 기능과 역할 재정립에 대한 검토 필요
 - 폭넓은 의견 수렴 등으로 부처 간 또는 부처 내 업무 조정 등 문화정책과 국정홍보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도출

3부 사람이 있는 문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문화체육관광부 조직을 개혁해 소속기관 자율성·전문성 확보

- 중장기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문화기관/국공립 예술단체들의 자율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전면 검토와 방안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처들이 소속기관을 통해서 단위별 사업을 지시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위계적인 행정구조와 문화를 개혁하여 '소속기관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간, 부처 간, 국가 간 문화정책 기획조정 능력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구조 모색
-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료화된 조직구조 등과 관련하여 핵심적 원인으로 비판받아 온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예술지원과와 소속기관 사이의 위계적이고 비효율적인 직렬 구조' 해체

실행과제

▶ 문화체육관광부의 행정구조를 개혁하고 협치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실행

- 다양한 국민, 문화예술인, 전문가 등의 참여와 협치는 블랙리스트 사태와 같은 국가조직범죄, 권력형 부패 등을 구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행정개혁
- 현재의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국가 문화행정 조직과 기관을 개혁하고 '자율, 분권, 협치'에 기반한 문화행정을 펼치려면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협치정책의 수립과 제도화 필요
-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치행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 문화행정 조직과 기관 관련 '참여와 협치의 원칙', '정보공개 책임' 등을 문화기본법에 명시

- 문화행정 조직과 기관의 의무와 책임으로 '문화행정에 대한 국민과 문화예술인들의 참여와 협치 보장'을 문화기본법을 개정하여 명시
- 협치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정보공개 책임 의무화
- 정보공개에 관한 원칙과 범위 재설정: 청구행위 이전에 사전 공개 원칙 명시

▶ 국가 중장기 재정 수립, 정부기관 평가 등에 문화 분야 전문가 참여 보장

- 국가 단위 정책수립 과정에 문화적 가치가 보장될 수 있도록 문화 분야 전문가 참여 의무화

▶ 참여와 협치에 기반한 문화행정 평가와 환류체계 구축

- 평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확보: 시민추천 시스템 도입, 평가위원 선정 과정 공개, 전직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임명 지양 등
- 평가에서 국민참여, 협치제도의 실질적 도입: 국민평가단 운영, 실질적 배점 부여 등
- 문화행정 조직과 기관에 대한 평가지표·평가체계 개혁

2. 문화행정조직 혁신

▶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조직 혁신

-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정책 의제와 미래비전을 창출하는 정책 총괄기관으로 장르 중심에서 예술생태계를 형성하는 요소 중심으로 조직과 업무 개편: 문화체육관광부 내의 장르별 예술지원과 운영에서 예술가권리보호, 예술과 타 분야 정책 협력/기획조정 등의 업무 중심으로 조직 구성과 운영 전면 재구조화
- 문화혁신 정책 기능 강화: 문화의 장기비전과 사회 분야의 기획 조정, 남북통일 대비, 새로운 기술혁명과 경제구조에 대응하는 문화정책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혁신 분야의 조직 신설 · 강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독립성 보장

- 1차적으로 법 개정 없이 즉각적으로 가능한 기능적 독립보장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원 사업에 대한 개입을 금지하고 지역 간, 부처 간, 국가 간 정책기획조율 기능 중심으로 전환
- 2차적으로 법 ·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와 방안 마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하여 장관임명이 아닌 예술위원 호선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출하게 함
- 국가인권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처럼 법적인 독립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방식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 진행
- 예술지원체계에서 '문화예술위원회'가 갖는 위상과 역할은 중요한 만큼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되 강한 공적 책임을 주고 국민(예술계)의 관리 ·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제반 체계 개편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율성 ·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혁신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자율성 · 전문성 · 미래지향성 강화
- 각각의 장르별(게임, 음악, 방송, 융합콘텐츠, 애니메이션, 캐릭터, 패션 등) 조직을 보강하고 장르별 지원정책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는 형태로 전환
- 장르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급변하는 콘텐츠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선 필요

▶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조직 개편

- 아시아 문화허브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집중화
- 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조직 개편 기본방향의 핵심어는 아시아권역, 문화아시아, 협력과 공존, 아시아평화, 아시아 예술의 허브
- 아시아 예술인들의 참여 확대, 공동창작의 허브 기능 강화
- 미래의 기술혁명이 주도하는 예술융합의 실험실

3부 사람이 있는 문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연구소를 강화하여 '아시아 문화연구'의 거점 역할
- 아시아 문화 전문인력의 교육과 교류의 장 역할 확대
- ▶ 창의적 예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한국예술종합학교 체계적 지원
 - 1992년 개원 이래 한국예술인재 양성의 견인차 역할을 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새로운 발전 수립이 필요
 - 새로운 예술환경과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창의적 예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년 전 완료된 현행 6개원 체제를 확대할 필요
 - 한예종은 세계예술대학 랭킹 46위(2016년 기준)로, 2030년까지 10위 내 진입을 목표로 글로벌 예술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갖기 위해 중장기 계획 수립
 - 한예종의 통합캠퍼스 이전 추진으로 통합적인 예술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근본 환경 마련

03 법·제도 개선과제

○ 현황

- ▶ 2018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소관 법률은 72개임

부문(수)	법률
문화예술부문 (28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국제문화교류진흥법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예문화산업진흥법 국어기본법 공연법 도서관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대한민국예술원법

3. 법·제도 개선과제

부문(수)	법률
문화예술부문 (28개)	문학진흥법 문화기본법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독서문화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예술인 복지법 지역문화진흥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점자법 한국수화언어법 향교재산법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진흥에 관한 법률(교육부 공동소관)
문화콘텐츠산업부문 (18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영상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3부 사람이 있는 문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부문(수)	법률
관광부문 (5개)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한국관광공사법
체육부문 (12개)	경륜·경정법 국민체육진흥법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생활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 씨름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학교체육 진흥법(교육부 공동소관) 바둑진흥법
사행산업부문(1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문화재청 (8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문화재보호기금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 문제점

- ▶ 일관된 법률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정치적·행정적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세분화된 진흥법이 남발되어 법률들의 위상과 목적이 혼재되고 파편화되어 있으며, 연계성과 정합성이 떨어짐
- ▶ 현행 법·제도는 독점문제, 노동권문제 등 문화예술 분야의 새로운 이슈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며, 그나마도

3. 법·제도 개선과제

넓은 틀에 필요한 내용을 꿰어 맞추는 식으로 법률을 보완함

- ▶ 대부분 법률이 중앙과 행정 중심의 수직적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고, 민간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기보다는 규제와 경쟁을 통한 관리로 용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가 단위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문화예술생태계에 대한 통합적 관점이 부재하며, 중앙집권적 문화행정의 폐해가 지역으로 전가되는 구조임
 - 개별 문화예술 법률들이 관료주의 문화행정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어 법정기관이 자율성을 상실하고 문체부 각 실국 관료 시스템의 하청 집행기구로 기능해 칸막이 문화행정의 문제를 기관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기반으로 극복하고자 한 애초 목적은 유실됨
 - 법과 행정체계에 근거한 하향식 사업으로 인한 예술행정의 자율성과 창의성 침해, 문체부 및 산하기관들의 각종 공모사업 남발로 지역문화 현장의 황폐화와 자생력 저하, 민관 협치 및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의 협력과 연대를 지원하기 어려운 사업구조, 지역문화기관(광역·기초재단, 문화원, 문화의 집 등) 간 상호 협력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야기함

○ 법체계 정비 방향과 추진 과제

1) 법률체계의 전면 재정비

▶ 배경과 방향

- 70여 개에 이르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소관 법률 사이의 체계적 정합성 구축 필요
- 특히 정책 대상 범위와 관련한 '정의 조항'의 정비가 시급함
- 2013년 문화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후속 법제 정비가 추진되지 않은 채 1970년대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을 사실상 모법으로 한 다양한 행정법이 제정·운용되고 있음
- 국가 주체의 진흥의 절차와 근거를 규정하는 '진흥법'에서 '지원법'으로 전환

▶ 추진 내용

〈제1안〉

- 문화기본법, 스포츠기본법, 관광기본법을 기반으로 관련 분야 법률들의 체계 정비
- 문화기본법에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을 중범위로 설정하여 관련 법률 등 체계 정비
 - ▷ 문화예술진흥법의 '예술지원법'으로 전환과 관련 예술 개념의 정비, 장르별 지원 법체계의 정비. 그 경우 문화지원법 제정 검토

3부 사람이 있는 문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 문화재보호법을 가칭 문화재기본법으로 전환하고 관련 법률체계 정비
-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문화산업기본법으로 개명하고, 관련 법률체계 정비.
*예: 영상진흥기본법 등은 영상진흥법 또는 영상지원법으로 개정
- 스포츠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 법률체계 정비
-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기본법으로 개정하고 관련 법률체계 정비

〈제2안〉

- 문화기본법을 체육, 관광 분야까지 포괄하는 법으로 개정
- 문화기본법을 기반으로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체육, 관광의 5대 중범위 기본법을 개정 또는 제정하여 체계 정비

2) 신규 법률 제정

▶ 배경과 방향

- 문화 분야 법체계 정비 후속 조치로 신법 제정 필요
- 이에 변화된 사회환경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새로운 법률체계 수립이 요구됨
- 문화비전 수립 · 집행과 관련 직제/위원회 신설 사항을 반영
- 블랙리스트 사태, 미투 운동 등 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법 제정 필요

▶ 추진 내용

- 문화지원법 제정
 - ▷ 예술지원을 제외한 문화 분야 지원을 규율
- 문화비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문화기본법 개정
- 예술인 권익 증진 법 제정
- 문화다양성 침해(혐오발언 등) 금지법(예. 차별금지법)
- 남북문화교류협력 활성화 지원법 제정
- 스포츠기본법 제정
- 체육인복지법 제정

3) 현행 법률의 개정

▶ 배경과 방향

- 초연결사회로 대변되는 정보기술 발전의 영향으로 사회 환경과 패러다임 변화, 문화다양성이 강조되고 개인의 문화창조·문화활동 참여·문화향유가 권리로 보장되는 문화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새로운 사회와 새로운 나라를 외친 국민들은 직접 참여와 연대로 부정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 파러 들고 있는 감추어진 폭력과 위계를 깨뜨리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음. 이는 우리 사회에 일반화되어 있는 수직적 구조가 더는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화다양성, 문화민주주의, 자치와 분권, 협치 등 새로운 가치의 제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추진 내용

- 헌법을 개정해 표현의 자유와 문화권 확대 명시
- 문화권(문화적 권리)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 강화→문화기본법 개정
- 예술인복지법을 예술인 지위 및 권리 보호법으로 개정
- 문화예술진흥법을 예술지원법으로 개정, 예술 표현의 자유 보호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처벌 조항 신설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문화다양성 정책 총괄부처로서의 문체부 위상 및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문화다양성 정책의 정부 간 협력체계 강화 및 그 법적 근거 명시 등)
 -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문화기본법」과 통합 또는 확대 개정
- 문화기본법 개정(문화비전위원회 설치)
-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하여 지역의 자율적 정책 역량 제고와 협치 근거 마련
- 관광기본법을 관광진흥기본법으로 개정, 지역관광 콘트를 타워 구축 조항 신설
- 국민체육진흥법을 전부 개정하여 스포츠기본법 체계에 맞추어 정비
- 조세 관련 법령 개정(문화콘텐츠 연구개발 세제지원, 문화 분야 중소기업 세제 지원 방안 등 마련)

○쟁점 과제

- ▶ 문화기본법 개정 방향과 내용
- ▶ 예술인 복지법 개정과 예술인 권익 증진법의 조율
- ▶ 예술 장르 진흥법의 개편 방향

04 중장기 재정전략

○ 국가 문화재정 투입의 필요성

- ▶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최소기준 적용
 - 문화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한국의 사회적·경제적 수준을 고려할 때 국민의 최소한 권리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해야 할 문화적 최소기준을 고려해야 함
 - 특히 지역 간 문화적 격차는 문화권이 표방하는 최소한의 문화적 권리를 박탈하게 되고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여 사회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 간 문화적 불평등(격차)과 지방재정 고갈에 대응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의 노력이 요구됨
- ▶ 문화예술 분야 특수성 및 시장실패와 정부 개입
 - 문화예술 분야는 재화의 특성상 시장경제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고 공공재와 가치재 성격을 가지므로 시장실패·보완을 위해 정부의 공공지출이 중요함
 - 이와 같이 문화예술 분야 재화의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다양한 공공적 의미(외부효과, 역량강화, 형평성, 효율성 등)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함

네처(Netzer)의 긍정적 외부효과(Positive Externality)

도서관과 예술화관 건립, 문화적 도시재생의 결과로 해당 지역에 관광객이 증대하고, 이로써 지역 수익을 창출하며 일자리도 확충할 수 있다는 문화예술 영역의 경제적 배후효과를 입증한 주장

보몰(Baumol)과 보웬(Bowen)의 비용질환(Cost Disease) 가설

문화예술은 노동집약적 분야로 기술발달에 따른 노동절감·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영역이므로, 이러한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당 분야가 도태되지 않도록 여타 분야와 격차를 보전해 주는 공공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문화 분야 사업의 성과는 계량화하기 어려운 특성과 탁월성에 대한 성과측정의 한계, 효과와 인과성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적정한 공공 문화투자의 수준(문화재정 규모)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함

4. 중장기 재정전략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 Paradox)

경제적 조건과 삶의 질은 비선형 관계: 소득이 많을수록 행복감이 높지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행복에 기여하지 않는 포화점 존재

1인당 GDP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이상의 국가에서는 기본욕구(의식주) 이상의 상위욕구 충족이 필요(Inglehart 1997; Kenny 1999; Frey and Stutzer 2002; Layard 2003, 2005)하며, 소득 외에 행복감을 강화하는 요인은 문화적 여건이나 여가활동(Kelly et al., 1986)임

한국은 1인당 GDP 2만 9,000달러의 경제대국으로 사회 전반에서 보편적으로 상위 욕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격차보다 문화적 격차로 인한 소외감이 더 큰 사회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됨

▶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 및 영향과 정부지원의 타당성 관계

-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공적 지원이 왜 타당한가?’에 대한 질문은 각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각 국가들은 정부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정당성을 찾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와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옴
- 미국은 2017년 NEA와 AFTA의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음
 - ▷ NEA는 BEA(경제분석국)과 함께 ‘예술 및 문화 생산위성계정’을 분석해 문화예술 분야는 미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4.2%를 차지하며, 1998년과 2014년 사이에 기여도는 35.1% 증가하였다고 보고함
 - ▷ AFTA는 미국 전체 비영리 예술산업의 경제적 활동(1,663억 달러 창출/2015년 기준)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460만 개)와 수익창출(275억 달러)을 하였으며, 설문조사에서 미국인들은 문화예술이 개인적인 삶의 질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개선해 주고 삶에 의미를 제공한다고 믿고 있다고 보고함
- 영국의 DCMS는 지속적으로 문화와 스포츠 등 여가활동 참여의 가치를 추정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정책의 기초자료로 사용함
 - ▷ 문화활동과 스포츠활동에 참여해서 얻는 행복의 가치를 화폐로 추정하면 연간 742파운드에서 1,359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 이는 문화나 스포츠 활동에 대한 개인적 행복 수준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 향후 소득 증대 효과, 사회행동에 미치는 영향(기부행위)과 같은 사회적 또는 국가적 편익을 제시하는 것으로 입증됨(Fujiwara, Kundrma, Dolan(2014); 장훈 · 윤소영, 2014)

*NEA : 국가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AFTA : 미국예술단체(Americans for the 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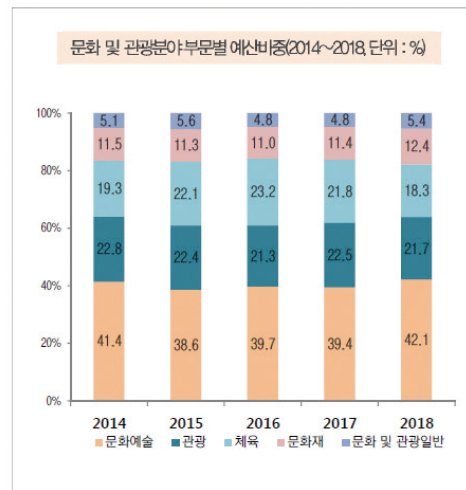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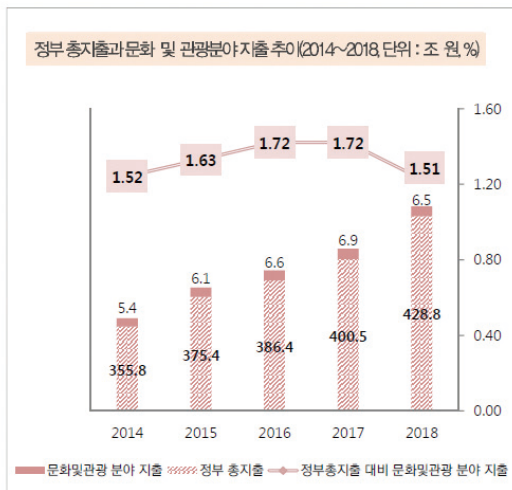
DCMS : 영국문화부(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3부 사람이 있는 문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문화재정의 현황

▶ 문화재정의 구조와 규모

-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은 예산(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과 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구성됨
- 문화재정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6조 9,00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다가 2018년 6조 5,000억 원(전체 대비 1.51%)으로 전년대비 6.3%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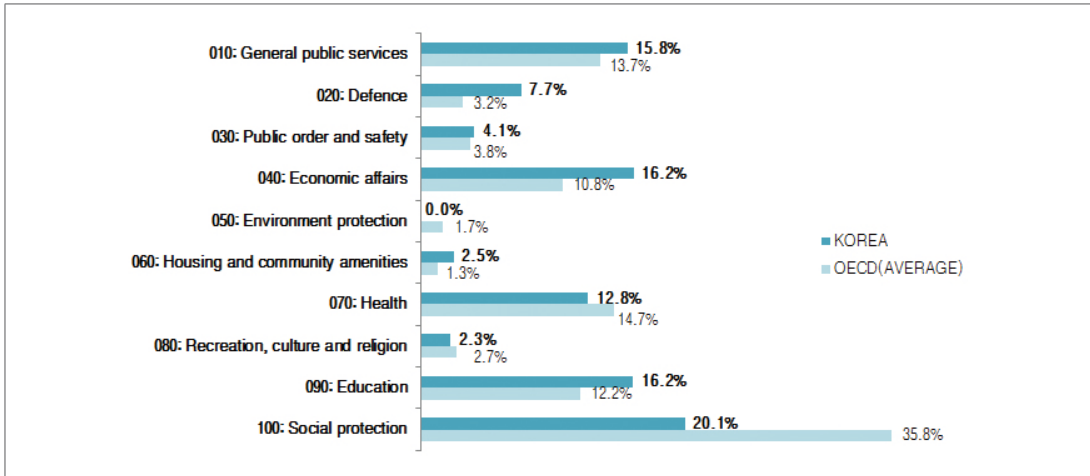


- OECD 국가 대상의 정부총지출 대비 문화예산 비중에 대한 국제 비교 결과, 한국은 OECD 국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정부 총지출 대비 문화예산: OECD 평균 2.7%, 한국 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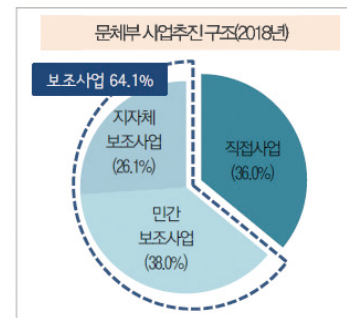
4. 중장기 재정전략

OECD 평균 대 한국 총지출 대비 분야별 지출(2015년, 회원국 30개국, 일반정부 기준)



▶ 문화재정의 예산사업과 사업추진 현황

- 2018년 기준 문화재정의 81.4%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소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과목구조는 프로그램 40개-단위사업 130개-세부사업 343개-내역사업 782개로 구성됨
- 2018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는 전체의 64.1%를 보조사업(지방자치단체 보조 26.1%, 민간보조 38%) 방식으로 추진하며, 직접사업은 36% 수준임



▶ 문화재정 사업의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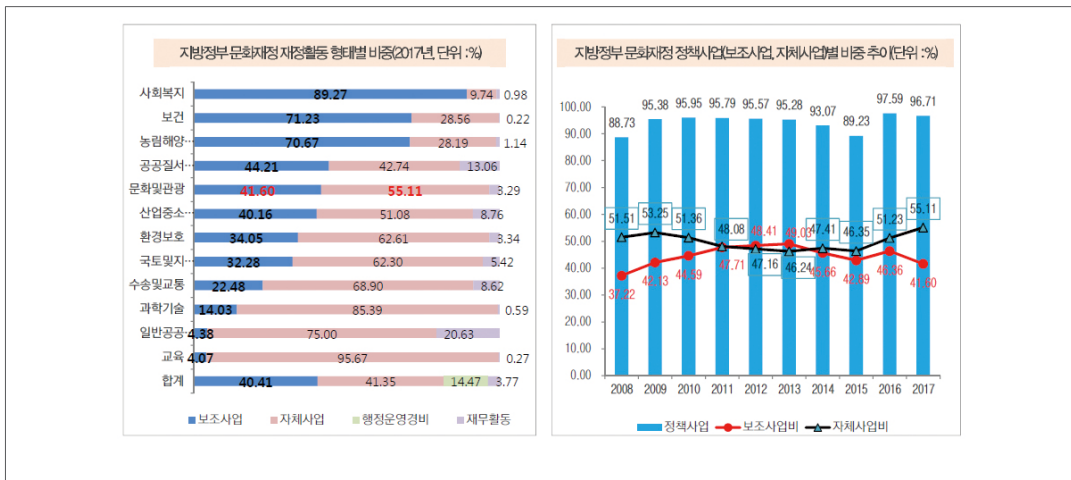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문화예술단체인 18개 소속기관을 지원하고 소속 공공기관 33개를 소관하고 있음
- 산하기관은 정책을 사업 서비스로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방향에 맞춰 직접사업 시행하거나 공모로 사업 시행자와 수혜자를 선정 또는 지역 민간기관(문화재단, 전문단체, 센터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함

3부 사람이 있는 문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구 분 (개수)	기관명
준시장형공기업(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4)	국민체육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4)	한국관광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아시아문화원
기타 공공기관 (24)	(재)국악방송,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정동극장, (재)한국문화정보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 수준과 격차

- 2017년 기준 지방정부의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은 보조사업비 41.6%, 자체사업비 55.1%로 구성되어 있음. 보조사업비중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하여 증가하다가 2014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임



- 2017년 현재 지방정부의 문화재정 비중은 최소 1%에서 최대 20%까지 격차가 상당

4. 중장기 재정전략

지자체 재정 대비 문화재정 구성비(2017년 기준)

구 분	구성비	합계	광역시도	시	군	구
합 계	100%	243	17	75	82	69
1% 미만	3%	8	0	0	0	8
1~5% 미만	51%	125	9	40	18	58
5~10% 미만	40%	95	7	29	56	3
10~15% 미만	5%	13	0	6	7	0
15~20% 미만	1%	2	1	0	1	0

문제점

▶ 수요자 중심과 현장중심형 정책을 개발하는 중장기 재정투자 방향 미비

- 국민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려는 국가의 문화정책이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공급자 위주의 분절적 서비스 공급과 경제적 성과지표에 근거한 성과관리에 집중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정책으로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
- 제공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예산이나 공급자의 기획에 근거하여 기능과 성과를 평가하던 것에서 수요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 ‘개인’의 문화적 권리에 집중하는 문화정책은 정책과 사업의 수립 과정에서 일반 국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시설과 프로그램의 운영이 다양한 요구에 맞게 재편될 필요가 있음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의 비물질적 영역으로 ‘문화, 체육, 관광’ 영역에 재정적 투자를 해서 개인적인 만족, 공동체 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그리고 국민 행복효과 등 가치와 영향에 대한 연구에 기반한 재정투자의 타당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 지역 간 문화격차와 지방재정 고갈에 대응한 자원조달 방안 시급

- 지방재정 자립이라는 재정분권의 방향에 따라 정부(중앙-지방) 간 역할을 분담하고 지방이양 사무를 검토하여 지방분권적 수행이 가능한 사업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도록 전환 준비가 필요함
- 특히 지역 간 문화격차나 지방정부의 문화재정 격차를 조정할 수 있는 재원이나 지방재정의 고갈에 대응한 자원조달 방안이 시급이 요구됨

3부 사람이 있는 문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 (1개 시도당 평균 문화시설) △서울·경기·인천(315개) ↔ △14개 시도(118개)
- ▷ (문화예술 관람률) △서울·경기·인천(81.2%) ↔ △읍면 지역(65.7%)
- ▷ 현재 지방정부 문화재정 비중은 최소 1%에서 최대 20%까지 격차가 상당함

▶ 지자체나 민간을 통한 간접수행 방식의 성과관리 미흡

- 문화 분야는 외부효과가 큰 특성에 따라 지자체나 민간을 통한 간접수행(보조사업) 비율이 높은 실정임. 결국 소액다건형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운용의 비효율성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임
 - ▷ 소액다건형 보조사업은 세분화된 사업 건수대로 사업대상 선정, 집행, 성과관리와 평가 등의 절차로 진행해야 하므로 실제 추진되는 사업비보다 간접비용(보조금 신청, 교부결정, 예산계산, 정산 등)이 더 필요한 비효율성이 존재함
- 사업규모가 작아 성과를 엄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고, 이러한 관리감독의 한계는 평가 없이 답습되는 연례적 지원방식을 야기하여 창작역량이 감소하는 등 사업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실효성 높은 사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 문화 분야는 공공기관부터 소규모 민간단체까지 다양한 형태의 민간조직이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렵고 보조사업 지원 기준과 방법(공모/지정)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사업지원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음. 이에 국회, 감사원, 재정운용 평가 등에서 보조방식에 대한 외부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
- 문화사업은 간접보조사업(재교부)이 다수 발생하는 복잡한 전달체계를 나타내며, 사업 수행주체 결정을 개별 사업마다 상황에 맞춰 지자체나 민간(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결정함
 - ▷ 지자체를 통한 보조사업은 광역시도가 지방비를 매칭(Matching)하고 시도 여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 재교부함
 - ▷ 민간을 통한 보조사업은 사업에 따라 공공기관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적합한 민간단체로 재교부하여 공공기관이 행정체계이자 집행체계 역할을 함

○ 개선 방향

- ▶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확보, 2030년까지 문화예산 단계적 증액 목표(2030년까지 문화예산 3% 실현)
 - 현재 문화예산으로는 문화비전2030의 과제들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 따라서 단계적으로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 논리와 전략을 개발.

4. 중장기 재정전략

- 전 국민의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예술인의 창의적 예술환경 조성, 지역의 문화분권 실현, 남북평화와 문화의 국제협력, 국가 성장동력으로 문화콘텐츠를 연구개발하고 한류의 글로벌 열풍을 수렴하는 문화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문화예산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
- ▶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문화재정 설계**
 - 개개 국민의 삶이 중심이 되는 체감형 문화정책 방향에 우선 투자
 - ▷ 기존의 공급자 중심으로 구분된 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의 편의와 선택을 중시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에 우선 투자
 -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문화 분야에 대한 공적 지원의 타당성에 근거를 둔 정부 지원의 중장기적 재정 설계 필요
 - ▷ 국민의 문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활용하여 재정계획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 문화 분야 위성계정이나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와 효과 보고서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화재정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재정설계의 기초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의 기능과 역할 분담 원칙 마련**
 - 중앙정부는 정책 수립 · 평가 · 조정 · 제도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집행과 사업관리 등 실제 사업의 추진단위는 관련 지자체나 산하기관에 이관하되 사후 성과평가를 실시해 책임을 묻는 성과관리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는 건마다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이 아닌 수요자 욕구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대상별 · 지역별 사업 전체를 계획 · 공급할 수 있는 정책 수립과 평가 기능에 집중하되 지방정부 또는 소속 · 산하기관에 포괄적으로 전달하여 자체적인 기획과 계획에 따라 배분되도록 하고 중분류 규모의 사업을 관리 · 감독하는 방식으로 재편이 필요함
 - 지자체 · 산하기관은 사업 전달체계로 자율성을 보장하고 세부사업의 직접적 추진주체로서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는 동시에 엄정한 평가제도를 마련하여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중분류로 교부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자체, 산하기관이 환경과 여건에 맞춰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사업 효과성 제고에도 바람직하며, 실질적인 팔길이원칙(arm's length principle)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음
- ▶ **문화 분야의 전략적 사업설계 및 사업분류와 사업수행방식 개편**
 - 중장기적 시각에서 문화 분야의 사업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목표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전략적인 사업설계를 해서 사업의 성과를 달성하고 효과성을 강조하는 배분구조 마련 필요
 - ▷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분야(탁월성, 전문성)와 소액다건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양성, 보편성) 등의

3부 사람이 있는 문화,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지원사업 대상을 분류하고 이에 기반하여 중앙과 지자체, 민간의 역할을 구분함으로써 사업의 전달(보조사업자) 원칙 마련

- ▷ 국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뛰어난 예술가나 단체, 관광 대상지 또는 상품, 전문체육인 등은 대상이 제한되기에 단순한 개발·활성화 목적이 아닌 전문적 무대화나 국내외 진출·활동 등에 집중 지원 필요
- ▷ 많은 국민이 체감하고 향유하고자 하는 목적의 문화복지 프로그램, 다양한 작품개발과 보급, 전 국민 여가편의 증진 등을 위해서는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소액다건형 지원도 필요함
- 사업수행 방식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분야(탁월성, 전문성)는 세부사업으로 중앙이 직접 추진하고, 소액다건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양성, 보편성)는 포괄적 규모로 보조사업을 편성하는 등 사업분류에 따른 전달 원칙 마련
- ▷ 사업의 특성을 구별할 수 있는 지표(기준)를 마련해 사업을 분류하고, 기준에 따라 적합한 사업전달 방식을 구분·적용함으로써 사업지원의 일관성과 투명성 확보(사업추진 주체 예측·관리 가능)

▶ 프로그램 예산체계 원칙과 개편 방향에 따른 예산 과목구조 재구조화

-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과목구조 개편의 기본 방향은 중복·유사한 세출예산은 통합하고, 분류가 모호한 경우 합리적인 기준과 범위에 따라 세부 내역사업을 재배치함
 - ▷ 성과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예산체계 원칙에 따라 단위사업은 상호 배타적이고 차별화된 명칭으로 특성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함
- 사업의 재분류는 단위사업 수준에서 기반조성, 육성(창작, 향유, 매개) 등의 구분으로 단순화하고, 세부사업에서는 사업의 질(quality, 수월성)과 양(quantity, 접근성) 차원에서 세분화된 구분을 기준으로 둘 수 있음
- 사업관리의 효율성(사업관리 행정비용 절감, 정책수립과 성과확산 업무 집중), 예산분석과 통계관리 기능을 강화하려면 예산서 내에서 최하위 분류체계를 일정 규모의 중분류 체계로 단순화하는 것이 효과적
 - ▷ 재정운용 측면에서 기능 중첩 배제, 정책결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축소, 세출규모 감축, 지출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여러 형태로 분포되어 있는 예산집행 경로(세부사업 단계)를 축소하는 것이 유리함
 - ▷ 이는 부서 간 거래비용 감소에 따른 생산적 능률성, 감독·통제 증진에 따른 정치적 책임성 증진, 정책공급의 안정성 증진, 정책조정 증진 등의 장점을 기대할 수 있음
- 세부사업의 정의와 범위, 특징과 재편기준을 마련하고 상위계획과 부합한 수준에서 유사·연계 사업은 통합하는 등 예산과목 구조상 사업의 연계성과 체계성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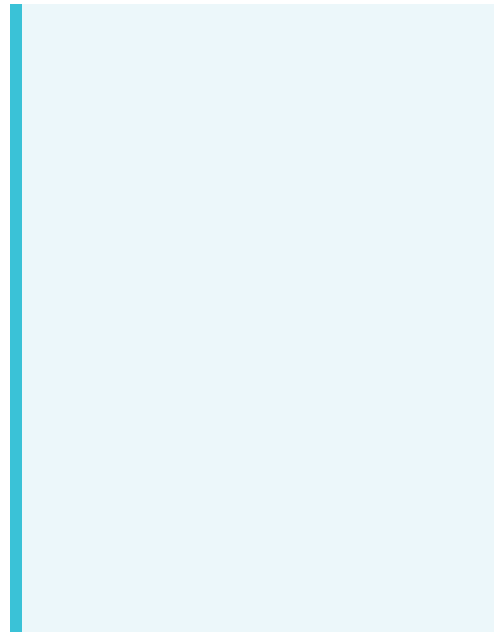
4. 중장기 재정전략

▶ 문화재정의 주기적인 평가제도로 환류체계 마련

- 재정전달 기관이 복잡하게 구성될수록 관료화주의 행태로 사업(서비스)이 경직되고 획일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다수의 소속·산하기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 검토와 평가 강화가 필요
- 타 부처에 비해 보조사업 수가 많은 문체부는 사전심사 강화, 성과평가 시행 등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체제 강화가 요구되므로 내부적으로 재정사업평가 체제의 정비 필요
 - ▷ 성과지표, 목표치 수준 등은 가장 기초적인 정보로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되려면 추가 분석이 필요하므로 사업평가가 중요
 - ▷ 사업자 선정, 지원 집행 후 성과평가 등 사업지원 효과를 점검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강도 높은 사업관리로 환류체계 마련
- 지자체와 산하기관에 포괄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추진·집행에 자율성을 부여하되 사업추진·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해 책임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체적인 사업성과 평가와 컨설팅 기능 확대 필요
- 문화사업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성과측정 방안 개발·활용, 부처 내 정례적 사업평가·모니터링 강화 등 보조사업이 많은 부처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기적인 평가를 중요한 부처 업무로 인식할 필요

문화비전2030

사람 이 있는 문화



부록



1. 국민 제안 주요 내용
2. 문화청책(文化聽策) 주요 내용

01 국민 제안 주요 내용

의제 0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순번	분야	주요 내용 요약	아이디	비고
1	문화예술	지역별 공공기관에서 국악 1인 1악기 지원 및 교습, 가족 국악 경연 대회 개최 제안	권*원	국민제안 (홈페이지)
2	문화예술	개인 삶의 문화 향유 권리를 특별법으로 제정, 탄력적인 근무시간으로 현실에 맞춤형 문화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안 문화를 바라보는 의식수준을 높이는 건축, 미술 등의 교육 여건 마련	정*관	국민제안 (홈페이지)
3	문화예술	입시문화에 지친 청소년들을 위한 찾아가는 인문학 강연과 진로콘서트 등 개발 및 운영	곽*기	국민제안 (홈페이지)
4	문화예술	장애인 문화권 확보를 위한 정책 마련, 장애인들의 문화향유권 확보에 필요한 음성해설, 폐쇄자막 서비스 등을 적정 수준으로 제공하기 위한 실효적 법제 정비, 장애인 문화포털 구축	김*준	국민제안 (홈페이지)
5	문화예술	제대예정 병사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캠프 등 운영 제안	배*철	국민제안 (홈페이지)
6	문화예술	손으로 책을 전달하자는 핸드북 캠페인 제안. 우량 도서 및 신간 도서를 구입하여 지역 도서관을 통한 캠페인 진행	윤*수	국민제안 (홈페이지)
7	문화예술	재외동포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해외문화교류지원 프로그램' 개설	김*경	국민제안 (홈페이지)

1. 국민 제안 주요 내용

순번	분야	주요 내용 요약	아이디	비고
8	문화예술	지역의 문화를 혁신하고 두레마을공동체를 다시 형성하는 예술이 필요, '2만 개의 두레패예술'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제안	유*열	국민제안 (홈페이지)
9	문화예술	문화시설, 문화 확장, 문화 공감에 있는 사각지대 감소, 다양성을 전제한 다양한 문화현장을 폭넓게 수용	김*성	국민제안 (홈페이지)
10	문화예술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 주는 '혁신예술위원회'와 '창조체험센터'를 개설, 전국의 모든 시군구 단위에 설치하여 창조체험의 기술을 모든 학교와 기업과 사회에 보급하는 전국적 캠페인 제안	유*열	국민제안 (홈페이지)
11	전통문화	문화유산 중심 관리에서 주변과 마을을 함께 관리	문화유산	모듬토론회
12	문화예술	생활문화유산 활성화 사업 확대: 지역문화재 인식 확대 및 접근성 강화 필요, 지역단위 로컬문화재 활용 활성화, '로컬 문화재 가꾸기 사업' 제안	문화유산	모듬토론회
13	전통문화	지역 주민 중심의 문화유산 생태계 구축: '지역 주민-지방자치단체-지역 내 문화단체-문화재청' 간 협의체 필요	문화유산	모듬토론회
14	체육	가족, 이웃, 공동체로서 스포츠클럽: 가족 단위의 생활체육 참여활동이 보장된 프로그램과 대회 개발	스포츠 클럽	모듬토론회
15	체육	스포츠클럽에서 자원봉사자 활용: 자원봉사자를 조직·운영할 수 있는 기구(인력풀) 설치, 클럽의 업무/직무 영역과 내용을 분석하고 자원봉사자의 참여 가능한 직무분류	스포츠 클럽	모듬토론회
16	문화예술	복합문화 콤플렉스 '예술인복합문화시설'의 건립: 읍면동 단위 중심의 시설을 리모델링 방식으로 조성	문화 예술 단체	모듬토론회
17	문화예술	공공도서관 외국어 도서 비치 확대	한*희	문정국
18	문화예술	국립박물관의 무료 입장료에서 소액 유료화로 전환 제안	정*관	문정국

순번	분야	주요 내용 요약	아이디	비고
19	문화예술	국립도서관의 도서배치를 통한 출판문화산업계 활성화 방안: 도서관 사전 배치를 통한 환경점검, 신인작가 프로모션	김*석	문정국
20	문화예술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정책 제언: 공공립예술단체 오디션 시각장애인 차별 금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영화해설 시스템 구축	김*영	문정국
21	문화예술	실버 세대를 위한 맞춤 문화공간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 필요	주*	문정국
22	문화예술	통합문화이용권 온라인 사용처 증대	김*정	문정국
23	문화예술	영유아 문화예술교육 전문강사제, 어린이집 보육교사 외 전문 예술강사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장*영	문정국
24	문화예술	국민여가생활을 위한 여가복지관광, 여가스포츠 지원제도 마련 및 실행	최*우	문정국
25	관광	장애인 여행 활성화, 한국형 복지관광 민관협력 모델 제언 및 실버 관광 정책 필요	정*록	문정국
26	문화예술	공공 문화공간 운영시간 확대	자율성 분과	현장토론회
27	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방식의 전환	자율성 분과	현장토론회
28	여가	여가시간의 확대(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자율성 분과	현장토론회

1. 국민 제안 주요 내용

의제 02

문화예술인/종사자 지위와 권리 보장

순번	분야	주요 내용 요약	아이디	비고
1	문화 예술	공연예술 프로덕션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예술지원 정책 필요, 기관별 상이한 사업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연계사업개발과 지원체계 마련, 프로듀서 주치의 작품제작 및 국제교류 플랫폼 개발에 대한 중장기 지원제도 확충, 장르 간 예술가/작업의 협업에 대한 지원환경 마련	이*민	국민제안 (홈페이지)
2	문화 예술	프리랜서 아티스트에게도 소액체당금 적용 제안	윤*제	국민제안 (홈페이지)
3	문화 예술	예술활동 발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를 적립하여 예술 작업(녹음실, 장비, 재료 대여, 공연 공간 대여 등)에 활용하는 현실적인 제도 마련 제안	고*훈	국민제안 (홈페이지)
4	문화 예술	저렴한 가격에 월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주택, 타운 필요	윤*제	국민제안 (홈페이지)
5	문화 예술	예술강사 월평균 급여 100여 만 원, 매년 평균 85개월 단위로 계약과 해지 반복, 예술강사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 자체가 책정이 불가능한 상황.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서 분리 제안	이*진	국민제안 (홈페이지)
6	관광	궁궐이나 문화재해설사 정식복장과 무선마이크 제공 제안	이*남	국민제안 (홈페이지)
7	문화 예술	현재 1만 1,284명(2017년 11월 기준)이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보유. 교육사를 수용할 수 있는 필요 분야 부족. 전문성에 관한 발급기준 및 관리 모호. 자격증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정, 정기적 재교육 필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사 평생교육기관 의무 배치 필요	박*연	국민제안 (홈페이지)
8	문화 예술	준학예사 합격자에 비해 경력 인증기관의 수가 적어 전문적 업무경험 기회 부족. 자격시험의 수준과 평가기준 높여 실력 있는 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 필요	박*연	국민제안 (홈페이지)

순번	분야	주요 내용 요약	아이디	비고
9	문화예술	신진예술가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국민 예술향유 신장을 위한 갤러리카페 정책, 갤러리카페를 통한 작품창작, 전시 나아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유통을 지원해 주는 제도 마련	박*연	국민제안 (홈페이지)
10	문화예술	예술인복지협회 예술활동증명 제도 및 개편 요구(예술활동증명 확인 조건 및 심사기간 개편, 예술인복지협회 사회복지사의 문화예술 노동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 등)	박*영	국민제안 (홈페이지)
11	문화예술	예술인들을 위한 지속적인 레지던시, 창작스튜디오 확대 운영	박*연	국민제안 (홈페이지)
12	문화예술	상상력, 실험 그리고 실패를 존중하는 청년 문화예술가 지원사업 제도 도입: (가칭) YNot 프로젝트	청년 예술가	모듬 토론회
13	문화예술	공간 연계 청년 문화예술가 지원사업의 활성화: 지역별 청년예술청 조성, 공공공간 내 청년예술가 창작공간 사업, 해외 공간 교류 프로그램 외	청년 예술가	모듬 토론회
14	문화예술	문화재 활용 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공정한 대가 마련	문화 유산	모듬 토론회
15	관광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위 보장: 관광통역안내사의 안정적 급여 확보,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인력 진입, 관광안내소 처우 개선	관광	모듬 토론회
16	체육	스포츠클럽을 통한 전문선수 육성: 합숙 폐지 등 운동부 운영에 대한 정상화 노력, 스포츠클럽을 통한 전문선수 육성 노력 확대	스포츠	모듬 토론회
17	콘텐츠	문화콘텐츠 기층 제작인력의 직업 및 복지 현실화	콘텐츠 제작	모듬 토론회
18	종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로서 직업분류 세분화: 직업분류가 사회보장제도(노동, 복지, 의료 보장체계)의 수혜 근거가 됨. 세분화된 직업 분류별 생태조사 파악하여 제도에 반영	노동권, 인권	모듬 토론회

1. 국민 제안 주요 내용

순번	분야	주요 내용 요약	아이디	비고
19	종무	직업인(노동환경) 차원의 문화예술인/종사자 실태조사: 예술창작과 생활을 모두 포함한 예술활동, 특수한 노동 형태의 예술노동에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태조사 필요	노동권, 인권	모듬 토론회
20	문화예술	문화예술 노동권익센터 개설	노동권, 인권	모듬 토론회
21	문화예술	예술, 노동, 문화가치의 사회적 인식 확산: 초·중·고 공교육 커리큘럼 내 예술노동, 노동자성, 노동과 삶, 노동과 사회에 대한 교육시행	노동권, 인권	모듬 토론회
22	문화예술	예술창작지원제도의 근본적 개혁: 창작자의 권리와 제작 흐름을 지원하는 개념의 제도 개혁 필요	노동권, 인권	모듬 토론회
23	문화예술	예술 관련 예산의 사람 중심 재설계: 예술인 전업률을 높이는 사람(예술인) 중심의 정책 전환을 요청, 시설 중심의 투자에서 예술인 중심의 투자 요청	문화예술 단체	모듬토론회
24	종무	예술현장의 정책 참여권 강화: 현장 예술인의 공통 의견이 정책(문화부, 지자체 등)에 반영되기 위한 광범위한 협치권 강화	문화예술 단체	모듬 토론회
25	종무	문화단체 거버넌스 기본법 제정(기재부, 행자부 협치)	문화예술 단체	모듬 토론회
26	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사와 학예사의 명확한 업무규정이 필요	고*상	문정국
27	문화예술	예술가의 소액체당금 적용 요구	윤*제	문정국
28	문화예술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실태조사 및 운영 관리 검토 필요	서*우	문정국
29	문화예술	예술인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윤*제	문정국
30	문화예술	예술인 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및 중복증명 간소화, 현장에서 원하는 복지의 프레임과 프로그램 전수조사 필요	김*은	문정국
31	문화예술	도슨트 양성 교육기관을 시도 권역별 1개 기관씩(기존 미술관 활용) 지정, 양성된 도슨트를 전국 네트워크로 일원화된 기관에서 등록 후 관리	배*임	문정국

순번	분야	주요 내용 요약	아이디	비고
32	문화예술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운동부 지도자 비정직의 정규직 실현(국가자격증인 전문체육지도사 자격증 필수, 자격증이 없으면 정규직 불가)	오*일	문정국
33	문화예술	신인작가 출판지원, 문학출판 쿠퍼제 시행(인기 작가 외 다양한 작가의 출판 장려)	홍*경	문정국
34	관광	관광통역사 관리 및 등록제를 통한 활용 필요	박*철	
35	체육	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 전환 시급	임*라 윤*실 박*범 박*종 김*석 이*수 임*호 이*문 이*경 이*희 김*오 외 26인	문정국
	체육	비인기, 무관심 종목에 대한 지원		
36	체육	운동선수들의 은퇴 후 진로 개발, 일자리 디자인 필요	박*린	문정국
37	체육	운동지도자의 고용안정화를 통한 엘리트 체육 육성 강화	이*원	문정국
38	문화예술	문화 전문인력의 '교육양성→행정 투입' 과정에서 일자리의 안전성·연속성 부족, 비정규직, 공공기관 인력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다수	중소도시 (4분과)	100인 집담회
39	문화예술	기획행정이 양성인 아닌 문화활동가로서 경험 중심의 인력양성 교육 필요(대안은 성북, 인디 053 참고)	중소도시 (4분과)	100인 집담회
40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서 인력 풀 관리 필요(홍보, 예술가 발굴을 통한 인력수급, 세대교체, 순순환 도모)	중소도시 (4분과)	100인 집담회

1. 국민 제안 주요 내용

순번	분야	주요 내용 요약	아이디	비고
41	문화예술	정산 등 행정처리의 간소화 필요(작가들이 일을 할 때 필요한 서류 등 복잡한 절차가 많음)	중소도시 (4분과)	100인 집담회
42	문화예술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예: 다양성 이주민 방송을 통한 인식 제고)	중소도시 (5분과)	100인 집담회
43	문화예술	예술인의 인력관리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근로권리 보장 필요	자율성 분과	현장 토론회
44	문화예술	문화예술계에서 근로 개념 논의 필요	자율성 분과	현장 토론회
45	체육	스포츠클럽 공간 운영계획 보완 필요	자율성 분과	현장 토론회
46	체육	스포츠 정책입안을 위한 지표 개발 필요	자율성 분과	현장 토론회

의제 03

성평등 문화 실현

1	종무	성차별 없는 문화권리와 환경 조성: 성차별 없는 창작환경을 위한 제도 마련, 문화기본법 내 성평등 관련 법제 보완, 성평등 문화 예산 5개년 계획: 1% 확보	젠더	모듬 토론회
2	종무	권위주의 극복 및 민주적 문화 조성: 문화예술계 내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토론문화 정착, 단체 및 조직 운영의 투명성 재고	젠더	모듬 토론회
3	종무	제재-위계폭력 및 성폭력 재발 방지: 성폭력 및 위계폭력 발생 시 가해자 국고 지원 금지, 학내 벌어지는 위계폭력,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부감사 및 법·제도 강화	젠더	모듬 토론회
4	종무	교육-장기적 목표: 문화예술 특수성: 장르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성폭력 예방 교육의 의무화 및 정부 모니터링	젠더	모듬 토론회

의제 04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순번	분야	주요 내용 요약	아이디	비고
1	관광	서울에 있는 예술기관을 표시한 SNS 기반 지도 개설, 서울 아트 투어 진행 제안	박*연	국민제안 (홈페이지)
2	전통문화	전통공예 경연을 통한 경제적 지원 및 작품 전시	박*연	국민제안 (홈페이지)
3	스포츠	전통스포츠 복원사업 '한국형 전통 마상스포츠 개발', 경마로 벌어들인 수익금의 상당 부분(80%)이 말산업 육성에 쓰임. 한국 승마인구 저변 확대가 필요	김*수	국민제안 (홈페이지)
4	전통문화	우리 문화의 근원을 일깨우는 전통문화 세미나, 심포지엄 그리고 저작활동과 문화콘텐츠 개발 필요	조*석	국민제안 (홈페이지)
5	전통문화	문화유산 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에 초점	문화유산	모듬 토론회
6	관광	관광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축하기 위한 관광현장 제정	관광	모듬 토론회
7	관광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 생태계 구축: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종류를 최근의 관광 트렌드에 맞춰 개정	관광	모듬 토론회
8	문화예술	한일 대중문화 개방, 이제는 완전 개방 단계로 확장 제안	성*민	문정국
9	문화예술	런던 소재 영국 박물관의 한국관 문화재 점검 요청 및 관리	배*진	문정국
10	관광	외국인 관광 예약을 위한 철도, 관광지 입장 예약 등 영문사이트 운영 개선	서*식	문정국
11	체육	스포츠 비인기 종목, 무관심 종목에 대한 지원과 육성	배*현	문정국
12	전통문화	전통문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민족문화예술진흥법안 신규 제정	전통문화 분과	현장 토론회
13	문화예술	문화다양성 연구 관련, 이주 집단화 규제 및 허용에 대한 내용 구체화 필요	다양성 분과	현장 토론회

1. 국민 제안 주요 내용

순번	분야	주요 내용 요약	아이디	비고
14	문화예술	차별금지법에 나오는 공공문화시설 관련 전문성 확보에서 문화부의 전문기관 관련 구체적 모니터링 요구	다양성 분과	현장 토론회
15	문화예술	협의체를 두어 관련 법령 해석 및 전 부처에 걸쳐 협의 기능 강화	다양성 분과	현장 토론회
16	문화예술	성소수자 문제 관련, 문화정체성 관련 큰 범주 안에서 어떻게 설정할지 고민 필요	다양성 분과	현장 토론회
17	문화예술	문화예술계에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성폭력 이슈들을 문화다양성이라는 프레임 안에서라도 정식으로 다뤄야 함	다양성 분과	현장 토론회
18	관광	내국인과 외국인의 상호 국가 방문, 여행을 통해 고취할 수 있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중소도시 (5분과)	100인 집담회
19	문화예술	대학로 같은 곳에서 지역문화주간을 만들어서 행사 추진	중소도시 (5분과)	100인 집담회
20	문화예술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하여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문화 분야에서의 지원에 대한 최고-최저기준 제시 필요	중소도시 (5분과)	100인 집담회
21	문화예술	헌법 내 문화다양성에 관한 추가 논의 필요	자율성 분과	현장 토론회

의제 05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 생태계 조성

순번	분야	주요 내용 요약	아이디	비고
1	문화예술	공공미술 관리재단(문화재단)을 지자체에 구성하여 공공미술 등록과 관리 연차제도를 운영하는 방안 제안	민*동	국민제안 (홈페이지)
2	문화예술	스토리 창작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스토리 정보 시스템 구축	이*진	국민제안 (홈페이지)

순번	분야	주요 내용 요약	아이디	비고
3	문화예술	창작기금의 직접 지급방식에서 도서구입 등 간접 지급방식으로 전환	김*은	국민제안 (홈페이지)
4	문화예술	문화상품 유통사업단의 찾아가는 문화상품 전시·유통·판매 활성화	김*은	국민제안 (홈페이지)
5	콘텐츠	무명 대중음악인 인디 뮤지션 지원정책 확대 제안	박*관	국민제안 (홈페이지)
6	종무	문화정책 의사결정 구조의 청년 문화예술가 참여권 보장: 위원회 및 심사제도 내 청년쿼터제 도입	청년 예술가	모듬토론회
7	전통문화	문화재 보존과 활용의 균형발전 위한 문화재위원회 혁신: 문화재 위원회 내의 활용분과 신설 및 교수 중심의 현장활동가 참여 유도	문화유산	모듬토론회
8	전통문화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 보호: 현재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저작권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다양성과 창의성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한 문제부 차원에서의 등록제도 추진 필요	문화유산	모듬토론회
9	콘텐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모태펀드 등의 운영혁신: 영화산업의 경우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태펀드의 70%를 4대 배급사가 지원받아 본래 목적 훼손	콘텐츠 제작	모듬토론회
10	콘텐츠	방송사 외주제작 비율의 장르별 차별화: 현재 외주제작은 40% 이상이지만 장르 차별화가 되지 않아 외주제작의 불균형 형태가 심각. 보도, 시사, 다큐, 교양, 예능, 드라마 등 장르별로 실정에 맞게 외주제작의 차등화가 요구됨	콘텐츠 제작	모듬토론회
11	콘텐츠	독립·중소 문화콘텐츠 제작자들의 장기지원 플랜: 독립·중소 문화콘텐츠 제작 시 지원의 관점을 상업적 이익을 내는 투자 관점에서 '장기 지원'의 관점으로 전환	콘텐츠 제작	모듬토론회
12	저작권	문화콘텐츠제작의 저작권 보장: 현재 방송사 및 미디어 포털사의 문화콘텐츠 유통 시 음원·방송영상 콘텐츠 등 저작권에 대한 보장 미흡 - 문화콘텐츠 생산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저작권의 다양한 권리 확보를 위한 법 개정과 제도의 현실화 요구	콘텐츠 제작	모듬토론회

1. 국민 제안 주요 내용

순번	분야	주요 내용 요약	아이디	비고
13	저작권	창작자의 권리보장 개념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저작권법 개정: 완성된 상품으로써 유통(마진, 매출)에 집중하여 '창작권리의 이동' 개념의 적극적 반영이 요구됨. 2차/3차 저작물에 대한 원천 창작자의 권리보상체계 반영 및 저작권 침해 처벌 강화	노동권 인권	모듬토론회
14	문화예술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 계약, 노동, 보상체계 개선: 개별예술가와 대형문화기업 간 불공정 계약관행과 악성체불, 저작권 위배 관행 개혁	노동권 인권	모듬토론회
15	관광	여행사 패키지 요금 투명성 개선 요청	이*이	문정국
16	문화예술	도서 정가제 폐지 요청	이*울	문정국
17	체육	야구 오심심판 탄핵제와 비디오판독 오심 공개	김*람	문정국
18	문화예술	애니메이션 작가의 저작권 보장	윤*제	문정국
19	문화예술	e나라도움 폐지, 천만 원 이내의 지원금은 공정한 심의를 거쳐 시상금 형식으로 지급	엄*용	문정국
20	문화예술	출판환경 개선, 출판박람, 출판 온라인 플랫폼 제안	홍*경	문정국
21	문화예술	세종도서 문학나눔 심사위원회제도 개선	김*태	문정국
22	문화예술	한국뮤지컬실태조사 및 뮤지컬 지식정보 플랫폼 제안	임*준	문정국
23	문화예술	국공립박물관 기획 프로그램 확대 및 공간 리뉴얼	김*소	문정국
24	문화예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심사위원 제도개선, 교수, 인간문화재, 비평가 등 권위자 중심 탈피	이*진	문정국
25	문화예술	한국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자격증제도 점검, 시험 중심의 인력 현장 투입 어려움, 자격증과 동시에 전문가로 둔갑, 자격증 불법대여	조*정	문정국
26	문화예술	문화예술 실연 또는 심층 인터뷰 심사, 기관에서 지정한 심사위원회 관객, 타 예술가 의견 반영한 심사제도 운영	박*렬	문정국

순번	분야	주요 내용 요약	아이디	비고
27	문화예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공연예술기관 및 단체에는 수십만 건의 공연예술자료 소장, 공연예술자료 열람 환경 구축	설*재	문정국
28	관광	국내 주요 관광지 입장권 예매 현장에서만 가능, 국내 주요 관광지 입장권 예매가 가능한 웹플랫폼 구축 필요	정*수	문정국
29	체육	스포츠 국제대회 인프라 구축, 사후 경기장 시설 활용 방안 매뉴얼 및 가이드 구축, 체육지식정보플랫폼 필요	김*규	문정국
30	콘텐츠	특정영화 독과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화를 통한 옴부즈맨 신고센터, 문화생태계 공정센터(장관 직속 등) 일원화 필요	다양성 분과	현장토론회
31	콘텐츠	(게임) 법정 등급분류제도의 자율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제도 폐지, 섀다운 제도 폐지, 많은 외국인 종사자의 비자제도 개선	다양성 분과	현장토론회
32	콘텐츠	유통되는 문화콘텐츠, 문화상품들의 부가가치세의 면세 및 이를 통한 문화쿠폰 발행으로 문화산업진흥기금 조성 추진 등 제언	다양성 분과	현장토론회
33	콘텐츠	표준계약서(불이행 문제) 관련 구조 규제, 강제적 규제로 변화 요구	다양성 분과	현장토론회
34	콘텐츠	(출판) 공급률 문제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문제 검토 요구	다양성 분과	현장토론회
35	저작권	원천 콘텐츠로서의 저작권 보호 및 생산자의 권리 보장 필요: 공공대출권 문제, 사적 복제보상금 제도 등	다양성 분과	현장토론회
36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성 관련 찾아가는 예술정책 등 지원 장치에 대한 고민 필요	다양성 분과	현장토론회
37	관광	관광산업과 관광업 내의 불공정성 개선: 가이드나 관광노동자(감정노동자, 산업 간 갑을관계)의 인권을 존중하는 공정한 질서 확립 필요	관광 (7분과)	100인 집담회

1. 국민 제안 주요 내용

의제 06

지역 문화분권 실현

순번	분야	주요 내용 요약	아이디	비고
1	체육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모역 조성	강*원	국민제안 (홈페이지)
2	전통문화	우리 문화의 뿌리 아리랑에 대한 정책과 비전에 따른 지원 확대	조*석	국민제안 (홈페이지)
3	관광	『권역별 관광지 영어 안내판의 번역 오류 수정집』 출판	사*철	국민제안 (홈페이지)
4	관광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물을 활용한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제안	대**리	국민제안 (홈페이지)
5	문화예술	청년 문화예술 환경 관련 지역문화 격차 해소: 지역문화예술지원종합정보 플랫폼(개방형) 구축, 지역 권역별 청년예술가 지원체계 구축(지원센터 등) 외	청년 예술가	모듬토론회
6	관광	주민 관광사업 '문화유산 결합방식' 검토: 지역 역사/문화 특정 교육 시행, 문화재와 접목한 관광 산업 추진, 주민과 민간단체(문화유산) 생태계 조성 필요	문화유산	모듬토론회
7	전통 문화	서원, 향교 활용 방안: 문화유산 교육과 활용을 통한 관광자원화 및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가는 좋은 자원으로 활용	문화유산	모듬토론회
8	관광	관광분야 지역 현황 프로그램의 지원 및 진입통로 강화와 확충: 지역관광의 구심점이 될 관광두레 사업, 대한민국 테마 10선 사업 강화	관광	모듬토론회
9	관광	중저가 외국인 숙박시설 확충	이*섭	문정국
10	체육	지역 내 비인기 종목 또는 무관심 종목 지방 체육 인프라 확충	김*재	문정국
11	관광	특성화 관광산업 육성 및 지속적인 관광산업 활용방안 필요. 지방관광산업육성 시 꼭 현 주민과 현 관광산업 가치를 도모해 함께 운영하는 정책 필요	정*화	문정국

순번	분야	주요 내용 요약	아이디	비고
12	문화예술	거리에서의 예술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정법 완화	김*훈	문정국
13	문화예술	지역 주민 등이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예술의 전당 마련	임*규	문정국
14	문화예술	시민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전시, 박물관물 건립 제안	정*관	문정국
15	문화예술	국가시책 공공도서관 확충	장*진	문정국
16	체육	심각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교육 진행	김*안	문정국
17	문화예술	중소규모 해외문화원 설립/운용 제안	김*현	문정국
18	문화예술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과 정책반영을 위해 지역에서 상주하는 문화협력관 제도 제안	임*호	문정국
19	문화예술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방식 변경 필요. 하향식 개정방식을 상향식으로 바꾸고, 기초에서 광역으로 16개 시도 기본계획을 올리며, 중앙에서 조율하고 협의해서 정리 추진	대도시 (3분과)	100인 집담회
20	문화예술	지역문화전담기구 부처에 대한 명기	대도시 (3분과)	100인 집담회
21	문화예술	문화 관련 법규들의 중복되거나 누락 부분 개선 필요	전통문화 (8분과)	100인 집담회
22	문화예술	전통을 특정 장르만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도록 민족문화예술진흥법안 신규 제정 필요	전통문화 (8분과)	100인 집담회
23	문화예술	아르코 아르떼, 예술인복지재단 등 예술강사나 예술인들의 정보(최소단위의 정보 공개) 축적 및 활용 방안 마련 필요	대도시 (1분과)	100인 집담회
24	문화예술	지역 특성에 맞는 공모, 심사 풀을 확장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공모절차 개선 필요	대도시 (2분과)	100인 집담회
25	문화예술	지역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 전문인력 교육 필요	중소도시 (4분과)	100인 집담회
26	문화예술	지역의 문화재단, 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등에 전문인력 부족	전통문화 (8분과)	100인 집담회

1. 국민 제안 주요 내용

순번	분야	주요 내용 요약	아이디	비고
27	문화예술	적극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하도록 법제화 추진	전통문화 (8분과)	100인 집담회
28	문화예술	기초문화재단이 없는 지역에 설립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거나 설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전통문화 (8분과)	100인 집담회
29	문화예술	지역 내 문화 관련 기관(재단, 문화원 등)들의 역할분담에 대한 제도적 개선으로 사업 중복 등 문제 해결 필요(지역문화진흥법 내 각 기관 역할 제시 등)	중소도시 (6분과), 정책 (9분과)	100인 집담회
30	문화예술	전통문화에 대한 컨트롤 타워 시스템(문화주체가 정리) 필요	전통문화 (8분과)	100인 집담회
31	문화예술	지역문화를 풀어낼 수 있는 기구 필요. 거버넌스와 네트워크로 만들고 정부 단위가 아니라 기초단위 지역에서 관리 전담	대도시 (1분과)	100인 집담회
32	문화예술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만들어서 지역문화 관련 지방기구(기초, 광역)에 대한 문화 거버넌스 체계 설립 필요(상향식 구성 추진)	대도시 (3분과)	100인 집담회
33	문화예술	지역 내 생활문화센터 지원에서 국가와 지방단체 사이에 경쟁하게 만드는 구조 개선 필요	대도시 (3분과)	100인 집담회
34	문화예술	경영평가에서 지역 문화예술 전문인력 활용, 특성을 고려한 평가 예외규정 반영 및 별도의 평가 기준 개설 필요	중소도시 (5분과)	100인 집담회
35	문화예술	광역·국가 차원에서 분야별·기관별 예산 항목상의 내용상 건강성 지표 파악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 지표 개발 필요	중소도시 (6분과)	100인 집담회
36	문화예술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여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평가를 보완하고 지역의 문화적 욕구와 필요, 지역마다 다른 지형에 맞게 예산 편성 필요	중소도시 (6분과), 농촌 (10분과)	100인 집담회
37	문화예술	지역문화에 대한 기회비용 또는 지역예산을 지원해서 지역에 맞는 모델 구성 필요(지역의 인력, 조사 프로그램 개발비용 등 포괄)	대도시 (1분과)	100인 집담회
38	문화예술	지역문화실태와 지역문화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중장기 조사 분석할 수 있는 예산 필요	대도시 (1분과)	100인 집담회

순번	분야	주요 내용 요약	아이디	비고
39	문화예술	재정지원에서 문화복지 개념을 확장해 각 지역에서 문화예산 3% 확보 필요	대도시 (3분과)	100인 집담회
40	문화예술	지특 예산 내에 지역문화발전 계정 개설 필요. 여기에 따른 예술인들을 우선적으로 확대 및 지원 필요	대도시 (3분과)	100인 집담회
41	문화예술	전문예술지원 방식의 다변화 필요	중소도시 (5분과)	100인 집담회
42	문화예술	민간영역의 공적 자금 지원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간이 민간임대를 많이 활용(폐교 활용한 레지던시 등)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	중소도시 (5분과)	100인 집담회
43	문화예술	공동체에 대한 개념에서 예술가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새 문화정책단의 정책으로 도출될 필요	대도시 (3분과)	100인 집담회
44	문화예술	지역 색깔에 맞는 전통문화, 지역문화 발전계획과 방안, 정책적 지원 필요	대도시 (1분과)	100인 집담회
45	문화예술	중앙에서 눈길을 끄는 사업은 지역으로 그대로 내려오는데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는 폐단에 대한 조치 필요	대도시 (2분과)	100인 집담회
46	문화예술	지역의 고유성, 독특한 정체성을 반영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중앙 차원의 정치적·제도적 보완 필요	중소도시 (6분과)	100인 집담회
47	문화예술	공유재산법이나 맞물려 있는 법안들은 법의 개방성이 보장 필요	대도시 (1분과)	100인 집담회
48	문화예술	예술인의 공간 사용에 대한 지원 및 기존 시설(시설, 문예회관) 활용 확대 대안 공간(창의적 소통공간, 안전한 작업 공간) 확보 필요	중소도시 (5분과)	100인 집담회
49	문화예술	접근이 용이한 교통 중심으로 문화예술, 교육, 예산이 풀려 있는 편향적 구조를 해결할 방안 필요	대도시 (1분과)	100인 집담회
50	문화예술	지역의 작은 조직들이 지역에서 생산한 콘텐츠(출판 등) 장인 등 지원 요청	대도시 (2분과)	100인 집담회

1. 국민 제안 주요 내용

순번	분야	주요 내용 요약	아이디	비고
51	문화예술	기존의 문화정책을 없애기보다 예전 것을 완전 폐지하는 것 지양	대도시 (2분과)	100인 집담회
52	문화예술	큰 개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진행되는지에 대한 관심 제고 필요	대도시 (2분과)	100인 집담회
53	관광	관광 가치의 인식 변화 필요. 경제가 중심에서 삶에 기반한 관광, 공공성이 부여되는 관광으로 변화 필요(지역 문화교육, 지역 문화다양성의 지표로서 긍정적 인식 제고)	관광 (7분과)	100인 집담회
54	관광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관광 유도 필요(현재 문화부의 글로벌 사업과 테마 13사업 등 확대)	관광 (7분과)	100인 집담회
55	관광	모두를 위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한 관광의 문화 개선 필요(관광은 행복권, 장애인, 노약자 모두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앞으로 이슈)	관광 (7분과)	100인 집담회
56	관광	관광정책 개선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처 간 협업 필요(국토부, 복지부, 환경부 등)	관광 (7분과)	100인 집담회
57	관광	참여정부 때 창 의한국 만들면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반복함.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10년 가까이 봉해져 있었던 것	중소도시 (5분과)	100인 집담회
58	콘텐츠	분권에 대한 미래지향적 공론화 필요	중소도시 (5분과)	100인 집담회
59	문화예술	지역문화에 대한 교육 필요(교과과정 및 교과 외 활동으로 전통문화, 지역문화 내용 확보 필요)	전통문화 (8분과)	100인 집담회
60	문화예술	관주도형 축제를 민간주도로 이양, 지역축제위원회 구성 등 행정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자율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축제 추진 필요	전통문화 (8분과)	100인 집담회
61	문화예술	전통문화 캠페인, 소통의 자리 마련 필요	전통문화 (8분과)	100인 집담회
62	문화예술	지역문화를 실질적으로 누리고 해 나가야 할 주민들을 앞장세울 수 있는(마을자치) 구조 필요	중소도시 (6분과)	100인 집담회

순번	분야	주요 내용 요약	아이디	비고
63	문화예술	지역의 실질적인 문화적 욕구 · 수준 · 단계에 맞게 아래에서부터 사업 지향(세부 지역단위의 특성화 사업, 평가지표 개발)	중소도시 (6분과)	100인 집담회
64	문화예술	문화 생산주체와 기초문화재단 차원에서 지역문화 네트워크 방법 개발 필요	중소도시 (6분과)	100인 집담회
65	문화예술	정책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방법에서 상향 구조 마련 필요	중소도시 (6분과)	100인 집담회
66	문화예술	지역의 수요와 욕구에 따라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 필요(전문성 확보, 일자리 창출)	중소도시 (6분과)	100인 집담회
67	문화예술	지역의 폭발적인 지역문화 수요를 확산하려면 지역 시민들을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 및 문화전문가 양성 필요	중소도시 (6분과)	100인 집담회
68	문화예술	현실적으로 예술가 처우 등 문제를 고려한다면 지역 문화예술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 등 여건 개선 필요	중소도시 (6분과)	100인 집담회
69	문화예술	생활문화진흥원이 지역문화진흥원으로 바뀌었는데 지역문화진흥원이 전통문화유산, 예술, 생활문화, 문화예술을 다 커버하는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중소도시 (6분과)	100인 집담회
70	문화예술	공모해서 지역의 줄 세우기 지양	중소도시 (6분과)	100인 집담회
71	문화예술	문화기본법을 중심으로 철학적 근거하에 법 · 제도 중복문제 개선 필요(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중소도시 (6분과)	100인 집담회
72	문화예술	인력 문제는 결국 문화기관들의 민간화가 이루어져야 문화 인력들이 뿌리내릴 수 있는 근거 확립	중소도시 (6분과)	100인 집담회
73	문화예술	지역과 지역, 영역 간 상호 보완 가능한 네트워크(파트너십, 거버넌스) 필요	농촌 (10분과)	100인 집담회
74	문화예술	문화향유보다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일치하는 정책, 참여하는 예술 형태의 레지던스 형태가 많이 필요	농촌 (10분과)	100인 집담회

1. 국민 제안 주요 내용

순번	분야	주요 내용 요약	아이디	비고
75	문화예술	공동체 개발에서 이슈를 중심으로 레지던시 형태 도입, 주민 중심의 이슈, 공동체 중심의 향유 프로그램이 사회적 성찰과 함께 필요	농촌 (10분과)	100인 집담회
76	문화예술	시설관리에 치중되어 있는 예산과 인적 자원투입 개선 필요(실질적으로 문화사업과 프로그램 시행 부분 미약)	중소도시 (6분과)	100인 집담회
77	문화예술	자치법규에 대한 규율 등 검토 필요. 문체부가 일차 검토 후 행안부와 의견 조율	중소도시 (5분과)	100인 집담회

의제 07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순번	분야	주요 내용 요약	아이디	비고
1	전통문화	문화유산 활용 '문화바우처 산업' 콘텐츠 검토 필요: 지역인프라 구축, 관광+문화유산 콘텐츠의 결합 및 검토 필요	문화유산	모듬 토론회
2	전통문화	문화유산 활용 전문가 집단의 양성	문화유산	모듬 토론회
3	관광	한국관광 개인맞춤형 큐레이션 시스템 도입	정*미	문정국
4	관광	국공립 문화체험시설에 AR콘텐츠를 활용한 ICT 기반 스마트 에듀 관광 서비스 운영 필요	원*엽	문정국
5	콘텐츠	정부와 기업이 주축이 되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콘텐츠 제작환경을 만들어 주고, 콘텐츠의 가치가 공정하게 유통되는 플랫폼: 한국형 콘텐츠 라이선싱(IP) 전략 모델 필요	박*임	문정국

순번	분야	주요 내용 요약	아이디	비고
6	콘텐츠	부처별, 분야별 칸막이 및 기득권 또는 계통 간 이해관계, 기관 폐쇄성 타파 필요(예: 미술관, 공연장, 경계를 허물고 다원예술로 접근)	창의성분과	현장 토론회
7	콘텐츠	예술자원에 대한 인프라 시급, 매개 역할(인력양성 및 센터)의 중요성 환기 필요	창의성분과	현장 토론회
8	콘텐츠	학문적·실천적 문화자원을 콘텐츠화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목록화, 더 나아가 이를 설명하는 메타데이터 구축 및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카테고리화 필요	창의성분과	현장 토론회
9	콘텐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아트&사이언스, 예술과 과학의 접점에 대한 탐색 등 시도는 활발하나 체계적 운영 시스템 부재	창의성분과	현장 토론회
10	콘텐츠	디지털시대에 소비자의 수요, 시대적 감수성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책실행들에 대한 고민 필요	창의성분과	현장 토론회
11	콘텐츠	R&D와 같이 가시적 결과물을 낼 수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및 불필요한 사업처럼 보이지 않도록 전략적 설정 필요	창의성분과	현장 토론회
12	콘텐츠	개발자(프로그래머)보다 매개자(유튜브 게임방송 DJ)의 수익이 더 높아지는 현상에 비추어 보면 현재 정책에서 수요자를 배제한 전통적 관념만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 필요	창의성분과	현장 토론회

의제 08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순번	분야	주요 내용 요약	아이디	비고
1	문화예술	한반도 평화를 여는 문화의 섬, 로드 프로젝트 추진	국제교류	모듬토론회

1. 국민 제안 주요 내용

순번	분야	주요 내용 요약	아이디	비고
2	문화, 관광, 체육	문화, 관광, 체육 분야 남북한 교류협력사업 획기적 전환	국제교류	모듬토론회
3	문화예술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문화기반사업 전개	국제교류	모듬토론회
4	콘텐츠	한류 3.0시대 준비와 문화콘텐츠 해외시장 진출 확대: 인문학 한류', 생활영역으로 확산하는 '융·복합 한류', 다른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는 '다양성 한류'로 발전시켜야 함	국제교류	모듬토론회
5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협력, 협력을 통한 국제교류 확대: 문화 분야 ODA 사업 추진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단체의 협력을 강화	국제교류	모듬토론회
6	문화예술	미래 세대와 실버 세대를 위한 국제문화 플랫폼 구축	국제교류	모듬토론회
7	문화예술	아시아 문화교류 확대 및 국제문화협력 종합계획 수립	국제교류	모듬토론회
8	문화예술	북한 탈북자 예술단 및 오두산 통일전망대 활성화	백*숙	현장토론회
9	문화예술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의 호소성 점검 필요	창의성분과	현장토론회
10	문화예술	남북문제에 대한 시대 감수성 환기 필요	창의성분과	현장토론회
11	문화예술	남북의 문화적 교류가 중요하며 이를 매개할 수 있는 채널 필요	창의성분과	현장토론회
12	문화예술	헌법에 문화적 가치를 명시하고 문화의 우월적 지위를 획득하여 경제적·사회적 분위기와 관계없이 문화교류 추진 필요	창의성분과	현장토론회
13	관광 문화예술	국토종합계획에 현재 녹색국토, 개방국토, 통일국토, 복지국토 네 가지 어젠다가 있는데, 여기에 문화국토를 제시하여 DMZ 쪽에 문화를 이어주고 프로젝트 속에서 개념을 잡아보는 것을 제안	창의성분과	현장토론회

의제 09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순번	분야	주요 내용 요약	아이디	비고
1	문화예술	청년 문화예술가의 사회적 경제활동 및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청년 문화예술가 관련 스타트업 시스템 도입 외	청년예술가	모듬토론회
2	전통문화	문화유산을 활용한 일자리 확대	문화유산	모듬토론회
3	문화예술	문화적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통합적 임시조직 구성과 연구: 마을기본법 발의안, 공공,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의 역할 및 사무 조정	마을만들기	모듬토론회
4	문화예술	문화적 동아리(문화, 예술, 미디어, 체육, 관광) 투 트랙 육성	마을만들기	모듬토론회
5	문화예술	교육, 거점, 인력의 통합지원을 통한 생활권 마을 미디어 활성화	마을만들기	모듬토론회
6	문화예술	권력의 이동, 권력의 재구성이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의 핵심 화두	창의성분과	현장토론회
7	문화예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체로서 정책을 펼치고 자리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분권이 중요	창의성분과	현장토론회
8	문화예술	문화공감대를 되살려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사회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	창의성분과	현장토론회
9	문화예술	타 부처 문제를 문체부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닌 부처 주변 에서 문화가 결합해 혁신적인 과정을 만들고 창구로서 역할 필요	창의성분과	현장토론회

1. 국민 제안 주요 내용

기타 기타 제안 내용

순번	분야	주요 내용 요약	아이디	비고
1	정책	부처 내, 부처 간 열린 행정 필요	창의성분과	현장토론회
2	정책	기존 정책에 대한 반성 필요. 12년 전 정책설정, 그리고 창의한국, 모두 제목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 제자리걸음인 내용이 다수로 검토 필요	창의성분과	현장토론회
3	정책	새 문화정책이 100년간 가져갈 수 있는 미래정책방향에 대한 담론으로서 정책추진 제안. 새 문화정책이 미래국가를 위한 정책인지 문체부 정책을 만들고 있는지 불분명	창의성분과	현장토론회
4	정책	예산 성격을 이해하고 과거 정책 실패 이유를 살펴본 후 액션플랜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 정책수립 과정과 결과 검토 필요	창의성분과	현장토론회
5	정책	문화정책에서 지향하는 창의성의 정의, 같은 영역 내 단계에 따라 요구되는 창의성에 대한 정의 필요	창의성분과	현장토론회

02 문화청책(文化聽策) 주요 내용

(1) 시작포럼(2017. 8. 3. 서울예술가의집)

분야	핵심어	세부 제안 내용
청년 문화 정책	도시재생과 청년문화	도시재생과 청년문화를 위한 ① 지역아티스트 등록제, 지역문화기획자 등록제 도입, ② 지역 문화기관의 조직적 시스템 개선과 고용안정화 제안
	청년문화와 네트워킹	청년문화기획자 네트워킹 프로그램인 '청년문화기획자 네트워크 사업'과 '문화의 달' 제도화 제안
	농촌청년문화	농촌청년문화를 위한 공간 등의 기반환경 조성 및 청년공동체 마련 제안
세대별 주제	행복한 청소년	청소년의 문화생활을 위한 '동아리 문화 육성' 제안
	세대 상생을 위한 정책	지역 문화 현장의 청년들을 키우기 위한 지역문화예술 현장 중장년층 대상 정책 및 지역문화원 원장공모제, 관련 지원방안 마련 제안
문화 예술	개인과 문화예술의 선순환적 사회구조 마련	예술가가 자생한 후 팔로어를 확대하는 선순환을 구축하기 위해 '문화예술 팔로어 확대 지원' 제안
	클래식 음악 관련 민관 협업체계 구축	공연 및 클래식 음악 공연계의 자생을 통한 지역문화와 공연문화의 발전을 위해 클래식 음악 관련 민관 협업체계 구축 제안
	민간예술단체 장기지원체계 마련	전략적·장기적 방식의 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필요성 강조 및 프로젝트 중심이 아닌 기반 구축 가능한 장기 지원체계 마련 제안
	다층적 공연예술유통체계	지역의 예술향수권을 증대하기 위한 공연예술유통의 다층적 체계 마련 필요
	미술유통 관련 정책	미술품 양도소득세, 미술유통법, 시각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관련 법안의 체계화 및 구체적 실현

2. 문화정책(文化聽策) 주요 내용

분야	핵심어	세부 제안 내용
일상 문화	지역재생을 위한 지역여행의 역할	여행을 지역 간 교류의 매개로 적극 활용하여 장기 체험형 · 프로젝트형 여행을 개발하고, 문화 · 경제와 영감을 주고받는 ‘국민 레지던시 여행’ 제안
	생활체육	기존의 공공 스포츠클럽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 필요, 시설 · 프로그램 · 지도자 통합 공급 시스템 구축 및 스포츠클럽 육성법 제정
	문화관광 활성화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기금법 발의, 문화와 관광의 융 · 복합 연구 확대 필요
협치와 문화분권	합치의 문화 거버넌스	콘텐츠와 지역 사용자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및 문화전당 개선, 5 · 18 민주정신을 바탕으로 한 한류콘텐츠 개발
	문화예술 공공영역의 축소	문화예술 분야 공공영역의 축소, 공공기관 직접 운영 사업의 민간 위탁 운영 전환
	문화예술행정 개선 및 문화예술정책의 지속성	문화예술행정 및 관련 종사자의 인식 개선 필요, 예술가의 역량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정책의 지속성 확보
전통 문화	전통문화예술 지원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장년층의 전통문화예술가에 대한 지원 비중 확대에 대한 필요성 강조
	국가무형문화재 계승지원	전통문화 이수자 및 지역 문화예술 소외층의 장기적 지원방안 강구

(2) 본포럼(2017. 10. 21~11. 17)

권역	포럼 주제	세부 제안 내용
강원	사라지다, 머물다, 나타나다 - 행복한 강원을 위한 상상제안	지역의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민주적·합리적 과정 필요
		예술인 파견사업 개선
		문화재단의 역할 제고 및 근무환경 개선
		문화정책 실명제 실시
		지역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실태파악 필요(기초통계 생산)
		시니어 문화 활동을 위한 정책 필요
경기·인천	모두와 함께하는 문화정책 경기·인천권 포럼	민간-공공기관-정부정책 간 소통제도와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문화다양성 교육 의무제 추진 제안
		지역문화재단의 독립성 확보
		다양한 문화협업(군사, 보건, 복지, 교육) 등으로 문화시장의 확대 정책
		문화예술전문공무원 채용
		삶, 지역과 연계된 '토대'에 대한 지원
서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시대, 문화분권 실현을 위한 제언	청년과 함께 기획하는 청년지원체계 구축
		지역문화를 위한 지자체 중심의 지역문화진흥법 재편
		지역 문화생태계 구성 주체의 위상과 역할 재설정
		문화분권 시대, 풀뿌리 생활문화의 가능성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 수립 및 필요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상화, 업무의 이양, 정책기능의 복원
		새로운 관점, 새로운 활동반경, 새로운 시도를 통한 문화협치

2. 문화정책(文化聽策) 주요 내용

권역	포럼 주제	세부 제안 내용
영남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년문화정책 페스타(울산)	청년 주도의 복합 문화활동
		지역의 청년문화 거점공간 지원
		프리랜서 시대의 정책 필요
		제3섹터 분야의 인력교육 및 지원사업 발굴
		청년문화정책위원회 및 청년문화예술위원회 제안
		청년에게 망할 기회를 지원(예) 이런 망할! 프로젝트)
	문화자치와 문화도시(대구)	상향식 정책 수립과정의 중요성
		복합적 · 균형적 지역학 정책지원방법론 개발
		스토리텔링형 정책사업 개발
		포스트 문화사업 제안
		문화생활사 아카이브를 조성해 지역의 문화 · 경제적 환경 개선
		입체적 과정을 통한 지역 및 도시 브랜드 구축
	모두와 함께하는 문화정책포럼 —문화도시에 미래를 묻다(김해)	생활문화예술과 더불어 전문예술인 지원도 동시에 필요
		지역의 정체성 확립 및 확산을 위한 지역 스토리텔링 지원 사업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정책과 청년전문가 육성 정책 마련
		지역의 문화행사나 축제 등에 생활문화동아리의 활용 등 지역문화예술인과 지역문화예술콘텐츠의 활용 방안 제도화
		생활문화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나 부서 마련
		세대별 맞춤 프로그램 마련 및 현실성 있는 문화행사와 축제 기획

권역	포럼 주제	세부 제안 내용
영남	부산 문화로 통, 모두와 함께하는 문화정책 '2030년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영남권 릴레이포럼(부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지원정책의 우선순위 조정 필요
		정책사업의 심의 및 심사구조에 개선 필요
		부산으로 유입되는 청년 대상 정책사업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및 평가 심사과정에서 가시적 성과와 결과물 중심이 아닌 작품과 사람을 중심에 두는 방법 도입
		공터나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작 공간 확대 필요
		전문가로서 가치 인정과 합당한 인건비 지급 등을 위한 예술가의 직업군 정비 필요
		문화향유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시민평론가 제도 등 마련
제주	문화자치시대, 제주 문화예술 생태계 들여다보기	지역문화 예술 생태계 구성 및 구조 파악을 위한 기초조사의 필요성
		창작활성화를 위한 사업유형 확대(창작장려금, 아티스트 피 등)
		수혜사업의 유료 확대를 위한 보조금 관련 법령 개선
		지역 통합 예술관리 시스템 구현
		마을단위의 재능기부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
		문화예술매개공간을 활용한 소속 예술인 케어 제도 제안
충청	새 정부 문화정책 수립에 필요한 충북권 이슈 및 정책 제안 (충북)	지역활동가 환경조성과 선순환 구조 마련
		문예진흥기금 재정비 및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진흥 기금 마련
		콘텐츠 기반 공간형 정책 사업
		지역 문화예술활동가 육성을 위한 기초/전문 교육 통합운영 및 긴 호흡의 인력개발 사업
		지역문화콘텐츠 직거래소 구축 제안
		지역예술인 쿼터제 제안

2. 문화청책(文化聽策) 주요 내용

권역	포럼 주제	세부 제안 내용
충청	충남의 문화를 듣다 -세대문화, 예술창작, 문화도시, 문화공간, 전통문화(충남)	분기별 공모사업 실행 등 분산지원방식 필요
		전통문화 소멸지역에 대한 정책적 대책 마련
		문화적 소통가를 길러내는 민간 공간운영 지원
		예술지원인력들(문화행정인력, 문화사무장 등) 양성
		취향예술(생활문화, 예술장르동아리를 넘어서는)의 네트워크 사업 추진
		청소년과 청년의 자기개발과 재능발견이 시작되는 문화공간 조성
호남	모두와 함께하는 문화정책 호남권 포럼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자발성과 자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방안
		권역별 문화예술위원회로 분리 및 직접운영 시스템 구축 필요
		현장과 행정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인큐베이팅 개념의 중간조직 필요
		청년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정책 마련(청년 클러스터, 청년의회 등)
		문화적 지원, 문의사항 발생 시 도움창구 개설(문화정보콜센터, 문화편의점 등)
		지역 문화인력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창작공간 제공, 문화이장제도 등)

「문화비전2030_사람이 있는 문화」 참여자

☉ 새문화정책준비단 TF위원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기획처장)	손동혁	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김기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양현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김기영	부산민예총 미디어기획위원장	유지곤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수석연구위원
김영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평가센터장	윤광식	국제문화협력지원센터 사무총장
김종희	서울문화재단 대표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라도삼	서울연구원 전략연구실 실장	이동민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 대책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디지털문화정책전공 교수	이원재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소장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 본부장	최도인	메타기획컨설팅 본부장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성해영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 TF분과위원

김권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팀장	유승호	강원대학교 교수
전고필	대인예술시장 감독	이 훈	한양대학교 교수
최승훈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융합 정책보좌역	김상훈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노용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	한창완	세종대학교 교수

☉ 간사

이정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예술기반정책연구실 위촉책임연구원	최고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김미소	DMZ피스트레인뮤직페스티벌 사무국장	정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전략팀

팀 장: 김명진(18.08.21~), 김성은(17.09.04.~18.08.20.)

행정사무관: 박규영(17.09.04~)

행 정 주 사: 이준규(18.09.04~), 이소진(17.09.04~18.09.03)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발행처 새문화정책준비단,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일 2018년 12월

인쇄처 (사)남북장애인교류협회 인쇄사업부

© 2018

※ 「문화비전2030_사람이 있는 문화」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